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503-01



독 일 형 법

2008. 5



법 무 부

발 간 사

법무부는 작년 6월 ‘형사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형법 총칙의 범죄론·형법론 분야에서부터 형법 각칙 및 각종 형사특별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미처 규율하지 못했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본·중국·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형사법을 국내 법조계·학계와 해당 국가의 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작년 12월에는 일본 형법을 번역하였고, 금년 3월에는 중국 형법·형사소송법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형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1871년 제정된 독일 형법은 정치·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7. 8.까지 6차례에 걸친 형법 전면 개정과 41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등을 통해 통일 이후 동·서독의 두개의 형법 체계의 통합 등 사회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을 소개한 이 자료집이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독일 형법 제도 연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자료의 번역 및 발간을 위해 애쓴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김혜정 교수, 이정원 교수 및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8. 5.

법무부 검찰국장

차동민

목 차

제1편	독일형법사 개관 3
독일형법사 개관	
제2편	제1장 형 법 13
	제1절 적용범위 13
	제2절 용어의 정의 17
총 칙	제2장 범죄행위 19
(Allgemeiner Teil)	제1절 가벌성의 기초 19
	제2절 미수 21
	제3절 정범 및 공범 22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24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25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26
	제1절 형벌 26
	제2절 형의 양정 31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 34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6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43
	제6절 보안처분 45
	제7절 박탈 및 몰수 67

제3편
형법각칙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75
제5장 시 효	78
제1절 공소시효	78
제2절 형집행 시효	81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87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87
제2절 내란죄	87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89
제4절 공통규정	95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97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103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104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108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112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115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130
제9장 선서 없는 허위진술 및 위증	135
제10장 무고의 죄	137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138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139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140
제14장 모욕죄	154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157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164
제17장 상해의 죄	170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173

부록

제19장 절도 및 횡령	182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186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188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193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201
제24장 파산의 죄	207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210
제26장 경쟁위반의 죄	215
제27장 손괴의 죄	217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219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238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	247
1. Allgemeiner Teil	261
2. Besonderer Teil	358

제 1 편

독일형법사 개관

【독일형법사 개관】

1987년 4월 1일 발효된 현행 독일형법은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서 총칙(제1조 - 제79조)과 각칙(제80조 - 제358조) 등 총 35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독일연방공화국은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는 대신 종전의 「독일제국형법전」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부분개정의 형식으로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49년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1951년 내란죄, 간첩죄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53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제도와 가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법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근대 형법사상과 효과적인 범죄예방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형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단편적인 부분개정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자, 연방정부는 1954년 이후 형법 전면개정을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2년 「정부초안(Regierungsentwurf)」이 발표된 데 이어 1966년에는 14명의 형법교수들이 작성한 「대체초안(Alternativentwurf)」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대체초안」은 형벌의 한계와 효과를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으로서 연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후 이러한 「대체초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두 개의 「형법개정법률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s Strafrechts)」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제1차 형법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과 「제2차 형법개정법률(Zweites 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의 명칭 하에 정식법률로 채택되었다.

1969년 6월 25일자 「제1차 형법개정법률」은 자유형의 단일화, 단기자유형의 제한 등 종전의 총칙규정을 혁신하고 일부 각칙규정을 개선하였으며 1969년 9월 1일과 1970년 4월 1일에 나뉘어 각 발효되었다. 이에 비해 1969년 7월 4일자 「제2차 형법개정법률」은 단순한 형법의 부분개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계나 내용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법총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률은 총칙편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각칙편의 개정작업을 완성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여 제정당시 그 발효일자가 1973년 10월 1일로 정하여졌었다. 그러나 예정했던 기간 내에 각칙부분의 전면 개정작업이 종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신형법의 시행을 미룰 수 없게 된 연방정부는 1975년 1월 2일 「제2차 형법개정법률」에 기초한 신총칙과 일부 개정된 「1871년 형법」의 각칙을 결합한 신형법을 일단 공포·시행하고 각칙부분은 향후 개별 법률을 통한 부분개정의 방식으로 수정·조정하기로 하였다. 각칙의 부분개정 작업은 그 후 수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Strafrechtsänderungsgesetz)」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추진되어 시위관련 범죄, 낙태죄, 성범죄, 통화관련 범죄, 개인의 자유관련 범죄 등이 새로이 규율되었다. 이와 같이 12년간의 수차 부분개정을 거쳐 정비된 형법은 1987년 3월 10일 연방정부에 의하여 신형법으로 공포되어 4월 1일 발효되었던 바, 이것이 바로 현행 독일형법인 것이다.

사회현상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작업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1992년 7월 15일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을 제정, 자금세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형의 도입과 박탈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 28일 「범죄방지를 위한 법률(Verbrechensbekämpfung)

ngsgesetz)』에 의하여 자금세탁의 구성요건을 여러 형태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그 처벌 범위를 다시 확대하였다. 그 외 최근 1997년 6월 13일에는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일반요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 fu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의 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문서개념에 「전자기록」이 추가되는 등 형법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국가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독일형법은 또 다시 크게 변모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의하여 동베를린을 포함한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등이 신설 연방 5개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발표와 동시에 「연방법률 확장적용의 원칙」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제외한 연방형법이 연방 전 지역에 적용되었다.

연방형법의 확장적용이 배제된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구동독 형법상 대응규정이 없는 연방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이다. 따라서 가입당시 연방형법만이 관련규정을 두었던 보안감호처분(제66조)과 동성애처벌(제175조)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둘째, 연방형법과 구동독 형법에 모두 해당규정이 있었으나 연방형법이 아닌 구동독 형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경우로서 낙태와 성범죄관련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낙태와 관련하여 구동·서독은 통일 당시 서로 상이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구서독과는 달리 구동독에서는 기한부 낙태허용 규정에 따라 12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태 처벌규정의 확장적용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통일조약 체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연방정부는 1992년 12월 31일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 구동·서독 지역에 각기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통일입법기관에 유보하였다. 그 외 연방형법 제182조의 「위계에 의한 소녀간음」 및 제236조의 「피약취·유인자의 동의에 의한 부녀약취·유인」 등의 규정은 이에 대응하는 구동독 형법 제149조를 적용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그 확장적용을 배제시켰다. 셋째, 연방형법에 대응규정이 없는 구동독 형법규정의 계속 적용을 허용한 경우이다. 구동독 형법 제191조의 「토지오염」 규정은 발전된 입법으로 평가되어 일부 개정조치와 함께 구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구동독 형법의 「평화, 인간성 및 인권침해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시효배제(제84조)」 및 「법관의 독립성 침해(제238조)」 규정도 현재까지 구동독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이원적 법적용 상황을 가능한 조속히 제거하고자 통일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연방형법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1994년 5월 31일 연방형법상 동성에 처벌규정은 종국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제182조도 죄명을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으로 개정하는 등 구동독 형법의 구성요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27일 제324조a를 추가하여 토지오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형법시행법률(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 제1조a에 따라 보안감호처분은 1995년 8월 1일 이후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적용되며, 낙태죄의 경우 1995년 8월 21일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한부 낙태허용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조치를 통하여, 통일조약 체결당시 그 확장적용이 배제되었던 일부 연방 형법 규정은 대부분 수정·보충되었다.

독일 형법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변화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우선 제33차 형법일부개정법률(Strafrechtsänderungsgesetz vom 1. 7. 1997)에

의하여 구 형법 제177조 강간죄(Vergewaltigung)의 구성요건과 제178조 성적 남용에 대한 구성요건이 한 조문으로 결합되면서, 성적 남용과 관련한 악용의 상황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까지도 포함시키는 등 그 구성요건이 확장되었다. 특히 동 조항에서 “혼인 외(ausserehelich)”라는 표지가 빠짐으로써 종래 배우자에 대한 강간 및 성적 남용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남용 및 강간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유럽사회에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의 영향으로 1998년에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과 관련하여 제6차 형법개정법률(Strafrechtsreformgesetz vom 26. 1. 1998)에 의해서 성범죄관련 규정의 처벌정도가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안감호요건도 완화되는 등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당시 입법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목적을 위한 종속 관계의 남용에서 아동 및 피종속자의 형법적 보호의 확장을 위하여 처벌 수위를 상당히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77조 제3항 및 제4항이 도입되었고 성적 남용 및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중과실로 야기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성범죄에 관한 처벌정도의 상향조정은 그 이후에도 2003년 12월 27일에 법률에 의해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2005년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형법규정(제232조)을 삽입함으로써 현재 독일 형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의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제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제17장에 있는 상해죄가 개편되면서 부분적으로 처벌정도가 상향되었다. 특히 상해의 실행

방법에 관한 위험에 따라(제224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결과의 중한 정도에 따라(제226조, 제227조) 상해의 중한 정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제6차 형법개정법률의 중요한 개정 중 또 다른 하나는 절도죄(제242조)의 구성요건에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탈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2005년 1월에는 손괴죄(제303조)와 관련하여 제2항에 “권한 없이 타인 재물의 외관을 현저하게 영구적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낙서를 통해 건물 및 교통수단의 외관을 손상하는 행위까지도 형법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제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혼인 외 자의 분만이라는 부녀의 상황에 입각하여 영아살해죄에서 그 형을 감경하던 특전을 폐지하였다. 이는 그 사이 혼인 외 자를 분만하는 부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제213조라는 일반적인 감경조항을 통해서 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특별한 감경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형벌과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벌금형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2년부터 유럽통화가 유로화로 통일됨에 따라 ‘司法法에 있어 유로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s Euro in Rechtspflegegesetzen vom 13. 12. 2001)’ 제21조에 근거하여 벌금형에 대한 규정인 제40조 제2항 제3문에서 독일 마르크가 유로화로 변경되었다.

그런가하면 1998년 형법개정 이래로 중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보안감호에 대한 폐지의 주장과 함께 그 수용인원이 감소되었던 것이, 1998년 특정범죄(주로 성범죄)에 대한 보안감호요건이 완화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유보적 보안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vorbehaltenen Sicherungsverwahrung vom 21. 8. 2002)”을 통해 독일 형법 제66조a를 신설하여 제66조 제3항에 열거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의 선고시점에 법원이 보안감호를 부과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보안감호의 선고를 유보하고 대신에 형의 집행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형집행법원에서 위험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보안감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유보적 보안감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제66조b를 신설하여 형의 선고시점에 법원에서 보안감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형집행법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안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보안처분은 엄격하게 제한된 영역에서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서도 이러한 보안처분이 인간존엄성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요건의 소급적용까지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

특히 지난 2005년 제16차 입법회기가 시작되면서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논의된 중대한 정책변화의 중심에는 보안처분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7년 4월 효과적인 보안처분집행을 위한 개정안이 독일연방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수용집행절차를 개정하려는 목적 하에 제67조의h(위기개입(Krisenintervention))를 신설하여 치료적인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보호관찰조건부로 유예된 경우에도, 만약 위기개입제도가 없었다면 보안처분유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하 3월에서 최장 6월까지 다시 보안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기간 보안처분의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4. 2. 5 판결(BVerfGE Bd. 109, S. 133) 참조.

재집행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가 하면, 제67조g 제1항 제2문에 보안처분 수용의 유예에 대한 취소가능성을 확장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6차 입법회기에서 보안처분과 관련한 또 다른 개혁은 행장감독과 관련한 것으로 2007년 5월에 제68조b 제2항 제2문에 형벌과 보안처분에서 석방된 후에도 소위 “사후치료” 가능성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정병원에 관한 규정을 제68조a 제7항에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며, 중한 성범죄의 경우 행위자에게 위험성이 계속 존재한다면 행장감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68조c 제3항에 규정하고, 제79조 제4항에 행장감독의 시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중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편

총 칙 (Allgemeiner Teil)

총 칙(Allgemeiner Teil)

제1장 형 법

제1절 적용범위

제1조 【죄형법정주의】 (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

제2조 【시간적 적용범위】 ①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박탈, 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

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선고한다.

제3조 【국내법에 대한 적용범위】 독일 형법은 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 【독일 선박 및 항공기내의 범죄에 대한 적용범위】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국기 또는 국적표지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제5조 【국내법익에 대한 국외범】 외국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침략전쟁의 예비(제80조)
2. 내란죄(제81조 내지 제83조)
3.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범
 - a) 제89조, 제90조a 제1항 및 제90조b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b) 제90조 및 제90조a 제2항의 경우
4. 간첩, 외환의 죄(제94조 내지 제100조a)
5. 국방에 대한 범죄
 - a) 제109조 및 제109조e 내지 제109조g의 경우
 - b) 제109조a, 제109조d와 제109조h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이고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약취와 정치적 무고(제234조a, 제241조a)
- 6a.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235조 제2항 2호 경우에서 아동의 약취
7.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소재한 사업소나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그 기업과 기업결합(Konzern)을 형성하고 있는 국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의 침해

8.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 a) 제1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행위자와 행위대상이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b) 제176조 내지 제176조b 및 제182조의 경우에서 행위자가 독일인인 경우
9.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고 국내에 그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낙태죄(제218조)
10.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법원 또는 선서나 선서에 대체되는 보증을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독일 관청에 계류 중인 소송절차에서 행한 선서 없는 허위진술, 선서위반 및 선서에 대체되는 허위보증(제153조 내지 제156조)
11. 국제법상 해양보호협정에 의하여 범죄로서 형사소추가 허용된 경우에만 하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한 제324조, 제326조, 제330조 및 제330조a의 경우에 환경에 대한 범죄
- 11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 제330조와 관련된 제32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범죄
12. 독일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재직기간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13. 외국인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로서 행한 범죄
14.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
- 14a.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거나 또는 독일인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의원매수에 관한 범죄(제108조e)
15.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인 경우에 조직적 행위(장기이식법 제18조)

제6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국외에서 범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삭제>
2. 제307조 및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2항 및 제310조의 경우에 핵에너지, 폭발물 및 방사선에 관한 범죄
3.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제316조c)
4. 성적 착취 및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조장(제232조 내지 제233조a)
5. 향정신성의약품의 권한 없는 판매
6. 제184조c 제1문과 관련된 제184조a 및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음란물의 반포
7.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제146조, 제151조 및 제152조),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의 위조(제152조b 제1항 내지 제4항) 및 그 예비죄(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2조b 제5항)
8. 보조금 사기(제264조)
9. 범죄가 국외에서 범해진 경우에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형사 소추되는 범죄

제7조 【기타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범위】 ① 국외에서 독일인에 대해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②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지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벌권이 미치지 않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1. 행위자가 행위 시에 독일인이었거나 행위 후에 독일인이 된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포되어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인도청구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거절되었거나 또는 인도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범죄의 시기】 범죄는 정범 또는 공범이 행위한 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 하였어야 한 때에 행해진 것이다. 결과발생한 때가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 【범죄의 장소】 ① 범죄는 정범이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장소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할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② 공범의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본범의) 장소뿐만 아니라 공범이 행위한 장소 또는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장소나 공범의 의사에 따라 본범이 행해져야 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국외범에 대한 공범이 국내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범에 대해 독일 형법이 적용된다.

제10조 【소년 및 청년에 대한 특별규정】 소년 및 청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11조 【인적개념 및 물적 개념】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직계혈족 및 인척,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약혼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자,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혈족관계 혹은 인척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b) 양부모 및 양자
2. 공직자란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공무원 또는 법관
 - b) 기타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있는 자
 - c) 관청이나 기타 관서 내에서 또는 그 위임에 의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
3. 법관이란 독일법에 의한 직업법관 혹은 명예법관인 자를 말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는 독일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관공서 또는 기타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 b)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을 위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타 연합체, 사업소 또는 기업
5. 위법한 행위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의 기도란 범죄의 미수 및 기수를 말한다.
7. 관청이란 법원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8. 처분이란 모든 보안처분, 박탈, 몰수 및 폐기를 말한다.
9. 대가란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 ②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를 요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특별한 결과에 관하여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고의행위로 본다.

- ③ 이 조항을 원용하는 규정에서 음성,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 전자기록, 도화 및 기타 표현물은 문서로 본다.

제12조 【중죄 및 경죄】 ①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 ② 경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경미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 ③ 총칙 규정에 의한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이나 감경은 중죄 및 경죄의 구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2장 범죄행위

제1절 가벌성의 기초

제13조 【부작위범】 ①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법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할 법적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② 부작위범의 형은 제49조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

제14조 【타인을 위한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행위한 경우,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 또는 상황(특별한 인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2.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3. 타인의 법정대리인
-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위임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15조 【고의행위와 과실행위】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고의행위만 처벌된다.

제16조 【구성요건적 착오】 ① 행위 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범으로 인한 가벌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행위 시 경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상황으로 착오한 자는 경한 법률에 의해서만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17조 【금지착오】 행위 시 행위자에게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경우, 이러한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위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제18조 【결과적 가중범¹⁾】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해 중한 형을 규정한 경우에 정범 또는 공범이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과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중하게 처벌된다.

제19조 【아동의 책임무능력】 범행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제20조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범행당시 병적인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또는 정신박약, 기타 중한 정신이상으로 인해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이 결여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제21조 【한정책임능력】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의 능력이 범행 당시 제20조에 나타난 이유로 인해 현저히 미약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제2절 미수

제22조 【개념정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를 직접 개시한 자는 미수범이다.

1) 원문은 “Schwerere Strafe bei besondern Tatfolgen”으로 “특별한 행위결과에 대한 가중형”으로 직역 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것이고 표제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번역한 1997년 법무부 견해에 따라 동일하게 번역한다.

제23조 【미수의 가벌성】 ① 중죄의 미수는 항상 처벌되고, 경죄의 미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② 미수는 기수행위보다 감경될 수 있다(제49조 제1항).

③ 행위자가 범죄 실행의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상 기수로 될 수 없음을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경우,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작량하여 감경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24조 【중지미수】 ① 자의로 범죄의 계속실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죄가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기수로 되지 않는 경우, 중지자가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그리고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수인이 범죄에 참여한 경우, 자의로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가 그의 관여 없이 완성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선행된 행위분담으로부터 독립하여 실행된 경우에는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자의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불가벌을 위하여 충분하다.

제3절 정범 및 공범

제25조 【정범】 ① 범죄행위를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서 처벌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공동정범).

제26조 【교사범】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의 불법행위를 결의케 한 자는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7조 【방조범】 ① 고의로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②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에 따른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

제28조 【특별한 인적 요소】 ① 정범의 가벌성을 근거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제14조 제1항)가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에게 결여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이 감경된다.

② 법률이 특별한 인적요소를 형의 가중, 감경 또는 조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그와 같은 인적요소가 존재하는 범죄참가자(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제29조 【범죄참가자의 독립적인 가벌성】 각 범죄참가자²⁾는 타인의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처벌된다.

제30조 【공범의 미수】 ① 타인에게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자는 중죄의 미수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다만,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한다. 제2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의 의사표시를 한 자, 타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이를 약속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2) 범죄참가자는 정범과 공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형법은 총칙 제2장 제3절에서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 교사범, 중범 및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어, 공범은 교사범과 중범 이외에 공동정범과 간접정범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하여 독일 형법은 그 제목을 ‘정범과 공범’으로 규정하여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공범이란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중범만을 의미한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제31조 【공범의 중지미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1. 타인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현존하는 위험을 자의로 방지한 자
2. 중죄를 범할 의사표시를 한 후 자의로 그 계획을 포기한 자
3. 중죄를 범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중죄 범행의 제안을 수락한 후 자의로 범행을 방지한 자

② 중지자의 관여 없이도 범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의 선행 행위와 독립하여 범행이 실행된 경우에 범행을 방지하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4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제32조 【정당방위】 ① 정당방위에 의한 범행을 실행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33조 【과잉방위】 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정당화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기타의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실행한 자는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련된 법익과 긴박한 위험의 정도를 교량하여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

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난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5조 【면책적 긴급피난】 ①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친족 또는 기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는 책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정황에 비추어, 특히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가 특별한 법률관계를 고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② 행위자가 행위 시 제1항에 의해 면책되는 상황으로 착오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

제5절 의회 내 발언 및 보고의 불가벌성

제36조 【의회 내 발언】 연방하원 의원, 연방회의 의원 또는 주 입법기관의 구성원은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으로 인하여 입법기관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의회 내 보고】 제36조에 규정된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 관한 진실에 부합되는 보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제1절 형벌³⁾

자유형

제38조 【자유형의 기간】 ① 자유형은 법률이 무기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로 한다.

② 유기자유형의 상한은 15년이고 하한은 1월로 한다.

제39조 【자유형의 계산】 1년 이하의 자유형은 주 및 월에 의해 계산되고 그 보다 장기의 자유형은 월 및 년에 의해 계산된다.

벌금형⁴⁾

제40조 【일수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

3) 형법시행법률 제315조c에 의하여 통일 후에도 구동독의 범죄구성요건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구동독 형법상의 형벌 대신 연방형법에 규정된 자유형 및 벌금형만이 적용되며 기타의 형벌은 모두 폐지되었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4)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에 관한 연방형법규정(제40조 내지 제43조)은 가입 발효 이전에 구동독에서 범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벌금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되 전체적으로 종전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형은 최고 360일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1997년 법무부번역서 참조).

-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

제41조 【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제43조a에 의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 【납입의 경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의 즉시 납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납입 기한을 지정하거나 분납 액을 정하여 벌금의 분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이라는 은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납입경감의). 허가 없이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납입 경감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증명이 부과될 수 있다.

제43조 【대체자유형】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

재산형

제43조a⁵⁾ 【재산형의 선고】 ① 범람이 이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행위자의 재산가액 이하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의 납부를 선고할 수 있다(재산형). 박탈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그 재산평가에서 제외된다. 그 재산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

② 제42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법원은 재산형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하는 자유형을 정한다(대체 자유형). 대체자유형의 상한은 2년, 그 하한은 1월로 한다.

부가형

제44조 【운전금지】 ①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과 관련되거나 운전자의 의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범죄로 인해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도로교통상 모든 종류 또는 특정 종류의 자동차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제315조c 제1항 제1호의 a, 제3항 또는 제316조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69조에 의한 운전면허박탈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금지를 명한다.

5) 재산형은 1992년 조직범죄방지법에 의하여 형법에 도입되어 확장적 박탈과 마찬가지로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불법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재산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재산의 박탈을 통해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여한 사람의 재범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재산형은 애당초 그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장적 박탈보다도 더 가혹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집단적 범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v. 20. 3. 2002 I 1340)는 동조문이 독일기본법 제103조 제2항(GG Art. 103 Abs. 2)과 합치하지 않으며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② 운전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금지의 기간 동안 독일관청에서 발급한 국내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관청에 보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럽경제 협약을 체결한 기타 조약체결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그 소지자가 국내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기타 외국의 운전면허증에는 운전 금지의 사실을 기재한다.

③ 운전면허증이 관청에 보관되거나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운전금지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운전금지기간은 보관 또는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에 유치된 기간은 운전금지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수효과

제45조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 ① 중죄로 인해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자격과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 자격을 상실한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박탈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담임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의 상실과 함께 동시에 해당 법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상실한다.

-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내에서 공법상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5조a 【상실의 개시 및 상실기간의 기산】 ① 자격, 법적지위 및 권리의 상실은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 ② 자격 또는 권리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이 집행종료되거나 그 시효가 완성되거나 또는 자유형이 면제된 그날로부터 기산된다. 자유형에 부가하여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보안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또는 사면에 의해 형, 잔형, 보안처분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 보호관찰의 경과 이후에 형 또는 잔형이 면제되거나 또는 보안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된다.

제45조b 【자격 및 권리의 재부여】 ① 법원은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실된 자격과 제45조 제5항에 의해 상실된 권리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부여할 수 있다.

1. 자격 등 상실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에 고의의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시설에 유치되었던 기간은 상실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절 형의 양정

제46조 【양형의 원칙】 ① 형의 양정은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한다. 형을 통해 행위자의 장래 사회 생활에 관해 예상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상호 비교교량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

의무위반의 정도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 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

③ 이미 법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a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형은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으로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 포기를 요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제47조 【단기자유형의 제한】 ① 법원은 범죄행위 또는 행위자의 인격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이 행위자의 교화 또는 범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6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②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6월 이상의 자유형이 고려되거나 또는 그것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법률이 자유형의 하한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 제1문에 의한 벌금형의 하한은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자유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경우 벌금형 30일수는 자유형 1월에 해당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 【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 ① 이 조항에 의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그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자유형은 3년 이상의 자유형
2.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법률에 정한 상한의 최고 4분의 3까지 선고해야만 된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벌금일수의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중된 자유형의 하한은 다음과 같이 감경된다.

하한이 10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하한이 3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

하한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월,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 하한

② 이 조항을 원용하는 법률에 의해 법원이 작량하여 감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형의 법정 하한 이하로 감경하거나 또는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 【감경사유의 경합】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정과 함께 경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제49조에 의한 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은 1회에 한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51조 【형의 산입】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사소송절차의 대상이거나 그 대상이 되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결 구금되었거나 기타의 자유박탈을 받은 경우에 그 기간을 자유형 및 벌금형에 산입한다. 다만, 법원은 범행 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확정된 형이 사후의 소송절차에서 다른 형으로 대체된 경우에 종전의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산입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형에 산입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해 국외에서 처벌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받은 형은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형에 산입된다. 국외에서 선고받은 기타의 자유박탈에 대해서도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벌금형을 산입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산입함에 있어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선고 받은 형 또는 자유박탈을 산입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의해 그 기준을 정한다.

⑤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기간(형사소송법 제111조a)을 제44조에 의한 운전금지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전면허증의 보관, 압류 또는 압수(형사소송법 제94조)는 제1문에 의한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로 본다.

제3절 수개의 법률위반에 있어 형의 양정

제52조 【상상적 경합】 ① 동일한 행위가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법법규를 수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의 형만을 선고한다.

② 수개의 형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형은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그 형은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워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41조의 조건하에서 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재산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적용 가능한 법률중의 하나가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해야만 하거나 또는 선고할 수 있다.

제53조 【경합범】 ① 동시에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개의 범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수개의 자유형 또는 수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② 벌금형과 함께 자유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1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1개의 병합벌금형을 선고한다.

③ 행위자가 제43조a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제52조 제4항의 경우에 단일형으로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정해지는 병합형에 부가하여 따로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형을 선고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병합재산형을 선고한다. 제43조a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제2문은 그 의미대로 적용된다.

제54조 【병합형의 형태】 ① 단일형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병합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병합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중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 중한 형을 가중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는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제1항 제3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에서 병합형을 정할 경우에 단일형의 합산에 있어 벌금형의 1일수는 자유형의 1일에 해당한다.

제55조 【사후적 병합형의 형태】 ①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선고된 형의 집행 종료, 시효완성 또는 그 면제 이전에 확정판결 전에 행하였던 다른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3조 및 제54조는 준용된다.

②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 부가형, 부수효과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은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유지된다. 이는 종전의 판결에서 선고된 재산형의 금액이 새로운 판결 당시의 행위자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제56조 【집행유예】 ①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의 선고 자체로 행위자에게 이미 위하의 목적을 달성하고 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 행위자가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 상황, 범행 후 태도, 생활태도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행위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건하에서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집행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결정에 있어 특히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형의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유예는 그 형의 일부로 제한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미결구금 또는 기타 자유박탈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56조a 【보호관찰기간】 ① 보호관찰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함께 시작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사후에 (법정) 하한 기간까지로 단축하거나 또는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전에 (법정) 상한 기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제56조b 【의무사항⁶⁾】 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최선을 다하여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할 것
2. 범죄행위와 행위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공익시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를 제공할 것
4. 국고에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법원은 의무사항의 이행이 손해의 원상회복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하여 적정한 급부를 스스로 제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안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제56조c 【준수사항】 ①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 관찰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특히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다.

- 6) 독일형법에서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속죄 내지 응보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과거지향적 사항으로 형벌적 성격을 가진 **Auflagen**과 재사회화의 이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또는 명령의 예방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미래지향적 사항으로 **Weisungen**을 구별하고 있다.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서, 다른 문헌에서는 **Auflagen**을 부담 조치, 부담사항 혹은 조건이라고 번역하고, **Weisungen**을 지시사항 혹은 지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고려하여, 의무사항(**Auflage**)과 준수사항(**Weisung**)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1. 거주, 교육, 근로 또는 여가에 관한 지시나 경제관계규제에 관한 명령에 따를 것
 2. 지정된 시간에 법원 또는 기타 관청에 보고할 것
 3. 피해자 또는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속한 자와 접촉하거나 교제하거나 고용하거나 훈련하거나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4. 장래 범죄행위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말 것
 5.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
- ③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1. 신체적 침해와 관련된 치료 또는 금단치료를 받을 것
 2. 적절한 공공수용시설 또는 적절한 기관 내에 거주할 것
-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장래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적절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약속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제56조d【보호관찰】 ① 법원은 범죄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② 9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27세 미만인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원조하고 보호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과 협력하여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의 이행 및 급부제안과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보고한다. 보호관찰관은 의무사항, 준수사항, 급부제한 또는 약속에 대한 현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법원에 통지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임명한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제3항에 의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의 활동은 상임직 또는 명예직으로 수행된다.

제56조e【사후판결】 법원은 제56조b 내지 제56조d에 의한 판결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f【집행유예의 취소⁷⁾】 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1. 보호관찰기간동안 재범함으로써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2. 준수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면탈함으로써 새로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무사항을 현저히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제1문 제1호는 집행유예의 판결이후 그 확정 이전 또는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 관련된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판결과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확정 사이에 재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3항에 의하여 가석방 및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연방형법규정은 형법 제2조 제3항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입 발효 이전에 구동독에서 범하여진 범죄행위를 이유로 선고된 보호관찰(구동독 형법 제33조) 또는 자유형 등에도 적용된다 (1997 법무부번역서 참조).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로써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추가적인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두는 것
2. 보호관찰기간 또는 감독기간을 연장하는 것

제2호의 경우에 보호관찰기간은 처음에 정한 보호관찰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의무사항, 급부제안, 준수사항 또는 약속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배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56조b 제2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의 이행 또는 제56조b 제3항에 의한 급부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제56조g【집행유예의 효과⁸⁾】 ①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관이 경과된 경우에 법원은 선고된 형을 면제한다. 제56조f 제3항 제1문은 준용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고의 범죄로 인해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형 면제의)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6조f 제1항 제2문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원문은 “Straferlass”, 즉 “형의 면제”이지만 그 내용이 집행유예 선고의 효과로서 형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60조의 “형의 면제(Absehen von Straf)”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집행유예의 효과”로 번역한 1997년 법무부 입장을 따르도록 한다.

제57조 【유기자유형의 가석방】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1. 최소 2월 이상인 선고형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
2.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 시 위협되는 법익의 무게,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1항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 유기자유형의 2분의 1이 이미 경과된 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잔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처음 자유형을 집행받고 그 자유형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죄행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및 행형 중 그의 교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 제56조a 내지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사후에 이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잔형의 기간보다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최소 1년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명한다.

④ 자유형에 (미결구금기간 등이)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

⑤ 제56조f 및 제56조g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결정 사이에 집행유예의 결정 시 법원에 의해 사실상의

이유로 고려될 수 없고 집행유예의 취소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범했던 경우에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한다.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정이 마지막으로 심사될 수 있는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이 있다.

⑥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박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제73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의 소재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기자유형의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6월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a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잔형 집행을 유예한다.

1. 15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제57조 제1항 제2문 및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받은 각 자유박탈은 제1항 제1문 제1호의 집행된 형으로 본다.
- ③ 보호관찰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6조a 제2항 제1문 및 제56조b 내지 제56조g, 제57조 제3항 제2문 및 제5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법원은 그 경과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b【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병합형으로 무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특히 중한 책임(제57조a 제1항 제1문 제2호)을 확정함에 있어 개개의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 ① 수개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제56조에 의한 집행유예는 병합형의 형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55조 제1항의 경우에서 종전 판결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전부 또는 잔형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병합형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하는 경우에 새로운 보호관찰기간의 하한은 이미 경과한 보호관찰기간까지 단축한다. 다만, 1년 이하로 단축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병합형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제56조f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절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① 180일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한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형의 선고 없이도 장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2. 범죄행위 및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 법질서방위를 위하여 형의 선고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6조 제1항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박탈,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할 수 있다. 보안 처분과 함께 형의 선고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a 【보호관찰기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① 법원은 보호관찰기간을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해야만 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로 유예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부양의무의 이행
3.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일정 금액의 납부
4. 외래 치료 또는 외래 금단치료의 수용
5. 교통강의 수강

이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행위자가 범한 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제56조c 제3항 및 제4항, 제56조e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9조b 【유예된 형의 선고】 ① 유예된 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56조f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자가 유예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된 것으로 한다.

제59조c 【병합형과 선고유예】 ①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한 선고유예를 정함에 있어 제53조 내지 제55조는 동일하게 준용된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선고유예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후에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제55조의 경우 선고유예 된 형과 선고된 형이 동종인 경우에는 병합형의 형태에 관한 규정(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을 준용한다.

제60조 【형의 면제】 법원은 행위자에게 발생한 범죄행위의 (법적) 결과가 형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정도로 중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이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절 보안처분

제61조 【개관】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병원수용
2. 금단(치료)시설수용
3. 보안감호수용
4. 행장감독⁹⁾
5. 운전면허박탈
6. 직업금지

제62조 【비례성의 원칙】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해 범해졌고 또 예견되는 행위의 의미와 아울러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의 정도가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해져서는 아니 된다.

9) 종래 법무부에서 발간한 독일 형법 번역서에서는 Führungsaufsicht와 Bewährungshilfe를 모두 보호관찰로 번역하고 있으나, Bewährungshilfe를 형벌도 아니고 보안처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Sturm, “Die Strafrechtsreform”, JZ 1970, S. 84 참조) 독일 형법에서는 Führungsaufsicht(행장감독 혹은 보안관찰)와 Bewährungshilfe(보호관찰)를 법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독일 실무에서도 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양자 모두를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있어, 집행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63조 【정신병원수용】 책임무능력(제20조) 또는 한정책임능력(제21조)의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의 그러한 상태에 기인하여 상당히 위법한 행위가 예견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위험하다는 점이 행위자 및 행위의 종합평가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법원은 정신병원 수용을 명한다.

제64조 【금단(치료)시설수용】 습벽, 알코올 음료 또는 다른 각성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고 중독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 또는 습벽에 기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을 증명했거나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단(치료)시설수용을 명한다. 금단(치료)시설에서 처치를 통해 치료되거나 또는 습벽 내에서의 재범을 상당 기간 방어하고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가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명한다.¹⁰⁾

제65조 (삭제)

제66조 【보안감호수용】 ① 고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과 함께

10) 1994년 3월 16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BGBI. I S. 3012)하였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치료성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64조가 동조 제1항의 조건 하에 수용명령을 예정한다면, 제64조는 독일기본법(GG)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문에 불합치하며 무효이다”. 이에 따라 제16차 입법회기의 개정안에 의하여 제2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보안감호수용을 명한다.

1.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 이전에 범한 고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각각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2회 선고받은 경우
 2.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 이전에 한 개 또는 수개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집행 받았거나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3. 행위자와 그의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행위자가 그의 습벽에 기인하여 중대한 범죄, 특히 그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중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반시민에게 위험하다고 나타난 경우
- ② 3개의 고의범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 각각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되었고, 그중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로 인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 또는 자유박탈(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전력이 없더라도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 ③ 중범죄 또는 제174조 내지 제174c조, 제176조, 제17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80조, 제182조, 제224조, 제2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23a조, 더 나아가 중독상태에서 중범죄 또는 앞에서 언급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원인 범죄)를 범하기 전에 한 개 또는 수 개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1회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벌과 함께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제1문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를 2회 범하고, 그로 인하여 각각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되었고 그 중 한 개 또는 수 개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 또는 자유박탈(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전력이 없더라도 형벌에 부가하여 보안감호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 병합형의 선고는 제1항 제1호의 한 개의 독립된 선고로 본다. 미결구금 또는 다른 자유박탈이 자유형에 算定¹¹⁾되는 경우, 이는 제1항 제2호의 집행을 마친 형벌로 본다. 예전의 범죄행위와 다음의 범죄행위 사이에 5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전의 범죄행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밖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는 독일 형법에 따른 고의행위이고 제3항의 경우 제3항 제1문에서 언급된 유형의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이 적용범위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로 본다.

제66조a 【보안감호수용의 유보¹²⁾】 ①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범죄 행위 중 하나로 인하여 선고함에 있어 행위자가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시민에 대한 위험성 여부가 충분하게 확신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제66조 제3항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보안감호명령을 유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454조b 제3항 및 그와 관련하여 제57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57조a 제1항 제1문 제1호에 의한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보안감호의 명령에

11) angerechnet(算定)와 eingerechnet(算入)는 전자는 계산에 고려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된다면, 후자는 계산에 넣는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12) 2002년에 ‘유보적 보안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vorbehaltenen Sicherungsverwahrung vom 21. 8. 2002)’을 통해 형법에 신설되었다. 여기서 Vorbehalt(유보)는 판단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우로 집행을 중지하거나 뒤로 미루는 Aussetzung(유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법체계와 비교하면 전자는 선고유예, 후자는 집행유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형벌집행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위 및 그의 변화 등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행위자로부터 현저한 범죄 행위가 예상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안감호를 명한다.

③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에 대한 결정은 먼저 제2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야만 한다. 이는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6조b 【보안감호수용의 사후적 명령¹³⁾】 ① 생명,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중범죄 또는 제250조, 제251조에 의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제252조, 제255조에 의한 중범죄 또는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중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 이후, 자유형집행의 종료에 앞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일반시민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벌집행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동,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하여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고 제66조의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보안감호 선고가 판결 시점에 법적인 근거로 인해 불가능했던 경우, 법원은 판결 시점에 이미 인정된 사실을 제1문의 사실로 고려한다.

② 생명,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또는 제250조, 제251조, 그와 관련하여 제252조 또는 제255조에 의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중범죄로 인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13) 2004년에 ‘사후적 보안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der nachträglichen Sicherungsverwahrung vom 18. 06. 2004)’을 통해 형법에 신설되었다.

제1항 제1문에 언급된 유형의 사실들이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벌집행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행위 또는 행위들 그리고 추가로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종료를 결정하는 시점에 수용의 근거가 되는 책임능력이 배제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상태가 행위자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67조d 제6항에 의한 정신병원수용이 종료된 것으로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다.

1. 제66조 제3항 제1문에 언급된 수 개의 행위들로 인해 제63조에 의한 수용이 명해졌거나 또는 제63조에 의한 수용의 원인행위에 앞서 범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1회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경우
2. 보안처분의 집행 동안 행위자, 그의 행위들 그리고 추가로 그의 변화에 대한 전체평가를 통해, 중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경우

제67조 【집행의 순서】 ①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수용이 자유형에 부가되어 명해지는 경우에 보안처분을 형벌에 앞서 집행한다.

② 법원은 형벌 또는 형벌의 일부가 보안처분에 앞서 집행되는 것을 통해 보안처분의 목적이 쉽게 달성되는 경우에는 형벌 또는 형벌의 일부를 보안처분에 앞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3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에 부가하여 금단(치료)시설수용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형벌의 일부를 보안처분에 앞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형벌의 일부는 형벌의 집행 및 그와 연결된 수용 이후에 제5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출국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의 체류가 형벌집행 중 또는 형벌집행 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앞서 형벌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③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2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의한 명령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 제4문에 의한 명령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항 제4문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체류종료가 형벌집행 중 또는 형벌집행 이후에 더 이상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취소한다.

④ 보안처분이 형벌에 앞서 전부 또는 일부 집행되는 경우, 보안처분의 집행기간은 형벌의 3분의2까지 종료된 것으로 산정된다.

⑤ 보안처분이 형벌에 앞서 집행되는 경우, 법원은 형벌의 절반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하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가석방하지 않는 경우, 보안처분의 집행은 계속된다. 다만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a 【다른 보안처분집행으로의 이송】 ①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시설 수용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보안처분 집행으로의 이송을 통해 행위자의 재사회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사후에 다른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하에 법원은 보안감호가 선고된 행위자를 사후에 제1항에서 언급된 보안처분 중 하나의 집행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게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③ 법원은 행위자의 재사회화가 이를 통해 더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후에 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언급된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사후에 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수용과 심사를 위한 기한은 판결에서 명하여진 수용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처음 1년이 경과된 후에, 제2문의 경우 수용의 집행개시까지 각각 늦어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항 제2문에 의한 결정을 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67조b 【(수용)명령과 동시에 유예】 ① 법원이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시설 수용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 의해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정신병원수용 및 금단시설수용의 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한다. 자유형이 보안처분과 동시에 판결되고 보호관찰조건부 형집행유예를 받지 않아서 행위자가 자유형을 집행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②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제67조c 【수용의 사후개시】 ① 동시에 명하여진 보안처분수용에 앞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형벌집행의 종료에 앞서 보안처분의 목적이 보안처분수용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 조건부 보안처분수용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② 수용의 집행이 수용명령의 확정이후 3년 동안 개시되지 않고 제1항 또는 제67조b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용은 법원이 그것을 명하는

경우에만 단지 집행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보안처분의 목적이 수용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명한다. 보안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유예를 통해서 보안처분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입증시키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보안처분수용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보안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법원은 수용의 종료를 선고한다.

- 제67조d 【수용의 기간】** ① 금단시설수용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기간은 수용의 개시로부터 진행된다. 자유형에 앞서 그와 함께 명해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보안처분집행의 기간이 형벌에 산정(angerechnet)되는 한, (보안처분의) 상한은 자유형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 ② 상한이 정해있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수용자가 보안처분집행 없이도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수용의 계속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한다. 보안처분유예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 ③ 보안감호수용이 10년 집행된 경우, 법원은 피수용자가 자신의 습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하게 침해를 주게 되는 중한 범죄를 범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종료를 선고한다. 종료와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 ④ 상한이 경과한 경우, 피수용자는 석방된다. 보안처분은 그와 함께 종료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 ⑤ 제64조 제2문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금단시설수용을 종료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⑥ 법원은 정신병원수용의 집행개시이후에 보안처분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보안처분의 계속집행이 비례성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안처분의 종료를 명한다. 수용집행으로부터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을 개시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행장감독 없이도 범죄행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장감독을 개시하지 않는 것을 명한다.

제67조e 【심사】 ① 법원은 수용의 계속집행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할 것인지 또는 종료를 명할 것인지를 언제라도 심사할 수 있다. 특정된 기간의 경과에 앞서 이를 심사해야만 한다.

② 수용에 있어 (특정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금단시설수용은 6개월

정신병원수용은 1년

보안감호수용은 2년

③ 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원은 그(기간의) 경과에 앞서 심사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기간을 법적 심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다.

④ 기간은 수용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법원이 유예 또는 종료명령을 기각하는 경우, 기간은 결정과 함께 새롭게 개시된다.

제67조f 【보안처분의 중복명령】 법원이 금단시설수용을 명하는 경우, 먼저 선고된 보안처분은 종료된다.

제67조g 【유예의 취소】 ① 법원은 피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보안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수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유예를 취소한다.

1. 행장감독기간동안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2. 제68조b에 의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또는 끊임없이 위반한 경우
3. 보호관찰관 또는 행장감독청¹⁴⁾의 감독과 지도에서 끊임없이 벗어난 경우
보안처분유예의 결정과 행장감독 개시(제68조c 제4항) 사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문 제1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법원은 행장감독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상태에 의하여 그 자로부터 위법한 행위가 예상되고, 따라서 보안처분의 목적상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수용의 유예를 취소한다.
- ③ 법원은 행장감독기간동안 행위자에게서 지득된 유예를 거절할 만한 상황을 통해 보안처분의 목적상 피선고자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유예를 취소한다.
- ④ 취소 전후의 수용기간은 전체적으로 보안처분의 법정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법원이 수용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안처분은 행장감독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 ⑥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배상되지 아니한다.

제67조h【기한부 재집행 : 위기개입¹⁵⁾】 ① 보안처분수용에서 면제된 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거나 또는 중독상태에서 재범을 하여 제67조g에 따른

14) 독일에서는 행장감독과 보호관찰을 법률적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행장감독의 감독청은 보호관찰소가 아닌 별도의 행장감독청(Aufsichtsstelle)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2005년 11월에 제16차 입법회기가 시작되면서 보안처분과 관련한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결국 2007년 5월 ‘행장감독개혁 및 사후적 보안감호규정의 보완’에 따라 제67조h에 “위기개입(Krisenintervention)”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다시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기간 동안에 유예된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보안처분수용을 최고 3월까지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1문의 조건하에 법원은 처분을 새롭게 명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분의 기간은 전체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g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법원은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경과 이전에 처분을 취소한다.

행장감독

제68조 【행장감독의 조건】 ① 법률이 특별히 행장감독을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최소 6월 이상의 유기 자유형을 받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형벌과 함께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

② 법률(제67조b, 제67조c, 제67조d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68조f)에 의한 행장감독에 관한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68조a 【감독청¹⁶⁾, 보호관찰, 법정병원】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그에게 행장감독기간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임명한다.

② 보호관찰관 및 감독청은 서로 협조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 및 원호한다.

③ 감독청은 법원 및 보호관찰관과 협조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행동과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16) 감독청(Aufsichtsstellen)의 권한과 임명에 관여하는 1974년 3월 2일 형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 EGStGB) 제295조(BGBl. I S. 469)에 규정되어 있다.

- ④ 감독청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한 도움과 원호에 관한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 ⑤ 법원은 감독청과 보호관찰관에게 그들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⑥ 감독청은 제145조의a 제2문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듣는다.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⑦ 제68조b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법정병원은 제2항에 언급된 자에 협력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 및 원호한다. 그밖에 법정병원이 보호관찰관의 지위에 서는 한, 법정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제3항 및 제6항이 적용된다.
- ⑧ 제1항에 언급된 자 및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언급된 법정병원의 조력자는 피선고자를 원호하고 그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03조를 통해 보호되는 관계의 범주 내에서 위탁되거나 인지된 타인의 비밀을 서로 공개한다. 그와 함께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언급된 법정병원의 조력자는 그들의 견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한, 그러한 비밀을 감독청 및 법원에 대하여 공개한다.
1. 피선고자가 제68조b 제1항 제1문 제11호에 의한 준수사항을 따르고 있거나 제68조b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의한 준수사항의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선고자의 관계 또는 상태가 제67조g, 제67조h, 또는 제68조c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3. 제3자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현저한 위험, 신체적 불가침, 개인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문 및 제2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법정병원의 조력자로부터 공개된 제203조 제1항의 사실은 위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8조b 【준수사항¹⁷⁾】 ①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행장감독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주거지 또는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말 것
2.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 머물지 말 것
3.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피해자 또는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접촉하거나 교류하거나 채용하거나 훈련시키거나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4.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말 것
5.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말 것
6.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자동차,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보유하거나, 운전하지 말 것
7. 특정한 시간에 감독청, 특정한 관청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8. 주거지 또는 직장을 변경할 때마다 즉시 감독청에 신고할 것
9. 실직한 경우 관할 직업중개소 또는 직업알선이 허락된 다른 관청에 신고할 것

17) 2007년 5월 독일연방의회에서 행장감독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68조b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가 신설되어 준수사항범위가 확장되고, 특히 동항 제3호에 접촉금지 및 교통금지가 포함되면서, 예컨대 피선고자가 석방된 이후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새롭게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거나, 성범죄자의 경우 모르는 아동과 접촉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알콜, 기타 각성제의 소비가 재범을 유발한다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지 말고, 신체적 침해와 관련되지 않는 알콜이나 중독물질통제를 받을 것
11. 특정시간에 또는 정해진 간격으로 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법정병원에 갈 것

법원은 준수사항에 금지행위 또는 요구행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행장감독의 전부 또는 일부기간 동안 특히 (직업) 훈련, 직업, 여가, 경제적 관계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된 더 자세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피선고자에게 특히 정신, 심리 또는 사회치료를 받도록 하라고(치료준수사항) 지시할 수 있다. 신체적 침해와 관련되지 않는 알콜 또는 중독물질통제를 받으라는 준수사항을 위하여 제56조c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준수사항에 있어 피선고자의 생활방식에 있어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장감독의 개시와 함께 제68조e 제1항 제1문 제3호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행장감독이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전 행장감독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준수사항을 판결로 포함해야 한다.

⑤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 피선고자의 원호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치료가 법정병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68조a 제8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8조c 【행장감독의 기간】

① 행장감독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법원은 상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계속해서 현저한 범죄를 범하여 일반인을 위협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1항 제1문에 의한 상한의 제한을 넘어서는 무기한의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

1. 제56조의c 제3항 제1호에 의한 준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치료 또는 금단요법을 받으라는 준수사항에 복종하지 않거나 또는 치료준수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문 제1호의 경우에 피선고자가 사후 동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행장 감독의 계속되는 기간을 확정한다. 그밖에 제68조e 제3항이 적용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제1문에 의한 행장 감독의 상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7조d 제2항에 의한 정신병원수용의 유예의 경우에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선고자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재차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하여 일반시민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피선고자에 대하여 제181조b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로 인해 2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병합자유형이 집행되거나 또는 정신병원이나 금단시설에 수용이 명해지고 제68조b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차 현저한 범죄를 범하여 일반 시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

④ 제68조 제1항의 경우 행장감독은 이러한 명령의 확정과 함께 개시되고, 제67조b 제2항, 제67조c 제1항 제2문 및 제2항 제4문 및 제67조d 제2항 제2문의 경우에 행장감독은 유예결정의 확정 또는 법정에서 명해지는 사후시점에 개시된다.

제68조d 【사후 결정】 법원은 제68조a 제1항 및 제5항, 제68조b 및 제68조c 제1항 제2문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의한 결정을 사후에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e【행장감독의 종료】 ① 무기한이 아닌 한, 다음과 같이 행장감독은 종료된다.

1.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개시
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부가하여 명하여진 자유형의 집행개시
3. 새로운 행장감독의 개시

그 밖의 경우에 행장감독은 자유형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기간 동안 정지된다. 새로운 행장감독이 기존의 무기한의 행장감독에 부가되는 경우에, 새로운 처분이 기존의 처분에 부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은 새로운 보안처분의 취소를 명한다.

② 법원은 피선고자가 행장감독 없이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행장감독을 취소한다. 취소는 빨라도 법정 하한기간을 경과한 후에 허용된다. 법원은 그 경과이전에는 행장감독의 취소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기간을 최고 6월로 정할 수 있다.

③ 무기한 행장감독이 부과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항 제1문에 의한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제68조c 제2항 제1문의 경우에는 늦어도 제68조c 제1항 제1문에 의한 상한의 경과와 함께
2. 제68조c 제3항의 경우에는 2년의 경과 전

법원이 행장감독의 종료를 기각한 경우에 법원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장감독의 종료에 대하여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제68조f【가석방 없이 종료한 때의 행장감독】 ① 고의범죄로 인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병합자유형 또는 제181조b에 언급된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 자유형이나 병합자유형을 전부 집행 받은 경우, 형집행으로부터 피선고자의 석방과 함께 행장감독이 개시된다. 이는 형집행에

이어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선고자가 행장감독 없이도 범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경우, 법원은 보안처분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68조g【행장감독 및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① 형(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보호관찰조건부 직업금지를 유예하고 피선고자가 동일 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동시에 행장감독을 받는 경우에 감독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위하여 제68조a 및 제68조b가 적용된다. 행장감독은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전에 종료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및 행장감독이 동일한 범죄를 근거로 명하여지는 경우, 법원은 행장감독을 보호관찰기간의 경과시점까지 중단하는 것을 또한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행장감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후에 형벌 또는 잔형이 면제되거나 또는 직업금지가 종료되는 경우에 같은 범죄로 인하여 명하여진 행장감독도 함께 종료된다. 이는 행장감독이 무기한인 경우(제68조c 제2항 제1문 또는 제3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박탈

제69조【운전면허의 박탈】 ① 자동차운전 중 또는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거나 또는 자동차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단지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혹은 배제될 수 없어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의 행위로부터 자동차운전이 부적절하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박탈한다. 제62조에 의한 더욱 자세한 심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죄인 경우에 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에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1. 도로교통의 위험(제315조의c)
2. 음주운전(제316조)
3. 사고당시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중상을 입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행위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장소에서의 불법이탈(제142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행위들 중 하나와 관련된 명정상태(제323조a)

③ 운전면허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실효한다. 독일관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판결에 의해 몰수된다.

제69조a 【운전면허의 교부금지】 ① 법원이 운전면허를 몰수하는 경우, 법원은 동시에 6월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운전면허가 교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금지). 법정상한이 행위자로부터 나타나는 위험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교부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교부금지를 명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상황이 예외를 통해서도 보안처분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운전면허교부)금지로부터 교통수단의 특정한 유형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범죄이전 최근 3년 동안 1회 금지가 명령되었던 경우에는 금지의 하한은 1년으로 한다.

④ (당해)범죄로 인하여 행위자에게서 운전면허를 잠정적으로 몰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11조a), 교부금지의 하한은 잠정적 몰수의 유효기간만큼 단축한다. 이는 3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교부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개시된다. 교부금지가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확정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수 있었던 판결의 고지 이후에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범죄로 인하여 명령되었던 잠정적인 몰수의 기간은 (금지)기간에 산입된다.
- ⑥ 운전면허증의 보관, 압류 또는 압수(형사소송법 제94조)는 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증의 잠정적 몰수와 같다.
- ⑦ 행위자가 자동차운전이 더 이상 부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잠정적인 금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빨라도 교부금지가 3월, 제3항의 경우에는 1년 경과한 경우에 허용된다. 제5항 제2문 및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9조b 【외국운전면허에 대한 몰수의 효과】 ① 행위자가 독일관청에서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운전을 허락받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의 몰수는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권한박탈의 효력을 갖는다. 결정의 확정과 함께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권한은 사라진다. 교부금지기간 동안 외국운전면허를 다시 사용하거나 국내운전면허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면허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의 관청에서 교부된 것이고 면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는 판결에 의해 몰수되고 교부한 관청으로 돌려보낸다. 기타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몰수 및 교부금지를 외국 운전면허증에 기입한다.

직업금지

제70조 【직업금지명령】 ①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단지 책임무능력이 증명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직업, 직업 일부, 영업 혹은 영업 일부의 계속되는 수행 중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업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② 행위자에게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이 잠정적으로 금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32조a), 금지기간의 하한은 유효했던 잠정적인 직업금지 기간만큼 단축한다. 다만, 이는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금지가 유효한 동안,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당해)범죄로 인해 명하여진 잠정적인 직업금지 기간은 그 기간이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확정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수 있었던 판결의 고지 이후에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금지기간 안에 산입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70조a 【직업금지의 유예】 ① 직업금지의 명령 이후에 행위자가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부 직업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금지명령은 (직업)금지가 1년 소요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제70조 제4항 제2문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 직업금지기간은 직업금지기간 내에 산입된다.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해 시설 내에 감호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직업금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유예되는 경우, 제56조a와 제56조c 내지 제56조e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호관찰기간은 피선고자에 대해 (당해) 행위로 인해 집행된 자유형 또는 명해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70조b【직업금지의 유예와 종료의 취소】 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직업금지의 목적이 직업금지의 계속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난 경우에 직업금지의 유예를 취소한다.

1. 보호관찰기간 동안 직업 또는 영업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

2.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또는 끊임 없이 위반하는 경우

3.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를 끊임 없이 이탈하는 경우

②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그에게서 유예의 거부를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서 보안처분의 목적 상 직업금지의 계속 적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직업금지유예를 취소한다.

③ 직업금지유예의 기간은 직업금지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 또는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지불한 급부는 상환되지 아니한다.

⑤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이후에 법원은 직업금지를 종료한다.

공통규정

제71조 【독립명령】 ① 법원은 행위자의 책임무능력 또는 심리무능력으로 인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병원수용 또는 금단시설수용을 독립적으로 명할 수 있다.

② 운전면허박탈과 직업금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72조 【보안처분의 경합】 ① 수 개의 보안처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한 개의 보안처분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 한 개의 보안처분만을 명한다. 그 경우 수 개의 적절한 보안처분 중에 행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것을 우선한다.

② 그 밖의 경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은 병과된다.

③ 수 개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순서를 정한다. 한 개의 보안처분집행의 종료에 앞서 법원은 (보안처분의) 목적상 수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보안처분의 집행을 명한다. 제67조c 제2항 제4문 및 제5문은 준용된다.

제7절 박탈 및 몰수¹⁸⁾

제73조 【박탈의 요건】 ①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정범 또는 공범이 범죄 행위를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물건¹⁹⁾을 획득한 경우,

18) 우리 형법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물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추징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에 독일형법은 물건의 몰수(Einziehung)와 재산적 이익의 박탈(Verfall)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박탈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행위의 생성물 또는 그 수단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19) 이 때의 물건이란 단순한 유체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권리 또는 이익을 포함하는

법원은 이의 박탈을 선고한다. 이는 범죄행위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생한 청구권의 이행이 정범 또는 공범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치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박탈은 관련된 이익에도 선고한다. 박탈은 정범 또는 공범이 취득물의 매각을 통하여 또는 그 파괴, 손상, 탈취의 대가로서 또는 취득한 권리에 근거하여 획득한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정범 또는 공범이 타인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일정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박탈명령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물건의 박탈은 당해 물건이 범죄행위를 위하여 또는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한 제3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선고된다.

제73조a 【가액의 박탈】 특정 물건의 박탈이 그 취득물의 성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73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대체물의 박탈이 배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취득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의 박탈을 선고한다. 법원은 그 가치가 최초 취득물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의 박탈에 부가하여 가액의 박탈을 선고한다.

제73조b 【평가】 취득물의 범위 및 그 가치, 그 이행이 정범 또는 공범에게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물건의 물수를 가져오게 될 청구권의 금액은 평가될 수 있다.

개념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동산, 부동산, 권리 이외에 급부, 이용권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제73조c 【박탈의 면제²⁰⁾】 ① 박탈이 그 처분대상자에 대해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박탈의 명령은 취득물의 가치가 명령 당시 처분대상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취득한 물건이 경미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입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42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3조d²¹⁾ 【확장적 박탈】 ① 이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위법 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범과 공범의 물건에 대한 박탈을 명한다. 제1문은 정범과 공범이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이 정범과 공범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3조b와 관련한 제73조 제1항 제2문 및 제73조 제2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범죄행위에 의한 특정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박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73조a 및 제73조b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박탈명령 이후 정범 또는 공범이 명령 전에 범한 다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정범 또는 공범의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박탈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이미 선고된 박탈명령을 고려한다.

④ 제73조c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3조e 【박탈의 효과】 ① 물건의 박탈이 명하여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박탈 권리가 박탈명령의 확정 당시 그 명령의 대상자에게

20) 원문에는 ‘Härtevorschrift’로 ‘엄격한 경우에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박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박탈의 면제’로 표현하기로 한다.

21) 조직범죄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조직범죄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독일 형법 제73조d에 확장적 박탈(erweiterter Verfall)과 제43조a에 재산형(Vermögensstrafe)이라는 새로운 불법수익박탈제도를 도입하였다.

귀속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국가로 이전된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② 박탈명령은 그 판결의 확정 이전에는 민법 제136조에 의한 매각금지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금지는 매각으로서 기타 처분도 포함된다.

제74조 【물수의 조건】 ① 고의로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나온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이나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② 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판결 당시 몰수 대상물이 정범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2. 몰수 대상물이 그 종류 및 상황에 의해 일반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법행위의 실행에 제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대상물의 몰수는 제2항 제2호의 조건하에 정범이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제1항 이외에 특별규정을 통해 몰수를 규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a 【물수의 확장적 조건】 범륵이 이 조항을 원용하고 경우, 판결 당시 물건의 소유 또는 그 귀속의 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몰수되어야 한다.

1. 최소한 중과실로 당해 물건이나 권리가 범죄행위 또는 그 예비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도록 함에 기여한 경우
2. 몰수가 허용될 상황을 알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제74조b 【비례성의 원칙】 ① 물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74조 제2항 제1호, 제74조a의 경우에 있어 물수처분이 범죄행위의 의미 및 물수처분의 대상자인 정범이나 공범 또는 제74조a에 규정된 제3자의 책임과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제74조 및 제74조a의 경우에 있어서 물수의 목적이 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수의 유예를 명하고 보다 경한 처분을 선고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 고려된다.

1. 물건을 폐기할 것
2. 물건에 대한 특정한 장치 또는 기호를 제거하거나 물건을 변형할 것
3. 물건을 특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것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물수의 유예는 종료된다.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사후에 물수를 명한다.

③ 물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물수는 물건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다.

제74조c 【가액의 물수】 ① 정범 또는 공범이 행위 당시 그 소유에 속하거나 그에게 귀속되어 물수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물건을 물수판결 이전에 사용, 특히 매각 또는 소비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법원은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 그 물건 가액과 동등한 일정한 금액의 물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범 또는 공범이 물수판결 이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배상 없이는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없거나 또는 몰수하더라도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제74조e 제2항 및 제74조f) 물건의 물수에 부가하거나 물수에 갈음하여 제1항에 의한 가액의 물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이 물건의 물수에 부가하여 가액의 물수를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한도는 물건에 설정된 가치에 따라 정한다.

③ 물건 및 물건에 설정된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

④ 납입부담경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적용한다.

제74조d【문서의 몰수 및 폐기】 ① 그 내용을 알면서 고의로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게 되는 내용의 문서(제11조 제3항)를 반포하는 경우, 최소한 그 문서의 일부가 위법행위를 통해 반포되었거나 반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문서의 몰수와 동시에 문서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인쇄판, 판목, 인쇄용 조판, 전기판, 요형 활자판, 연판 등과 같은 기구의 폐기를 명한다.

② 몰수는 반포행위 또는 그 예비에 가담한 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공연히 전시중이거나 송부를 통한 반포 중으로서 아직 수취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문서에 한하여 한다.

③ 제1항은 그 내용을 알면서 고의의 반포행위가 그 이후의 범죄상황이 추가됨으로써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몰수 및 폐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한다.

1. 문서 및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물건이 정범, 공범 또는 정범이나 공범이 그를 위하여 행위한 타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반포가 특정되어 있을 것
2. 전호에 규정된 자들에 의한 불법반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처분이 필요할 것

④ 전시, 게시, 상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문서(제11조 제3항) 또는 최소한 문서의 일부가 공연히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이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반포로 본다.

⑤ 제74조b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e 【몰수의 효과】 ① 물건이 몰수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몰수대상 권리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국가로 이전된다.

②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법원은 제74조 제2항 제2호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몰수를 선고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한다. 법원은 제74조f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소멸을 명할 수 있다.

③ 몰수명령 및 몰수유예의 명령에 관하여서는 그 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3조e 제2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4조f 【보상】 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몰수대상 권리가 몰수 또는 폐기에 관한 판결의 확정 당시 제3자에 귀속되었거나 그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침해하게 되는 경우, 그 제3자는 국고로부터 그 거래액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보상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제3자가 최소한 중과실로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범행 또는 그 예비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도록 함에 기여한 경우
2. 제3자가 몰수 또는 폐기가 허용될 상황을 알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몰수 또는 폐기가 허용될 상황에 비추어 제3자로부터 보상 없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상의 거부가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허용할 수 있다.

제75조 【기관 및 대리인에 대한 특별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제74조 내지 제74조c 및 제74조f의 각호에 규정된 조건하에 물건 또는 그 가액몰수가 허용되거나 또는 보상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해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동기관의 구성원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사 또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
3. 인적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원
4. 법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인적 단체의 포괄대리인 또는 그 업무대리인이나 또는 행위대리인
5. 법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인적 단체의 사업 또는 기업의 대표로서 영업수행의 감독 또는 업무대리에 있어 통제권한의 기타 수행이라는 책임이 있는 기타 사람

제14조 제3항은 이를 적용한다.

공통규정

제76조 【사후 가액의 박탈 또는 몰수 명령】 물건의 박탈 또는 몰수 명령이 그 명령 이후에 제73조a, 제73조d 제2항 또는 제74조c에 규정된 조건중의 하나가 충족되거나 알려지게 되어 그 전부를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일부만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법원은 사후에 그 가액의 박탈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a 【박탈의 독립명령】 ① 사실상의 이유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해 특정인의 형사소추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물건 또는 그 가액의 박탈이나 몰수 또는 폐기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기타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거나 또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4조d의 조건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1.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법률에 다른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만,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폐기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은 법원이 형을 면제한 경우이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 또는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중지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제77조 【고소권자】 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및 자에게 이전된다. 피해자가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동거자 또는 자 없이 사망하였거나 그들이 고소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은 직계존속에게 이전되고, 직계존속도 고소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및 자의 직계비속에게 이전된다. 친족이 그 범죄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친족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친족은 고소권의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소권은 형사소추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고소권자가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인 경우에 일신상의 업무대리권이 있는 법정대리인 및 고소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고소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자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77조a 【직무상 상관의 고소】 ① 범죄행위가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의 군인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 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 당시 당사자가 소속된 각 직무상 상관인 고소권을 가진다.

② 직업법관의 경우 직무상 상관 대신 법관 직무의 감독권자가 고소권을 가진다. 군인의 경우 직무상 상관은 징계권을 가진 상관인 된다.

③ 직무상 상관이 없거나 없었던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속한 관청이 고소할 수 있다. 당해 공무원 또는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자신이 관청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관청이 고소권자가 된다.

④ 연방정부 구성원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구성원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고소권자가 된다.

제77조b 【고소기간】 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범죄는 고소권자가 3월의 고소기간을 경과하기까지 고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고소기간의 만료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익일인 평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

②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죄 또는 행위자를 안 날의 익일부터 기산된다. 범죄행위의 형사소추 가능성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고소권자가 판결의 확정을 안 날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산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시된다.

③ 수인이 고소권을 가지거나 또는 하나의 범죄에 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한다.

④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고소권이 친족에게 이전된 경우에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⑤ 화해관청에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화해시도의 이행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제3문에 의한 증명서가 교부될 때까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77조c 【쌍방가해 범죄행위】 상호 관련이 있고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쌍방가해 범죄행위에 있어 고소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제1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고소권은 소멸한다. 그 상대방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제77조d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②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동거자·자·직계존속·형제자매·자의 직계비속이 제77조 제2항에 의한 순위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순위가 같은 수인의 친족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77조e【권한위임 및 처벌요구】 범죄행위가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될 수 있는 경우에 제77조 및 제77조d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시 효

제1절 공소시효

제78조【시효기간】 ① 공소시효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처벌 및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이 면제된다. 제76조a 제2항 제1문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② 제211조(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1. 법정형이 무기 자유형인 범죄는 30년
2.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범죄는 20년
3.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10년
4.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인 범죄는 5년
5. 기타의 범죄는 3년

④ 공소시효는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하여 그 구성요건이 실현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78조a【시효의 기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78조b【시효의 정지】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제174조 내지 제174c조 및 제176조 내지 제179조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8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2. 법률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개시될 수 없거나 또는 속행될 수 없는 기간 이는 범죄행위가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② 행위자가 연방하원 의원 또는 주입법기관의 구성원이라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정지된다.

1. 검찰, 경찰관서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 또는 행위자를 안 날
2.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고소가 제기된 날(형사소송법 제158조)

③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시효기간은 그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이 특히 중한 사안에 대하여 가중형으로서 5년 이상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법원에서 그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 제7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공판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⑤ 국외에 체류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권한 있는 관청이 공식적인 인도요청을 제기한 경우에 요청의 개시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국외에서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독일 기관에 행위자의 인도시까지
2. 행위자가 인도요청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밖으로 내보내질 때까지
3. 국외를 통해 독일관청에 인도요청이 거절될 때까지
4. 인도요청이 철회될 때까지

국외에서 인도요청의 개시일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요청한 관청이 그 요청이 국외에 사실상 도달되지 않거나 또는 늦게 도달된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인도요청은 송부하여 1월이 경과된 후 또는 외국에 송부된 후에 도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문은 요청된 국가에서 유럽주요명령 및 회원국가 사이의 인도절차(ABl. EG Nr. L 190 S. 1)에 대한 2002년 6월 13일자 권고기준협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형사사안의 기간규정에 관한 국제적 사범공조에 대한 법률’ 제83조c에 존재하는 인도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8조c 【시효의 중단】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다.

1. 피의자에 대한 최초 신문, 수사절차 개시에 관한 고지 또는 그와 같은 신문이나 고지의 명령
2. 피의자에 대한 법관의 신문 또는 그 명령
3. 피의자에 대한 사전신문 또는 수사절차 개시에 관한 고지가 있었던 경우, 법관 또는 검사에 의한 감정의뢰
4. 법원의 압수·수색명령 및 그 유지에 관한 법관의 결정
5. 구속영장, 감호영장, 구인영장 및 그 유지에 관한 법관의 결정
6. 공소의 제기
7. 공판의 개시
8. 공판기일의 지정
9. 약식명령 또는 기타 판결에 준하는 결정
10.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법원의 잠정적 절차중지 및 그와 같은 절차중지 이후 또는 부재자에 대한 절차 중 피고인의 소재 수사나 증거 보전을 위하여 발하여진 법관 또는 검사의 각종 명령

11. 피고인의 공판무능력을 이유로 한 법원의 잠정적 절차중지 및 그와 같은 절차중지 이후 피고인의 공판능력 심사를 위하여 발하여진 법관 또는 검사의 각종 명령
12. 국외에서 심리를 행하기 위한 법관의 각종 요청
보전절차 및 독립절차에서의 공소시효는 제1문에 해당하는 보전절차 및 독립절차의 진행을 위한 행위에 의하여 중단된다.
- ② 공소시효는 서면에 의한 명령이나 판결 시 그 명령 또는 판결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중단된다. 서명 후 즉시 문서의 처리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문서의 처리절차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공소시효는 매 중단 이후 새로이 기산된다. 다만, 제78조a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법정 공소시효기간의 두 배가 경과한 경우 및 특별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3년 이하로 단축된 경우로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공소시효는 완성된다. 제78조b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④ 공소시효의 중단은 중단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⑤ 범죄행위 종료 시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공소시효기간이 단축된 경우, 신법의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중단행위는 시효가 중단된 시점에 신법에 의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2절 형집행 시효

- 제79조 【시효기간】** ① 확정된 선고형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은 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무기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형의 시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년 이상의 자유형은 25년
2.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은 20년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은 10년
4. 1년 이하의 자유형 및 30일수 이상의 벌금형은 5년
5. 30일수 이하의 벌금형은 3년

④ 보안감호의 집행 및 무기한 행장감독(제68조c 제2항 제1문 또는 제3항)에 관하여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행장감독의 경우 및 금단시설에 최초수용의 경우에는 5년
2.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10년

⑤ 자유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형에 부가하여 자유박탈 보안처분, 박탈, 몰수 또는 폐기가 선고된 경우에는 어느 형 또는 처분의 집행 시효는 다른 형 또는 처분의 집행 시효보다 먼저 완성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시에 명하여진 보안감호처분은 형 또는 다른 처분의 집행 시효완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⑥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79조a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법률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개시 또는 속행될 수 없는 기간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중의 각 사항이 허용된 기간
 - a) 집행의 유예 또는 그 중지
 - b) 법원의 판결 또는 사면에 의한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 c) 벌금, 박탈 또는 몰수의 경우에 납입부담의 경감
3.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국내외의 시설 내에 유치된 기간

제79조b 【시효의 연장】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인도 또는 이송이 불가능한 일정한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법원은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1차에 한해서 법정 시효기간의 2분의 1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 편

형 법 각 칙

형법각칙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제80조 【침략전쟁 예비】 독일연방공화국이 참가해야 할 침략전쟁(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예비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0조a 【침략전쟁 선동】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집회를 통하여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침략전쟁(제80조)을 선동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절 내란죄

제81조 【연방에 대한 내란】 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2.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2조 【주에 대한 내란】 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연방공화국의 다른 주에 합병하거나 주의 일부를 해당 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
2. 주헌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변형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 【내란 예비】 ① 연방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주에 대한 특정한 내란기도를 예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83조a 【능동적 후회】 ① 법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의 계속적 실행을 포기하고 나아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 계속하여 그 범죄를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83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그 범죄계획을 포기하고 그가 야기하여 인식하고 있는 ‘타인이 계속하여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할 것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그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험이 방지되었거나,

본질적으로 감소된 경우 또는 범죄의 완성이 방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84조 【위헌정당유지】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 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2.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

② 제1항에 언급된 정당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기본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정당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절차에서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타 본안판결이나 동 절차에서 선고된 본안판결의 집행 중에 명하여진 집행가능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절차는 제1문에 규정된 절차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의 경우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1문의 경우 행위자가 정당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제1문의

목적은 실현하였거나 행위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5조 【결사금지위반】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 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정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절차에서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③ 제84조 제4항 및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6조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¹⁾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1) 1997년 6월 13일자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안에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in Datenspeichern oeffentlich zugaenglich macht)’가 추가되었다.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② 제1항에 의한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제11조 제3항)만으로 한정한다.

③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a 【위헌조직 표시 사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표시를 국내에 반포하거나, 집회에서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반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전호에 규정된 표지를 표현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반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1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란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 등을 말한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물은 제1문에서 명시한 표시로 본다.

③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7조 【군사적 사보티지 목적의 스파이 활동】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의 예비를 위하여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군사적 사보티지를 위한 준비행위
2. 군사적 사보티지 대상의 탐지
3.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양여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4. 군사적 사보티지 수단의 저장장소 또는 태업활동 기지 등의 설치, 유지, 점검
5.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훈련받거나 타인을 훈련시키는 행위
6.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자(제1호 내지 제5호)와 상기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을 연결시키거나 이를 유지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09조e,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제310조b 내지 제311조a, 제312조, 제313조, 제315조, 제315조b, 제316조b, 제316조c 제1항 제2호, 제317조 또는 제318조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2. 기타 국가방위를 위하여, 전쟁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경제전반을 위하여 중요한 공장의 가동을 그 공장가동에 공할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탈취함으로써 그 공장가동을 방해 또는 교란하는 행위

③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에 관청에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8조 【반헌법적 군사적 사보티지²⁾】 ①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종자로서 또는 단체와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단체를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서 고의로 이 법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시키거나 그 정하여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우편 또는 공공교통에 공하는 기업이나 시설
2. 공공 목적에 공하는 전기통신설비
3. 수도, 전기, 난방 또는 에너지 등의 공적 공급에 공하거나 기타 국민의 생필품 공급에 중요한 기업이나 시설
4. 그 전부 내지 주요부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공하는 관청, 시설, 설비 또는 물건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9조 【연방군 및公安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이나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연방군 또는公安기관의 의무적인 긴급출동부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연방군 또는公安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2) ‘반헌법적 군사적 사보티지’의 원문상의 표현은 ‘Verfassungsfeindliche Sabotage’이다. ‘Verfassungsfeindliche’는 ‘헌법에 반대하는’, ‘반체제적’ 등으로 직역되며, 그 외에 ‘국헌문란’ 의미로도 의역도 가능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조는 군사적 사보티지에 의하여 헌법상의 제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 내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헌문란의 의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문 그대로 ‘반헌법적’으로 번역하였다. 제89조도 동일하게 번역한다.

계획적인 공작활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내지 안전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86조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0조 【연방대통령모독】 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87조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제187조)을 구성하거나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동조의 행위는 연방대통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90조a 【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³⁾】 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 또는 악의 비방

3) 본조의 구성요건은 그 내용상 우리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국기·국장모독죄, 국기·국장 비방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의 휘장, 기, 문장, 찬가의 비방
- ② 공적으로 게시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기 또는 관청이 공적으로 설치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사용불능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행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90조b 【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 ①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정부, 헌법재판소 또는 그 구성원을 국가의 권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관련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 된다.

제91조 【적용범위】 제84조, 제85조 및 제87조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범하여진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절 공통규정

제92조 【개념정의】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폐지시키거나 국가의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영토를 분리시킨 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한 것이다.

② 이 법에서 의미하는 헌법상 제원칙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2. 입법부의 헌법질서예의 기속,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률예의 기속
3. 야당의 조직 및 그 활동수행에 관한 권리
4.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5. 법원의 독립
6.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배제

③ 이 법에서 의미하는

1.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제1항).
2.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내외적 안전을 침해함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이란 그 수행자가 헌법상 제원칙(제2항)의 소멸, 무효화 또는 파괴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92조a 【부수효과】 법원은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92조b 【몰수】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제80조a, 제86조, 제86조a, 제90조 내지 제90조b의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물건
-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⁴⁾

제93조 【국가기밀의 개념】 ① 국가기밀이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을 말한다.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실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조약 당사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 국가간에 합의된 군비축소협정에 위반되는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4조 【간첩】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국가기밀을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원문은 ‘Gefährdung der äusseren Sicherheits’로서 직역하면 ‘외적안전위험죄’가 되나 우리 형법상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외환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규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를 ‘외환의 죄’로 번역하였다. 다만, 우리 형법상 외환의 죄는 그 개념 속에 간첩죄를 포함하고 있으나, 독일형법의 경우는 이를 외환의 죄에서 분리,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고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기타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공연히 공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한 국가기밀유지의무를 지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2.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특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제95조 【국가기밀누설】 ①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4조 제2항 제2문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6조 【간첩목적의 기밀탐지, 국가기밀 수집】 ① 간첩을 목적(제94조)으로 국가기밀을 수집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누설(제95조)할 목적으로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수집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7조 【국가기밀의 방기】 ①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과실로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기밀로서 그 직무, 직위 또는 관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을 중과실⁵⁾에 의하여 권한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과실에 의하여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연방정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97조a 【불법기밀의 누설】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을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간첩(제94조)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96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제1문에 규정된 기밀에 준용한다.

제97조b 【불법기밀로 오인한 국가기밀누설】 ① 제94조 내지 제97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국가기밀을 제97조a에 규정된 기밀로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5) 원문은 'leichtfertig'로서 '경솔하게', '부주의로 인하여'의 뜻이다. 여기서는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중과실'로 번역하였다. 이하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1. 행위자의 착오가 비난가능한 경우
2. 행위자가 추정되는 위반을 저지할 의도로 행위한 것이 아닌 경우
3. 정황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그 목적(추정되는 위반을 저지할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가 사전에 연방하원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가 공무원 또는 연방군 군인으로서 그에게 국가기밀이 직무상 국가기밀이 맡겨져 있었거나 또는 직무상 지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에 행위자가 공무원 직무상 상급공무원 또는 군인훈련상 상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처벌한다. 이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및 제353조b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8조 【간첩목적의 활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 또는 제96조 제1항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의 수집 또는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한 자
 2.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 대하여 제1호의 활동을 할 의사표시를 한 자
- 제1문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94조 제2항 제2문 제1호는 본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거나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관청에 진술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타국 또는 그 중개인에 의하여 그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에 자의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체없이 관청에 진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99조 【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제94조, 제96조 제1항, 제97조a 또는 제94조나 제9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용된 제97조b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국의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적대하는 사실, 물건, 지식의 전달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수행한 자
2. 타국의 정보기관 또는 그 중개인에 대하여 제1호의 활동을 할 의사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 권고에 따라 비밀로 하고 있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한 국가기밀유지의무를 지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2.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③ 제98조 제2항은 본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0조 【평화 위협적 관계 형성 등】 ① 생활근거를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내에 두고 있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전쟁 또는 무력도발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기관 또는 그 중개인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0조a 【간첩목적의 위조】 ① ‘위조 또는 변조된 물건’, ‘이에 관한 정보’

또는 ‘진정 또는 진실한 것인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이나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을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그 물건이나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타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타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물건을 제조 또는 취득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그 행위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 【부수효과】 법원은 이 장에서 규정한 고의의 범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1조a 【몰수】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물건 및 제100조a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물건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문 제2호에 규정된 물건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행위자가 책임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제102조 【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① 공적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의 원수, 정부 구성원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파견된 외국 외교 사절의 장의 신체 또는 생명을 공격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3조 【외국 기관 및 사절 모욕】 ①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공적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 정부의 구성원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파견된 외국 외교사절의 장을 그 지위와 관련하여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모욕의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행한 경우에는 제200조를 준용한다. 유죄판결의 공시는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 【외국 국기 및 국장 침해】 ①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승인된 관례에 따라 공적으로 게시된 외국 국기 또는 외국사절을 통하여 공적으로 설치된 외국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a 【형사소추 조건】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그 외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주의가 보장되고 있으며, 행위 당시에도 상호주의가 보장되었고, 외국정부의 처벌요구 및 연방정부의 형사소추를 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추된다.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제105조 【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

2. 연방회의 또는 그 위원회
 3.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헌법재판소
-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6조 【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강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연방대통령
 2. 다음 각 기관의 구성원
 - a)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 b) 연방회의
 - c)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헌법재판소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06조a (삭제)

제106조b 【입법기관 활동의 방해】 ①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이 입법기관의 건물 또는 그 부속 부동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정한 일반적·개별적 명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입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방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 연방상원 의원, 연방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입법기관 또는 그 의장의 명령인 경우에는 주입법기관 구성원이나 주정부 구성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선거방해】 ①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7조a 【선거조작】 ① 권한없이 투표한 자 또는 기타 부당한 선거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선거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7조b 【선거문서 위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허위신고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선거색인카드)에 등록한 자
2. 등록자격이 없는 타인을 그 정을 알면서 선거인으로 등록한 자
3. 선거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선거권자의 선거인으로서의 등록을 방해한 자
4.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입후보자로 등록되도록 한 자

② 사회보장의 예비선거를 위한 선거문서의 교부는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c【선거비밀 침해】 제3자의 투표내용을 자기 또는 타인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선거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가하거나 직업적·경제적 종속관계를 남용하거나 기타 경제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위법하게 타인에 대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선거권을 제한된 의미로 행사하도록 강요하거나 선거권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8조a【선거인에 대한 사기】 ① 타인을 기망하여 투표시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무효투표를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8조b【선거인매수】 ① 선거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공, 약속, 수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선거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기로 하고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08조c【부수효과】 법원은 제107조, 제107조a, 제108조 및 제108조b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

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8조d【적용범위】 제107조 내지 제108조c는 국민대표선거, 유럽의회의원 선거, 기타 연방·각 주·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선거 및 투표, 사회보장예비선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입후보추천의 서명 또는 국민 제안의 서명은 제1문에 의한 선거 또는 투표로 본다.

제108조e【의원의 매직】 ①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의 선거나 투표를 위하여 그 지지표를 매수 또는 매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공 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제109조【신체훼손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①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승낙을 받고 신체훼손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를 야기하거나 야기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또는 특정 종류의 군복무면탈을 위하여 전항의 부적합한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a【기망에 의한 병역의무면탈】 ① 기망을 포함하는 간교한 계략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전부 또는 특정 종류의 군복무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b - 제109조c (삭제)

제109조d【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 ①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그것이 유포될 경우 연방군의 활동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허위 또는 현저히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연방군의 국방임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장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e【방위수단에 대한 군사적 사보티지 행위】 ① 그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이 국가방위나 전쟁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에 공하는 방위수단, 설비, 시설을 권한 없이 파괴, 손상,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군대의 전투력, 인명을 위태롭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그 정을 알면서 제1항의 대상물 또는 그 용도로 지정된 제작재료를 불완전하게 제조하거나, 공급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제1항에 규정된 위험을 야기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 제2항의 경우에 그 정을 알지 못하였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09조f【국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보통신 활동】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외의 관청, 정당, 기타 단체를 위하여 또는 결사가 금지된 단체나 그 중개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해하는 계획을 실현한 자는 그 행위가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방업무에 관한 정보 수집
2. 국방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사의 운영
3. 제1호, 제2호의 활동에 대한 선전 또는 원조

통상적인 신문 또는 방송통신의 범위 내에서 일반에 대하여 보도하기 위한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g【국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사⁶⁾】 ① 방위수단, 군사시설이나 설비 또는 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사진 등으로 모사하거나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모사물이나 설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6) 본조의 ‘Abbildung’은 사진, 제도, 밀랍모형 또는 석고모형 등을 이용하여 군사시설 등의 영상을 재현한 것을 의미하며, ‘Beschreibung’은 언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② 항공기에서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내의 지역이나 대상물을 사진촬영하거나 그 필름 또는 인화된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 또는 군대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모사물 또는 설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그 정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행위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09조h 【외국을 위한 모병】 ① 외국을 위하여 군사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인을 모병하거나 모병자 또는 이러한 시설에 중개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9조i 【부수효과】 법원은 제109조a 및 제109조f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제45조 제2항 및 제5항)할 수 있다.

제109조k 【몰수】 제109조d 내지 제109조g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제109조g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사물, 설명서, 사진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문 제2호에 규정된 물건은 국가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행위자가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제110조 (삭제)

제111조 【공연한 범죄선동】 ① 집행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위법행위를 선동한 자는 교사범(제26조)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효과 없는 선동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형은 선동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2조 (삭제)

제113조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① 법률, 법규명령, 판결, 법원의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에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저항하거나 사실상 공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경우
2. 행위자가 폭행에 의하여 피공격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행위자가 직무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법원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책임이 경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고 그가 인식한 정황에 비추어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정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동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4조 【의제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①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법경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 자 또는 검찰 수사보조자의 직무집행행위는 제113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본다.

- ② 제113조는 직무행위의 지원을 위하여 관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 - 119조 (삭제)

제120조 【도주원조】 ①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교사 또는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자가 피구금자의 도주를 방지하여야 할 공무원 또는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기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 내에 유치되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피구금자로 본다.

제121조 【특수도주】 ① 다중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피구금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구금시설 관리, 기타 공무원 또는 피구금자의 감독·보호·신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를 강요(제240조)하거나 사실상 공격하는 행위

2. 폭력적 탈옥행위

3. 집합한 다중에 속한 피구금자 중 1인 또는 기타 다른 피구금자의 폭력적 탈옥을 원조하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 특수도주범은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기를 휴대한 경우

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무기를 휴대한 경우

3. 폭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④ 보안감호처분 중에 있는 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피구금자에 해당한다.

제122조 (삭제)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3조 【주거침입】 ① 타인의 주거, 사무실, 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하여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불법 침입한 자 또는 권한 없이 그 장소에 체류하는 자로서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124조 【특수주거침입⁷⁾】 다중이 공연히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사무실, 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해서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참가한 각 자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25조 【소요】 ①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에 의하여 범한 다음 각호의 행위에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가담한 자 또는 그 준비행위를 원조할 목적으로 다중에 협력한 자는 다른 법규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행
2. 사람에 대한 폭행을 고지한 협박

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행위가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13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7) 원문은 ‘Schwere Hausfriedensbruch’로 직역하면 ‘중한 주거침입’이 되지만, 우리 형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주거를 침입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구성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특수주거침입’으로 번역한다.

제125조a 【특히 중한 소요】 제125조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충기를 휴대한 경우
2.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흉기를 휴대한 경우
3. 폭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제224조)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4. 타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조a 제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3. 중상해죄(제226조)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조, 제234조a, 제239조a 또는 제239조b의 죄
5.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제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조)
6. 공공위험의 중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b 제3항, 제316조a 제1항 및 제3항, 제316조c 제1항 및 제3항, 제318조 제3항 및 제4항

7. 공공위험의 경죄 중 제309조 제6항, 제311조 제1항, 제316조b 제1항, 제317조 제1항 또는 제318조 제1항
-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27조 【무장단체조직】 권한 없이 무장단체를 조직·지휘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무기나 금품을 공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력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28조 (삭제)

제129조 【범죄단체조직】 ① 범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그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그 단체를 위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 또는 그 단체를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이 아닌 경우
2. 범죄의 수행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중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
3.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84조 내지 제87조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단체조직행위의 미수는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정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범죄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소송법 제100조c 제2항 제1호 a, b, c, d, e와 제239조나 제239조

b의 범죄행위를 제외한 g, h 내지 m,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에서 제시된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법원은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 또는 그 목적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행위자가 자의로 계획을 알고 있는 그 범행이 제지될 수 있을 만큼 적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관청에 진술한 경우
- 행위자가 단체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의 관여 없이도 그러한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29조a 【테러단체조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행을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모살(제211조) 또는 고살(제212조) 또는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또는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또는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제239조a 또는 제239조b
3. (삭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국민들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거나, 관청이나 국제기구를 위법하게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으로 강요하거나,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치적,

헌법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근본구조를 제거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침해’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범행 종류나 그 파장이 국가나 국제기구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담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1. 타인에게 중대한, 특히 제226조에 규정된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제303조b, 제305조, 제305조a의 범죄 또는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313조, 제314조 또는 제3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16조b 제1항, 제3항, 제316조c 제1항 내지 제3항, 제317조 제1항의 죄
3. 환경범죄 중 제330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4.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20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및 각각 제21조와 관련한 죄, 또는 제22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
5. 무기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협박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인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행위자가 단체의 수괴 또는 배후조정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원조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단체를 위해서 구성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⑥ 법원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 관여자에 대하여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 ⑦ 제129조 제6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⑧ 법원은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 공공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 ⑨ 법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129조b 【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확장적 박탈과 몰수】

- ① 제129조와 제129조a의 규정은 외국에서의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범죄행위가 유럽연합 소속국 이외에서의 단체와 관련된 경우라면 이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실현된 활동을 통하여 범해지거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독일인이거나 독일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문의 행위는 독일연방 법무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수권은 개별적 행위를 위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체와 관련된 장래의 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수권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단체의 목적이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국가질서의 근본가치나 국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을 비교할 때 비난가능하게 보여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29조 및 제129조a의 경우 및 각각 제1항과 관련하여서도 제73조d 및 제74조a를 준용한다.

제130조 【국민선동】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 a) 반포행위
- b)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a 내지 c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④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⑤ 제2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의 문서(제11조 제3항)에도 준용된다.
- ⑥ 제86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및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0조a 【범죄조장】 ①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데 적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범할 준비를 지원 또는 유발하는 내용을 가진 문서(제11조 제3항)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1.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데 적합한 문서(제11조 제3항)를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2.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③ 제86조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1조 【폭력물 반포 등】 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2조 【공직사칭】 권한 없이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하거나 공적 기관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를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2조a 【칭호, 직명, 휘장 등 모용】 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의 관청명, 직명, 학위, 칭호, 공적 작위의 사용
2.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선서한 회계사, 세무사, 세무수권자 직업명칭의 사용
3. 공적으로 임용된 감정인 명칭의 사용

4. 국내 또는 국외의 제복, 관복, 관청 휘장의 착용

② 구별이 불가능한 유사품은 제1항에 기재한 명칭, 학위, 칭호, 작위, 제복, 관복 또는 관청의 휘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교회 및 기타 공법상 종교단체의 관청명, 칭호, 작위, 제복, 휘장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제1항 제4호의 범죄행위 단독으로 또는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하여 관련된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

제133조 【보관물파괴】 ① 관청에 보관중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문서나 기타 동산을 파괴, 손상,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또는 직무상 처분을 면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은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에 직무상 보관중이거나 교회 또는 기타 공법상의 종교단체 등이 직무상 보관을 위하여 행위자 또는 타인에게 인도한 문서 또는 기타 동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③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적 임무를 위해서 행위자에게 특별하게 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물건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4조 【관청의 고시침해】 공고를 위하여 공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한 관청의 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 파괴, 제거, 손상,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5조 (삭제)

제136조 【강제처분표시파괴, 봉인파괴】 ① 압류중이거나 기타 직무상 강제보전중인 물건을 파괴, 손상,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물건을 압류하거나 직무상 봉하거나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상 봉인을 손상, 개괴, 식별불능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봉인에 의한 폐쇄효용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압류, 강제보전, 봉인표시가 적법한 직무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착오로 직무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3조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137조 (삭제)

제138조 【범죄불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청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침략전쟁의 예비(제80조)
2. 내란의 죄 중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항
3. 간첩 및 외환의 죄 중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a 또는 제100조
4.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 중 제146조, 제151조, 제152조 또는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 위조죄 중 제152조b 제1항 제1호 내지 제3항
5.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6.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233조 제3항의 죄 및 제234조, 제234조a, 제239조a 또는 제239조b의 죄
7. 강도 또는 강도적 공갈(제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조)
8.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b 제3항 또는 제316조a, 제316조c
- ② 제129조a 및 제129조b 제1항 제1문과 제2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129조a의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관청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129조b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위법행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9조 【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 ① 제138조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고지자의 형을 면제한다.

- ② 성직자는 사제의 신분에서 고백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 ③ 친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족의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모살 또는 고살(제211조 또는 제212조)
2. 인종학살 중 국제형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반인도적 범죄 중 국제형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전쟁범죄 중 국제형법 제8조 제1항 제1호

3. 테러단체(제129조a 및 제129조b 제1항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129조a)에 의한

공갈약취(제239조a 제1항)

인질강요(제239조b 제1항)

항공기·선박 운항에 대한 공격(제316조c 제1항)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호사, 변호인 또는 의사, 심리학적 심리치료사,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도 그 신분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직업적 보조자 및 이들과 직업적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도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④ 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지의무자의 관여 없이도 범죄의 실행 또는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의무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3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 또는 제176조 제3항, 제176조a 와 제176조b, 제177조와 제178조 또는 제17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위법행위가 범해진 이후 또는 가벌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착수된 이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

제141조 (삭제)

제142조 【사고장소 불법이탈】 ① 교통사고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지를 이탈한 사고관계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른 사고관계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에 남아 자신이 사고에 관계되었음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 차량 및 사고에 관계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타인이 확인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황에 비추어 적정한 시간을 대기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즉시 확인을 가능하게 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제1항 제2호) 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2. 정당하거나 면책적으로 사고지를 이탈한 경우

③ 사고관계자가 권리자(제1항 제1호)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에 관계된 사실을 고지한 경우 또는 주소·거소·차량번호·차량소재지를 진술하고 가능한 시간 내에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가능하게 할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위자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확인을 무효화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사고관계자가 단지 중대하지 아니한 재물 손괴의 결과를 야기한 사고 이후 24시간 내에 교통혼잡지역 밖에서 자의로 사후확인을 가능하게 한 경우(제3항)에 그 형을 감경(제49조 제1항)하거나 이 규정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사고관계자란 정황에 비추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었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 【비상전화,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수단의 남용】 ①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비상전화 또는 비상표지의 남용
2. 재난, 공공의 위험 또는 응급사태를 이유로 타인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기망하는 행위

②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303조 또는 제30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경고 또는 금지의 표지를 제거,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의미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재난이나 공공위험의 예방에 공하는 보호시설 또는 재난이나 공공위험 발생 시 구조를 위한 구조설비 또는 기타 물건을 제거, 변경, 사용불능하게 하는 행위

제145조a 【행장감독중의 준수사항위반⁸⁾】 행장감독기간 중 제68조b 제1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행장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는 행장감독청(제68조a)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145조b (삭제)

제145조c 【직업금지위반】 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8) 2007년 5월 행장감독 개정안을 통해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타인을 위하여 직업, 직업의 일부, 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45조d【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①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관청 또는 고발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망한 자는 그 행위가 제164조, 제258조 또는 제258조 a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

2.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행이 임박하다는 사실

② 확실하게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가담자에 관하여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발생한 위법행위

2. 그 발생이 임박한 제126조 제1항의 위법행위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제146조【통화위조·변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진정한 통화로 행사하거나 행사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 또는 실제보다 높은 가치의 외관을 갖게 할 목적으로 통화를 변조한 자

2. 제1호의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하에서 위조, 변조 또는 취득한 통화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한 자

-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계속적인 통화위조를 위해서 조직된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47조 【위조·변조통화행사】 ① 제14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8조 【우표, 인지 등 위조·변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진정한 것으로 사용 또는 행사하거나 사용 또는 행사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관청이 발행한 우표·인지 등을 위조한 자 또는 실제보다 높은 가치의 외관을 갖게 할 목적으로 우표·인지 등을 변조한 자
2. 제1호의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우표·인지 등을 취득한 자
3. 위조·변조된 우표·인지 등을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또는 행사한 자

② 이미 사용된 우표·인지 등을 그 소인표지를 제거한 후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9조 【통화 및 우표·인지 등 위조의 예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에 제공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함으로써 통화 또는 우표·인지 등의 위조를 예비한 자는 통화위조의 예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우표·인지 등 위조의 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인쇄판, 판목, 인쇄용조판, 전기판, 요형활자판, 연판,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범행에 적합한 기구
2. 화폐 또는 우표·인지 등의 발행 용도로 사용되고 위조를 특별히 방지하고 있는 지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지
3.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기타 구성부분

② 자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된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 그에 의하여 야기된 바로서 타인이 계속해서 범죄를 예비 또는 실행할 위험을 저기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행위
2. 현재 소유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위조수단을 폐기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수단의 소유사실을 관청에 고지하거나 이를 관청에 인도하는 행위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타인이 범죄를 계속하여 예비하거나 실행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범죄의 완성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 대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 ① 제146조, 제148조 제1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해당 범죄의 계속적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49조 제1항, 제152조a, 제152조b 등의 통화위조 예비에 대하여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위조·변조통화, 위조·변조 또는 사용된 우표·인지 및 제149조에 기재한 위조수단은 몰수한다.

제151조 【유가증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은 인쇄 및 지질에 의하여 위조를 특별히 방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의한 통화로 본다.

1. 채권에 일정금액의 지급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총발행유가증권의 일부인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2. 주식
3. 자본회사가 발행한 지분증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증권, 이윤증권, 갹신증권 및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인도증서
5. 여행자수표

제152조 【외국의 통화, 우표·인지, 유가증권】 제146조 내지 제151조는 외국의 통화, 우표·인지,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a 【지불카드, 수표 및 어음의 위조】 ① 법률거래에서 기망을 목적으로, 그러한 기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내국의 또는 외국의 지불카드, 수표 또는 어음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이러한 위조·변조된 카드, 수표 또는 어음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양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의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지불카드는 다음에 해당하는 카드를 말한다.
 - 1. 신용회사나 금융업무 취급기관이 발행하고,
 - 2. 일정한 장치나 코드로 특별히 위조를 방지한 카드
- ⑤ 우표·인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제149조의 규정과 제15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2조b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및 유로수표책⁹⁾의 위조】 ①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또는 유로수표책과 관련하여 제152조a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의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보증기능이 있는 지불카드란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유로체크카드 및 기타 카드를 말한다.
 - 1. 지불거래에서 카드제시자에게 보증된 지불을 가능하게 하고,
 - 2. 일정한 장치나 코드로 특별히 위조를 방지한 카드

9) 유로수표책은 아직 액면기재와 서명을 하기 이전의 유로수표의 상태를 인쇄한 용지들을 말한다.

⑤ 통화위조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제149조의 규정과 제15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장 선서 없는 허위진술 및 위증

제153조 【선서 없는 허위진술】 ① 법원에 대하여 또는 선서에 의한 증언이나 감정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선서 없이 허위로 진술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연방 및 주 입법기관의 사실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장소와 동일하게 본다.

제154조 【위증】 ① 법원 또는 선서를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위증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55조 【선서에 준하는 서약】 다음은 이를 선서로 본다.

1. 선서에 갈음한 서약
2. 사전의 선서 또는 서약의 원용

제156조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하거나 그와 같은 보증을 원용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57조 【긴급피난으로서의 허위진술】 ① 법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 또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친족 또는 자기가 처벌받거나 자유박탈보안처분을 받을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고, 선서 없는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선서능력 없는 자가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8조 【허위진술의 정정】 ① 법원은 행위자가 허위진술을 적시에 정정한 경우에는 위증,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선서 없는 허위진술에 대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미 행한 허위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정정할 수 없게 되거나 허위진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 또는 이미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거나 신문이 개시된 경우에는 허위진술은 정정할 수 없다.

③ 허위진술의 정정은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절차진행 중 이를 심사한 기관 및 법원, 검찰 또는 경찰관서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159조 【허위진술에 대한 교사의 미수】 선서 없는 허위진술(제153조) 및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제156조)에 대한 교사의 미수¹⁰⁾에 관하여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60조 【허위진술의 유도】 ① 타인에 대하여 위증을 유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에 대하여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또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 중죄에 해당하는 위증에 대한 교사의 미수는 당연히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한 제159조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1조 - 제162조 (삭제)

제163조 【과실위증, 과실에 의한 선거갈음 허위보증】 ① 제154조 내지 제156조에 규정된 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허위진술을 적시에 정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장 무고의 죄

제164조 【무고】 ①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의 위법행위나 의무위반 사실을 관청, 고발접수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군상관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관청 등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기에 적합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기타의 허위주장을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65조 【유죄판결의 공시】 ①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제164조의 범죄를 범하고 이를 이유로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 무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의 공시를 명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기재된

친족에게 이전된다. 제7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0조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제166조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①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타인의 종교적 신조 또는 세계관의 내용을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국내의 교회 또는 기타 종교단체, 세계관단체¹¹⁾, 그 제도나 관례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67조 【종교행사방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내의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의 예배 또는 종교행위를 공연히 그리고 현저한 방법으로 방해한 자
 2. 제1호에 의한 종교단체의 예배를 봉하는 장소에서 오욕행위를 한 자
- ② 예배에 상응하는 국내 세계관단체의 의식은 예배에 해당한다.

제167조a 【장례예식방해】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장례예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1) 세계관단체(Weltanschauungsvereinigung)란 세계의 의미해석에 그 본질을 두며 공통의 세계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무종교론, 반종교론을 옹호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세계관단체로는 예컨대 프리메이슨(Freimaurer), 인도주의연합(humanistische Union), 인지학단체(Anthroposophische Gesellschaft), 독일유일신교(Deutsche Unitarier), 독일자유사상단체(Deutsche Friedenskerverband) 등을 들 수 있다.

- 제168조 【사자안식의 방해】** ① 사체, 사체의 일부, 사망한 태아, 사망한 태아의 일부, 유골을 권한 없이 권리자의 보관으로부터 탈취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오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장례장소, 묘지, 공공의 사자 추모장소를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그곳에 대하여 오욕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 제169조 【신분위조】** ① 아동을 바꿔치거나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및 가족 관계 확정의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타인의 신분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이를 은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0조 【부양의무위반】** ①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부양권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임신부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를 비난 가능할 정도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171조 【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 16세 미만자의 보호 또는 교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발육을 현저히 해하거나 범죄성향을 지니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행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2조 【중혼】 혼인 중에 있는 자로서 혼인한 자 또는 기혼자와 혼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3조 【근친상간】 ①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위 당시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제174조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¹²⁾】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피보호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16세 미만자
2. 교육, 직업교육, 보호·업무·고용관계로 인한 종속성을 남용하여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되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
3.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친자 또는 양자

12) “sexueller Mißbrauch”를 “간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sexueller Mißbrauch”에는 간음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 더 나아가 추행행위까지 넓은 성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칫 우리의 성폭력범죄 관련규정 내지 용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남용”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 하에서 자기 또는 피보호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피보호자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행위
2.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피보호자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4조a 【피구금자, 관청에 감호된자, 시설 내 피치료자와 요부조자에 대한

성적 남용】 ① 교육, 직업교육,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치료 또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자에 대하여 질병 또는 要구호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남용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4조b 【공무원 직위를 악용한 성적 남용】

① 형사소송절차 또는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선고절차 또는 관청의 감호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절차에 근거한 종속관계를 악용하여 그 절차의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4조c 【자문관계, 치료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악용한 성적 남용】 ①

정신적·심적 질병 또는 중독에 의한 장애 또는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문, 치료 또는 보호관계를 악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정신치료를 위하여 위탁된 자에게 치료관계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 (삭제)

제176조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① 14세 미만자(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아동을 교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용인·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한 자
2.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3. 행위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또는 그들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4.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의 게시, 음란한 내용의 테이프의 상연 또는 그에 준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동을 아동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한 행동을 약속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⑥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제4항 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제5항에 의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6조a 【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 ①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행위자가 지난 5년 사이에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자가 아동과 성교(Beischlaf vollziehen)하거나 또는 신체 침입과 관련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3. 행위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통하여 중대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

③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176조 제6항의 경우에서 정범 또는 다른 공범으로서 고의로 제184조b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포될 음란문서(제11조 제3항)의 대상물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서 행위 중에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중한 남용을 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기간에 행위자가 당국의 선고로 시설에 감호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 판결 받은 행위는 독일 형법에 따라 제1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행위라면 제1항의 경우에서 국내에서 판결 받은 행위와 동등하다.

제176조b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 의한 치사】 행위자가 성적 남용(제176조 및 제176조a)을 통해 중과실로 아동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7조 【성적 강요, 강간】 ①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참도록 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폭행과 함께
2.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에 대한 협박을 통해
3.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 침입과 관련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자
 2. 폭행 또는 폭력을 고지한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항을 폭력으로 저해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하여 그 밖의 물건 또는 도구를 지닌 자
 3.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중한 건강상 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 중에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자
 2. 피해자를
 - a) 행위 중에 신체적으로 중하게 남용한 자
 - b)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자
- ⑤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과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8조 【성적 강요 및 강간에 의한 치사】 행위자가 성적 강요 또는 강간(제177조)을 통해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9조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남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중독과 관련된 장애 또는 심한 의식장애로
항거불능인 자

2.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

② 항거불능상태의 남용 하에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항거불능상태인 자(제1항)를
남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침입과
관련된(강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

3.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중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
정신적 발전에 현저한 훼손을 야기한 경우

⑥ 제5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⑦ 제177조 제4항 2호 및 제178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80조 【미성년자의 성적행위 조장】 ①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조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중개를 통해

2. 보증 또는 기회의 마련을 통해

제1문 제2호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성적행위의) 조장을 통해 교육의무를 상당히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8세 미만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개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교육, 직업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위탁하고 있거나 또는 임무 또는 노동관계의 범위 내에서 따르고 있는 18세 미만자를 교육관계·직업 교육관계·보호관계·임무관계·노동관계와 관련하여 종속되어 있는 것을 남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성적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적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0조a 【매춘자 착취】 ① 매춘자를 종사시켜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종속 안에서 (매춘)행위를 시키는 기업을 영업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끈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18세 미만자에게 매춘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 영업적인 숙소 또는 영업적인 거소를 제공한 자
2. 매춘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 대하여 매춘을 독려하거나 매춘과 관련하여 착취한 자

제180조b 및 제181조 (삭제)

제181조a 【음행매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일회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유지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윤락행위를 하는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
2. 영리를 위하여 매춘의 실행 시 타인을 감독하거나 매춘실행의 장소, 시간, 정도 또는 기타 상황을 정하거나 또는 매춘의 중지를 방해하는 처분을 하는 행위

② 성교의 알선을 통해 영업적으로 타인의 매춘행위를 조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일회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독립성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조장행위를 배우자에게 시도한 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처벌된다.

제181조b 【행장감독】 제174조 내지 제174조c, 제176조 내지 제180조, 제181조a 및 제182조의 경우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한다(제68조 제1항).

제181조c 【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 행위자가 당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81조a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43조a, 제73조d를 준용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182조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을 한 18세 이상의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강제(핍박)상태를 악용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 대해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②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을 악용한 21세 이상인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서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지 않는 한,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행위대상의 태도를 고려하여 행위의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3조 【음부노출행위】 ① 음부노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남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당해행위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지 않는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소추된다.

③ 법원은 행위자가 장기 치료행위로 인해 노출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행장감독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음부노출행위로 인해 남자 또는 여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법정형의) 상한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하고 있는 기타 규정
2. 제17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176조 제3항 제1호

제183조a 【공연음란¹³⁾】 공연히 성적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공분을 야기시킨 자는 그 행위가 제183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4조 【음란문서반포】 ① 음란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18세 미만자가 접근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영업장소 외에서의 소매로, 매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기타의 판매소에서, 통신판매에 의하여 또는 영업적 도서대여점이나 독서회에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 3a. 18세 미만자의 출입 또는 그 열람이 불가능한 점포를 제외한 영업적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적 사용보장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13) 원문은 ‘Erregung oeffentlichen Aegernisses’으로서 ‘공분야기’로 해석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상 ‘공연음란’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공연음란으로 번역한 법무부견해를 따른다.

4.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반입을 기도하는 행위
 5. 18세 미만자가 출입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또는 해당 상점과의 영업거래 외에서의 문서의 반포를 통하여 양여, 광고, 선전하는 행위
 6. 타인의 요청 없이 이를 타인에게 송부하는 행위
 7. 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상영을 조건으로 한 대가를 받고 필름을 공개 상영하는 행위
 8.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9. 해당 국가의 형법법규에 위반하여 음란문서 또는 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국외에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출하는 행위
- ② 사람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 양여 또는 접근하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교육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업적 대여거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1항 제3a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내지 ⑦ (삭제)

제184조a 【동물음란물의 반포】 폭력성 또는 동물과의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제184조b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유】 ①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제176조 내지 제176조b)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음란물) 음란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반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② 타인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하도록 기도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고 아동음란물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자신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하도록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 언급된 문서를 소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은 적법한 업무·직업적 의무의 이행에 공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물은 몰수된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제184조c 【라디오,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 통한 음란공연의 반포】 음란공연을 라디오, 미디어업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해 반포한 자는 제184조 내지 제184조b에 의해 처벌된다. 제184조 제1항의 경우 제1문은 음란상영이 기술적 또는 기타 방지책을 통해 18세 미만자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한 반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84조d 【금지된 매춘의 수행】 법령을 통해 특정장소에서의 매춘의 절대적 금지 또는 주간의 특정시간대의 매춘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84조e 【미성년자위해 매춘】 매춘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해하는 방법으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학교인근 또는 기타 18세 미만자가 출입하는 지역
2. 18세 미만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184조f 【개념정의】 이법에서

1. 성적 행위란
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행위만을 말한다.
2. 타인 앞에서의 성적 행위란
행위과정을 지각하는 타인의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말한다.

제14장 모욕죄

제185조 【모욕】 모욕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이 행동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6조 【비방¹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유포한 자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7조 【중상】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8조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① 정치인에 대하여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유포(제11조 제3항)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시키려는 동기에 의하여 피해자를 비방(제186조)하고, 그

14) 1997년 법무부 번역에서는 “제186조와 제187조는 원문상으로는 ‘Ueble Nachrede’, ‘Verleumdung’등으로 표현되며, 직역하면 전자는 ‘악평’, 후자는 ‘중상’의 뜻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의역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186조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악평은 사실적시 이외에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비방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과)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중상(제187조)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89조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 모독】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을 모독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90조 【형사판결을 통한 진실입증】 주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범죄행위인 경우에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진실의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 또는 전파 이전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진실의 입증은 배제된다.

제191조 (삭제)

제192조 【진실입증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모욕】 주장 또는 유포 사실의 진실입증은 주장 또는 유포의 형식이나 주장 또는 유포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5조에 의한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93조 【정당한 이익의 주장】 학문적, 예술적 또는 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의 주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인 의사표명,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직무상 지적 또는 평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사표명의 형식이나 의사표명이 행하여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 제194조 【고소】** 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모욕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나 공공의 게시를 통하여, 집회에서 또는 방송에서의 표현을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집단의 소속원으로서 국가사회주의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적·자의적 지배에 의해서 소추되었고, 국민의 일부가 그 집단에 있으며, 모욕이 그러한 소추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욕행위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적으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은 철회될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과 이의신청권은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족에게 이전된다.
- ② 사자에 대한 추모감정이 모독된 경우에는 고소권이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족에게 있다. 모욕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나 공공의 게시를 통하여, 집회에서 또는 방송에서의 표현을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사자가 국가사회주의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피해자로서 그 생명을 잃었고, 추모감정모독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모욕행위는 고소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직권으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은 철회될 수 없다.
- ③ 공무원, 공적 직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연방군의 군인에 대한 모욕행위가 그러한 직무의 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해진 경우에는 직무상관의 고소에 의해서도 형사소추된다. 관청이나 그밖에 공적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기관장 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고소에 의하여 형사소추된다. 이는 교회나 공법상의 기타 다른 종교 단체의 기관이나 관청의 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기타 정치적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단체의 수권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된다.

제195조 - 제198조 (삭제)

제199조 【쌍방간의 모욕】 현장에서 상호 공방적으로 모욕행위가 일어난 경우, 법관은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형 면제를 선고할 수 있다.

제200조 【판결의 공시】 ① 모욕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범하여졌고, 그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밖의 고소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구된 모욕죄에 대한 판결의 공시가 공적으로 명하여 진다.

② 판결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모욕이 신문이나 잡지의 출판을 통해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판결공시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모욕행위가 들어있던 동일한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모욕행위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제201조 【대화비밀침해】 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과의 비공개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해서 제작된 녹음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②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그 타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과의 일정한 비공개적 대화를 도청 장치로 도청하는 행위

2. 원문이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제1항 제1호의 녹음된 또는 제2항 제1호의 도청된 타인과의 비공개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 제1문 제2호에 의한 행위는 공개적 전달이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된다. 공개적 전달이 중대한 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으로서 또는 공적 임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대화의 신뢰를 침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1항과 제2항).
-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⑤ 정범이나 공범이 사용한 녹음테이프와 도청기는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a 【사진촬영을 통한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의 침해】 ①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③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정범이나 공범이 사용한 사진필름 및 사진촬영기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도구는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2조 【서신비밀침해】 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20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행위자에게 알려지도록 작성된 것이 아닌 봉함된 편지 기타 봉함된 다른 문서를 개피하는 행위
 2. 그러한 문서 등을 개피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 ② 행위자에게 알려지도록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잠긴 용기를 통하여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된 문서를 용기를 열고서 권한 없이 문서의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도화도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제202조a 【정보 탐지】 ① 그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무권한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된 정보에 권한 없이 보안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접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접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정보는 전기적·자기적으로 또는 기타 직접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되고 전달되는 정보만을 의미한다.

제202조b 【정보 피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공개적인 정보중개로부터 또는 정보처리기관의 전자적 전송으로부터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정보(제202조a 제2항)를 권한 없이 입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입수하게 한 자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02조c 【정보 탐지 및 피싱의 예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단을 만들거나 입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입수하게 하거나,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제202조a 또는 제202조b의 범행을 예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정보에의 접근(제202조a 제2항)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 또는 기타 비밀번호

2. 그러한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② 제149조 제2항과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3조 【사적 비밀의 침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알게 된 타인의 비밀, 특히 개인적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나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직업의 수행이나 직업표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규율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다른 치료직업의 구성원

2. 국가적으로 승인된 학문적 졸업시험을 통과한 직업적 심리학자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의 변호인, 경영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또는 법무법인, 변리회사, 경영평가회사, 회계법인, 세무회사의 기관이나 사원

4. 가정상담원, 가족상담원, 교육상담원, 청소년상담원 및 관청이나 공법적인 단체, 시설 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된 의존성 문제에 관한 상담원

4a. 임신갈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에 의하여 승인된 상담소의 구성원이나 대리인¹⁵⁾

5. 국가적으로 승인된 공익근무원 또는 국가적으로 승인된 특수교육교사
6. 사적 의료보험,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직원 또는 개인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의 수납처 직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알게 된 타인의 비밀, 특히 개인적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나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공무원
2. 공적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의무를 부담하는 자
3. 임의대리권에 의하여 임무와 권한이 부여된 자
4. 연방 또는 주 입법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실조사위원회의 구성원, 그 밖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평의회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위원회나 평의회의 보조인으로서의 구성원
5. 임무의 성실한 충족에 대한 의무가 법률을 근거로 명확하게 부과된 공적으로 임명된 감정인
6. 학술적 연구수행에서 비밀준수 의무의 성실한 충족이 법률을 근거로 명확하게 부과된 자

공적 행정의 임무를 위해서 확보된 타인의 개인적 또는 사실적 관계에 관한 개개의 진술은 제1문의 비밀과 동일하게 본다. 다만 그러한 개개의 진술이 다른 관청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서 공적 행정의 임무를 위해서 알려졌고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한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a.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자에게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위탁되었거나 그밖에 알게 된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

15) 제203조 제1항 제4호a, 제218조b 제2항 제1호에 따라 승인된 상담소는 BVerfGE v. 4.8.1992 I 1585 - 2 BvO 16/92 u. a. - 에서와 같이 성교육, 보호, 가족계획과 상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승인된 상담소와 동일하다.

으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되었던, 이 규정이 의미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이 권한 없이 누설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은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와 동일하게 본다. 그들의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보조자와 그들과 함께 업무의 준비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도 제1항과 본항 제1문에서 규정된 자들과 동일하게 본다.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자로부터 또는 그의 유물로부터 비밀을 알게 된 자도 제1항과 본항 제1문 및 제2문에서 규정된 자들과 동일하게 본다.

④ 행위자가 관계인의 사망 후에 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된다.

⑤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행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행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04조 【타인비밀의 매각】 ① 제203조에 의하여 그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타인의 비밀, 특히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매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03조 제4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5조 【고소】 ① 제201조 제1항과 제2항, 제201조a, 제202조, 제203조와 제204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이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202조a 및 제202조b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은 제77조 제2항에 따라 가족에게 이전한다. 다만 제202조a 및 제202조b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이 피해자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03조a 및 제204조의 죄에 대한 고소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203조 및 제204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이 의미에 맞게 적용된다.

제206조 【우편비밀과 전신비밀의 침해】 ① 우편비밀이나 전신비밀에 속하고, 우편사무나 전화통신사무에 업무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사업의 소유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소유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전달을 위해서 그러한 업체에 맡겨지고 봉합된 송달물을 개피하거나 봉합을 개피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2. 전달을 위해서 그러한 업체에 맡겨진 송달물을 송달하지 않는 행위
3. 제1항이나 본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승인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제1항에서 규정된 업체에 대한 감독임무를 맡은 자
2. 그러한 업체로부터 또는 그의 수권에 의하여 우편사무나 전화통신사무에서의 수취를 위탁받은 자
3. 그러한 업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의 제작이나 그러한 일을 위탁 받은 자

④ 우편영역이나 전신영역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서 권한 있는

또는 권한 없는 우편비밀이나 전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그가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특정인 사이에서 우편송수신의 자세한 상황 및 우편물의 내용은 우편 비밀에 속한다. 전화통신과 그 자세한 상황, 특히 누구와 전화를 통화하는지 또는 했는지 여부는 통신비밀에 속한다. 통화비밀은 실패한 연결 시도의 자세한 상황에까지 확장된다.

제207조 내지 제210조 (삭제)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제211조¹⁶⁾ 【모살】 ① 모살자는 무기 자유형에 처한다.

② 모살자란,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말한다.

제212조 【고살】 ① 모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고살자로서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 자유형에 처한다.

제213조 【경한 고살】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16) BVerfGE v. 21.6.1977 I 1236 - 1 BvL 14/76 결정근거에 따라서 독일 기본법과 일치함.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14조 - 제215조 (삭제)

제216조 【촉탁살인】 ①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7조 (삭제)

제218조¹⁷⁾ 【낙태】 ①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자궁 내 수정란의 착상완료 전에 이를 저지한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낙태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
2. 중과실로 임산부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자

③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산부는 미수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17) 제218조 내지 제219b(중전 제218조 내지 제219조d) : IdF d. Art. 13 Nr. 1 G v. 27. 7. 1992 I 1398 mWv 5. 8. 1992. Art. 13 Nr. 1은 BVerfGE v. 4.8.1992 1585 - 2 BvO 16/92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992년 8월 4일에 대한 잠정적인 선고는 BVerfGE v. 25.1. 1993 I 270에 따라 반복된다.

제218조a【낙태의 처벌면제¹⁸⁾】 ① 제21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현되지 아니한다.

1. 임산부가 낙태를 촉탁하고 제219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최소한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한 경우
2. 낙태가 의사에 의하여 시술된 경우
3.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서 의사가 시술한 낙태는 임산부의 현재와 장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한 훼손의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에 대해 제176조 내지 제179조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 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산부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낙태에 있어서는 제2항의 조건은 적용된다.

④ 낙태가 의사와의 상담(제219조)후에 시술되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는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임산부가 수술당시 특별한 곤경에 빠져있었던 경우에는 제218조에 의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8) 통일 당시 구서독 지역에서는 의사의 확인 없는 낙태를 모두 불법으로 처벌하는 적응해결 방식(Indikationsloegung)이 적용되고 있었던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부 낙태허용방안(Fristensloesung)이 적용되고 있었다. 낙태처벌규정의 확장 적용 문제는 「통일조약」합의 당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부분으로서 이에 연방 정부는 연방형법의 확장적용을 포기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통일된 새로운 낙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조건으로 양독일 지역에 각각의 종전 형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방의회는 통일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1992년 7월 27일 12주 이내 상담 조건부 낙태허용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임부 및 가족 원조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은 1993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그 주요부분이 무효로 선언되었다. 그 후 이규정은 다시금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거쳐 1995년 8월 21일자 임부 및 가족원조 개정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연방 전지역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제218조b【의사의 확인 없는 낙태, 의사의 부정확인】 ①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 각 항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직접 낙태시술을 행하지 않은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로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건에 대한 부정확인을 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임신부는 제1문 또는 제2문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의사가 제1항, 제218조, 제219조a 또는 제219조b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또는 다른 낙태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금지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이 제1문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혐의로 인해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잠정적으로 제218조a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금지할 수 있다.

제218조c【낙태시 의사의 의무위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낙태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부녀에게 낙태요청을 위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2. 수술의 의미, 특히 그 과정, 결과, 위험,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작용 등에 관하여 임신부와 의학적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3. 제218조a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전에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임신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
4. 제218조a 제1항의 경우에 제219조에 따라 부녀와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낙태한 자

② 임신부는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19조 【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 대한 상담】 ①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한다.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만 한다. 상담은 책임 있고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부녀를 조력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아가 임신의 각 단계에서 부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과 출산을 통해 임부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하고 비통상적인 고통이 야기되는 경우에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질서에 의해 낙태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부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상담은 조언과 원조를 통해 임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긴급상황을 시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신갈등법에서 규율한다.

② 상담은 임신갈등법에 따라 승인된 임신갈등상담소가 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상담종료 후 임신부에게 최종 상담일자과 임신부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임신갈등법에 따라서 발급하여야 한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제219조a 【낙태를 위한 선전】 ① 집회 중에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하여 자신의 영리로 인해 또는 현저히 불쾌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관하여 공연히 제안, 광고, 선전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설명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낙태의 시행 또는 조장을 위한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
2. 낙태에 적합한 수단, 물건 또는 절차 및 그 효능

- ② 제1항 제1호는 의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상담소가 제218조a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하에 낙태를 시도하도록 준비된 의사, 병원, 시설에 관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제2호는 (제1항의) 행위가 의사 또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수단 또는 물건을 거래할 권한 있는 자 또는 의학·약학 전문지에 출판됨으로써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9조b【낙태를 위한 수단의 유통】 ① 제218조에 의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목적으로 낙태에 적합한 수단 또는 물건을 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임신부의 낙태예비에 가담한 공범은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 (낙태)행위와 관련된 수단 또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219조c (삭제)

제219조d (삭제)

제220조 (삭제)

제220조a (삭제)

제221조【유기】 ① 사람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를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부조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
 2. 자신의 보호 하에 있거나 또는 도와줄 의무가 있는 자를 부조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 ②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해 또는 교육이나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위탁하고 있는 자에 대해 당해 행위를 범한 경우
 2.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2조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7장 상해의 죄

제223조 【상해】 ①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 【위험한 상해】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상해를 가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독극물 또는 기타 건강을 해하는 물질의 사용
2.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의 수단
3. 교활한 공격의 수단
4. 수인이 공동하여
5.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의 수단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5조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① 18세 미만자 또는 불구나 질병으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괴롭히거나 또는 가혹하게 학대한 경우 또는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해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자신의 보호 또는 후견 하에 있는 자
2. 자신의 세대에 속한 자
3. 보호의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
4. 업무 또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종속된 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요부조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사망 또는 중한 상해(건강침해)의 위험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

④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6조 【중상해】 ① 상해로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청력, 언어능력 또는 생식력을 상실케하는 결과
2. 신체의 중요부위를 상실케하거나 영구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결과
3. 현저히 영구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질병, 신체마비,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에 빠뜨리는 결과

② 행위자가 제1항에 규정된 결과를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7조 【상해치사】 ① 행위자가 상해로 인하여(제223조 내지 제226조)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28조 【승낙】 피해자의 승낙과 함께 상해를 가한 자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다.

제229조 【과실치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0조 【고소】 ① 제223조의 고의에 의한 상해 및 제229조의 과실에 의한 상해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상해에 있어서 제77조 제2항에 의해 고소권은 친족에게 넘어간다.

② 공무원, 공무상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에 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직무상 상관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소추된다. 교회 및 기타 공법상의 종교 단체의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1조 【싸움에 대한 관여, 쌍방간의 상해】 ① 스스로 싸움에 관여했거나 또는 수인이 한사람에 대한 침해에 관여한 자는 싸움이나 침해를 통해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제226조)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여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싸움 또는 침해에 관여한 자를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제232조 【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 ① 타인을 강제상태 또는 외국에 체류함으로 인한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착취하는 성적 행동을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키거나 자신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하도록 시킨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1세 미만자에게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문에 규정된 그 밖의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피해자가 아동(제176조 제1항)인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범한 경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처벌한다.

1. 타인을 폭력, 협박, 위계 등을 통해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그 밖에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2. 매춘을 수용 또는 계속하게 하거나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폭력,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사로잡은 자

⑤ 제1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 및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제233조 【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 ① 강제상태 또는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인한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함으로써 타인을 노예, 몸종 또는 하인으로 또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심각한 불균형에 놓여 있는 근로조건으로 행위자나 제3자에 의해서 고용되는 것을 수용하게 하거나 존속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1세 미만자에게 노예, 몸종 또는 하인으로 또는 제1문에서 규정된 고용을 수용하게 하거나 존속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32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3조a【인신매매조장】 ① 타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또는 수용함으로써 제232조 또는 제233조에 의한 인신매매를 조장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피해자가 아동(제176조 제1항)인 경우
2.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폭력 또는 심한 해악에 의한 협박을 통해 또는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한 경우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3조b【행장감독, 확장적 박탈】 ① 제232조 내지 제233조a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② 제232조 내지 제233조a의 경우, 행위자가 직업상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적용해야 한다.

제234조【인신강도】 ① 타인의 부조 없는 상태를 악용하거나 또는 군시설 또는 군유사시설에서 복무하도록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타인을 폭력, 심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 또는 속임수로 장악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34조a【납치】 ① 이 법의 적용범위 이외의 지역에서 위계,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하여 타인을 호송하거나, 그곳으로 보내지도록 유발하거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하도록 잡아 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정치적 이유에서 소추되게 하고, 이 때 법치국가적 근본원칙에 위배된 폭력적 또는 자의적 처분을 통하여 신체와 생명에 손상을 입게 하고, 감금되게 하고, 그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하는 위험에 빠뜨린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당해 행위를 예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성년자 약취·유인¹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약취 또는 불법으로 억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하여 18세 미만자
2. 친척이 아닌 아동

② 아동을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을 행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19) Entziehung은 “약취”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약취 이외에도 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본조의 경우 행위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이외에 위계를 들고 있는 바, 폭행·협박에 의하여 보호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그와 같은 행위는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약취행위
2. 외국으로 보내진 후에 그곳에서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억류하는 행위
-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피해자를 (당해) 행위로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발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당해) 행위를 범한 경우
- ⑤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⑥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5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 ⑦ 미성년자 약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36조 【아동거래】 ① 보호의무 또는 교육의무를 중하게 소홀히 하면서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타인에게 영구히 넘겨 주는 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의 경우에서 아동, 피후견인, 피보호자를 자신이 영구히 데리고 있으면서 이를 위하여 보상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의 입양의 중계

2. 제3자가 18세 미만을 영구히 데리고 있게 할 목적으로 중계활동의 수행

제1문의 경우에 중계된 자가 국내 또는 국외로 이송되도록 행위자가 주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소유욕, 직업상 또는 계속적인 아동거래행위와 관련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경우

2. (당해) 행위를 통해 아동 또는 중계된 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아동 또는 중계된 자의 신체적·정신적 행복을 고려 할 때, 관여자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 공범의 책임이 경미하다면 법원은 그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제49조 제2항) 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7조 (삭제)

제238조 【쫓아 다님²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끊임 없이

20) ‘스토킹피해자의 형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m strafrechtlichen Schutz von

하는 등 권한 없이 사람을 쫓아 다니고 그로 인해 그의 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장소적으로 가깝게 찾아가는 행위
 2. 대화의 수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개인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그를 위하여 물건이나 급부를 주문하거나 또는 접촉을 계속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위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 ②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을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39조 【자유박탈²¹⁾】 ① 사람을 감금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자유를 박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Stalking-Opfern vom 31. 03. 2007)’에 의하여 형법에 추가되었다. 이는 스토킹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 여기서의 자유박탈은 우리 형법상의 체포·감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1. 1주 이상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
 - 2. 당해 행위 또는 당해 행위가 범해지는 동안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 ④ 행위자가 당해 행위 또는 당해 행위가 범해지는 동안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39조a 【인질강도】 ① 자신의 안녕에 대한 피해자의 염려 또는 피해자의 안녕에 대한 제3자의 염려를 공갈(제253조)에 악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로잡은 자, 또는 당해 행위로 인해 야기된 타인의 상황을 공갈에 악용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급부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그의 일상영역으로 돌려보낸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행위자의 관여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239조b【인질강요】 ①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중상해(제226조)를 가할 것을 협박하거나 1주 이상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서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인질로 삼은 자 또는 그러한 행위로 야기된 상황을 강요에 악용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23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준용된다.

제239조c【행장감독】 제239조a 및 제239조b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40조【강요】 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해 타인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의도한 목적을 위하여 폭행을 사용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비난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위법하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타인에게 성적 행동 또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2.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3. 공무원으로서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제241조【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241조a【정치적 무고】 ① 고발 또는 무고를 통해 타인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와 함께 폭력적 또는 자의적 조치에 의하여 법치 국가원칙에 반하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를 입거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타인에 관한 사실을 통지 또는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타인에 대한 고발, 무고 또는 통지에 있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그 행위가 제1항에 규정된 결과를 야기할 의도로 범하여 지거나, 기타 특히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9장 절도 및 횡령

제242조【절도】 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3조【특히 중한 절도】 ① 절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절도의 실행을 위하여 건조물·사무소·영업소 또는 기타 담이 있는 장소에 침입·잠입하거나, 위조 열쇠 또는 기타 통상적인 개문용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 장소에 침입·잠입하는 경우
 2. 봉합한 용기 또는 기타 보호장치에 의하여 특별히 도난을 방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3. 직업적으로 절도하는 경우
 4. 교회 또는 기타 종교행사에 공하는 건물이나 장소로부터 예배에 봉헌 되거나 종교적 숭배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
 5.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박물관에 소장중이거나 공연히 전시중인 학문, 예술, 역사 또는 기술발전 등에 중요한 물건을 절취한 경우
 6. 타인의 궁박한 상태, 재난 또는 공공의 위험 등을 악용하여 절취한 경우
 7. 무기법에 의하여 취득 시 허가를 요하는 권총, 전시무기관리법에 의한 기관총, 기관소총, 전자동·반자동 총기, 폭발물을 장착한 병기 또는 폭발물을 절취한 경우
- ② 제1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6조의 경우에 (절도)행위가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히 중한 경우에서 배제된다.

제244조 【무기휴대절도, 범죄조직절도, 주거침입절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참가자가 다음과 같이 절도한 경우
 - a) 총기 또는 다른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고
 - b)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의 항거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그 밖에 도구 또는 수단을 휴대하고
2.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범죄조직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한 경우

3. 절도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에 침입, 잠입하거나, 위조 열쇠 또는 기타 통상적인 개문 용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 장소에 침입·잠입하여 절도한 경우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244조a【중한 범죄조직절도²²⁾】 ① 제243조 제1항 제2문의 조건하에 절도하거나 제24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43조a,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245조【행장감독】 제242조 내지 제244조a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46조【횡령】 ① 타인의 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불법영득의사) 한 자는 당해 행위가 다른 형법규정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재물이 행위자에게 위탁중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22) 동조는 1992년 7월 15일자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247조 【집안 및 가족절도(친족상도례)】 절도 또는 횡령의 피해자가 친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주거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48조 (삭제)

제248조a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 제242조 및 제246조의 경우에 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은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48조b 【자동차의 권한 없는 사용】 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사용한 자는 당해 행위가 다른 형법규정에서 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당해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④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는 기계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 차체에 결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육로자동차를 말한다.

제248조c 【전력의 도용】 ① 설비나 장치로부터 합법적인 전력의 도입에 공하지 아니한 도선을 사용하여 전기설비나 전기장치로 타인의 전력을 탈취한 자는 전력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속하게 할 의도(불법영득의 의사)로 행위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행위가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할 의사로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당해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 제249조 【강도】** 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의 동산을 강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제250조 【중강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참가자가 다음과 같이 강도한 경우
 - a)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고
 - b) 폭력 또는 폭력을 고지한 협박으로 타인의 항거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고
 - c) 당해 행위로 타인을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에 빠뜨리고
 2. 행위자가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하에 강도한 경우
- ② 행위자 또는 다른 범죄 참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 중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무기를 휴대한 경우

3. 타인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 a) 당해 행위 중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한 경우
- b)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51조 【강도치사】 행위자가 강도(제249조 및 제250조)에 의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52조 【준강도】 절도 중에 절취한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박을 가하는 새로운 범행을 행한 자는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253조 【공갈】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영리를 위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강요자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행위는 위법하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공갈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 (삭제)

제255조 【강도에 준하는 공갈】 공갈이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는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56조 【행장감독, 재산형 및 몰수의 확장】 ① 제249조 내지 제255조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② 제253조 및 제255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제73조d는 준용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제73조d가 준용된다.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제257조 【범죄비호】 ① 위법행위를 범한 타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로 인한 이익을 확보하게 할 의도로 조력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본범에 대한 형보다 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범에 참가한 것으로 인해 처벌되는 자는 범죄비호를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본범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에게 범죄비호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비호를 행한 자가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 본범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비호행위는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추될 수 있다. 제248조a는 준용된다.

제258조 【처벌방해²³⁾】 ① 타인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을 받게 되는 경우에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신고된 형 또는 처분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벌은 본범에 대한 형보다 더 중해서는 아니 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당해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 또는 처분의 신고 또는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못하게 만들려고 의도한 자는 처벌방해를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⑥ 친족을 위하여 당해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58조a 【공무상 처벌방해】 ① 행위자가 제258조 제1항의 경우에 형사 소송절차 또는 처분명령절차(제11조 제1항 제8호)에 참여하는 공무원이거나, 또는 제258조 제2항의 경우에 형 또는 처분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당해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8조 제3항 및 제6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259조 【장물취득】 ① 타인이 절취한 재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영득한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23) 1997년 법무부 번역본에서는 범인은닉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범인은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으로 처벌이 실패되도록 만드는 경우이므로 이해의 편의 상 “처벌방해”로 번역한다.

위하여 매입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매각을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7조 및 제248조a는 준용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 【영업적 장물취득, 조직범죄 장물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물죄를 범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영업적으로 행한 경우

2. 강도, 절도 또는 장물죄 등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경우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43조a,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73조d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260조a 【영업적 범죄조직 장물취득】 ① 강도, 절도 또는 장물죄 등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장물죄를 영업적으로 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43조a,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61조 【자금세탁,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가치의 은닉²⁴⁾】 ① 제2문에 언급된

24) 동조는 1992년 7월 15일자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후, 1994년 10월 28일자 ‘형법·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s und Strafprozessordnung und anderer Gesetz.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에 의하여 죄명이 ‘자금세탁,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가치의 은닉’으로 개정되었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대상물을 은닉하거나 그 출처를 위장하거나 출처의 수사, 그 대상물의 발견, 추징, 몰수 또는 압류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에 의한 위법행위란 다음 각호의 죄를 말한다.

1. 중죄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죄
 - a) 제332조 제1항, 제3항 및 제334조
 - b) 향정신성의약품법(Betäubungsmittelgesetz)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원료 감독법(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제29조 제1항 제1호
3. 조세규정(Abgabenordnung) 제373조 및 제374조 제2항에 의한 경죄²⁵⁾, 모든 경우에 공동시장조직 및 직접변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Durchführung der Gemeinsamen Marktorganisationen und der Direktzahlungen) 제12조 제1항과 연계
4. 다음 각 해당 경죄를 영업적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한 경우
 - a) 제152조a, 제181조a,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 제2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33조a, 제242조, 제246조, 제253조, 제259조, 제263조 내지 제264조, 제266조, 제267조, 제269조, 제284조, 제32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2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b) 체류법(Aufenthaltsgesetz) 제96조, 망명절차법(Asylverfahrensgesetz) 제84조 및 조세규정 제370조
5. 제129조 및 제129조a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경죄, 모든 경우에 제129조b

25) 제373조 및 제374조 제2항은 2007년 12월 21일자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내용은 “행위자가 영업적 또는 제1항의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자)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항과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구성원으로서(제129조, 제129조a, 각각의 경우 제129조b 제1항과 연계) 범한 경죄

조세규정(Abgabenordnung) 제370조에 의한 영업적 또는 조직범죄적 탈세의 경우에 탈세를 통해 절약된 비용 및 불법하게 취득한 조세상환액 및 조세변상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제2문 제3호의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탈세한 대상물에 대하여 제1문은 적용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취득 당시 그 대상물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자금 세탁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그 대상물이 제1항에 언급된 위법행위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중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당해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제3자가 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행위는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⑦ 자금세탁범죄와 관련 있는 대상물은 이를 몰수 할 수 있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제43조a, 제73조d는 행위자가 자금세탁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하여야 한다.

⑧ 당해 행위가 행위지에서도 처벌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유형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유래한 대상물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대상물과 동일하게 본다.

⑨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자금세탁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각되지 아니하였고 행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거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평가를 통하여 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자의로 관할관청에 (자금세탁)행위를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게 한 자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1호에 언급된 조건하에서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대상물을 보전한 자

그 밖에 본범의 참가를 이유로 처벌되는 자도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⑩ 법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이 가담한 범죄행위 또는 제1항에 기재된 타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제49조 제2항)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2조 【행장감독】 제259조 내지 제261조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제263조 【사기】 ①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착오를 야기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으로 또는 문서위조 또는 사기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중한 정도의 재산손실을 야기하거나 또는 사기의 계속적 수행으로 수인을 재산손실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행위한 경우
3. 타인을 경제적인 위급에 빠뜨린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5. 행위자 또는 타인이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불을 놓거나 방화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소실시키거나 또는 배를 물속에 빠뜨리거나 난파시킨 후에 보험사례로 기망한 경우

④ 제243조 제2항,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에 의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를 영업적으로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당해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⑦ 행위자가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에 의한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는 준용된다.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역시 제73조d는 준용된다.

- 제263조a 【컴퓨터사기】** ①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프로그램의 부정확한 구성,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의 사용,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 기타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권한 없는 작용에 의하여 정보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제263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당해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팔려고 내놓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제149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4조 【보조금사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보조금승인을 관할하는 관청 또는 기타 보조금지급절차에 관여하는 지위나 사람(보조금지급자)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리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한 자
 2.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또는 보조금지급자를 통해 그 사용이 제한된 대상물 또는 금전지급을 사용제한에 반하여 사용한 자
 3.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보조금지급절차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통해 취득한 증명서를 보조금수령자격 또는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한 자
-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한 사리사욕에 의하여 또는 자기나 타인을 위하여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사용하여 고액의 부당한 보조금을 취득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3.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협력을 악용한 경우

③ 제263조 제5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중과실로 행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자의로 행위에 근거한 보조금지급을 방지한 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이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행위자가 보조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원임자격, 공공선거에 의한 권리취득자격을 박탈(제45조 제2항)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⑦ 동조의 보조금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한 (급부금의) 일부라도 다음과 같은 사업소나 기업에 대하여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공공재원으로부터 조달되는 급부
 - a) 시장에 적합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고
 - b) 경제(발전의) 촉진에 공하는
 2. 최소한 (급부금의) 일부라도 시장에 적합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유럽공동체법에 의한 공공재원으로부터 조달되는 급부
- 제1문 제1호에 의한 사업소나 기업에는 공기업도 포함된다.

⑧ 제1항의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실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지급자가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한 사실
2. 보조금 또는 보조금이익의 승인, 지급, 취소, 재지급 또는 위탁과 관련하여 법률상 종속되는 사실

제264조a【투자사기】 ① 다음 각호의 1과 관련하여 재산상태를 전망, 설명 또는 개관함에 있어 매입이나 투자증대의 결정에 대한 중요한 상황에 관하여 수인에 대하여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기업이윤 참가를 보장하는 지분의 판매
2. 당해 지분에 대한 출자를 증대하는 제안

② 제1항은 그 행위가 기업이 자기 명의 하에 타인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자의로 (제1항의) 행위에 근거하여 매입 또는 투자증대를 조건으로 한 급부의 제공을 방지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급부가 제공될 수 없었던 경우에 급부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5조【보험남용】 ① 보험에 의한 급부를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침몰, 손상, 사용성의 침해, 손실 또는 절도에 대하여 보험에 든 물건을 손실하거나 파괴하거나 그 사용성을 침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 행위를 제263조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5조a【사익취득】 ① 자동판매기나 공공목적에 공하는 전기통신망의 급부, 교통수단에 의한 운송 또는 기관이나 시설에의 입장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사취한 자는 그 행위를 다른 규정에서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47조 및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5조b【신용사기】 ① 사업소나 기업 또는 피기망 사업소나 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의 허가, 기간연기, 또는 조건변경의 신청과 관련한 사업소나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a)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문서 특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명세서 또는 평가서의 제출

b) 신용수신자에게 유리하고 당해 신청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서면진술

2. 당해 신청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서면이나 진술에 적시된 경제상황의 악화사실을 제출 당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신용대출자가 (제1항의) 행위에 근거하여 신청된 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자의로 방지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급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부의 제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의미는

1. 사업소 및 기업은 그 대상물과 독립하여 종류나 규모가 상업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영업활동을 요하는 사업소나 기업을 말한다.

2. 모든 종류의 금전대부, 인수신용, 유상취득 및 금전채권에 대한 지불 기간의 연기, 어음과 수표의 할인 및 보증의 인수, 신용보증 및 기타의 담보제공을 말한다.

제266조 【배임】 ① 법률,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를 통해 인정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또는 신용관계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해야할 의무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3조 제2항 및 제247조, 제248조a 및 제26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6조a 【임금의 체불 및 횡령】 ① 사용자로서 노동축진을 포함하여 사용인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임금의 지불여부와 독립하여 징수기관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축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사용인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임금지불여부와 독립하여 지불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기여금의 납입에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사회보장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진술을 하는 행위
2. 기여금의 납입에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의무에 반하여 사회보장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로서 사용인을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늦어도 납입만료 시까지 또는 만료 후 지체 없이 타인에 대한 지불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은 근로소득세로 지불중지된 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기여금을 체불한 경우
2.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의 사용으로 결정된 기여금을 체불한 경우
3.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협력을 악용한 경우

⑤ 가내노동자의 위임자,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공업법상 이에 준하는 자 및 중간수공업자는 사용자로 본다.

⑥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늦어도 납입만료 시 또는 만료 후 지체 없이 징수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따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체불한 기여금 액수의 고지
2.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입이 불가능한 사유의 설명

제1문의 조건이 구비되고 징수기관이 정한 적절한 기간 이내에 기여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행위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경우에 제1문 및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6조b 【수표보증카드 및 신용카드의 남용】 ① 수표보증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발급에 의하여 인정된 발급자로 하여금 사용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가능성을 남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급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248조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제267조 【문서위조】 ①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²⁶⁾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으로 또는 사기 또는 문서위조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중대한 정도의 재산손실을 야기한 경우
3. 다수의 위조·변조된 문서를 통해 법적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화시킨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④ 제263조 내지 제264조 또는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문서위조를 영업적으로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6) 원문상으로는 ‘eine unechte Urkunde herstellt’로서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고’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간단히 ‘위조하고’로 표현한다.

제268조 【기술매체기록의 위조】 ① 법적 거래 시 기망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기술매체기록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2. 위조 또는 변조된 기술매체기록을 행사하는 행위

② 기술매체기록이란 기술적 장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일반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기록내용을 식별가능하게 하고, 그 결정이 작성 당시에 정하여졌는지 또는 그 이후에 정하여졌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의 증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측량치, 계산치, 사건정황 또는 사건경과에 관한 표현물을 말한다.

③ 행위자가 기록과정을 방해함으로써 기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기술매체기록의 위조로 본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267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69조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 ①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그 입증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증거 상 중요한 데이터로 저장 또는 변경하고 그렇게 저장 또는 변경된 데이터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67조 제3항 및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70조 【정보처리과정에서의 법적 거래의 기망】 허위 사실에 의하여 법적 거래 시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적 거래 시의 기망으로 본다.

제271조 【간접문서위조²⁷⁾】 ① 권리 또는 권리관계에 중요한 의사표시, 거래 또는 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다르게 나타나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거나 나타내고,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 내용 그대로 공문서·공공장부·공전자기록·공공등기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유형의 문서위조 또는 위조된 데이터저장을 기망을 목적으로 법적 거래시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또는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행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 (삭제)

제273조 【공정증서의 변경】 ① 법적 거래시 기망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제267조 또는 제274조에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정증서에 등록(내용)을 제거하거나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공증서의 한 면을 제거하는 행위
2.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공정증서를 행사하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4조 【문서은닉, 경계표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7) 이는 우리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1.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기술매체기록을 폐기, 손괴 또는 은닉한 자
2.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제202조a 제2항)를 소거, 은닉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변경한 자
3.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경계석 또는 기타 경계나 수위를 표시하는 표지를 절취, 파괴 또는 인식불능하게 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잘못된 장소에 설치한 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5조 【공정증서위조의 예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조,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위조를 예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인쇄판, 판목, 인쇄용 조판, 전기판, 요형활자판, 연판 또는 기타 범행에 적합한 기구
2. 공정증서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위조를 특별히 방지하기 위한 지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지
3. 공정증서 서식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49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76조 【위조공정증서 취득】 ① 위조·변조된 공정증서 또는 제271조 및 제348조에 규정된 유형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하는 행위
2. 법적 거래 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그 행사가 가능하게 할 의도로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 또는 타인에게 양여하는 행위

②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276조a 【체류법상의 서류, 차량관련서류】 제275조 및 제276조는 체류허가 및 체류인용 등 체류법상의 서류, 자동차검사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관련서류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277조 【진단서 위조】 자격 없이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의료종사자로서 또는 부당하게 그러한 사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종류의 진정한 진단서를 변조해서 관청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78조 【허위진단서 작성】 그 정을 알면서 관청이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및 기타 면허 있는 의료종사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79조 【허위진단서 행사】 자기 또는 타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관청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제277조 및 제278조에 규정된 종류의 진단서를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0조 (삭제)

제281조 【증명서부정행사】 ① 법적 거래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행사한 자 또는 법적 거래시의 기망을 목적으로 작성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이를 양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일반거래상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증서 및 기타 문서는 (제1항의) 증명서로 본다.

제282조 【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 ① 제267조 내지 제269조, 제275조 및 제276조의 경우 행위자가 당해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하여 조직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267조, 제268조, 제271조 제2항 및 제3항, 제273조 또는 제276조 및 제276조a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276조 또는 제279조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275조 및 제276조a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275조의 경우 그곳에 규정된 위조수단은 이를 몰수한다.

제24장 파산의 죄²⁸⁾

제283조 【파산²⁹⁾】 ① 채무가 초과된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 임박하거나 현실로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파산이 개시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구성부분을 제거 또는 은닉하거나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파괴, 손상 또는 사용 불능하게 한 자
2.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의한 적자 사업, 투기사업 또는 차액거래를 행하거나 비경제적 지출, 투기, 내기에 의하여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
3. 상품이나 유가증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상품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제조된 물건을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현저한 저가로 매각 또는 처분한 자
4. 타인의 권리로 기망하거나 가장의 권리를 승인한 자
5.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태의 일람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6. 상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상업장부 또는 기타 문서를 법정보관 의무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거·은닉·파괴 또는 손상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재산상태의 일람을 불가능하게 한 자

28) 제24장의 표제어는 1994년 10월 5일자 ‘파산법시행법률(EGinsO)’ 제60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Konkursstraftaten’에서 ‘Insolvenzstraftaten’로 개정된다. 이 경우 ‘Insolvenzstraftaten’는 지급불능으로 번역되고 ‘Konkursstraftaten’보다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파산으로 이해하여 따로 번역문을 달지 아니하였다.

29) 위 ‘파산법시행법률’ 제60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제283조 제1항 제1호의 ‘Konkursöffnung’은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으로, ‘Konkursmasse’는 ‘Insolvenzmass’로, 제6항의 ‘Konkursverfahren’도 ‘Insolvenzverfahren’으로 각 대체된다.

7. 상법에 위반하여

- a) 재산상태의 일람이 불가능하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자
-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현저히 반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태를 감소시키거나 실제 거래관계를 은폐 또는 가장한 자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의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을 초래한 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의 경우 과실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임박하거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

2. 제2항의 경우 중과실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을 초래한 자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최소한 과실로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임박이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

2. 제1항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와 관련하여 적용된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중과실로 지급불능의 임박이나 발생을 초래한 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위는 행위자가 그 지급을 중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개시신청이 파산재단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83조a 【특히 중한 파산】 제28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 파산행위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2. 그 정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그에게 위탁된 재산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그들을 빠뜨리거나 또는 그들을 경제적 궁박상태에 빠뜨린 경우

제283조b【장부작성의무 위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산상태의 일람이 어렵게 하도록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2. 상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상업장부 또는 기타 문서 등을 법정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거·은닉·파괴 또는 손상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재산상태의 일람을 어렵게 한 자
3. 상법을 위반하여
 - a) 재산상태의 일람이 어렵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자
 - b) 규정된 기간 이내에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283조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83조c【채권자비호】 ① 자신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1인에 대하여 그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거나 채권의 종류나 변제기에 비추어 청구할 수 없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자 1인을 비호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283조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83조d【채무자비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 하에서, 파산 재산에 속하는 타인 재산의 구성부분을 그의 동의를 받고서 또는 그를 위해서 제거·은닉하거나 합법적인 경제요청에 반하는 방법으로 파괴·손상 또는 사용불능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타인의 급박한 지급불능 사실을 알면서
- 2. 타인의 파산절차에서 또는 타인의 파산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을 이끄는 절차에서 지불중지 이후에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 2. 그 정을 알면서 수인을 타인에게 위탁된 그들의 재산가치를 상실시킬 위험이나 경제적 궁박상태에 빠뜨린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는 타인이 지급을 중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개시신청이 파산재단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제284조【불법도박개장】 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히 도박을 개장·유지하거나 도박을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단체 또는 폐쇄된 회사 내에서의 도박도 공연히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영업적으로 도박한 자

2. 도박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자

④ 공연한 도박(제1항 및 제2항)을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5조 【불법도박가담】 공연한 도박(제284조)에 가담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86조 【재산형, 확장적 박탈 및 몰수】 ① 제284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제28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② 제284조 및 제285조의 경우 도박시설, 도박대 또는 환전대에서 발견된 화폐는 그 화폐가 판결 당시 정범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그 밖의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 【불법 복표 및 경품권 발매】 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히 동산 또는 부동산의 복표 또는 경품권을 발매하거나 공연히 복표 또는 경품권에 대한 도박계약의 체결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도박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공을 수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공연한 복표 또는 경품권을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8조 【강제집행 면탈】 ①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방해할 의도로 그 재산의 구성부분을 매각 또는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89조 【담보물 거래】 ① 소유권자를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동산을 그 동산의 용익권자, 질권자, 사용권자 또는 유치권자로부터 위법한 의도로 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90조 【담보물의 권한 없는 사용】 유치하고 있는 담보물을 권한 없이 사용한 공공 전당포영업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91조 【고리대금】 ① 타인의 공박상태, 무경험, 판단능력의 결여 또는 현저한 의사박약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그 급부나 그 전달에 대하여 현저하게 오해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수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주거공간의 임차 또는 그 임차와 관련된 부수비용을 위하여
2. 신용대차를 얻기 위하여
3. 그 밖의 기타 급부를 위하여

4. 제1호 내지 제4호의 급부의 중개를 위하여

수인이 급부자, 중개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재산상의 이익과 전체적인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궁박상태나 그 밖의 빈약상태를 이용한 모든 자에 대해서 제1항이 적용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는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경제적 궁박상태로 빠뜨리는 경우
2. 그 행위를 영업적으로 범하는 경우
3. 어음을 통하여 폭리적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한 경우

제292조 【밀렵】 ① 타인의 수렵권 또는 수렵수행권을 침해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행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야생동물을 추적하거나, 포획하거나, 사살하거나 또는 이를 영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는 행위
2. 수렵권에 속하는 재물을 영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거나,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한 경우
2. 야간이나 금렵기에 텃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통상적인 수렵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행위한 경우
3. 총기를 휴대한 수인이 공동하여 행위한 경우

제293조 【불법어로】 타인의 어업권 또는 어업수행권을 침해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어획하는 행위
2. 어업권에 속하는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제294조 【고소】 제292조 제1항 및 제293조의 경우 그 행위가 친족에 의하여 범하여지거나 행위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수렵 또는 어로가 허가된 지역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295조 【몰수】 정범이나 공범이 행위 당시에 휴대하였거나 사용한 수렵·어로장비, 개 및 기타 동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6조 (삭제)

제297조 【금제품에 의한 선박·자동차·선박에 대한 위험 야기】 ① 그것을 수송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물건을 선주나 선장 몰래 독일선박에 반입하거나 수용한 자 또는 선주 몰래 독일선박에 반입하거나 수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선박이나 선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몰수 위험의 야기
 2. 선주나 선장에 대한 처벌 위험의 야기
- ② 선주가 선장 몰래 독일선박 내에 선장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초래하는 물건을 반입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전부 또는 일부 정박하는 외국선박에도 적용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물건이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반입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선주와 선장의 위치를 대신한다.

제26장 경쟁위반의 죄

제298조 【공급의 모집시 부당경쟁 협상】 ①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에 대한 공급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모집자에게 특정한 공급을 수용하도록 유발하는 위법한 협상을 기초로 공급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급의 모집은 선행된 참여경쟁 계약의 경매 없는 위탁과 동일하다.

③ 행위자가 모집자가 공급을 수용하거나 모집자에게 그의 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연관된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 그의 공급이 수용되지 아니하거나 모집자에게 급부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의로 공급의 수용이나 급부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행위자의 노력이 있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99조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 ①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으로서,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 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

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에게 그들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외국에서의 경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0조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의 특히 중한 경우】 제299조에 의한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행위가 거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제301조 【고소】 ① 제299조에 의한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② 피해자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된 모든 영업운영자, 조합, 상업회의소도 제1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02조 【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 ① 제299조 제1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제299조 제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43조a와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용된다.

제27장 손괴의 죄

제303조 【재물손괴】 ① 위법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상 또는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권한 없이 타인 재물의 외관을 현저하게 영구적으로 변경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3조a 【데이터손괴】 ① 컴퓨터데이터(제202조a 제2항)를 위법하게 소거, 은닉,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02조c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3조b 【컴퓨터업무방해】 ① 타인의 중요한 정보처리를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통하여 현저하게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03조a 제1항의 범죄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정보(제202조a 제2항)를 입력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산자료가 입력된 물체를 파괴, 손상, 사용불능,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사업이나 타인의 기업 또는 관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 처리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2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행위가 거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2.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3. 당해 행위를 통하여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침해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 ⑤ 제202조c는 제1항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03조c 【고소】 제303조, 제303조a 제1항 및 제2항, 제303조b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각 행위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304조 【공공위해 재물손괴】 ① 위법하게 국내 종교단체의 숭배물이나 예배에 공하는 물건 또는 묘비, 공공기념물, 천연기념물, 공공 박물관에 보관중이거나 공개 전시된 예술품·학술품·산업품, 공적 수요에 공하는 물건이나 공공도로·광장·시설의 미화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 또는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② 권한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 또는 대상물을 현저히 영구적으로 변경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 【건조물파괴】 ① 위법하게 타인 소유의 건조물, 선박, 교량, 댐, 축조된 도로, 철도, 기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a 【주요산업수단 등 파괴】 ① 위법하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16조b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이나 기업의 건설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시설이나 기업의 운영이나 해체에 공하는 시설의 건축을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기술적 산업수단
2. 경찰 또는 연방군의 차량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제306조 【방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대상물에 대하여 방화하거나 또는 방화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건조물 또는 가건물

2. 영업소 또는 기술적 설비, 특히 기계
3. 창고 또는 저장상품
4. 자동차, 기차, 항공기 또는 수상교통수단
5. 숲, 삼림 또는 늪지
6. 농장, 농업 또는 임업의 시설이나 생산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a 【중방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방화하거나 방화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건조물, 선박, 공장 또는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기타 공간
2. 교회 또는 다른 종교행사에 공하는 건조물
3. 사람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시간동안 사람의 일시적 체류에 공하는 공간

② 제30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물건에 방화하거나 또는 방화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을 건강 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b 【특히 중한 방화】 ① 제306조 또는 제306조a 에 의한 방화를 통하여 타인의 중한 건강훼손 또는 수인의 건강훼손을 야기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306조a의 경우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방화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행위한 경우
3.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는 어렵게 한 경우

제306조c 【방화치사】 행위자가 제306조 내지 제306조b에 의한 방화를 통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06조d 【실화】 ① 제306조 제1항 또는 제306조a 제1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 하거나, 제306조a 제2항의 경우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306조a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6조e 【능동적 후회】 ① 법원은 제306조, 제306조a 및 제306조b의 경우에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306조b의 경우에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행위자의 관여 없이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화재가 진화된 경우에는 자의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06조f 【화재위험야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대상물에 대하여 연기에 의하거나 불이나 등불에 의하거나 연소 중이거나 소화되지 아니한 물건을 방기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화재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화재위험이 있는 기업체 또는 시설
2.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장 또는 농업 시설 또는 기업
3. 숲, 삼림 또는 늪지
4. 정리된 들판 또는 들판에 쌓여 있는 쉽게 점화되는 농업생산물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물건에 방화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과실로 행위한 자 또는 제2항의 경우 과실로 화재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7조 【원자력에 의한 폭발야기】 ① 원자력을 방출함으로써 폭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원자력을 방출함으로써 폭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과실로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제1항의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
2. 제2항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자유형

- ④ 제2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8조 【폭발물 폭발야기】 ① 원자력 방출 이외의 방법으로 특히 폭발물에 의하여 폭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행위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위험을 과실로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9조 【방사선의 남용】 ① 타인의 건강을 해할 의도로 타인의 건강을 해하기에 적합한 방사선을 투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행위자가 수인에 대하여 당해 방사선을 투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③ 행위자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했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행위자가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도로, 물건·수자원·대기·토양·동물·식물에 대해서 그러한 침해·변경·손상을 야기하기에 적합한 방사선을 투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려는 의도
 - 2. 심각하게 수자원, 대기 또는 토양을 나쁘게 변경시키려는 의도
 - 3. 상당한 가치 있는 그가 소유하지 아니한 동물이나 식물을 손상시키려는 의도

제310조 【폭발물 또는 방사선범죄의 예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를 위하여 핵연료물질, 기타 방사성물질, 폭발물 또는 범죄 실행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한 자는 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제307조 제1항 또는 제309조 제2항의 특정행위의 기도

2. 폭발물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308조 제1항의 범죄

3. 제309조 제1항의 범죄

4. 제309조 제6항의 범죄

②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1조 【방사선의 방출】 ① 행정법상의 의무(제330조d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방사선을 방출하는 행위

2.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행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시설의 가동시, 특히 사업장 지역에서, 시설이 있는 지역 이외에서의 침해를 야기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범한 제1항의 행위

2. 기타 행정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범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제312조 【핵공업시설의 부실시공】 ① 핵공업시설(제330조d 제2호) 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나 그 가동을 위한 특정한 재료를 부실하게 제조하거나 공급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물건에 대하여 원자핵분열이 과정이나 방사성물질 방출과 연관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였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④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 2. 중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3조 【일수의 야기】 ① 일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타인의 물건에 중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제308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14조 【공공을 해하는 독극물혼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독극물 또는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혼입하거나, 독극물 또는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혼입한 제2호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이를 유통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1. 채워진 샘, 우물, 수도 또는 음용수 저장소에 있는 물
- 2. 공공의 판매나 소비에 공하는 물건

- ② 제308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14조a 【능동적 후회】 ①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그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및 제309조 제2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309조 제1항 또는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서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

a) 제307조 제2항

b) 제308조 제1항 및 제5항

c) 제309조 제6항

d) 제311조 제1항

e) 제312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f) 제313조 및 제308조 제5항과 연계된 제313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음의 경우에서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

a) 제307조 제4항

b) 제308조 제6항

c) 제311조 제3항

d) 제312조 제6항 제2호

e) 제308조 제6항과 연계된 제313조 제2항

2. 제310조의 경우에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자
- ④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 방지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충분하다.

제315조 【철도, 선박, 항공 특수교통방해³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궤도차량³¹⁾, 삭도차량³²⁾, 선박, 항공기 교통의 안전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운송시설 또는 운송수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2. 장애물의 설치
3. 표지 또는 신호의 허위 조작
4. 기타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기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30) 원문은 ‘Gefährliche Eingriff in den Bahn-, Schiffs- und Luftverkehr’이며 ‘철도, 선박, 항공 교통에서의 위험한 침해’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조의 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의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교통의 침해’라 하지 아니하고 ‘교통방해’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다만 우리 형법과는 달리 독일형법은 제315조a에서 ‘Gefährdung des Bahn-, Schiff-, Luftverkehr’의 죄명으로 ‘철도, 선박, 항공교통에 대한 위험야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본조는 ‘철도, 선박, 항공 특수 교통방해’로 제315조a는 ‘철도, 선박, 항공 교통방해’로 번역하였다. 이하 제315조b 및 제315조c도 같은 관점에서 번역한다.

31) 궤도차량은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공하는 궤도에 연결된 차량 즉 동력이나 기계력에 의하여 궤도에서 작동하며 궤도에 연결된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이때의 궤도란 예컨대 철로(Eisenbahnen), 시가철도(Strafsssenbahnen), 협궤철도(Kleinbahnen) 및 공장전용철도(Werksbahnen) 등을 말하며, 공장주변, 광산, 산맥내의 철도 및 지하철도(Untergroundbahnen), 톱니바퀴식 철도(Zahnradbahnen) 등도 이에 속한다.

32) 삭도(索道)차량이란 운행 중 운송수단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 매달리 채 작동하는 운송시설을 말한다. 예컨대 캐빈케이블카(Kabinenbahnen), 체어 리프트(Sessellifte) 등을 들 수 있다.

처한다.

1.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
 - a) 재난을 야기하려는 의도
 - b)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2.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했거나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
 - ④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3항의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조a 【철도, 선박 및 항공 교통방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궤도차량, 삭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운행한 자
2. 제1호에 기재된 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궤도차량, 삭도차량, 선박, 항공기 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5조b【특수 도로교통방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교통시설 또는 자동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2. 장애물의 설치
3. 기타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기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315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조c【도로교통방해】 ① 도로교통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a) 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의 복용

- b) 정신적·신체적 결함
- 2. 중대한 교통규칙의 위반이나 중과실의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
 - a) 우선진행권의 무시
 - b) 추월방법위반 또는 기타 추월과정에서의 과실 운전
 - c) 횡단보도에서의 과실 운전
 - d)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 교차로, 도로합류지점 또는 철도횡단 지점에서의 과속 운전
 - e)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량 우측통행의 위반
 - f)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회전, 후진, 역방향 주행 또는 그 시도행위
 - g)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중인 자동차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 행위
- ②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5조d【도로교통에서의 궤도차량】 궤도가 도로교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보호를 위한 규정(제315조b 및 제315조c)만을 적용한다.

제316조【음주운전】 ①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제315조 내지 제315조d)한 자는 제315조a 또는 제315조c에서 그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범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316조a 【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① 강도(제249조 또는 제250조), 준강도(제252조) 또는 강도적 공갈(제255조)의 실행을 위하여 도로교통의 특별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자나 그 동승자의 신체·생명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16조b 【공공기업의 교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운영에 공할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운영 용도의 전력을 탈취함으로써 그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우편 또는 공공교통의 공적 공급에 공하는 기업이나 시설
2. 물, 빛, 열 또는 동력의 공적 공급에 공하는 시설 또는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기업
3. 공공의 질서 또는 안전에 공하는 설비나 시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물, 빛, 열 또는 동력과 같이 국민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재화의 공급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6조c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방해·파괴³³⁾】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그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타 음모를 실행한 자

a) 민간항공에 속하고 비행중인 항공기

b) 민간 해운교통에 속하는 선박

2. 제1호의 항공기나 선박 또는 이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등을 파괴, 손상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거나 폭발이나 화재 야기를 기도한 자
승무원이나 승객이 이미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 운송물의 적재를 개시하였거나 승무원이나 승객이 예정대로 하차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그 운송물의 하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항공기는 비행중인 항공기로 본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범죄를 예비하기 위하여 총기, 폭발물, 기타 폭발이나 화재를 야기하기 위한 물질이나 장비를 제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33) 원문은 ‘Angriff auf Luft- und Seeverkehr’으로서 ‘항공, 선박교통에 대한 공격’으로 번역된다. 죄명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직역하지 아니하고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 선박의 운항방해 및 파괴’로 의역하였다. 본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폭행에 의한 항공기, 선박의 운항방해 행위를, 제2호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선박의 파괴행위를 처벌하는 각 규정을 두고 있다.

제317조 【전기통신시설교란】 ① 그 운영에 사용되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 또는 사용불능하게 하거나 그 운영 용도로 정하여진 전력을 탈취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공하는 원격통신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당해 행위를 과실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8조 【주요시설손괴】 ① 수도·수문·방파제·제방·댐 또는 기타 수리시설, 교량·도선·도로·호안시설, 양수(揚水)·통풍·광부수송 등 광산운영에 공하는 시설을 손상 또는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거나 또는 수인에게 건강훼손을 야기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3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4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

제319조 【건축물에 대한 위험의 야기】 ① 건축물의 건축이나 철거를 설계, 관리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나 건축기술원칙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직업 또는 영업의 수행 중 건축물 내에 공작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을 설계, 관리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나 건축기술원칙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0조 【능동적 후회】 ① 법원은 행위자가 자의로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타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 제316조c 제1항의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31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또는 제5항
2. 제315조b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15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3항
3. 제318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호
4.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가 나타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한 자
 - a) 제315조 제6항
 - b) 제315조b 제5항
 - c) 제318조 제6항 제2호
 - d) 제319조 제4항
 2. 제316조c 제4항의 경우에 자의로 범죄의 계속적인 실행을 포기하거나 기타 위험을 방지한 자
- ④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나 결과가 방지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충분하다.

제321조 【행장감독】 제306조 내지 제306조c 및 제30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0조 제1항 및 제316조c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법원은 행장감독을 명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322조 【몰수】 제306조 내지 제306조c, 제307조 내지 제314조 또는 제316조c의 범죄행위가 범하여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제310조 내지 제312조, 제314조 또는 제316조c의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

제323조 (삭제)

제323조a【명정】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제323조b【금단시설에 대한 위험야기】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 없이 금단치료를 위한 시설에 감호된 타인에게 그 정을 알면서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 없이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제공, 양여하거나 약물복용을 사주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3조c【구조불이행】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행위,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제324조 【수자원오염³⁴⁾】 ① 권한 없이 수자원³⁵⁾을 오염시키거나 그 수질을 유해하게 변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24조a 【토지오염³⁶⁾】 ①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토지에 물질을 반입하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유해하게 변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수자원을 해하기에 적합한 방법

2. 상당한 범위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4) 1995년 6월 6일자 ‘해상권에 관한 협정(1982/1994)의 시행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수자원 오염행위에 대한 독일형법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독일형법은 형법 제324조, 제326조, 제330조 및 제330조a의 경우에 국제해양보호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에 북해 또는 동해 지역에서 선박에 의한 원료의 유입을 통하여 범한 환경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5) 원문은 ‘Gewässer’로서 이는 강, 호수, 해양 등의 총칭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는 수자원으로 번역하였다.

36) 토지오염의 구성요건은 1994년 6월 27일자 ‘제2차 환경범죄방지를 위한 법률(Zweites Gesetz zur Bekämpfung der Umweltkriminalität)’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제325조 【대기오염】 ①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시설이 있는 지역 이외에서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대기의 변화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그 시설지역 이외의 대기 중에 방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유해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또는 기타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 물건을 해하기에 적합한 물질
2. 지속적으로 수자원, 대기 또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유해하게 변경시키기에 적합한 물질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5조a 【소음, 진동 및 비방사성광선 등 야기】 ①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시설이 속한 지역 이외에서 타인의 건강을 해하기에 적합한 소음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시설, 특히 사업장 또는 기계의 가동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방사성광선의 예방을 위한 행정법상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건강, 그의 소유가 아닌 동물 또는 타인의 상당한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2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의 위해폐기물 취급】 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또는 법률에 규정된 또는 허가받은 절차와 현저히 다른 방법으로 처리, 저장, 보관, 방출, 기타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극물’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이 가능하고 공공에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폐기물
2. 사람에게 암, 불임 또는 유전자변형을 일으키는 폐기물
3. 폭발위험, 자연발화위험 또는 경미하지 아니한 방사성을 띠고 있는 폐기물
4. 종류, 성분 또는 양에 비추어 볼 때
 - a) 지속적으로 수자원, 대기 또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유해하게 변경시키기에 적합한 폐기물
 - b) 동물, 식물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금지에 반하여 또는 필요한 허가 없이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로 통과시킨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⑤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2. 제3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⑥ 폐기물의 양이 경미하여 환경, 특히 인간, 수자원, 대기, 토지, 유익한 동·식물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명백하게 배제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327조 【시설의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의 운영】 ① 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핵공업시설물을 운영하거나 조업준비 중인 또는 휴업 중인 핵공업시설물을 차지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물이나 그 운영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
- 2.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그 운영상태를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

② 해당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나 계획의 확정 없이 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허가를 요하는 시설 또는 기타 위험방지를 위해서 그 운영이 금지된 연방-임및시온법상의 시설
- 2. 수자원관리법상 허가를 요하거나 신고의무 있는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관 시설
- 3. 순환경제법 및 폐기물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2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28조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의 방사성물질, 기타 위험물질과 화물의 취급】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을 보관, 운송,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자
 2. 필요한 허가 없이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종류·성질·양에 비추어 방사선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을 야기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방사성물질을 보관, 운송,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하여 인도 의무가 있는 핵연료물질을 신속히 인도하지 아니한 자
 2. 핵연료물질 또는 제1항 제2호에 기재한 물질을 권한 없는 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핵폭발을 야기한 자
 4. 제3자로 하여금 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촉진시킨 자
- ③ 행정법상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 그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동물 또는 상당한 가치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시설의 운영, 특히 사업장이나 기술적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화학물질 법상의 방사성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보관, 처리, 가공, 기타 사용하는 행위

2. 위험한 화물을 운송, 발송, 포장, 개피, 선적, 하역, 수령 또는 타인에게 양여하는 행위

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9조 【보호지역에 대한 위험야기】 ① 대기오염이나 소음에 의한 유해한 환경영향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아니한 기상상태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유해한 환경영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하여 연방-임및시온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지역 내에서 시설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서의 법령에 의하여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 지역 내에서 시설을 운영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자동차, 궤도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자원 또는 온천 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시설의 운영
 2. 수자원에 위해한 물질의 수송을 위한 수송관 시설의 가동 또는 그러한 물질의 수송
 3. 영업시설 지역에서의 자갈, 모래, 점토, 기타 고체물의 채굴
- 공공기업에서의 시설도 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에 해당한다.

③ 자연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으로 잠정 지정된 지역 또는 국립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 또는 집행 가능한 금지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보호목적에 현저히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토지매장물 또는 기타 토지구성부분의 채굴 또는 채취
2. 발굴 또는 제방축조의 시도
3. 수자원의 형성, 변경 또는 제거
4. 늪지, 소택지, 습지, 기타 습한 지역의 배수
5. 산림의 개간
6.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종류의 동물을 사살, 포획, 추적하거나 또는 이들 동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또는 제거
7. 연방자연보호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종류의 식물의 손상 또는 제거
8. 건축물의 설치

④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 그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제3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30조 【특히 중한 환경범죄】 ① 제324조 내지 제329조의 고의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자원, 토지 또는 제329조 제3항의 보호지역을, 그 침해가 고도의 비용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침해하는 경우
2. 공공의 수돗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3.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또는 식물의 존속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4. 탐욕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② 제330조a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324조 내지 제329조에 의한 고의범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1호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사람의 사망이나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수인에 대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2. 사람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 제2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30조a 【독극물방출에 의한 중한 위험야기】 ① 독극물이 함유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물질을 유포하거나 방출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이나 수인에 대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전항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중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30조b【능동적 후회】 ① 법원은 제325조a 제2항, 제32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30조a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의로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에 의하여 야기된 상태를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행위자는 제325조a 제3항 제2호, 제326조 제5항, 제328조 제5항 및 제330조a 제5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위험이 방지되었거나 위법하게 야기된 상태가 제거된 경우에는 제1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의적인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제330조c【물수】 제326조, 제3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28조, 제32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 및 동조 제4항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제3항의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 범행 또는 그 예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2.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
- 제74조a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330조d【개념정의】 이 장에서

1. 수자원이란 지표수와 지하수 및 해양을 말한다.
2. 핵공업시설이란 핵연료물질의 생산, 처리, 가공, 분열을 위한 시설 또는 방사선이 방출된 핵연료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위험화물이란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및 각 적용지역 내에서 위험화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4. 행정법상 의무란 다음 각 1에 근거하여 발생하고 환경, 특히 인간·동물·식물·수자원·대기·토지를 위험이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 a) 법률규정
 - b) 법원의 판결
 - c) 집행 가능한 행정행위
 - d) 집행 가능한 부담
 - e) 행정행위에 의하여서도 당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의 공법상 계약
5. 인가, 계획확정 또는 기타 허가 없이 행한 행위란 협박, 뇌물수수 또는 결탁에 근거하거나 허위의 또는 불충분한 진술에 의하여 기망된 인가, 계획확정 또는 기타 허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

제331조 【수뢰】 ①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의 수수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또는 행위자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수수를 허가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32조 【부정처사 수뢰】 ①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재판을 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③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 행위자가 사전에 타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태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

제333조 【뇌물공여】 ①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수수한 자의 수수행위를 사전에 허가했거나 또는 이익을 수수한 자의 지체 없는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34조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 ①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재판행위
 2. 장래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될 재판행위
-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태도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

제335조 【특별히 중한 부정처사 수뢰와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 ① 다음 각호의 1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 각 1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a) 제3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의 행위

b) 제3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및 각각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와 제2항

2. 제332조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한 제2항의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행위가 대규모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2.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경우

3.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제336조 【직무행위의 유기】 제331조 내지 제335조의 경우에 직무행위의 유기나 법관의 재판행위의 유기는 그 행위의 수행과 동일하게 본다.

제337조 【중재법관의 보수】 중재법관의 보수는 중재법관이 일방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 몰래 보수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거나 수수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몰래 중재법관에게 보수를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제331조 내지 제335조에서의 이익에 해당한다.

제338조【재산형 및 확장적 박탈】 ① 제332조 및 제336조와 제337조와 결합된 제332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73조d를 준용한다.

② 제334조 및 제336조와 제337조와 결합된 제334조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73조d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339조【법률왜곡】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40조【공무원에 의한 상해】 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도록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24조 내지 제229조는 제1항 제1문의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41조 - 제342조 (삭제)

제343조【진술강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절차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또는 설명하도록 강요

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기타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형사소송절차, 관청의 유치명령절차
2. 과태료 부과절차
3.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②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44조 【책임 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 ① 비자유박탈적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절차 이외의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죄가 없는 자 또는 법률상 형사소추될 수 없는 자를 형사소추하거나 그러한 소추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은 관청의 유치명령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의미에 일치하도록 적용된다.

② 비자유박탈적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명령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법률상 형사소추될 수 없는 자를 형사소추하거나 그러한 소추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의미에 일치하도록 적용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과태료 부과절차
2.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제345조 【책임 없는 자 등에 대한 집행】 ① 자유형, 자유박탈 보안처분, 관청의 유치명령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형, 보안처분, 유치명령을 집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행위자가 중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 또는 처분(제11조 제1항 제8호)의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형 또는 처분을 집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다음 각호 1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으로서 법률상 집행될 수 없는 법률효과를 집행한 자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소년체포
2. 질서위반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그 부수효과
3. 질서벌금 또는 질서구금
4. 징계절차 또는 명예법관이나 직업법관의 절차

제346조 - 제347조 (삭제)

제348조 【직무상 허위문서작성】 ①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적 기록, 공적 장부 또는 공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9조 - 제351조 (삭제)

제352조 【수수료 부당징수】 ① 공적 직무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징수하는 공무원, 변호사, 기타 법률 보조자가 납입자에게 납입의무가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의 납입의무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전부 징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공과금 부당징수, 급부금 부당축소】 ① 공공금고를 위하여 조세, 수수료, 기타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납입자에게 납입의무가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의 납입의무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징수하고, 위법하게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현금 또는 현물의 공적 지급과정에서 수령자에게 위법하게 감액지급하고 이를 완전한 급부의 이행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53조a 【외교업무상 신뢰위반】 ① 외국정부, 국가공동체 또는 국가 간 기구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방정부를 오도할 의사로 사실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연방정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353조b 【업무상 비밀누설, 특별 비밀유지의무위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그에게 위탁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고, 그로 인하여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행위자가 제1문의 행위에 의하여 과실로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무원

2. 공적 업무를 위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3. 임의대리권에 의하여 임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해서 그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물건 또는 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연히 공표하고, 그로 인하여 중요한 공익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그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

2. 기타 다른 공적 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형벌부과가 암시됨으로써 명확하게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된다. 제1문의 수권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부여된다.

1. 다음 각 1의 경우 입법기관의 장

a) 행위자가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에 의해서 또는 입법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비밀을 알게 된 제1항의 경우

b) 제2항 제1호의 경우

2. 다음 각 1의 경우 최고 연방관청

a) 그 밖에 행위자가 연방관청이나 기타 다른 연방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비밀을 알게 된 제1항의 경우

- b) 행위자가 연방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2항 제2호의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기타 모든 경우 주 최고 행정관청

제353조c (삭제)

제353조d 【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법률상 금지에 위반하여 그 공개가 배제된 법원의 심리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의 내용을 공연히 전달한 자
- 2. 법률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명해진 묵비의무에 위반하여 법원의 비공개 심리를 통해서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공개한 자
- 3.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

제354조 (삭제)

제355조 【조세비밀침해】 ①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공무원으로서 권한 없이 다음 각 1에서 지득한 타인의 경제상황
 - a) 조세문제에서의 행정절차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
 - b) 조세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절차나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절차

- c) 재무관청의 통고를 통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과세결정의 초안
 이나 법률적으로 규정된 과세과정에서 나타난 확인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초안을 통한 기타 다른 기회
2. 제1호의 절차 중 하나에서 공무원의 지위에서 알게 된 타인의 영업상
 또는 업무상 비밀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적 업무를 위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
 2. 공적으로 위촉된 감정인
 3. 교회 또는 공법상 다른 종교단체의 직무수행자
- ③ 제1항의 행위는 직무상 상관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소추된다. 공적으로 위촉된 감정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이외에 그 절차와 관련 있는 관청의 장이 고소권자가 된다.

제356조 【변호사 등의 의뢰인 배반】 ①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보조자가
 직무상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동일 법률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조력 또는 자문을 통하여 기여한 경우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이 자기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 당사자와 담합
 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57조 【부하에 대한 범죄 유인】 ① 부하직원에게 공무원 범죄를 유발
 시키거나 유발시키려고 기도하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게 한 상관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공무원이 범한 위법행위가 그의 감독 및 관리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58조 【부수효과】 법원은 제332조, 제335조, 제339조, 제340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제348조, 제352조 내지 제353조b 제1항, 제355조 및 제357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무담임자격(제45조 제2항)을 박탈할 수 있다.

부 록

1. Allgemeiner Teil
2. Besonderer Teil

Strafgesetzbuch (StGB)

Ausfertigungsdatum : 15.05.1871

Vollzitat : "Strafgesetzbuch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November 1998 (BGBl. I S.3322), zuletzt geändert durch das Gesetz vom 26. Oktober 2007 (BGBl. I S. 2523) Änderung durch Art. 17 G v. 12.12.2007 I 2840 textlich nachgewiesen, dokumentarisch noch nichtbearbeitet Änderung durch Art. 4 G v. 21.12.2007 I 3198 ist berücksichtigt)"

Stand : Neugefasst durch Bek. v. 13.11.1998 I 3322; zuletzt geändert durch G v. 26.10.2007 I 2523 Änderung durch Art. 17 G v. 12.12.2007 I 2840 textlich nachgewiesen, dokumentarisch noch nicht bearbeitet Änderung durch Art. 4 G v. 21.12.2007 I 3198 ist berücksichtigt

Fußnote : Textnachweis Geltung ab : 1. 1.1982 Amtlicher Hinweis des Normgebers auf EG-Recht: Umsetzung der EWGRL 439/91 (CELEX Nr : 391L0439) v gl. G v. 24.4.1998 I 747 Maßgaben aufgrund Einig Vtr vgl. StGB Anhang EV; nicht mehr anzuwenden

Allgemeiner Teil

Erster Abschnitt Das Strafgesetz

Erster Titel Geltungsbereich

Zweiter Titel Sprachgebrauch

Zweiter Abschnitt Die Tat

Erster Titel Grundlagen der Strafbarkeit

Zweiter Titel Versuch

Dritter Titel Täterschaft und Teilnahme

Vierter Titel Notwehr und Notstand

Fünfter Titel Straflosigkeit parlamentarischer Äußerungen und Berichte

Dritter Abschnitt Rechtsfolgen der Tat

Erster Titel Strafen

Zweiter Titel Strafbemessung

Dritter Titel Strafbemessung bei mehreren Gesetzesverletzungen

Vierter Titel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Fünfter Titel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Absehen von Strafe

Sechster Tit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iebenter Titel Verfall und Einziehung

Vierter Abschnitt Strafantrag, Ermächtigung, Strafverlangen

Fünfter Abschnitt Verjährung

Erster Titel Verfolgungsverjährung

Zweiter Titel Vollstreckungsverjährung

Besonderer Teil

Erster Abschnitt Friedensverrat, Hochverrat und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

Erster Titel Friedensverrat

Zweiter Titel Hochverrat

Dritter Titel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Vierter Titel Gemeinsame Vorschriften

Zweiter Abschnitt Landesverrat und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Drit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ausländische Staaten

Vier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Verfassungsorgane sowie bei Wahlen und Abstimmungen

Fünf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Landesverteidigung

Sechster Abschnitt 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Siebe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Achter Abschnitt Geld-und Wertzeichenfälschung

Neunter Abschnitt Falsche uneidliche Aussage und Meineid

Zehnter Abschnitt Falsche Verdächtigung

Elfter Abschnitt Straftaten, welche sich auf Religion und Weltanschauung beziehen

Zwölf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en Personenstand, die Ehe und die Familie

Drei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Vierzehnter Abschnitt Beleidigung

Fünfzehnter Abschnitt Verletzung des persönlichen Lebens-und Geheimbereichs

Sech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as Leben

Sieb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Acht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Neunzehnter Abschnitt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Zwanzigster Abschnitt Raub und Erpressung

Einundzwanzigster Abschnitt Begünstigung und Hehlerei

Zweiundzwanzigster Abschnitt Betrug und Untreue

Dreiundzwanzigster Abschnitt Urkundenfälschung

Vierundzwanzigster Abschnitt Insolvenzstraftaten

Fünfundzwanzigster Abschnitt Strafbarer Eigennutz

Sechsendzwanzigs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en Wettbewerb

Siebenundzwanzigster Abschnitt Sachbeschädigung

Achtundzwanzigster Abschnitt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Neunundzwanzigs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Umwelt

Dreißigster Abschnitt Straftaten im Amt

Allgemeiner Teil

Erster Abschnitt Das Strafgesetz

Erster Titel Geltungsbereich

§ 1 Keine Strafe ohne Gesetz

Eine Tat kann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Strafb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urde.

§ 2 Zeitliche Geltung

- (1) Die Strafe und ihre Nebenfolgen bestimmen sich nach dem Gesetz, das zur Zeit der Tat gilt.
- (2) Wird die Strafdrohung während der Begehung der Tat geändert, so ist das Gesetz anzuwenden, das bei Beendigung der Tat gilt.
- (3) Wird das Gesetz, das bei Beendigung der Tat gilt, vor der Entscheidung geändert, so ist das mildeste Gesetz anzuwenden.
- (4) Ein Gesetz, das nur für eine bestimmte Zeit gelten soll, ist auf Taten, die während seiner Geltung begangen sind, auch dann anzuwenden, wenn es außer Kraft getreten ist. Dies gilt nicht, soweit ein Gesetz etwas anderes bestimmt.
- (5) Für Verfall, Einziehung und Unbrauchbarmachung gelten die Absätze 1 bis 4 entsprechend.

(6) Üb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st, wenn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nach dem Gesetz zu entscheiden, das zur Zeit der Entscheidung gilt.

§ 3 Geltung für Inlandstaten

Das deutsche Strafrecht gilt für Taten, die im Inland begangen werden.

§ 4 Geltung für Taten auf deutschen Schiffen und Luftfahrzeugen

Das deutsche Strafrecht gilt, unabhängig vom Recht des Tatorts, für Taten, die auf einem Schiff oder in einem Luftfahrzeug begangen werden, das berechtigt ist, die Bundesflagge oder das Staatszugehörigkeitszei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führen.

§ 5 Auslandstaten gegen inländische Rechtsgüter

Das deutsche Strafrecht gilt, unabhängig vom Recht des Tatorts, für folgende Taten, die im Ausland begangen werden:

1. Vorbereitung eines Angriffskrieges (§ 80);
2. Hochverrat (§§ 81 bis 83);
3.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 a) in den Fällen der §§ 89, 90a Abs. 1 und des § 90b, wenn der Täter Deutscher ist und seine Lebensgrundlag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at, und
 - b) in den Fällen der §§ 90 und 90a Abs. 2;
4. Landesverrat und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 94 bis 100a);
5. Straftaten gegen die Landesverteidigung) in den Fällen der §§ 109

- und 109e bis 109g und b) in den Fällen der §§ 109a, 109d und 109h, wenn der Täter Deutscher ist und seine Lebensgrundlag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at;
6. Verschleppung und politische Verdächtigung (§§ 234a, 241a), wenn die Tat sich gegen einen Deutschen richtet, der im Inland sein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 6a. Entziehung eines Kindes in den Fällen des § 235 Abs. 2 Nr. 2, wenn die Tat sich gegen eine Person richtet, die im Inland ihr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7. Verletzung von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sen eines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liegenden Betriebs, eines Unternehmens, das dort seinen Sitz hat, oder eines Unternehmens mit Sitz im Ausland, das von einem Unternehmen mit Sitz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bhängig ist und mit diesem einen Konzern bildet;
8.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 a) in den Fällen des § 174 Abs. 1 und 3, wenn der Täter und der, gegen den die Tat begangen wird, zur Zeit der Tat Deutsche sind und ihre Lebensgrundlage im Inland haben, und
- b) in den Fällen der §§ 176 bis 176b und 182, wenn der Täter Deutscher ist;
9. Abbruch der Schwangerschaft (§ 218), wenn der Täter zur Zeit der Tat Deutscher ist und seine Lebensgrundlag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at;
10. falsche uneidliche Aussage, Meineid und falsche Versicherung an

Eides Statt (§§ 153 bis 156) in einem Verfahren, das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bei einem Gericht oder einer anderen deutschen Stelle anhängig ist, die zur Abnahme von Eiden oder eidesstattlichen Versicherungen zuständig ist;

11. Straftaten gegen die Umwelt in den Fällen der §§ 324, 326, 330 und 330a, die im Bereich der deutschen ausschließlichen Wirtschaftszone begangen werden, soweit völkerrechtliche Übereinkommen zum Schutze des Meeres ihre Verfolgung als Straftaten gestatten;
- 11a. Straftaten nach § 328 Abs. 2 Nr. 3 und 4, Abs. 4 und 5, auch in Verbindung mit § 330, wenn der Täter zur Zeit der Tat Deutscher ist;
12. Taten, die ein deutscher Amtsträger oder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während eines dienstlichen Aufenthalts oder in Beziehung auf den Dienst begeht;
13. Taten, die ein Ausländer als Amtsträger oder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begeht;
14. Taten, die jemand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 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 Ausübung ihr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ihren Dienst begeht;
- 14a. Abgeordnetenbestechung (§ 108e), wenn der Täter zur Zeit der Tat Deutscher ist oder die Tat gegenüber einem Deutschen begangen wird;
15. Organ- und Gewebehandel (§ 18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wenn der Täter zur Zeit der Tat Deutscher ist.

§ 6 Auslandstaten gegen international geschützte Rechtsgüter

Das deutsche Strafrecht gilt weiter, unabhängig vom Recht des Tatorts, für folgende Taten, die im Ausland begangen werden:

1. (weggefallen)
2. Kernenergie-, Sprengstoff- und Strahlungsverbrechen in den Fällen der §§ 307 und 308 Abs. 1 bis 4, des § 309 Abs. 2 und des § 310;
3. Angriffe auf den Luft- und Seeverkehr (§ 316c);
4. Menschenhandel zum Zweck der sexuellen Ausbeutung und zum Zweck der Ausbeutung der Arbeitskraft sowie Förderung des Menschenhandels (§§ 232 bis 233a);
5. unbefugter Vertrieb von Betäubungsmitteln;
6. Verbreitung pornographischer Schriften in den Fällen der §§ 184a und 184b Abs. 1 bis 3, auch in Verbindung mit § 184c Satz 1;
7. Geld- und Wertpapierfälschung (§§ 146, 151 und 152), Fälschung von Zahlungskarten mit Garantiefunktion und Vordrucken für Eurochecks (§ 152b Abs. 1 bis 4) sowie deren Vorbereitung (§§ 149, 151, 152 und 152b Abs. 5);
8. Subventionsbetrug (§ 264);
9. Taten, die auf Grund ein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bindlichen zwischenstaatlichen Abkommens auch dann zu verfolgen sind, wenn sie im Ausland begangen werden.

§ 7 Geltung für Auslandstaten in anderen Fällen

- (1) Das deutsche Strafrecht gilt für Taten, die im Ausland gegen einen Deutschen begangen werden, wenn die Tat am Tatort mit Strafe bedroht ist oder der Tatort keiner Strafgewalt unterliegt.

- (2) Für andere Taten, die im Ausland begangen werden, gilt das deutsche Strafrecht, wenn die Tat am Tatort mit Strafe bedroht ist oder der Tatort keiner Strafgewaltunterliegt und wenn der Täter
1. zur Zeit der Tat Deutscher war oder es nach der Tat geworden ist oder
 2. zur Zeit der Tat Ausländer war, im Inland betroffen und, obwohl das Auslieferungsgesetz seine Auslieferung nach der Art der Tat zuließe, nichtausgeliefert wird, weil ein Auslieferungsersuchen innerhalb angemessener Frist nichtgestellt oder abgelehnt wird oder die Auslieferung nicht ausführbar ist.

§ 8 Zeit der Tat

Eine Tat ist zu der Zeit begangen, zu welcher der Täter oder der Teilnehmer gehandelt hat oder im Falle des Unterlassens hätte handeln müssen. Wann der Erfolg eintritt, ist nicht maßgebend.

§ 9 Ort der Tat

- (1) Eine Tat ist an jedem Ort begangen, an dem der Täter gehandelt hat oder im Falle des Unterlassens hätte handeln müssen oder an dem der zum Tatbestand gehörende Erfolgeingetreten ist oder nach der Vorstellung des Täters eintreten sollte.
- (2) Die Teilnahme ist sowohl an dem Ort begangen, an dem die Tat begangen ist, als auch an jedem Ort, an dem der Teilnehmer gehandelt hat oder im Falle des Unterlassens hätte handeln müssen

oder an dem nach seiner Vorstellung die Tat begangen werden sollte. Hat der Teilnehmer an einer Auslandstat im Inland gehandelt, so gilt für die Teilnahme das deutsche Strafrecht, auch wenn die Tat nach dem Recht des Tatorts nicht mit Strafe bedroht ist.

§ 10 Sondervorschriften für Jugendliche und Heranwachsende

Für Taten von Jugendlichen und Heranwachsenden gilt dieses Gesetz nur, soweit im Jugendgerichts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ist.

Zweiter Titel Sprachgebrauch

§ 11 Personen- und Sachbegriffe

(1)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1. Angehöriger : wer zu den folgenden Personen gehört:
 - a) Verwandte und Verschwägte gerader Linie, der Ehegatte, der Lebenspartner, der Verlobte, auch im Sinne des Lebenspartnerschaftsgesetzes, Geschwister,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der Geschwister, Geschwister der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und zwar auch dann, wenn die Ehe oder die Lebenspartnerschaft, welche die Beziehung begründet hat, nicht mehr besteht oder wenn die Verwandtschaft oder Schwägerschaft erloschen ist,
 - b) Pflegeeltern und Pflegekinder;
2. Amtsträger : wer nach deutschem Recht
 - a) Beamter oder Richter ist,
 - b) in einem sonstigen öffentlich-rechtlichen Amtsverhältnis steht oder

- c) sonst dazu bestellt ist, bei einer Behörde oder bei einer sonstigen Stelle oder in deren Auftrag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unbeschadet der zur Aufgabenerfüllung gewählten Organisationsform wahrzunehmen;
 - 3. Richter: wer nach deutschem Recht Berufsrichter oder ehrenamtlicher Richter ist;
 - 4.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wer, ohne Amtsträger zu sein,
 - a) bei einer Behörde oder bei einer sonstigen 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wahrnimmt, oder
 - b) bei einem Verband oder sonstigen Zusammenschluß, Betrieb oder Unternehmen, die für eine Behörde oder für eine sonstige Stelle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usführen, beschäftigt oder für sie tätig und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seiner Obliegenheiten auf Grund eines Gesetzes förmlich verpflichtet ist;
 - 5. rechtswidrige Tat: nur eine solche, di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verwirklicht;
 - 6. Unternehmen einer Tat: deren Versuch und deren Vollendung;
 - 7. Behörde: auch ein Gericht;
 - 8. Maßnahme: je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er Verfall, die Einziehung und die Unbrauchbarmachung;
 - 9. Entgelt: jede in einem Vermögensvorteil bestehende Gegenleistung.
- (2) Vorsätzlich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Tat auch dann, wenn sie einen gesetzlichen Tatbestand verwirklicht, der hinsichtlich der

Handlung Vorsatzvoraussetzt, hinsichtlich einer dadurch verursachten besonderen Folge jedoch Fahrlässigkeit ausreichen läßt.

- (3) Den Schriften stehen Ton-und Bildträger, Datenspeicher, Abbildungen und andere Darstellungen in denjenigen Vorschriften gleich, die auf diesen Absatz verweisen.

§ 12 Verbrechen und Vergehen

- (1) Verbrechen sind rechtswidrige Taten, die im Mindestmaß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oder darüber bedroht sind.
- (2) Vergehen sind rechtswidrige Taten, die im Mindestmaß mit einer geringeren Freiheitsstrafe oder die mit Geldstrafe bedroht sind.
- (3) Schärfungen oder Milderungen, die nach den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Teils oder für besonders schwere oder minder schwere Fälle vorgesehen sind, bleiben für die Einteilung außer Betracht.

Zweiter Abschnitt Die Tat

Erster Titel Grundlagen der Strafbarkeit

§ 13 Begehen durch Unterlassen

- (1) Wer es unterläßt, einen Erfolg abzuwenden, der zum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gehört, ist nach diesem Gesetz nur dann strafbar, wenn er rechtlich dafür einzustehen hat, daß der Erfolg nicht eintritt, und wenn das Unterlassen der Verwirklich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durch ein Tun entspricht.
- (2) Die Strafe kann nach § 49 Abs. 1 gemildert werden.

§ 14 Handeln für einen anderen

(1) Handelt jemand

1. als vertretungsberechtigtes Organ einer juristischen Person oder als Mitglied eines solchen Organs,
 2. als vertretungsberechtigter Gesellschafter einer rechtsfähigen Personengesellschaft oder
 3. als gesetzlicher Vertreter eines anderen,
- so ist ein Gesetz, nach dem besondere persönliche Eigenschaften, Verhältnisse oder Umstände (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 die Strafbarkeit begründen, auch auf den Vertreter anzuwenden, wenn diese Merkmale zwar nicht bei ihm, aber bei dem Vertretenen vorliegen.

(2) Ist jemand von dem Inhaber eines Betriebs oder einem sonst dazu Befugten

1. beauftragt, den Betrieb ganz oder zum Teil zu leiten, oder
 2. ausdrücklich beauftragt, in eigener Verantwortung Aufgaben wahrzunehmen, die dem Inhaber des Betriebs obliegen,
- und handelt er auf Grund dieses Auftrags, so ist ein Gesetz, nach dem 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 die Strafbarkeit begründen, auch auf den Beauftragten anzuwenden, wenn diese Merkmale zwar nicht bei ihm, aber bei dem Inhaber des Betriebs vorliegen. Dem Betrieb im Sinne des Satzes 1 steht das Unternehmen gleich. Handelt jemand auf Grund eines entsprechenden Auftrags für eine 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wahrnimmt, so ist Satz 1 sinngemäß anzuwenden.

(3) Die Absätze 1 und 2 sind auch dann anzuwenden, wenn die

Rechtshandlung, welche die Vertretungsbefugnis oder das Auftragsverhältnis begründen sollte, unwirksam ist.

§ 15 Vorsätzliches und fahrlässiges Handeln

Strafbar ist nur vorsätzliches Handeln, wenn nicht das Gesetz fahrlässiges Handeln ausdrücklich mit Strafe bedroht.

§ 16 Irrtum über Tatumstände

- (1) Wer bei Begehung der Tat einen Umstand nicht kennt, der zum gesetzlichen Tatbestand gehört, handelt nicht vorsätzlich. Die Strafbarkeit wegen fahrlässiger Begehung bleibt unberührt.
- (2) Wer bei Begehung der Tat irrig Umstände annimmt, welche den Tatbestand eines milderen Gesetzes verwirklichen würden, kann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nur nach dem milderen Gesetz bestraft werden.

§ 17 Verbotsirrtum

Fehlt dem Täter bei Begehung der Tat die Einsicht, Unrecht zu tun, so handelt er ohne Schuld, wenn er diesen Irrtum nicht vermeiden konnte. Konnte der Täter den Irrtum vermeiden, so kann die Strafe nach § 49 Abs. 1 gemildert werden.

Fußnote

§ 17: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formel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17.12.1975, 1976 I 48 – 1 BvL 24/75

§ 18 Schwerere Strafe bei besonderen Tatfolgen

Knüpft das Gesetz an eine besondere Folge der Tat eine schwerere Strafe, so trifft sie den Täter oder den Teilnehmer nur, wenn ihm hinsichtlich dieser Folge wenigstens Fahrlässigkeit zur Last fällt.

§ 19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

Schuldunfähig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och nicht vierzehn Jahre alt ist.

§20 Schuldunfähigkeit wegen seelischer Störungen

Ohne Schuld handelt, wer bei Begehung der Tat wegen einer krankhaften seelischen Störung, wegen einer tiefgreifenden Bewußtseinsstörung oder wegen Schwachsinn oder einer schweren anderen seelischen Abartigkeit unfähig ist, das Unrecht der Tat einzusehen oder nach dieser Einsicht zu handeln.

§21 Verminderte Schuldfähigkeit

Ist die Fähigkeit des Täters, das Unrecht der Tat einzusehen oder nach dieser Einsicht zu handeln, aus einem der in § 20 bezeichneten Gründe bei Begehung der Tat erheblich vermindert, so kann die Strafe nach § 49 Abs. 1 gemildert werden.

Zweiter Titel Versuch

§ 22 Begriffsbestimmung

Eine Straftat versucht, wer nach seiner Vorstellung von der Tat zur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unmittelbar ansetzt.

§23 Strafbarkeit des Versuchs

- (1) Der Versuch eines Verbrechens ist stets strafbar, der Versuch eines Vergehens nur dann, wenn das Gesetz es ausdrücklich bestimmt.
- (2) Der Versuch kann milder bestraft werden als die vollendete Tat (§ 49 Abs. 1).
- (3) Hat der Täter aus grobem Unverstand verkannt, daß der Versuch nach der Art des Gegenstandes, an dem, oder des Mittels, mit dem die Tat begangen werden sollte, überhaupt nicht zur Vollendung führen konnte, so kann das Gericht von Strafe absehen oder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 24 Rücktritt

- (1) Wegen Versuchs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aufgibt oder deren Vollendung verhindert. Wird die Tat ohne Zutun des Zurücktretenden nicht vollendet, so wird er straflos, wenn er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ie Vollendung zu verhindern.
- (2) Sind an der Tat mehrere beteiligt, so wird wegen Versuchs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die Vollendung verhindert. Jedoch genügt zu seiner Straflosigkeit sein freiwilliges und ernsthaftes Bemühen, die Vollendung der Tat zu verhindern, wenn sie ohne sein Zutun nicht vollendet oder unabhängig von seinem früheren Tatbeitrag begangen wird.

Dritter Titel Täterschaft und Teilnahme

§ 25 Täterschaft

- (1) Als Täter wird bestraft, wer die Straftat selbst oder durch einen anderen begeht.
- (2) Begehen mehrere die Straftat gemeinschaftlich, so wird jeder als Täter bestraft(Mittäter).

§ 26 Anstiftung

Als Anstifter wird gleich einem Täter bestraft, wer vorsätzlich einen anderen zu dessenvorsätzlich begangener rechtswidriger Tat bestimmt hat.

§ 27 Beihilfe

- (1) Als Gehilfe wird bestraft, wer vorsätzlich einem anderen zu dessen vorsätzlichbegangener rechtswidriger Tat Hilfe geleistet hat.
- (2) Die Strafe für den Gehilfen richtet sich nach der Strafdrohung für den Täter. Sie ist nach § 49 Abs. 1 zu mildern.

§ 28 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

- (1) Fehlen 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 (§ 14 Abs. 1), welche die Strafbarkeit des Täters begründen, beim Teilnehmer (Anstifter oder Gehilfe), so ist dessen Strafe nach §49 Abs. 1 zu mildern.
- (2) Bestimmt das Gesetz, daß 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 die Strafe schärfen, mildern oder ausschließen, so gilt das nur für den Beteiligten (Täter oder Teilnehmer),bei dem sie vorliegen.

§ 29 Selbständige Strafbarkeit des Beteiligten

Jeder Beteiligte wird ohne Rücksicht auf die Schuld des anderen nach seiner Schuld bestraft.

§ 30 Versuch der Beteiligung

- (1) Wer einen anderen zu bestimmen versucht, ein Verbrechen zu begehen oder zu ihm anzustiften, wird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en Versuch des Verbrechens bestraft. Jedoch ist die Strafe nach § 49 Abs. 1 zu mildern. § 23 Abs. 3 gilt entsprechend.
- (2) Ebenso wird bestraft, wer sich bereit erklärt, wer das Erbieten eines anderen annimmt oder wer mit einem anderen verabredet, ein Verbrechen zu begehen oder zu ihm anzustiften.

§ 31 Rücktritt vom Versuch der Beteiligung

- (1) Nach § 30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1. den Versuch aufgibt, einen anderen zu einem Verbrechen zu bestimmen, und eine etwa bestehende Gefahr, daß der andere die Tat begeht, abwendet,
 2. nachdem er sich zu einem Verbrechen bereit erklärt hatte, sein Vorhaben aufgibt oder,
 3. nachdem er ein Verbrechen verabredet oder das Erbieten eines anderen zu einem Verbrechen angenommen hatte, die Tat verhindert.
- (2) Unterbleibt die Tat ohne Zutun des Zurücktretenden oder wird sie unabhängig von seinem früheren Verhalten begangen, so genügt zu seiner Straflosigkeit sein freiwilliges und ernsthaftes Bemühen, die Tat zu verhindern.

Vierter Titel Notwehr und Notstand

§ 32 Notwehr

- (1) Wer eine Tat begeht, die durch Notwehr geboten ist, handelt nicht rechtswidrig.
- (2) Notwehr ist die Verteidigung, die erforderlich ist, um einen gegenwärtigen rechtswidrigen Angriff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 33 Überschreitung der Notwehr

Überschreitet der Täter die Grenzen der Notwehr aus Verwirrung, Furcht oder Schrecken, so wird er nicht bestraft.

§ 34 Rechtfertigender Notstand

Wer in einer gegenwärtig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 für Leben, Leib, Freiheit, Ehre, Eigentum oder ein anderes Rechtsgut eine Tat begeht, um die Gefahr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handelt nicht rechtswidrig, wenn bei Abwägung der widerstreitenden Interessen, namentlich der betroffenen Rechtsgüter und des Grades der ihnen drohenden Gefahren, das geschützte Interesse das beeinträchtigte wesentlich überwiegt. Dies gilt jedoch nur, soweit die Tat ein angemessenes Mittel ist, die Gefahr abzuwenden.

§ 35 Entschuldigender Notstand

- (1) Wer in einer gegenwärtig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 für Leben, Leib oder Freiheit eine rechtswidrige Tat begeht, um die

Gefahr von sich, einem Angehörigen oder einer anderen ihm nahestehenden Person abzuwenden, handelt ohne Schuld. Dies gilt nicht, soweit dem Täter nach den Umständen, namentlich weil er die Gefahr selbst verursacht hat oder weil er in einem besonderen Rechtsverhältnis stand, zugemutet werden konnte, die Gefahr hinzunehmen; jedoch kann die Strafe nach § 49 Abs. 1 gemildert werden, wenn der Täter nicht mit Rücksicht auf ein besonderes Rechtsverhältnis die Gefahr hinzunehmen hatte.

- (2) Nimmt der Täter bei Begehung der Tat irrig Umstände an, welche ihn nach Absatz 1 entschuldigen würden, so wird er nur dann bestraft, wenn er den Irrtum vermeiden konnte. Die Strafe ist nach § 49 Abs. 1 zu mildern.

Fünfter Titel Strafflosigkeit parlamentarischer Äußerungen und Berichte

§ 36 Parlamentarische Äußerung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der Bundesversammlung oder eines Gesetzgebungsorgans eines Landes dürfen zu keiner Zeit wegen ihrer Abstimmung oder wegen einer Äußerung, die sie in der Körperschaft oder in einem ihrer Ausschüsse getan haben, außerhalb der Körperschaft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Dies gilt nicht für verleumderische Beleidigungen.

§ 37 Parlamentarische Berichte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die öffentlichen Sitzungen der in § 36

bezeichneten Körperschaften oder ihrer Ausschüsse bleiben von jeder Verantwortlichkeit frei.

Dritter Abschnitt Rechtsfolgen der Tat

Erster Titel Strafen Freiheitsstrafe

§ 38 Dauer der Freiheitsstrafe

- (1) Die Freiheitsstrafe ist zeitig, wenn das Gesetz nicht lebenslange Freiheitsstrafe androht.
- (2) Das Höchstmaß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ist fünfzehn Jahre, ihr Mindestmaß ein Monat.

§ 39 Bemessung der Freiheitsstrafe

Freiheitsstrafe unter einem Jahr wird nach vollen Wochen und Monaten, Freiheitsstrafe von längerer Dauer nach vollen Monaten und Jahren bemessen.

Geldstrafe

§ 40 Verhängung in Tagessätzen

- (1) Die Geldstrafe wird in Tagessätzen verhängt. Sie beträgt mindestens fünf und, wenn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höchstens dreihundertsechzig volle Tagessätze.
- (2) Die Höhe eines Tagessatzes bestimmt das Geri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des Täters. Dabei geht es in der Regel von dem Nettoeinkommen aus, das der Täter durchschnittlich an einem Tag hat oderhaben könnte. Ein Tagessatz wird auf mindestens einen und höchstens fünftausend Euro festgesetzt.

(3) Die Einkünfte des Täters, sein Vermögen und andere Grundlagen für die Bemessung eines Tagessatzes können geschätzt werden.

(4) In der Entscheidung werden Zahl und Höhe der Tagessätze angegeben.

§ 41 Geldstrafe neben Freiheitsstrafe

Hat der Täter sich durch die Tat bereichert oder zu bereichern versucht, so kan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eine sonst nicht oder nur wahlweise angedrohte Geldstrafe verhängt werden, wenn dies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des Täters angebracht ist. Dies gilt nicht, wenn das Gericht nach § 43a eine Vermögensstrafe verhängt.

§ 42 Zahlungserleichterungen

Ist dem Verurteilten nach seinen persönlichen o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nicht zuzumuten, die Geldstrafe sofort zu zahlen, so bewilligt ihm das Gericht eine Zahlungsfrist oder gestattet ihm, die Strafe in bestimmten Teilbeträgen zu zahlen. Das Gericht kann dabei anordnen, daß die Vergünstigung, die Geldstrafe in bestimmten Teilbeträgen zu zahlen, entfällt, wenn der Verurteilte einen Teilbetrag nicht rechtzeitig zahlt. Das Gericht soll Zahlungserleichterungen auch gewähren, wenn ohne die Bewilligung die Wiedergutmachung des durch die Straftat verursachten

Schadensdurch den Verurteilten erheblich gefährdet wäre; dabei kann dem Verurteilten der Nachweis der Wiedergutmachung auferlegt werden.

§ 43 Ersatzfreiheitsstrafe

An die Stelle einer uneinbringlichen Geldstrafe tritt Freiheitsstrafe. Einem Tagessatzentspricht ein Tag Freiheitsstrafe. Das Mindestmaß der Ersatzfreiheitsstrafe ist ein Tag.

Vermögensstrafe

§ 43a Verhängung der Vermögensstrafe

- (1) Verweist das Gesetz auf diese Vorschrift, so kann das Gericht neben einer lebenslangen oder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auf Zahlung eines Geldbetrages erkennen, dessen Höhe durch den Wert des Vermögens des Täters begrenzt ist (Vermögensstrafe). Vermögensvorteile, deren Verfall angeordnet wird, bleiben bei der Bewertung des Vermögens außer Ansatz. Der Wert des Vermögens kann geschätzt werden.
- (2) § 42 gilt entsprechend.
- (3) Das Gericht bestimmt eine Freiheitsstrafe, die im Fall der Uneinbringlichkeit an die Stelle der Vermögensstrafe tritt (Ersatzfreiheitsstrafe). Das Höchstmaß der Ersatzfreiheitsstrafe ist zwei Jahre, ihr Mindestmaß ein Monat.

Fußnote

§43a: Gem. BVerfGE v. 20.3.2002 I 1340 (2 BvR 794/95) mit GG (100–1) Art. 103 Abs. 2 unvereinbar und nichtig

Nebenstrafe

§ 44 Fahrverbot

- (1) Wird jemand wegen einer Straftat, die er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m Führen eines Kraftfahrzeugs oder unter Verletzung der Pflichten eines Kraftfahrzeugführers begangen hat, zu einer Freiheitsstrafe oder einer Geldstrafe verurteilt, so kann ihm das Gericht für die Dauer von einem Monat bis zu drei Monaten verbieten, im Straßenverkehr Kraftfahrzeuge jeder oder einer bestimmten Art zu führen. Ein Fahrverbot ist in der Regel anzuordnen, wenn in den Fällen einer Verurteilung nach § 315c Abs. 1 Nr. 1 Buchstabe a, Abs. 3 oder § 316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nach § 69 unterbleibt.
- (2) Das Fahrverbot wird m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wirksam. Für seine Dauer werden von einer deutschen Behörde ausgestellte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Führerscheine amtlich verwahrt. Dies gilt auch, wenn der Führerschein von einer Behörde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eines anderen Vertragsstaates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ausgestellt worden ist, sofern der Inhaber seinen ordentlichen Wohnsitz im Inland hat. In anderen ausländischen Führerscheinen wird das Fahrverbot vermerkt.
- (3) Ist ein Führerschein amtlich zu verwahren oder das Fahrverbot in einem ausländischen Führerschein zu vermerken, so wird die Verbotsfrist erst von dem Tage an gerechnet, an dem dies geschieht. In die

Verbotsfrist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Nebenfolgen

§ 45 Verlust der Amtsfähigkeit, der Wählbarkeit und des Stimmrechts

- (1) Wer wegen eines Verbrechens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verurteilt wird, verliert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und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 (2) Das Gericht kann dem Verurteilten für die Dauer von zwei bis zu fünf Jahren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Fähigkeiten aberkennen, soweit das Gesetz es besonders vorsieht.
- (3) Mit dem Verlust der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verliert der Verurteilte zugleich die entsprechenden Rechtsstellungen und Rechte, die er innehat.
- (4) Mit dem Verlust der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verliert der Verurteilte zugleich die entsprechenden Rechtsstellungen und Rechte, die er innehat, soweit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5) Das Gericht kann dem Verurteilten für die Dauer von zwei bis zu fünf Jahren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 stimmen, aberkennen, soweit das Gesetz es besonders vorsieht.

§ 45a Eintritt und Berechnung des Verlustes

- (1) Der Verlust der Fähigkeiten, Rechtsstellungen und Rechte wird m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wirksam.
- (2) Die Dauer des Verlustes einer Fähigkeit oder eines Rechts wird von dem Tage angerechnet, an dem die Freiheitsstrafe verbüßt, verjährt oder erlassen ist. Ist nebender Freiheitsstrafe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worden, so wird die Frist erst von dem Tage an gerechnet, an dem auch die Maßregel erledigt ist.
- (3) War die Vollstreckung der Strafe, des Strafrestes oder der Maßregel zur Bewährung oder im Gnadenweg ausgesetzt, so wird in die Frist die Bewährungszeit eingerechnet, wenn nach deren Ablauf die Strafe oder der Strafrest erlassen wird oder die Maßregel erledigt ist.

§45b Wiederverleihung von Fähigkeiten und Rechten

- (1) Das Gericht kann nach § 45 Abs. 1 und 2 verlorene Fähigkeiten und nach § 45 Abs. 5 verlorene Rechte wiederverleihen, wenn 1. der Verlust die Hälfte der Zeit, für die er dauern sollte, wirksam war und 2. zu erwarten ist, daß der Verurteilte künftig keine vorsätzlichen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 (2) In die Fristen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er Verurteilte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Zweiter Titel Strafbemessung

§ 46 Grundsätze der Strafzumessung

- (1) Die Schuld des Täters ist Grundlage für die Zumessung der Strafe. Die Wirkungen, die von der Strafe für das künftige Leben des Täters in der Gesellschaft zu erwarten sind, sind zu berücksichtigen.
- (2) Bei der Zumessung wägt das Gericht die Umstände, die für und gegen den Täter sprechen, gegeneinander ab. Dabei kommen namentlich in Betracht: die Beweggründe und die Ziele des Täters, die Gesinnung, die aus der Tat spricht, und der bei der Tat aufgewendete Wille, das Maß der Pflichtwidrigkeit, die Art der Ausführung und die verschuldeten Auswirkungen der Tat, das Vorleben des Täters, seine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sowie sein Verhalten nach der Tat, besonders sein Bemühen, den Schaden wiedergutzumachen, sowie das Bemühen des Täters,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
- (3) Umstände, die schon Merkmale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sind, dürf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 46a Täter–Opfer–Ausgleich, Schadenswiedergutmachung

Hat der Täter

1. in dem Bemühen,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 (Täter–Opfer–Ausgleich), seine Tat ganz oder zum überwiegenden Teil wiedergutmacht oder deren Wiedergutmachung ernsthaft erstrebt oder

2. in einem Fall, in welchem die Schadenswiedergutmachung von ihm erhebliche persönliche Leistungen oder persönlichen Verzicht erfordert hat, das Opfer ganz oder zum überwiegenden Teil entschädigt,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 49 Abs. 1 mildern oder, wenn keine höhere Strafe als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bis zu dreihundertsechzig Tagessätzen verwirkt ist, von Strafe absehen.

§ 47 Kurze Freiheitsstrafe nur in Ausnahmefällen

- (1) Eine Freiheitsstrafe unter sechs Monaten verhängt das Gericht nur, wenn besondere Umstände, die in der Tat oder der Persönlichkeit des Täters liegen, die Verhängung einer Freiheitsstrafe zur Einwirkung auf den Täter oder zur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unerlässlich machen.
- (2) Droht das Gesetz keine Geldstrafe an und kommt ein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oder darüber nicht in Betracht, so verhängt das Gericht eine Geldstrafe, wenn nicht die Verhängung einer Freiheitsstrafe nach Absatz 1 unerlässlich ist. Droht das Gesetz ein erhöhtes Mindestmaß der Freiheitsstrafe an, so bestimmt sich das Mindestmaß der Geldstrafe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ach dem Mindestmaß der angedrohten Freiheitsstrafe; dabei entsprechen dreißig Tagessätze einem Monat Freiheitsstrafe.

§ 48 (weggefallen)

§ 49 Besondere gesetzliche Milderungsgründe

- (1) Ist eine Milderung nach dieser Vorschrift vorgeschrieben oder zugelassen, so gilt für die Milderung folgendes:
1. An die Stelle von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trit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2. Bei zeitiger Freiheitsstrafe darf höchstens auf drei Viertel des angedrohten Höchstmaßes erkannt werden. Bei Geldstrafe gilt dasselbe für die Höchstzahl der Tagessätze.
 3. Das erhöhte Mindestmaß einer Freiheitsstrafe ermäßigt sich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zehn oder fünf Jahren auf zwei Jahre,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drei oder zwei Jahren auf sechs Monate, im Falle eines Mindestmaßes von einem Jahr auf drei Monate, im übrigen auf das gesetzliche Mindestmaß.
- (2) Darf das Gericht nach einem Gesetz, das auf diese Vorschrift verweis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so kann es bis zum gesetzlichen Mindestmaß der angedrohten Strafe herabgehen oder statt auf Freiheitsstrafe auf Geldstrafe erkennen.

§ 50 Zusammentreffen von Milderungsgründen

Ein Umstand, der allein oder mit anderen Umständen die Annahme eines minder schweren Falles begründet und der zugleich ein besonderer gesetzlicher Milderungsgrund nach § 49 ist, darf nur einmal berücksichtigt werden.

§ 51 Anrechnung

- (1) Hat der Verurteilte aus Anlaß einer Tat, die Gegenstand des

Verfahrens ist oder gewesen ist, Untersuchungshaft oder eine andere Freiheitsentziehung erlitten, so wird sie auf zeitige Freiheitsstrafe und auf Geldstrafe angerechnet. Das Gericht kann jedoch anordnen, daß die Anrechnung ganz oder zum Teil unterbleibt, wenn sie im Hinblick auf das Verhalten des Verurteilten nach der Tat nicht gerechtfertigt ist.

- (2) Wird eine rechtskräftig verhängte Strafe in einem späteren Verfahren durch eine andere Strafe ersetzt, so wird auf diese die frühere Strafe angerechnet, soweit sie vollstreckt oder durch Anrechnung erledigt ist.
- (3) Ist der Verurteilte wegen derselben Tat im Ausland bestraft worden, so wird auf die neue Strafe die ausländische angerechnet, soweit sie vollstreckt ist. Für eine andere im Ausland erlittene Freiheitsentziehung gilt Absatz 1 entsprechend.
- (4) Bei der Anrechnung von Geldstrafe oder auf Geldstrafe entspricht ein Tag Freiheitsentziehung einem Tagessatz. Wird eine ausländische Strafe oder Freiheitsentziehung angerechnet, so bestimmt das Gericht den Maßstab nach seinem Ermessen.
- (5) Für die Anrechnung der Dauer einer vorläufigen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111a der Strafprozeßordnung) auf das Fahrverbot nach § 44 gilt Absatz 1 entsprechend. In diesem Sinne steht der vorläufigen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die Verwahrung, Sicherstellung oder Beschlagnahme des Führerscheins (§ 94 der Strafprozeßordnung) gleich.

Dritter Titel Strafbemessung bei mehreren Gesetzesverletzungen

§ 52 Tateinheit

- (1) Verletzt dieselbe Handlung mehrere Strafgesetze oder dasselbe Strafgesetz mehrmals, so wird nur auf eine Strafe erkannt.
- (2) Sind mehrere Strafgesetze verletzt, so wird die Strafe nach dem Gesetz bestimmt, das die schwerste Strafe androht. Sie darf nicht milder sein, als die anderen anwendbaren Gesetze es zulassen.
- (3) Geldstrafe kann das Gerich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41 neben Freiheitsstrafe gesondert verhängen.
- (4) Läßt eines der anwendbaren Gesetze die Vermögensstrafe zu, so kann das Gericht auf sie neben einer lebenslangen oder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gesondert erkennen. Im übrigen muß oder kann auf Nebenstrafen, Nebenfolgen und Maßnahmen (§ 11 Abs. 1 Nr. 8) erkannt werden, wenn eines der anwendbaren Gesetze sie vorschreibt oder zuläßt.

§ 53 Tatmehrheit

- (1) Hat jemand mehrere Straftaten begangen, die gleichzeitig abgeurteilt werden, und dadurch mehrere Freiheitsstrafen oder mehrere Geldstrafen verwirkt, so wird auf eine Gesamtstrafe erkannt.
- (2) Trifft Freiheitsstrafe mit Geldstrafe zusammen, so wird auf eine Gesamtstrafe erkannt. Jedoch kann das Gericht auf Geldstrafe auch gesondert erkennen; soll in diesen Fällen wegen mehrerer Straftaten Geldstrafe verhängt werden, so wird insoweit auf eine Gesamtgeldstrafe erkannt.

- (3) Hat der Täter nach dem Gesetz, nach welchem § 43a Anwendung findet, oder im Falldes §52 Abs. 4 als Einzelstrafe eine lebenslange oder eine zeitige Freiheitsstrafe vonmehr als zwei Jahren verwirkt, so kann das Gericht neben der nach Absatz 1 oder 2 zubildenden Gesamtstrafe gesondert eine Vermögensstrafe verhängen; soll in diesen Fällenwegen mehrerer Straftaten Vermögensstrafe verhängt werden, so wird insoweit auf eine Gesamtvermögensstrafe erkannt. § 43a Abs. 3 gilt entsprechend.
- (4) § 52 Abs. 3 und 4 Satz 2 gilt sinngemäß.

§ 54 Bildung der Gesamtstrafe

- (1) Ist eine der Einzelstrafen ein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so wird alsGesamtstrafe auf lebenslange Freiheitsstrafe erkannt. In allen übrigen Fällen wird die Gesamtstrafe durch Erhöhung der verwirkten höchsten Strafe, bei Strafen verschiedenerArt durch Erhöhung der ihrer Art nach schwersten Strafe gebildet. Dabei werden die Person des Täters und die einzelnen Straftaten zusammenfassend gewürdigt.
- (2) Die Gesamtstrafe darf die Summe der Einzelstrafen nicht erreichen. Sie darf beizeitigen Freiheitsstrafen fünfzehn Jahre, bei Vermögensstrafen den Wert des Vermögensdes Täters und bei Geldstrafe siebenhundertzwanzig Tagessätze nicht übersteigen; §43a Abs. 1 Satz 3 gilt entsprechend.
- (3) Ist eine Gesamtstrafe aus Freiheits–und Geldstrafe zu bilden, so entspricht beider Bestimmung der Summe der Einzelstrafen ein Tagessatz einem Tag Freiheitsstrafe.

§ 55 Nachträgliche Bildung der Gesamtstrafe

- (1) Die §§ 53 und 54 sind auch anzuwenden, wenn ein rechtskräftig Verurteilter, bevor die gegen ihn erkannte Strafe vollstreckt, verjährt oder erlassen ist, wegen einer anderen Straftat verurteilt wird, die er vor der früheren Verurteilung begangen hat. Als frühere Verurteilung gilt das Urteil in dem früheren Verfahren, in dem die zugrundeliegenden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üft werden konnten.
- (2) Vermögensstrafen, Nebenstrafen, Nebenfolgen und Maßnahmen (§11 Abs. 1 Nr. 8), auf die in der früheren Entscheidung erkannt war, sind aufrechtzuerhalten, soweit sie nicht durch die neue Entscheidung gegenstandslos werden. Dies gilt auch, wenn die Höhe der Vermögensstrafe, auf die in der früheren Entscheidung erkannt war, den Wert des Vermögens des Täters zum Zeitpunkt der neuen Entscheidung übersteigt.

Vierter Titel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 56 Strafaussetzung

- (1) Bei der Verurteilung zu Freiheitsstrafe von nicht mehr als einem Jahr setzt das Gericht die Vollstreckung der Strafe zur Bewährung aus, wenn zu erwarten ist, daß der Verurteilte sich schon die Verurteilung zur Warnung dienen lassen und künftig auch ohne die Einwirkung des Strafvollzugs keine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Dabei sind namentlich die Persönlichkeit des Verurteilten, sein

Vorleben, die Umstände einer Tat, sein Verhalten nach der Tat, seine Lebensverhältnisse und die Wirkungen zu berücksichtigen, die von der Aussetzung für ihn zu erwarten sind.

- (2) Das Gericht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auch die Vollstreckung einer höheren Freiheitsstrafe, die zwei Jahre nicht übersteigt, zur Bewährung aussetzen, wenn nach der Gesamtwürdigung von Tat und Persönlichkeit des Verurteilten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Bei der Entscheidung ist namentlich auch das Bemühen des Verurteilten, den durch die Tat verursachten Schaden wiedergutzumachen, zu berücksichtigen.
- (3) Bei der Verurteilung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ird die Vollstreckung nicht ausgesetzt, wenn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sie gebietet.
- (4) Die Strafaussetzung kann nicht auf einen Teil der Strafe beschränkt werden. Sie wird durch eine Anrechnung von Untersuchungshaft oder einer anderen Freiheitsentziehung nicht ausgeschlossen.

§ 56a Bewährungszeit

- (1) Das Gericht bestimmt die Dauer der Bewährungszeit. Sie darf fünf Jahre nicht überschreiten und zwei Jahre nicht unterschreiten.
- (2) Die Bewährungszeit beginnt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Strafaussetzung. Sie kann nachträglich bis auf das Mindestmaß verkürzt oder vor ihrem Ablauf bis auf das Höchstmaß verlängert werden.

§ 56b Auflagen

- (1) Das Gericht kann dem Verurteilten Auflagen erteilen, die der Genugtuung für das begangene Unrecht dienen. Dabei dürfen an den Verurteilten keine unzumutba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 (2) Das Gericht kann dem Verurteilten auferlegen,
1. nach Kräften den durch die Tat verursachten Schaden wiedergutzumachen,
 2. einen Geldbetrag zugunsten einer gemeinnützigen Einrichtung zu zahlen, wenn dies im Hinblick auf die Tat und die Persönlichkeit des Täters angebracht ist,
 3. sonst gemeinnützige Leistungen zu erbringen oder
 4. einen Geldbetrag zugunsten der Staatskasse zu zahlen.
- Eine Auflage nach Satz 1 Nr. 2 bis 4 soll das Gericht nur erteilen, soweit die Erfüllung der Auflage einer Wiedergutmachung des Schadens nicht entgegensteht.
- (3) Erbietet sich der Verurteilte zu angemessenen Leistungen, die der Genugtuung für das begangene Unrecht dienen, so sieht das Gericht in der Regel von Auflagen vorläufig ab, wenn die Erfüllung des Anerbietens zu erwarten ist.

§ 56c Weisungen

- (1) Das Gericht erteilt dem Verurteilten für die Dauer der Bewährungszeit Weisungen, wenn er dieser Hilfe bedarf, um keine Straftaten mehr zu begehen. Dabei dürfen an die Lebensführung des Verurteilten keine unzumutba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2) Das Gericht kann den Verurteilten namentlich anweisen,

1. Anordnungen zu befolgen, die sich auf Aufenthalt, Ausbildung, Arbeit oder Freizeit oder auf die Ordnung sein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beziehen,
2. sich zu bestimmten Zeiten bei Gericht oder einer anderen Stelle zu melden,
3. zu der verletzten Person oder bestimmten Personen oder Personen einer bestimmten Gruppe, die ihm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keinen Kontakt aufzunehmen, mit ihnen nicht zu verkehren, sie nicht zu beschäftigen, auszubilden oder zu beherbergen,
4. bestimmte Gegenstände, die ihm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nicht zu besitzen, bei sich zu führen oder verwahren zu lassen oder
5. Unterhaltungspflichten nachzukommen.

(3) Die Weisung,

1. sich einer Heilbehandlung, die mit einem körperlichen Eingriff verbunden ist, oder einer Entziehungskur zu unterziehen oder
2. in einem geeigneten Heim oder einer geeigneten Anstalt Aufenthalt zu nehmen,

darf nur mit Einwilligung des Verurteilten erteilt werden.

(4) Macht der Verurteilte entsprechende Zusagen für seine künftige Lebensführung, so sieht das Gericht in der Regel von Weisungen vorläufig ab, wenn die Einhaltung der Zusagen zu erwarten ist.

§ 56d Bewährungshilfe

- (1) Das Gericht unterstellt die verurteilte Person für die Dauer oder einen Teiler der Bewährungszeit der Aufsicht und Leitung einer Bewährungshelferin oder eines Bewährungshelfers, wenn dies angezeigt ist, um sie von Straftaten abzuhalten.
- (2) Eine Weisung nach Absatz 1 erteilt das Gericht in der Regel, wenn es eine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neun Monaten aussetzt und die verurteilte Person noch nicht 27 Jahre alt ist.
- (3) Die Bewährungshelferin oder der Bewährungshelfer steht der verurteilten Person helfend und betreuend zur Seite. Sie oder er überwacht im Einvernehmen mit dem Gericht die Erfüllung der Auflagen und Weisungen sowie der Anerbieten und Zusagen und berichtet über die Lebensführung der verurteilten Person in Zeitabständen, die das Gericht bestimmt. Größliche oder beharrliche Verstöße gegen Auflagen, Weisungen, Anerbieten oder Zusagen teilt die Bewährungshelferin oder der Bewährungshelfer dem Gericht mit.
- (4) Die Bewährungshelferin oder der Bewährungshelfer wird vom Gericht bestellt. Er kann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m Bewährungshelfer für die Tätigkeit nach Absatz 3 Anweisungen erteilen.
- (5) Die Tätigkeit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wird haupt- oder ehrenamtlich ausgeübt.

§ 56e Nachträgliche Entscheidungen

Das Gericht kann Entscheidungen nach den §§ 56b bis 56d auch nachträglich treffen, ändern oder aufheben.

§ 56f Widerruf der Strafaussetzung

(1) Das Gericht widerruft die Strafaussetzung, wenn die verurteilte Person

1. in der Bewährungszeit eine Straftat begeht und dadurch zeigt, daßdie Erwartung, dieder Strafaussetzung zugrunde lag, sich nicht erfüllt hat,
2. gegen Weisungen gröblich oder beharrlich verstößt oder sich der Aufsicht und Leitung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beharrlich entzieht und dadurch Anlaß zu der Besorgnis gibt, daß sie erneut Straftaten begehen wird, oder
3. gegen Auflagen gröblich oder beharrlich verstößt.

Satz 1 Nr. 1 gilt entsprechend, wenn die Tat in der Zeit zwischen der Entscheidung überdie Strafaussetzung und deren Rechtskraft oder bei nachträglicher Gesamtstrafenbildungin der Zeit zwischen der Entscheidung über die Strafaussetzung in einem einbezogenen Urteil und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Gesamtstrafe begangen worden ist.

(2) Das Gericht sieht jedoch von dem Widerruf ab, wenn es ausreicht,

1. weitere Auflagen oder Weisungen zu erteilen, insbesondere die verurteilte Person einer Bewährungshelferin oder einem Bewährungshelfer zu unterstellen, oder
2. die Bewährungs–oder Unterstellungszeit zu verlängern.

In den Fällen der Nummer 2 darf die Bewährungszeit nicht um mehr als die Hälfte derzunächst bestimmten Bewährungszeit verlängert werden.

- (3) Leistungen, die die verurteilte Person zur Erfüllung von Auflagen, Anerbieten, Weisungen oder Zusagen erbracht hat, werden nicht erstattet. Das Gericht kann jedoch, wenn es die Strafaussetzung widerruft, Leistungen, die die verurteilte Person zur Erfüllung von Auflagen nach § 56b Abs. 2 Satz 1 Nr. 2 bis 4 oder entsprechenden Anerbieten nach § 56b Abs. 3 erbracht hat, auf die Strafe anrechnen.

§ 56g Straferlaß

- (1) Widerruft das Gericht die Strafaussetzung nicht, so erläßt es die Strafe nach Ablauf der Bewährungszeit. § 56f Abs. 3 Satz 1 ist anzuwenden.
- (2) Das Gericht kann den Straferlaß widerrufen, wenn der Verurteilt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wegen einer in der Bewährungszeit begangenen vorsätzlichen Straftat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verurteilt wird. Der Widerruf ist nur innerhalb von einem Jahr nach Ablauf der Bewährungszeit und von sechs Monaten nach Rechtskraft der Verurteilung zulässig. § 56f Abs. 1 Satz 2 und Abs. 3 gilt entsprechend.

§ 57 Aussetzung des Strafrestes bei zeitiger Freiheitsstrafe

- (1) Das Gericht setzt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zur Bewährung aus, wenn
1. zwei Drittel der verhängten Strafe, mindestens jedoch zwei Monate, verbüßt sind,

2. di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icherheitsinteresses der Allgemeinheit verantwortet werden kann, und
3. die verurteilte Person einwilligt.

Bei der Entscheidung sind insbesondere die Persönlichkeit der verurteilten Person, ihr Vorleben, die Umstände ihrer Tat, das Gewicht des bei einem Rückfallbedrohten Rechtsguts, das Verhalten der verurteilten Person im Vollzug, ihre Lebensverhältnisse und die Wirkungen zu berücksichtigen, die von der Aussetzung für sie zu erwarten sind.

- (2) Schon nach Verbüßung der Hälfte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mindestens jedoch von sechs Monaten, kann das Gericht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zur Bewährung aussetzen, wenn

1. die verurteilte Person erstmals eine Freiheitsstrafe verbüßt und diese zwei Jahre nicht übersteigt oder
2. die Gesamtwürdigung von Tat, Persönlichkeit der verurteilten Person und ihrer Entwicklung während des Strafvollzugs ergibt, daß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und die übrig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erfüllt sind.

- (3) Die §§ 56a bis 56e gelten entsprechend; die Bewährungszeit darf, auch wenn sie nachträglich verkürzt wird, die Dauer des Strafrestes nicht unterschreiten. Hat die verurteilte Person mindestens ein Jahr ihrer Strafe verbüßt, bevor deren Rest zur Bewährung ausgesetzt wird, unterstellt sie das Gericht in der Regel für die Dauer oder einen Teil der Bewährungszeit der Aufsicht und Leitung einer Bewährungshelferin oder eines Bewährungshelfers.

- (4) Soweit eine Freiheitsstrafe durch Anrechnung erledigt ist, gilt sie als verbüßte Strafe im Sinne der Absätze 1 bis 3.
- (5) Die §§ 56f und 56g gelten entsprechend. Das Gericht widerruft die Strafaussetzung auch dann, wenn die verurteilte Person in der Zeit zwischen der Verurteilung und der Entscheidung über die Strafaussetzung eine Straftat begangen hat, die von dem Gericht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Strafaussetzung aus tatsächlichen Gründ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konnte und die im Fall ihrer Berücksichtigung zur Versagung der Strafaussetzung geführt hätte; als Verurteilung gilt das Urteil, in dem die zugrundeliegenden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üft werden konnten.
- (6) Das Gericht kann davon absehen,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zur Bewährung auszusetzen, wenn die verurteilte Person unzureichende oder falsche Angaben über den Verbleib von Gegenständen macht, die dem Verfall unterliegen oder nur deshalb nicht unterliegen, weil der verletzten Person aus der Tat ein Anspruch der in § 73 Abs. 1 Satz 2 bezeichneten Art erwachsen ist.
- (7) Das Gericht kann Fristen von höchstens sechs Monaten festsetzen, vor deren Ablauf ein Antrag der verurteilten Person, den Strafreis zur Bewährung auszusetzen, unzulässig ist.

§ 57a Aussetzung des Strafreises bei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 (1) Das Gericht setzt die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zur Bewährung aus, wenn

1. fünfzehn Jahre der Strafe verbüßt sind,
 2. nicht die besondere Schwere der Schuld des Verurteilten die weitere Vollstreckung gebietet und
 3. die Voraussetzungen des § 57 Abs. 1 Satz 1 Nr. 2 und 3 vorliegen.
§ 57 Abs. 1 Satz 2 und Abs. 6 gilt entsprechend.
- (2) Als verbüßte Strafe im Sinne des Absatzes 1 Satz 1 Nr. 1 gilt jede Freiheitsentziehung, die der Verurteilte aus Anlaß der Tat erlitten hat.
- (3) Die Dauer der Bewährungszeit beträgt fünf Jahre. § 56a Abs. 2 Satz 1 und die §§ 56bbis 56g, 57 Abs. 3 Satz 2 und Abs. 5 Satz 2 gelten entsprechend.
- (4) Das Gericht kann Fristen von höchstens zwei Jahren festsetzen, vor deren Ablauf ein Antrag des Verurteilten, den Strafreist zur Bewährung auszusetzen, unzulässig ist.

§ 57b Aussetzung des Strafrestes bei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als Gesamtstrafe

Ist auf lebenslange Freiheitsstrafe als Gesamtstrafe erkannt, so werden bei der Feststellung der besonderen Schwere der Schuld (§ 57a Abs. 1 Satz 1 Nr. 2) die einzelnen Straftaten zusammenfassend gewürdigt.

§ 58 Gesamtstrafe und Strafaussetzung

- (1) Hat jemand mehrere Straftaten begangen, so ist für die Strafaussetzung nach § 56 die Höhe der Gesamtstrafe maßgebend.
- (2) Ist in den Fällen des § 55 Abs. 1 die Vollstreckung der in der früheren Entscheidung verhängten Freiheitsstrafe ganz oder für den

Strafrest zur Bewährung ausgesetzt und wird auch die Gesamtstrafe zur Bewährung ausgesetzt, so verkürzt sich das Mindestmaß der neuen Bewährungszeit um die bereits abgelaufene Bewährungszeit, jedoch nicht auf weniger als ein Jahr. Wird die Gesamtstrafe nicht zur Bewährung ausgesetzt, so gilt § 56f Abs. 3 entsprechend.

Fünfter Titel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Absehen von Strafe

§ 59 Voraussetzungen der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 (1) Hat jemand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verwirkt, so kann das Gericht ihn neben dem Schuldspruch verwarnen, die Strafe bestimmen und die Verurteilung zu dieser Strafe vorbehalten, wenn
1. zu erwarten ist, daß der Täter künftig auch ohne Verurteilung zu Strafe keine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2. nach der Gesamtwürdigung von Tat und Persönlichkeit des Täters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eine Verhängung von Strafe entbehrlich machen, und
 3.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die Verurteilung zu Strafe nicht gebietet.

§ 56 Abs. 1 Satz 2 gilt entsprechend.

- (2) Neben der Verwarnung kann auf Verfall,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erkannt werden. Neb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st die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nicht zulässig.

§ 59a Bewährungszeit, Auflagen und Weisungen

(1) Das Gericht bestimmt die Dauer der Bewährungszeit. Sie darf zwei Jahre nichtüberschreiten und ein Jahr nicht unterschreiten.

(2) Das Gericht kann den Verwarnten anweisen,

1. sich zu bemühen,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 oder sonst den durch die Tat verursachten Schaden wiedergutzumachen,
2. seinen Unterhaltungspflichten nachzukommen,
3. einen Geldbetrag zugunsten einer gemeinnützigen Einrichtung oder der Staatskasse zu zahlen,
4. sich einer ambulanten Heilbehandlung oder einer ambulanten Entziehungskur zuunterziehen oder
5. an einem Verkehrsunterricht teilzunehmen.

Dabei dürfen an die Lebensführung des Verwarnten keine unzumutbaren Anforderungengestellt werden; auch dürfen die Auflagen und Weisungen nach Satz 1 Nr. 3 bis 5 zurBedeutung der vom Täter begangenen Tat nicht außer Verhältnis stehen. § 56c Abs. 3 und4 und § 56e gelten entsprechend.

§ 59b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1) Für die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gilt § 56f entsprechend.

(2) Wird der Verwarnte nicht zu der vorbehaltenen Strafe verurteilt, so stellt dasGericht nach Ablauf der Bewährungszeit fest, daß es bei der Verwarnung sein Bewendenhat.

§ 59c Gesamtstrafe und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 (1) Hat jemand mehrere Straftaten begangen, so sind bei der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für die Bestimmung der Strafe die §§53 bis 55 entsprechend anzuwenden.
- (2) Wird der Verwarnte wegen einer vor der Verwarnung begangenen Straftat nachträglich zu Strafe verurteilt, so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ildung einer Gesamtstrafe (§§53 bis 55 und 58)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ie vorbehaltene Strafe in den Fällen des § 55 einer erkannten Strafe gleichsteht.

§ 60 Absehen von Strafe

Das Gericht sieht von Strafe ab, wenn die Folgen der Tat, die den Täter getroffen haben, so schwer sind, daß die Verhängung einer Strafe offensichtlich verfehlt wäre. Dies gilt nicht, wenn der Täter für die Tat eine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einem Jahr verwirkt hat.

Sechster Tit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61 Übersicht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ind

1.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2.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3.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4. die Führungsaufsicht,
5.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6. das Berufsverbot.

§ 62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arf nicht angeordnet werden, wenn sie zur Bedeutung der vom Täter begangenen und zu erwartenden Taten sowie zu dem Grad der von ihm ausgehenden Gefahr außer Verhältnis steht.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n

§ 63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Hat jemand eine rechtswidrige Tat im Zustand der Schuldunfähigkeit (§ 20) oder der verminderten Schuldfähigkeit (§ 21) begangen, so ordnet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an, wenn die Gesamtwürdigung des Täters und seiner Tat ergibt, daß von ihm infolge seines Zustandes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zu erwarten sind und er deshalb für die Allgemeinheit gefährlich ist.

§ 64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Hat eine Person den Hang, alkoholische Getränke oder andere berauschende Mittel im Übermaß zu sich zu nehmen, und wird sie wegen einer rechtswidrigen Tat, die sie im Rausch begangen hat oder die auf ihren Hang zurückgeht, verurteilt oder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eil ihre Schuldunfähigkeit erwiesen oder nicht auszuschließen ist, so soll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anordnen,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sie infolge ihres Hanges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begehen wird. Die Anordnung ergeht nur, wenn eine hinreichend

konkrete Aussicht besteht, die Person durch die Behandl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zu heilen oder über eine erhebliche Zeit vor dem Rückfall in den Hang zu bewahren und von der Begehung erheblicher rechtswidriger Taten abzuhalten, die auf ihren Hang zurückgehen.

§ 65 (weggefallen)

§ 66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 (1) Wird jemand wegen einer vorsätzlichen Straftat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zwei Jahren verurteilt, so ordnet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die Sicherungsverwahrung, wenn
1. der Täter wegen vorsätzlicher Straftaten, die er vor der neuen Tat begangen hat, schon zweimal jeweils zu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verurteilt worden ist,
 2. er wegen einer oder mehrerer dieser Taten vor der neuen Tat für die Zeit von mindestens zwei Jahren Freiheitsstrafe verbüßt oder sich im Vollzug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befunden hat und
 3. die Gesamtwürdigung des Täters und seiner Taten ergibt, daß er infolge eines Hangs zu erheblichen Straftaten, namentlich zu solchen, durch welche die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oder schwerer wirtschaftlicher Schaden angerichtet wird, für die Allgemeinheit gefährlich ist.
- (2) Hat jemand drei vorsätzliche Straftaten begangen, durch die er jeweils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verwirkt hat, und

wird er wegen einer oder mehrerer dieser Taten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verurteilt, so kann das Gericht unter der in Absatz 1 Nr. 3 bezeichneten Voraussetzung neben der Strafe die Sicherungsverwahrung auch ohne frühere Verurteilung oder Freiheitsentziehung (Absatz 1 Nr. 1 und 2) anordnen.

- (3) Wird jemand wegen eines Verbrechens ode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74c, 176, 179 Abs. 1 bis 4, §§ 180, 182, 224, 225 Abs. 1 oder 2 oder nach § 323a, soweit die im Rausch begangene Tat ein Verbrechen oder eine der vorgenannten rechtswidrigen Taten ist,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zwei Jahren verurteilt, so kann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die Sicherungsverwahrung anordnen, wenn der Täter wegen einer oder mehrerer solcher Straftaten, die er vor der neuen Tat begangen hat, schon einmal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in Absatz 1 Nr. 2 und 3 genannten Voraussetzungen erfüllt sind. Hat jemand zwei Straftaten der in Satz 1 bezeichneten Art begangen, durch die er jeweils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zwei Jahren verwirkt hat und wird er wegen einer oder mehrerer dieser Taten zu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verurteilt, so kann das Gericht unter den in Absatz 1 Nr. 3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neben der Strafe die Sicherungsverwahrung auch ohne frühere Verurteilung oder Freiheitsentziehung (Absatz 1 Nr. 1 und 2) anordnen. Die Absätze 1 und 2 bleiben unberührt.
- (4) Im Sinne des Absatzes 1 Nr. 1 gilt eine Verurteilung zu Gesamtstrafe als eine einzige Verurteilung. Ist Untersuchungshaft

oder eine andere Freiheitsentziehung auf Freiheitsstrafe angerechnet, so gilt sie als verbüßte Strafe im Sinne des Absatzes 1 Nr. 2. Eine frühere Tat bleibt außer Betracht, wenn zwischen ihr und der folgenden Tat mehr als fünf Jahre verstrichen sind. In die Frist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Eine Tat, die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abgeurteilt worden ist, steht einer innerhalb dieses Bereichs abgeurteilten Tat gleich, wenn sie nach deutschem Strafrecht eine vorsätzliche Ta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eine der Straftaten der in Absatz 3 Satz 1 bezeichneten Art wäre.

§ 66a Vorbehalt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 (1) Ist bei der Verurteilung wegen einer der in § 66 Abs. 3 Satz 1 genannten Straftaten nicht mit hinreichender Sicherheit feststellbar, ob der Täter für die Allgemeinheit im Sinne von § 66 Abs. 1 Nr. 3 gefährlich ist, so kann das Gericht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vorbehalten, wenn die übrigen Voraussetzungen des § 66 Abs. 3 erfüllt sind.
- (2) Übe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entscheidet das Gericht spätestens sechs Monate vor dem Zeitpunkt, ab dem eine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Strafrestes zur Bewährung nach § 57 Abs. 1 Satz 1 Nr. 1, § 57a Abs. 1 Satz 1 Nr. 1, auch in Verbindung mit § 454b Abs. 3 der Strafprozessordnung, möglich ist. Es ordnet die Sicherungsverwahrung an, wenn die Gesamtwürdigung

des Verurteilten, seiner Taten und seiner Entwicklung während des Strafvollzuges ergibt, dass von ihm erhebliche Straftaten zu erwarten sind, durch welche die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 (3) Die Entscheidung über die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Strafrestes zur Bewährung darf erst nach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nach Absatz 2 Satz 1 ergehen. Dies gilt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57 Abs. 2 Nr. 2 offensichtlich nicht vorliegen.

§ 66b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 (1) Werden nach einer Verurteilung wegen eines Verbrechens gegen das Leb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persönliche Freiheit oder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eines Verbrechens nach den §§ 250, 251, auch in Verbindung mit den §§ 252, 255, oder wegen eines der in § 66 Abs. 3 Satz 1 genannten Vergehen vor Ende des Vollzugs dieser Freiheitsstrafe Tatsachen erkennbar, die auf eine erhebliche Gefährlichkeit des Verurteilten für die Allgemeinheit hinweisen, so kann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nachträglich anordnen, wenn die Gesamtwürdigung des Verurteilten, seiner Taten und ergänzend seiner Entwicklung während des Strafvollzugs ergibt, dass 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rhebliche Straftaten begehen wird, durch welche die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und wenn i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nachträglich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die übrigen Voraussetzungen des § 66 erfüllt sind. Wa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im Zeitpunkt der Verurteilung aus rechtlichen Gründen nicht möglich, so berücksichtigt das Gericht als Tatsachen im Sinne des Satzes 1 auch solche, die im Zeitpunkt der Verurteilung bereits erkennbar waren.

- (2) Werden Tatsachen der in Absatz 1 Satz 1 genannten Art nach einer Verurteilung zu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fünf Jahren wegen eines oder mehrerer Verbrechen gegen das Leb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persönliche Freiheit,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nach den §§ 250, 251, auch in Verbindung mit § 252 oder § 255, erkennbar, so kann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nachträglich anordnen, wenn die Gesamtwürdigung des Verurteilten, seiner Tat oder seiner Taten und ergänzend seiner Entwicklung während des Strafvollzugs ergibt, dass 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rhebliche Straftaten begehen wird, durch welche die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 (3) Ist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nach § 67d Abs. 6 für erledigt erklärt worden, weil der die Schuldfähigkeit ausschließende oder vermindernde Zustand, auf dem die Unterbringung beruhte, im Zeitpunkt der Erledigungsentscheidung nicht bestanden hat, so kann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nachträglich anordnen, wenn
 1. die Unterbringung des Betroffenen nach § 63 wegen mehrerer der

in §66 Abs. 3 Satz 1 genannten Taten angeordnet wurde oder wenn der Betroffene wegen einer oder mehrerer solcher Taten, die er vor der zur Unterbringung nach § 63 führenden Tat begangen hat, schon einmal zu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verurteilt oder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tergebracht worden war und

2. die Gesamtwürdigung des Betroffenen, seiner Taten und ergänzend seiner Entwicklung während des Vollzugs der Maßregel ergibt, dass 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rhebliche Straftaten begehen wird, durch welche die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 67 Reihenfolge der Vollstreckung

- (1) Wird die Unterbringung in einer Anstalt nach den §§ 63 und 64 neben einer Freiheitsstrafe angeordnet, so wird die Maßregel vor der Strafe vollzogen.
- (2) Das Gericht bestimmt jedoch, daß die Strafe oder ein Teil der Strafe vor der Maßregel zu vollziehen ist, wenn der Zweck der Maßregel dadurch leichter erreicht wird. Bei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neben einer zeitigen Freiheitsstrafe von über drei Jahren soll das Gericht bestimmen, dass ein Teil der Strafe vor der Maßregel zu vollziehen ist. Dieser Teil der Strafe ist so zu bemessen, dass nach seiner Vollziehung und einer anschließenden Unterbringung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5 Satz 1 möglich ist. Das Gericht soll ferner bestimmen,

das die Strafe vor der Maßregel zu vollziehen ist, wenn die verurteilte Person vollziehbar zur Ausreise verpflichtet und zu erwarten ist, dass ihr Aufenthal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während oder unmittelbar nach Verbüßung der Strafe beendet wird.

- (3) Das Gericht kann eine Anordnung nach Absatz 2 Satz 1 oder Satz 2 nachträglich treffen, ändern oder aufheben, wenn Umstände in der Person des Verurteilten es angezeigt erscheinen lassen. Eine Anordnung nach Absatz 2 Satz 4 kann das Gericht auch nachträglich treffen. Hat es eine Anordnung nach Absatz 2 Satz 4 getroffen, so hebt es diese auf, wenn eine Beendigung des Aufenthalts der verurteilten Person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während oder unmittelbar nach Verbüßung der Strafe nicht mehr zu erwarten ist.
- (4) Wird die Maßregel ganz oder zum Teil vor der Strafe vollzogen, so wird die Zeit des Vollzugs der Maßregel auf die Strafe angerechnet, bis zwei Drittel der Strafe erledigt sind.
- (5) Wird die Maßregel vor der Strafe oder vor einem Rest der Strafe vollzogen, so kann das Gericht die Vollstreckung des Strafreste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7 Abs. 1 Satz 1 Nr. 2 und 3 zur Bewährung aussetzen, wenn die Hälfte der Strafe erledigt ist. Wird der Strafrest nicht ausgesetzt, so wird der Vollzug der Maßregel fortgesetzt; das Gericht kann jedoch den Vollzug der Strafe anordnen, wenn Umstände in der Person des Verurteilten es angezeigt erscheinen lassen.

§ 67a Überweisung in den Vollzug einer anderen Maßregel

- (1) Ist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angeordne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untergebrachte Person nachträglich in den Vollzug der anderen Maßregel überweisen, wenn ihre Resozialisierung dadurch besser gefördert werden kann.
- (2)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kann das Gericht nachträglich auch eine Person, gegen die Sicherungsverwahrung angeordnet worden ist, in den Vollzug einer der in Absatz 1 genannten Maßregeln überweisen. Dies gilt bereits dann, wenn sich die Person noch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findet und bei ihr ein Zustand nach § 20 oder § 21 vorliegt.
- (3) Das Gericht kann eine Entscheid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ändern oder aufheben, wenn sich nachträglich ergibt, dass die Resozialisierung der untergebrachten Person dadurch besser gefördert werden kann.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2 kann das Gericht ferner aufheben, wenn sich nachträglich ergibt, dass mit dem Vollzug der in Absatz 1 genannten Maßregeln kein Erfolg erzielt werden kann.
- (4) Die Fristen für die Dauer der Unterbringung und die Überprüfung richten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 für die im Urteil angeordnete Unterbringung gelten. Im Falle des Absatzes 2 hat das Gericht erstmals nach Ablauf von einem Jahr, sodann im Falle des Satzes 2 bis zum Beginn der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jeweils spätestens vor Ablauf von weiteren zwei Jahren zu prüfen, ob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3 Satz 2 vorliegen.

§ 67b Aussetzung zugleich mit der Anordnung

- (1) Ordnet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an, so setzt es zugleich deren Vollstreckung zur Bewährung aus, wenn besondere Umstände die Erwartung rechtfertigen, daß der Zweck der Maßregel auch dadurch erreicht werden kann. Die Aussetzung unterbleibt, wenn der Täter noch Freiheitsstrafe zu verbüßen hat, die gleichzeitig mit der Maßregel verhängt und nicht zur Bewährung ausgesetzt wird.
- (2) Mit der Aussetz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67c Späterer Beginn der Unterbringung

- (1) Wird eine Freiheitsstrafe vor einer zugleich angeordneten Unterbringung vollzogen, so prüft das Gericht vor dem Ende des Vollzugs der Strafe, ob der Zweck der Maßregel die Unterbringung noch erfordert. Ist das nicht der Fall, so setzt es die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zur Bewährung aus; mit der Aussetz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2) Hat der Vollzug der Unterbringung drei Jahre nach Rechtskraft ihrer Anordnung noch nicht begonnen und liegt ein Fall des Absatzes 1 oder des § 67b nicht vor, so darf die Unterbringung nur noch vollzogen werden, wenn das Gericht es anordnet. In die Frist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Das Gericht ordnet den Vollzug an, wenn der Zweck der Maßregel die Unterbringung noch erfordert. Ist der Zweck der Maßregel nicht erreicht, rechtfertigen aber besondere Umstände die Erwartung, daß auch durch die Aussetzung erreicht werden kann, so setzt das Gericht die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zur Bewährung aus; mit der Aussetz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Ist der Zweck der Maßregel erreicht, so erklärt das Gericht sie für erledigt.

§ 67d Dauer der Unterbringung

- (1)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darf zwei Jahre nicht übersteigen. Die Frist läuft vom Beginn der Unterbringung an. Wird vor einer Freiheitsstrafe eine daneben angeordnet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vollzogen, so verlängert sich die Höchstfrist um die Dauer der Freiheitsstrafe, soweit die Zeit des Vollzugs der Maßregel auf die Strafe angerechnet wird.
- (2) Ist keine Höchstfrist vorgesehen oder ist die Frist noch nicht abgelaufen, so setzt das Gericht die weitere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zur Bewährung aus, wenn zu erwarten ist, daß der Untergebrachte außerhalb des Maßregelvollzugs keine rechtswidrigen Taten mehr begehen wird. Mit der Aussetz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3) Sind zehn Jahre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vollzogen worden, so erklärt das Gericht die Maßregel für erledigt, wenn nicht die Gefahr besteht, daß der Untergebrachte infolge seines Hanges erhebliche Straftaten begehen wird, durch welche die

- Opfer seelisch oder körperlich schwer geschädigt werden. Mit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der Unterbring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4) Ist die Höchstfrist abgelaufen, so wird der Untergebrachte entlassen. Die Maßregel ist damit erledigt. Mit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der Unterbring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5) Das Gericht erklärt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für erledig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64 Satz 2 nicht mehr vorliegen. Mit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der Unterbring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 (6) Stellt das Gericht nach Beginn der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fest,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Maßregel nicht mehr vorliegen oder die weitere Vollstreckung der Maßregel unverhältnismäßig wäre, so erklärt es sie für erledigt. Mit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der Unterbringung tritt Führungsaufsicht ein. Das Gericht ordnet den Nichteintritt der Führungsaufsicht an, wenn zu erwarten ist, dass der Betroffene auch ohne sie keine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Fußnote

§ 67d Abs. 3: Mit GG (100–1) vereinbar gem. BVerfGE v. 5.2.2004 I 1069 (2 BvR 2029/01)

§ 67e Überprüfung

- (1) Das Gericht kann jederzeit prüfen, ob die weitere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zur Bewährung auszusetzen oder für erledigt zu erklären ist. Es muß dies vor Ablauf bestimmter Fristen prüfen.

- (2) Die Fristen betragen bei der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sechs Monate,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ein Jahr, in der Sicherungsverwahrung zwei Jahre.
- (3) Das Gericht kann die Fristen kürzen. Es kann im Rahmen der gesetzlichen Prüfungsfristen auch Fristen festsetzen, vor deren Ablauf ein Antrag auf Prüfung unzulässig ist.
- (4) Die Fristen laufen vom Beginn der Unterbringung an. Lehnt das Gericht die Aussetzung oder Erledigungserklärung ab, so beginnen die Fristen mit der Entscheidung von neuem.

§ 67f Mehrfache Anordnung der Maßregel

Ordnet das Gericht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an, so ist eine frühere Anordnung der Maßregel erledigt.

§ 67g Widerruf der Aussetzung

- (1) Das Gericht widerruft die Aussetzung einer Unterbringung, wenn die verurteilte Person
 - 1. während der Dauer der Führungsaufsicht eine rechtswidrige Tat begeht,
 - 2. gegen Weisungen nach § 68b gröblich oder beharrlich verstößt oder
 - 3. sich der Aufsicht und Leitung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oder der Aufsichtsstelle beharrlich entziehtund sich daraus ergibt, dass der Zweck der Maßregel ihre Unterbringung erfordert. Satz 1 Nr. 1 gilt entsprechend, wenn der Widerrufsgrund

zwischen der Entscheidung über die Aussetzung und dem Beginn der Führungsaufsicht (§ 68c Abs. 4) entstanden ist.

- (2) Das Gericht widerruft die Aussetzung einer Unterbringung nach den §§ 63 und 64 auch dann, wenn sich während der Dauer der Führungsaufsicht ergibt, dass von der verurteilten Person infolge ihres Zustands rechtswidrige Taten zu erwarten sind und deshalb der Zweck der Maßregel ihre Unterbringung erfordert.
- (3) Das Gericht widerruft die Aussetzung ferner, wenn Umstände, die ihm während der Dauer der Führungsaufsicht bekannt werden und zur Versagung der Aussetzung geführt hätten, zeigen, daß der Zweck der Maßregel die Unterbringung der verurteilten Person erfordert.
- (4) Die Dauer der Unterbringung vor und nach dem Widerruf darf insgesamt die gesetzliche Höchstfrist der Maßregel nicht übersteigen.
- (5) Widerruft das Gericht die Aussetzung der Unterbringung nicht, so ist die Maßregel mit dem Ende der Führungsaufsicht erledigt.
- (6) Leistungen, die die verurteilte Person zur Erfüllung von Weisungen erbracht hat, werden nicht erstattet.

§ 67h Befristete Wiederinvollzugsetzung; Krisenintervention

- (1) Während der Dauer der Führungsaufsicht kann das Gericht die ausgesetzte Unterbringung nach § 63 oder § 64 für eine Dauer von höchstens drei Monaten wieder in Vollzug setzen, wenn eine akute Verschlechterung des Zustands der aus der Unterbringung entlassenen Person oder ein Rückfall in ihr Suchtverhalten eingetreten ist und die Maßnahme erforderlich ist, um einen Widerruf nach § 67g zu

vermeide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kann es die Maßnahme erneut anordnen oder ihre Dauerverlängern; die Dauer der Maßnahme darf insgesamt sechs Monate nicht überschreiten. §67g Abs. 4 gilt entsprechend.

- (2) Das Gericht hebt die Maßnahme vor Ablauf der nach Absatz 1 gesetzten Frist auf, wenn ihr Zweck erreicht ist.

Führungsaufsicht

§ 68 Voraussetzungen der Führungsaufsicht

- (1) Hat jemand wegen einer Straftat, bei der das Gesetz Führungsaufsicht besonders vorsieht, zeitige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verwirkt, so kann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Führungsaufsicht anordnen, wenn die Gefahr besteht, daß weitere Straftaten begangen werden.
- (2) Die Vorschriften über die Führungsaufsicht kraft Gesetzes (§§ 67b, 67c, 67d Abs. 2 bis 6 und § 68f) bleiben unberührt.

§ 68a Aufsichtsstelle, Bewährungshilfe, forensische Ambulanz

- (1) Die verurteilte Person untersteht einer Aufsichtsstelle; das Gericht bestellt für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eine Bewährungshelferin oder einen Bewährungshelfer.
- (2) Die Bewährungshelferin oder der Bewährungshelfer und die Aufsichtsstelle stehen im Einvernehmen miteinander der verurteilten Person helfend und betreuend zur Seite.
- (3) Die Aufsichtsstelle überwacht im Einvernehmen mit dem Gericht

und mit Unterstützung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das Verhalten der verurteilten Person und die Erfüllung der Weisungen.

- (4) Besteht zwischen der Aufsichtsstelle und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m Bewährungshelfer in Fragen, welche die Hilfe für die verurteilte Person und ihre Betreuung berühren, kein Einvernehmen, entscheidet das Gericht.
- (5) Das Gericht kann der Aufsichtsstelle und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m Bewährungshelfer für ihre Tätigkeit Anweisungen erteilen.
- (6) Vor Stellung eines Antrags nach § 145a Satz 2 hört die Aufsichtsstelle die Bewährungshelferin oder den Bewährungshelfer; Absatz 4 ist nicht anzuwenden.
- (7) Wird eine Weisung nach § 68b Abs. 2 Satz 2 und 3 erteilt, steht im Einvernehmen mit den in Absatz 2 Genannten auch die forensische Ambulanz der verurteilten Person helfend und betreuend zur Seite. Im Übrigen gelten die Absätze 3 und 6, soweit sie die Stellung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betreffen, auch für die forensische Ambulanz.
- (8) Die in Absatz 1 Genannten und die in § 203 Abs. 1 Nr. 1, 2 und 5 genannt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er forensischen Ambulanz haben fremde Geheimnisse, die ihnen im Rahmen des durch § 203 geschützten Verhältnisses anvertraut oder sonst bekannt geworden sind, einander zu offenbaren, soweit dies notwendig ist, um der verurteilten Person zu helfen, nicht wieder straffällig zu werden. Darüber hinaus haben die in § 203 Abs. 1 Nr. 1, 2 und 5

genannt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er forensischen Ambulanz solche Geheimnisse gegenüber der Aufsichtsstelle und dem Gericht zu offenbaren, soweit aus ihrer Sicht

1. dies notwendig ist, um zu überwachen, ob die verurteilte Person einer Vorstellungsweisung nach § 68b Abs. 1 Satz 1 Nr. 11 nachkommt oder im Rahmen einer Weisung nach § 68b Abs. 2 Satz 2 und 3 an einer Behandlung teilnimmt,
2. das Verhalten oder der Zustand der verurteilten Person Maßnahmen nach § 67g, § 67h oder § 68c Abs. 2 oder Abs. 3 erforderlich erscheinen lässt oder
3. dies zur Abwehr einer erheblichen gegenwärtigen Gefahr für das Leb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persönliche Freiheit oder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Dritter erforderlich ist.

In den Fällen der Sätze 1 und 2 Nr. 2 und 3 dürfen Tatsachen im Sinne von § 203 Abs. 1, die vo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n der forensischen Ambulanz offenbart wurden, nur zu den dort genannten Zwecken verwendet werden.

§ 68b Weisungen

- (1) Das Gericht kann die verurteilte Person für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oder für eine kürzere Zeit anweisen,
1. den Wohn- oder Aufenthaltsort oder einen bestimmten Bereich nicht ohne Erlaubnis der Aufsichtsstelle zu verlassen,
 2. sich nicht an bestimmten Orten aufzuhalten, die ihr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3. zu der verletzten Person oder bestimmten Personen oder Personen einer bestimmten Gruppe, die ihr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keinen Kontakt aufzunehmen, mit ihnen nicht zu verkehren, sie nicht zu beschäftigen, auszubilden oder zu beherbergen,
4. bestimmte Tätigkeiten nicht auszuüben, die sie nach den Umständen zu Straftatenmissbrauchen kann,
5. bestimmte Gegenstände, die ihr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nicht zu besitzen, bei sich zu führen oder verwahren zu lassen,
6. Kraftfahrzeuge oder bestimmte Arten von Kraftfahrzeugen oder von anderen Fahrzeugen nicht zu halten oder zu führen, die sie nach den Umständen zu Straftatenmissbrauchen kann,
7. sich zu bestimmten Zeiten bei der Aufsichtsstelle, einer bestimmten Dienststelle oder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m Bewährungshelfer zu melden,
8. jeden Wechsel der Wohnung oder des Arbeitsplatzes unverzüglich der Aufsichtsstelle zu melden,
9. sich im Fall der Erwerbslosigkeit bei der zuständigen Agentur für Arbeit oder einer anderen zur Arbeitsvermittlung zugelassenen Stelle zu melden,
10. keine alkoholischen Getränke oder andere berauschende Mittel zu sich zu nehmen, wenn aufgrund bestimmter Tatsachen Gründe für die Annahme bestehen, dass der Konsum solcher Mittel zur Begehung weiterer Straftaten beitragen wird, und sich Alkohol oder

Suchtmittelkontrollen zu unterziehen, die nicht mit einem körperlichen Eingriff verbunden sind, oder

11. sich zu bestimmten Zeiten oder in bestimmten Abständen bei einer Ärztin oder einem Arzt, einer Psychotherapeutin oder einem Psychotherapeuten oder einer forensischen Ambulanz vorzustellen.

Das Gericht hat in seiner Weisung das verbotene oder verlangte Verhalten genau zu bestimmen.

- (2) Das Gericht kann der verurteilten Person für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oder für eine kürzere Zeit weitere Weisungen erteilen, insbesondere solche, die sich auf Ausbildung, Arbeit, Freizeit, die Ordnung 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oder die Erfüllung von Unterhaltungspflichten beziehen. Das Gericht kann die verurteilte Person insbesondere anweisen, sich psychiatrisch, psycho- oder sozialtherapeutisch betreuen und behandeln zu lassen (Therapieweisung). Die Betreuung und Behandlung kann durch eine forensische Ambulanz erfolgen. §56c Abs. 3 gilt entsprechend, auch für die Weisung, sich Alkohol- oder Suchtmittelkontrollen zu unterziehen, die mit körperlichen Eingriffen verbunden sind.
- (3) Bei den Weisungen dürfen an die Lebensführung der verurteilten Person keine unzumutba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 (4) Wenn mit Eintritt der Führungsaufsicht eine bereits bestehende Führungsaufsicht nach §68e Abs. 1 Satz 1 Nr. 3 endet, muss das Gericht auch die Weisungen in seine Entscheidung einbeziehen, die im Rahmen der früheren Führungsaufsicht erteilt worden sind.
- (5) Soweit die Betreuung der verurteilten Perso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1 oder ihre Behandlung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nicht durch eine forensische Ambulanzerfolgt, gilt § 68a Abs. 8 entsprechend.

§ 68c Dauer der Führungsaufsicht

- (1) Die Führungsaufsicht dauert mindestens zwei und höchstens fünf Jahre. Das Gericht kann die Höchstdauer abkürzen.
- (2) Das Gericht kann eine die Höchstdauer nach Absatz 1 Satz 1 überschreitende unbefristete Führungsaufsicht anordnen, wenn die verurteilte Person
 1. in eine Weisung nach § 56c Abs. 3 Nr. 1 nicht einwilligt oder
 2. einer Weisung, sich einer Heilbehandlung oder einer Entziehungskur zu unterziehen, oder einer Therapieweisung nicht nachkommtund eine Gefährdung der Allgemeinheit durch die Begehung weiterer erheblicher Straftaten zu befürchten ist. Erklärt die verurteilte Person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r. 1 nachträglich ihre Einwilligung, setzt das Gericht die weiter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fest. Im Übrigen gilt § 68e Abs. 3.
- (3) Das Gericht kann die Führungsaufsicht über die Höchstdauer nach Absatz 1 Satz 1 hinaus unbefristet verlängern, wenn
 1. in Fällen der Aussetzung der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nach § 67d Abs. 2 aufgrund bestimmter Tatsachen Gründe für die Annahme bestehen, dass die verurteilte Person andernfalls alsbald in einen Zustand nach § 20 oder § 21 geraten wird, infolge dessen eine Gefährdung der Allgemeinheit

durch die Begehung weiterer erheblicher rechtswidriger Taten zu befürchten ist, oder

2. gegen die verurteilte Person wegen Straftaten der in § 181b genannten Art eine Freiheitsstrafe oder Gesamt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hängt oder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einer Entziehungsanstalt angeordnet wurde und sich aus dem Verstoß gegen Weisung nach § 68b Abs. 1 oder Abs. 2 oder aufgrund anderer bestimmter Tatsachen konkrete Anhaltspunkte dafür ergeben, dass eine Gefährdung der Allgemeinheit durch die Begehung weiterer erheblicher Straftaten zu befürchten ist.

- (4) In den Fällen des § 68 Abs. 1 beginnt die Führungsaufsicht mit der Rechtskraft ihrer Anordnung, in den Fällen des § 67b Abs. 2, des § 67c Abs. 1 Satz 2 und Abs. 2 Satz 4 und des § 67d Abs. 2 Satz 2 mit der Rechtskraft der Aussetzungsentscheidung oder zu einem gerichtlich angeordneten späteren Zeitpunkt. In ihre Dauer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ie verurteilte Person flüchtig ist, sich verborgen hält od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 68d Nachträgliche Entscheidungen

Das Gericht kann Entscheidungen nach § 68a Abs. 1 und 5, den §§ 68b und 68c Abs. 1 Satz 2 und Abs. 2 und 3 auch nachträglich treffen, ändern oder aufheben.

§ 68e Beendigung oder Ruhen der Führungsaufsicht

- (1) Soweit sie nicht unbefristet ist, endet die Führungsaufsicht
1. mit Beginn des Vollzugs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2. mit Beginn des Vollzugs einer Freiheitsstrafe, neben 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angeordnet ist,
 3. mit Eintritt einer neuen Führungsaufsicht.

In den übrigen Fällen ruht die Führungsaufsicht während der Dauer des Vollzugs einer Freiheitsstrafe oder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Tritt eine neue Führungsaufsicht zu einer bestehenden unbefristeten hinzu, ordnet das Gericht das Entfallen der neuen Maßregel an, wenn es ihrer neben der bestehenden nicht bedarf.

- (2) Das Gericht hebt die Führungsaufsicht auf, wenn zu erwarten ist, dass die verurteilte Person auch ohne sie keine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Die Aufhebung ist frühestens nach Ablauf der gesetzlichen Mindestdauer zulässig. Das Gericht kann Fristen von höchstens sechs Monaten festsetzen, vor deren Ablauf ein Antrag auf Aufhebung der Führungsaufsicht unzulässig ist.

- (3) Ist unbefristete Führungsaufsicht eingetreten, prüft das Gericht
1. in den Fällen des § 68c Abs. 2 Satz 1 spätestens mit Verstreichen der Höchstfrist nach § 68c Abs. 1 Satz 1,
 2. in den Fällen des § 68c Abs. 3 vor Ablauf von zwei Jahren,
- ob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2 Satz 1 geboten ist. Lehnt das Gericht eine Aufhebung der Führungsaufsicht ab, hat es vor Ablauf von zwei Jahren von neuem über eine Aufhebung der Führungsaufsicht zu entscheiden.

§ 68f Führungsaufsicht bei Nichtaussetzung des Strafrestes

- (1) Ist eine Freiheitsstrafe oder Gesamt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zwei Jahren wegen vorsätzlicher Straftaten oder eine Freiheitsstrafe oder Gesamt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wegen Straftaten der in § 181b genannten Art vollständig vollstreckt worden, tritt mit der Entlassung der verurteilten Person aus dem Strafvollzug Führungsaufsicht ein. Dies gilt nicht, wenn im Anschluss an die Strafverbüßung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 (2) Ist zu erwarten, dass die verurteilte Person auch ohne die Führungsaufsicht keine Straftaten mehr begehen wird, ordnet das Gericht an, dass die Maßregel entfällt.

§ 68g Führungsaufsicht und Aussetzung zur Bewährung

- (1) Ist die Strafaussetzung oder Aussetzung des Strafrestes angeordnet oder das Berufsverbot zur Bewährung ausgesetzt und steht der Verurteilte wegen derselben oder einer anderen Tat zugleich unter Führungsaufsicht, so gelten für die Aufsicht und die Erteilung von Weisungen nur die §§ 68a und 68b. Die Führungsaufsicht endet nicht vor Ablauf der Bewährungszeit.
- (2) Sind die Aussetzung zur Bewährung und die Führungsaufsicht auf Grund derselben Tat angeordnet, so kann das Gericht jedoch bestimmen, daß die Führungsaufsicht bis zum Ablauf der Bewährungszeit ruht. Die Bewährungszeit wird dann in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nicht eingerechnet.

- (3) Wird nach Ablauf der Bewährungszeit die Strafe oder der Strafreist erlassen oder das Berufsverbot für erledigt erklärt, so endet damit auch eine wegen derselben Tatangeordnete Führungsaufsicht. Dies gilt nicht, wenn die Führungsaufsicht unbefristet ist (§68c Abs. 2 Satz 1 oder Abs. 3).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69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1) Wird jemand wegen einer rechtswidrigen Tat, die er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m Führen eines Kraftfahrzeugs oder unter Verletzung der Pflichten eines Kraftfahrzeugführers begangen hat, verurteilt oder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eil seine Schuldunfähigkeit erwiesen oder nicht auszuschließen ist, so entzieht ihm das Gericht die Fahrerlaubnis, wenn sich aus der Tat ergibt, daß er zum Führen von Kraftfahrzeugen ungeeignet ist. Einer weiteren Prüfung nach § 62 bedarf es nicht.
- (2) Ist die rechtswidrige Ta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ein Vergehen
1. der Gefährdung des Straßenverkehrs (§ 315c),
 2. der Trunkenheit im Verkehr (§ 316),
 3. des unerlaubten Entferns vom Unfallort (§ 142), obwohl der Täter weiß oder wissen kann, daß bei dem Unfall ein Mensch getötet oder nicht unerheblich verletzt worden oder an fremden Sachen bedeutender Schaden entstanden ist, oder

4. des Vollrausches (§323a), der sich auf eine der Taten nach den Nummern 1 bis 3bezieht,

so ist der Täter in der Regel als ungeeignet zum Führen von Kraftfahrzeugen anzusehen.

(3) Die Fahrerlaubnis erlischt m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Ein von einer deutschenBehörde ausgestellter Führerschein wird im Urteil eingezogen.

§ 69a Sperre für die Erteilung einer Fahrerlaubnis

(1) Entzieht das Gericht die Fahrerlaubnis, so bestimmt es zugleich, daß für die Dauer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keine neue Fahrerlaubnis erteilt werden darf(Sperre). Die Sperre kann für immer angeordnet wer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diegesetzliche Höchstfrist zur Abwehr der von dem Täter drohenden Gefahr nicht ausreicht.Hat der Täter keine Fahrerlaubnis, so wird nur die Sperre angeordnet.

(2) Das Gericht kann von der Sperre bestimmte Arten von Kraftfahrzeugen ausnehmen, wennbesondere Umständ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der Zweck der Maßregel dadurch nichtgefährdet wird.

(3) Das Mindestmaß der Sperre beträgt ein Jahr, wenn gegen den Täter in den letztendrei Jahren vor der Tat bereits einmal eine Sperre angeordnet worden ist.

(4) War dem Täter die Fahrerlaubnis wegen der Tat vorläufig entzogen (§ 111a derStrafprozeßordnung), so verkürzt sich das Mindestmaß der Sperre um die Zeit, in der dievorläufige Entziehung wirksam war. Es darf jedoch drei Monate nicht unterschreiten.

- (5) Die Sperre beginnt m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In die Frist wird die Zeiteiner wegen der Tat angeordneten vorläufigen Entziehung eingerechnet, soweit sie nach Verkündung des Urteils verstrichen ist, in dem die der Maßregel zugrunde liegenden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üft werden konnten.
- (6) Im Sinne der Absätze 4 und 5 steht der vorläufigen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die Verwahrung, Sicherstellung oder Beschlagnahme des Führerscheins (§ 94 der Strafprozeßordnung) gleich.
- (7) Ergibt sich Grund zu der Annahme, daß der Täter zum Führen von Kraftfahrzeugen nicht mehr ungeeignet ist, so kann das Gericht die Sperre vorzeitig aufheben. Die Aufhebung ist frühestens zulässig, wenn die Sperre drei Monate,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ein Jahr gedauert hat; Absatz 5 Satz 2 und Absatz 6 gelten entsprechend.

§ 69b Wirkung der Entziehung bei ein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

- (1) Darf der Täter auf Grund einer im Ausland erteilten Fahrerlaubnis im Inland Kraftfahrzeuge führen, ohne daß ihm von einer deutschen Behörde eine Fahrerlaubnis erteilt worden ist, so hat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die Wirkung einer Aberkennung des Rechts, von der Fahrerlaubnis im Inland Gebrauch zu machen.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erlischt das Recht zum Führen von Kraftfahrzeugen im Inland. Während der Sperre darf weder das Recht, von d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 wieder Gebrauch zu machen, noch eine inländische Fahrerlaubnis erteilt werden.

- (2) Ist der ausländische Führerschein von einer Behörde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eines anderen Vertragsstaates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ausgestellt worden und hat der Inhaber seinen ordentlichen Wohnsitz im Inland, so wird der Führerschein im Urteil eingezogen und an die ausstellende Behörde zurückgesandt. In anderen Fällen werden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und die Sperre in den ausländischen Führerscheinen vermerkt.

Berufsverbot

§ 70 Anordnung des Berufsverbots

- (1) Wird jemand wegen einer rechtswidrigen Tat, die er unter Mißbrauch seines Berufs oder Gewerbes oder unter grober Verletzung der mit ihnen verbundenen Pflichten begangen hat, verurteilt oder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eil seine Schuldunfähigkeit erwiesen oder nicht auszuschließen ist, so kann ihm das Gericht die Ausübung des Berufs, Berufszweiges, Gewerbes oder Gewerbebezweiges für die Dauer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verbieten, wenn die Gesamtwürdigung des Täters und der Tat die Gefahr erkennen läßt, daß er bei weiterer Ausübung des Berufs, Berufszweiges, Gewerbes oder Gewerbebezweiges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der bezeichneten Art begehen wird. Das Berufsverbot kann für immer angeordnet wer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die gesetzliche Höchstfrist zur Abwehr der von dem Täter drohenden Gefahr nicht ausreicht.

- (2) War dem Täter die Ausübung des Berufs, Berufszweiges, Gewerbes oder Gewerbebezweiges vorläufig verboten (§ 132a der Strafprozeßordnung), so verkürzt sich das Mindestmaß der Verbotsfrist um die Zeit, in der das vorläufige Berufsverbot wirksam war. Es darf jedoch drei Monate nicht unterschreiten.
- (3) Solange das Verbot wirksam ist, darf der Täter den Beruf, den Berufszweig, das Gewerbe oder den Gewerbebezweig auch nicht für einen anderen ausüben oder durch eine von seinen Weisungen abhängige Person für sich ausüben lassen.
- (4) Das Berufsverbot wird m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wirksam. In die Verbotsfrist wird die Zeit eines wegen der Tat angeordneten vorläufigen Berufsverbots eingerechnet, soweit sie nach Verkündung des Urteils verstrichen ist, in dem die der Maßregel zugrunde liegenden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üft werden konnten. Die Zei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wird nicht eingerechnet.

§ 70a Aussetzung des Berufsverbots

- (1) Ergibt sich nach Anordnung des Berufsverbots Grund zu der Annahme, daß die Gefahr, der Täter werde erhebliche rechtswidrige Taten der in § 70 Abs. 1 bezeichneten Art begehen, nicht mehr besteht, so kann das Gericht das Verbot zur Bewährung aussetzen.
- (2) Die Anordnung ist frühestens zulässig, wenn das Verbot ein Jahr gedauert hat. In die Frist wird im Rahmen des § 70 Abs. 4 Satz 2 die Zeit eines vorläufigen Berufsverbots eingerechnet. Die Zei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wird nicht eingerechnet.

- (3) Wird das Berufsverbot zur Bewährung ausgesetzt, so gelten die §§ 56a und 56c bis 56e entsprechend. Die Bewährungszeit verlängert sich jedoch um die Zeit, in der eine Freiheitsstrafe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vollzogen wird, die gegen den Verurteilten wegen der Tat verhängt oder angeordnet worden ist.

§ 70b Widerruf der Aussetzung und Erledigung des Berufsverbots

- (1) Das Gericht widerruft die Aussetzung eines Berufsverbots, wenn die verurteilte Person
1. während der Bewährungszeit unter Mißbrauch ihres Berufs oder Gewerbes oder unter grober Verletzung der mit ihnen verbundenen Pflichten eine rechtswidrige Tat begeht,
 2. gegen eine Weisung gröblich oder beharrlich verstößt oder
 3. sich der Aufsicht und Leitung der Bewährungshelferin oder des Bewährungshelfers beharrlich entzieht
- und sich daraus ergibt, daß der Zweck des Berufsverbots dessen weitere Anwendung erfordert.
- (2) Das Gericht widerruft die Aussetzung des Berufsverbots auch dann, wenn Umstände, die ihm während der Bewährungszeit bekannt werden und zur Versagung der Aussetzung geführt hätten, zeigen, daß der Zweck der Maßregel die weitere Anwendung des Berufsverbots erfordert.
- (3) Die Zeit der Aussetzung des Berufsverbots wird in die Verbotsfrist

nichteingerechnet.

- (4) Leistungen, die die verurteilte Person zur Erfüllung von Weisungen oder Zusagenerbracht hat, werden nicht erstattet.
- (5) Nach Ablauf der Bewährungszeit erklärt das Gericht das Berufsverbot für erledigt.

Gemeinsame Vorschriften

§ 71 Selbständige Anordnung

- (1)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einer Entziehungsanstalt kann das Gericht auch selbständig anordnen, wenn das Strafverfahren wegen Schuldunfähigkeit oder Verhandlungsunfähigkeit des Täters undurchführbar ist.
- (2) Dasselbe gilt für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und das Berufsverbot.

§ 72 Verbindung von Maßregeln

- (1) Sind die Voraussetzungen für mehrere Maßregeln erfüllt, ist aber der erstrebte Zweck durch einzelne von ihnen zu erreichen, so werden nur sie angeordnet. Dabei ist unter mehreren geeigneten Maßregeln denen der Vorzug zu geben, die den Täter am wenigsten beschweren.
- (2) Im übrigen werden die Maßregeln nebeneinander angeordnet, wenn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3) Werden mehrer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n angeordnet, so bestimmt das Gericht die Reihenfolge der Vollstreckung. Vor dem

Ende des Vollzugs einer Maßregel ordnet das Gericht jeweils den Vollzug der nächsten an, wenn deren Zweck die Unterbringung noch erfordert. § 67c Abs. 2 Satz 4 und 5 ist anzuwenden.

Siebenter Titel Verfall und Einziehung

§ 73 Voraussetzungen des Verfalls

- (1) Ist eine rechtswidrige Tat begangen worden und hat der Täter oder Teilnehmer für die Tat oder aus ihr etwas erlangt, so ordnet das Gericht dessen Verfall an. Dies gilt nicht, soweit dem Verletzten aus der Tat ein Anspruch erwachsen ist, dessen Erfüllung dem Täter oder Teilnehmer den Wert des aus der Tat Erlangten entziehen würde.
- (2) Die Anordnung des Verfalls erstreckt sich auf die gezogenen Nutzungen. Sie kann sich auch auf die Gegenstände erstrecken,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durch die Veräußerung eines erlangten Gegenstandes oder als Ersatz für dessen Zerstörung, Beschädigung oder Entziehung oder auf Grund eines erlangten Rechts erworben hat.
- (3) Hat der Täter oder Teilnehmer für einen anderen gehandelt und hat dadurch dieser etwas erlangt, so richtet sich die Anordnung des Verfalls nach den Absätzen 1 und 2 gegen ihn.
- (4) Der Verfall eines Gegenstandes wird auch angeordnet, wenn er einem Dritten gehört oder zusteht, der ihn für die Tat oder sonst in Kenntnis der Tatumstände gewährt hat.

§ 73a Verfall des Wertersatzes

Soweit der Verfall eines bestimmten Gegenstandes wegen der Beschaffenheit des Erlangten oder aus einem anderen Grunde nicht möglich ist oder von dem Verfall eines Ersatzgegenstandes nach § 73 Abs. 2 Satz 2 abgesehen wird, ordnet das Gericht den Verfall eines Geldbetrags an, der dem Wert des Erlangten entspricht. Eine solche Anordnung trifft das Gericht auch neben dem Verfall eines Gegenstandes, soweit dessen Wert hinter dem Wert des zunächst Erlangten zurückbleibt.

§ 73b Schätzung

Der Umfang des Erlangten und dessen Wert sowie die Höhe des Anspruchs, dessen Erfüllung dem Täter oder Teilnehmer das aus der Tat Erlangte entziehen würde, können geschätzt werden.

§ 73c Härtevorschrift

- (1) Der Verfall wird nicht angeordnet, soweit er für den Betroffenen eine unbillige Härte wäre. Die Anordnung kann unterbleiben, soweit der Wert des Erlangten zur Zeit der Anordnung in dem Vermögen des Betroffenen nicht mehr vorhanden ist oder wenn das Erlangte nur einen geringen Wert hat.
- (2) Für die Bewilligung von Zahlungserleichterungen gilt § 42 entsprechend.

§ 73d Erweiterter Verfall

- (1) Ist eine rechtswidrige Tat nach einem Gesetz begangen worden, das auf diese Vorschrift verweist, so ordnet das Gericht den Verfall von Gegenständen des Täters oder Teilnehmers auch dann

an, wenn die Umständ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diese Gegenstände für rechtswidrige Taten oder aus ihnen erlangt worden sind. 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ein Gegenstand dem Täter oder Teilnehmer nur deshalb nicht gehört oder zusteht, weil er den Gegenstand für eine rechtswidrige Tat oder aus ihr erlangt hat. § 73 Abs. 1 Satz 2, auch in Verbindung mit § 73b, und § 73 Abs. 2 gelten entsprechend.

- (2) Ist der Verfall eines bestimmten Gegenstandes nach der Tat ganz oder teilweise unmöglich geworden, so finden insoweit die §§ 73a und 73b sinngemäß Anwendung.
- (3) Ist nach Anordnung des Verfalls nach Absatz 1 wegen einer anderen rechtswidrigen Tat,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vor der Anordnung begangen hat, erneut über den Verfall von Gegenständen des Täters oder Teilnehmers zu entscheiden, so berücksichtigt das Gericht hierbei die bereits ergangene Anordnung.
- (4) § 73c gilt entsprechend.

§ 73e Wirkung des Verfalls

- (1) Wird der Verfall eines Gegenstandes angeordnet, so geht das Eigentum an der Sache oder das verfallene Recht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auf den Staat über, wenn es dem von der Anordnung Betroffenen zu dieser Zeit zusteht. Rechte Dritter an dem Gegenstand bleiben bestehen.
- (2) Vor der Rechtskraft wirkt die Anordnung als Veräußerungsverbot im Sinne des § 13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das Verbot umfaßt auch andere Verfügungen als Veräußerungen.

§ 74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 (1) Ist eine vorsätzliche Straftat begangen worden, so können Gegenstände, die durch sie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eingezogen werden.
- (2) Die Einziehung ist nur zulässig, wenn
 1. die Gegenstände zur Zeit der Entscheidung dem Täter oder Teilnehmer gehören oder zustehen oder
 2. die Gegenstände nach ihrer Art und den Umständen die Allgemeinheit gefährden oder die Gefahr besteht, daß sie der Begehung rechtswidriger Taten dienen werden.
- (3)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Nr. 2 ist die Einziehung der Gegenstände auch zulässig, wenn der Täter ohne Schuld gehandelt hat.
- (4) Wird die Einziehung durch eine besondere Vorschrift über Absatz 1 hinaus vorgeschrieben oder zugelassen, so gelten die Absätze 2 und 3 entsprechend.

§ 74a Erweiterte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Verweist das Gesetz auf diese Vorschrift, so dürfen die Gegenstände abweichend von § 74 Abs. 2 Nr. 1 auch dann eingezogen werden, wenn derjenige, dem sie zur Zeit der Entscheidung gehören oder zustehen,

1. wenigstens leichtfertig dazu beigetragen hat, daß die Sache oder das Recht Mittel oder Gegenstand der Tat oder ihrer Vorbereitung gewesen ist, oder
2. die Gegenstände in Kenntnis der Umstände, welche die Einziehung zugelassen hätten, in verwerflicher Weise erworben hat.

§ 74b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 (1) Ist die Einziehung nicht vorgeschrieben, so darf sie in den Fällen des § 74 Abs. 2 Nr. 1 und des § 74a nicht angeordnet werden, wenn sie zur Bedeutung der begangenen Tat und zum Vorwurf, der den von der Einziehung betroffenen Täter oder Teilnehmer oder in den Fällen des § 74a den Dritten trifft, außer Verhältnis steht.
- (2) Das Gericht ordnet in den Fällen der §§ 74 und 74a an, daß die Einziehung vorbehalten bleibt, und trifft eine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 wenn der Zweck der Einziehung auch durch sie erreicht werden kann. In Betracht kommt namentlich die Anweisung,
1. die Gegenstände unbrauchbar zu machen,
 2. an den Gegenständen bestimmte Einrichtungen oder Kennzeichen zu beseitigen oder die Gegenstände sonst zu ändern oder
 3. über die Gegenstände in bestimmter Weise zu verfügen.
- Wird die Anweisung befolgt, so wird der Vorbehalt der Einziehung aufgehoben; andernfalls ordnet das Gericht die Einziehung nachträglich an.
- (3) Ist die Einziehung nicht vorgeschrieben, so kann sie auf einen Teil der Gegenstände beschränkt werden.

§ 74c Einziehung des Wertersatzes

- (1) Hat der Täter oder Teilnehmer den Gegenstand, der ihm zur Zeit der Tat gehörte oder zu dem Zustand und auf dessen Einziehung hätte erkannt werden können, vor der Entscheidung über die Einziehung verwertet, namentlich veräußert oder verbraucht, oder hat er die Einziehung des Gegenstandes sonst vereitelt, so kann das Gericht

die Einziehung eines Geldbetrags gegen den Täter oder Teilnehmer bis zu der Höhe anordnen, die dem Wert des Gegenstandes entspricht.

- (2) Eine solche Anordnung kann das Gericht auch neben der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oder an deren Stelle treffen, wenn ihn der Täter oder Teilnehmer vor der Entscheidung über die Einziehung mit dem Recht eines Dritten belastet hat, dessen Erlös ohne Entschädigung nicht angeordnet werden kann oder im Falle der Einziehung nicht angeordnet werden könnte (§ 74e Abs. 2 und § 74f); trifft das Gericht die Anordnung neben der Einziehung, so bemißt sich die Höhe des Wertersatzes nach dem Wert der Belastung des Gegenstandes.
- (3) Der Wert des Gegenstandes und der Belastung kann geschätzt werden.
- (4) Für die Bewilligung von Zahlungserleichterungen gilt § 42.

§ 74d Einziehung von Schriften und Unbrauchbarmachung

- (1) Schriften (§ 11 Abs. 3), die einen solchen Inhalt haben, daß jede vorsätzliche Verbreitung in Kenntnis ihres Inhalts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verwirklichen würde, werden eingezogen, wenn mindestens ein Stück durch eine rechtswidrige Tat verbreitet oder zur Verbreitung bestimmt worden ist. Zugleich wird angeordnet, daß die zur Herstellung der Schriften gebrauchten oder bestimmten Vorrichtungen, wie Platten, Formen, Drucksätze, Druckstöcke, Negative oder Matrizen, unbrauchbar gemacht werden.

- (2) Die Einziehung erstreckt sich nur auf die Stücke, die sich im Besitz der bei ihrer Verbreitung oder deren Vorbereitung mitwirkenden Personen befinden oder öffentlichausgelegt oder beim Verbreiten durch Versenden noch nicht dem Empfänger ausgehändigt worden sind.
- (3) Absatz 1 gilt entsprechend bei Schriften (§11 Abs. 3), die einen solchen Inhalt haben, daß die vorsätzliche Verbreitung in Kenntnis ihres Inhalts nur bei Hinzutreten weiterer Tatumsständ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verwirklichen würde. Die Einziehung und Unbrauchbarmachung werden jedoch nur angeordnet, soweit
1. die Stücke und die in Absatz 1 Satz 2 bezeichneten Gegenstände sich im Besitz des Täters, Teilnehmers oder eines anderen befinden, für den der Täter oder Teilnehmer gehandelt hat, oder von diesen Personen zur Verbreitung bestimmt sind und
 2. die Maßnahmen erforderlich sind, um ein gesetzwidriges Verbreiten durch diese Personen zu verhindern.
- (4) Dem Verbreiten im Sinne der Absätze 1 bis 3 steht es gleich, wenn eine Schrift (§ 11 Abs. 3) oder mindestens ein Stück der Schrift durch Ausstellen, Anschlag, Vorführen oder in anderer Weise öffentlich zugänglich gemacht wird.
- (5) § 74b Abs. 2 und 3 gilt entsprechend.

§ 74e Wirkung der Einziehung

- (1) Wird ein Gegenstand eingezogen, so geht das Eigentum an der Sache oder das eingezogene Recht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auf den Staat über.

- (2) Rechte Dritter an dem Gegenstand bleiben bestehen. Das Gericht ordnet jedoch das Erlöschen dieser Rechte an, wenn es die Einziehung darauf stützt,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 74 Abs. 2 Nr. 2 vorliegen. Es kann das Erlöschen des Rechts eines Dritten auch dann anordnen, wenn diesem eine Entschädigung nach § 74f Abs. 2 Nr. 1 oder 2 nicht zu gewähren ist.
- (3) § 73e Abs. 2 gilt entsprechend für die Anordnung der Einziehung und die Anordnung des Vorbehalts der Einziehung, auch wenn sie noch nicht rechtskräftig ist.

§ 74f Entschädigung

- (1) Stand das Eigentum an der Sache oder das eingezogene Recht zur Ze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einem Dritten zu oder war der Gegenstand mit dem Recht eines Dritten belastet, das durch die Entscheidung erloschen oder beeinträchtigt ist, so wird der Dritte aus der Staatskass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erkehrswertes angemessen in Geld entschädigt.
- (2) Eine Entschädigung wird nicht gewährt, wenn
1. der Dritte wenigstens leichtfertig dazu beigetragen hat, daß die Sache oder das Recht Mittel oder Gegenstand der Tat oder ihrer Vorbereitung gewesen ist,
 2. der Dritte den Gegenstand oder das Recht an dem Gegenstand in Kenntnis der Umstände, welche die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zulassen, in verwerflicher Weise erworben hat oder

3. es nach den Umständen, welche die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begründethaben,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außerhalb des Strafrechts zulässig wäre, den Gegenstand dem Dritten ohne Entschädigung dauernd zu entziehen.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kann eine Entschädigung gewährt werden, soweit es eineunbillige Härte wäre, sie zu versagen.

§ 75 Sondervorschrift für Organe und Vertreter

Hat jemand

1. als vertretungsberechtigtes Organ einer juristischen Person oder als Mitglied einessolchen Organs,
 2. als Vorstand ein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oder als Mitglied eines solchen Vorstandes,
 3. als vertretungsberechtigter Gesellschafter einer rechtsfähigen Personengesellschaft,
 4. als Generalbevollmächtigter oder in leitender Stellung als Prokurist oder Handlungsbevollmächtigter einer juristischen Person oder einer in Nummer 2 oder 3 genannten Personenvereinigung oder
 5. als sonstige Person, die für die Leitung des Betriebs oder Unternehmens einerjuristischen Person oder einer in Nummer 2 oder 3 genannten Personenvereinigungverantwortlich handelt, wozu auch die Überwachung der Geschäftsführung oder diesonstige Ausübung von Kontrollbefugnissen in leitender Stellung gehört,
- eine Handlung vorgenommen, die ihm gegenüber unter den übrigen Voraussetzungender §§ 74 bis 74c und 74f die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oder des Wertersatzes zulassen oder den Ausschluß der Entschädigung begründen würde, so wird seine Handlung bei Anwendung dieser Vorschriften dem Vertretenen zugerechnet. § 14 Abs. 3 gilt entsprechend.

Gemeinsame Vorschriften

§ 76 Nachträgliche Anordnung von Verfall oder Einziehung des Wertersatzes

Ist die Anordnung des Verfalls oder der Einziehung eines Gegenstandes nicht ausführbar oder unzureichend, weil nach der Anordnung eine der in §§ 73a, 73d Abs. 2 oder § 74c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ingetreten oder bekannt geworden ist, so kann das Gericht den Verfall oder die Einziehung des Wertersatzes nachträglich anordnen.

§ 76a Selbständige Anordnung

- (1) Kann wegen der Straftat aus tatsächlichen Gründen keine bestimmte Person verfolgt oder verurteilt werden, so muß oder kann auf Verfall oder Einziehung des Gegenstandes oder des Wertersatzes oder auf Unbrauchbarmachung selbständig erkannt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die Maßnahme vorgeschrieben oder zugelassen ist, im übrigen vorliegen.
- (2)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74 Abs. 2 Nr. 2, Abs. 3 und des § 74d ist Absatz 1 auch dann anzuwenden, wenn
 1. die Verfolgung der Straftat verjährt ist oder
 2. sonst aus rechtlichen Gründen keine bestimmte Person verfolgt werden kann und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dürfen jedoch nicht angeordnet werden, wenn Antrag, Ermächtigung oder Strafverlangen fehlen.

- (3)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das Gericht von Strafe absieht oder wenn das Verfahren nach einer Vorschrift eingestellt wird, die dies nach dem Ermessen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Gerichts oder im Einvernehmen beider zuläßt.

Vierter Abschnitt Strafantrag, Ermächtigung, Strafverlangen

§ 77 Antragsberechtigte

- (1) Ist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bar, so kann, soweit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der Verletzte den Antrag stellen.
- (2) Stirbt der Verletzte, so geht sein Antragsrecht in den Fällen, die das Gesetz bestimmt, auf den Ehegatten, den Lebenspartner und die Kinder über. Hat der Verletzte weder einen Ehegatten, oder einen Lebenspartner noch Kinder hinterlassen oder sind sie vor Ablauf der Antragsfrist gestorben, so geht das Antragsrecht auf die Eltern und, wenn auch sie vor Ablauf der Antragsfrist gestorben sind, auf die Geschwister und die Enkel über. Ist ein Angehöriger an der Tat beteiligt oder ist seine Verwandtschaft erloschen, so scheidet er bei dem Übergang des Antragsrechts aus. Das Antragsrecht geht nicht über, wenn die Verfolgung dem erklärten Willen des Verletzten widerspricht.
- (3) Ist der Antragsberechtigte geschäftsunfähig oder beschränkt geschäftsfähig,

sokönnen der gesetzliche Vertreter in den persönlichen Angelegenheiten und derjenige, dem die Sorge für die Person des Antragsberechtigten zusteht, den Antrag stellen.

- (4) Sind mehrere antragsberechtigt, so kann jeder den Antrag selbständig stellen.

§ 77a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 (1) Ist die Tat von einem Amtsträger, einem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m Soldaten der Bundeswehr oder gegen ihn begangen und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bar, so ist derjenige Dienstvorgesetzte antragsberechtigt, dem der Betreffende zur Zeit der Tat unterstellt war.
- (2) Bei Berufsrichtern ist an Stelle des Dienstvorgesetzten antragsberechtigt, wer die Dienstaufsicht über den Richter führt. Bei Soldaten ist Dienstvorgesetzter der Disziplinarvorgesetzte.
- (3) Bei einem Amtsträger oder einem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der keinen Dienstvorgesetzten hat oder gehabt hat, kann die Dienststelle, für die er tätig war, den Antrag stellen. Leitet der Amtsträger oder der Verpflichtete selbst diese Dienststelle, so ist die staatliche Aufsichtsbehörde antragsberechtigt.
- (4) Bei Mitgliedern der Bundesregierung ist die Bundesregierung, bei Mitgliedern einer Landesregierung die Landesregierung antragsberechtigt.

§ 77b Antragsfrist

- (1) Eine Tat, die nur auf Antrag verfolgbar ist, wird nicht verfolgt,

wenn der Antragsberechtigte es unterläßt, den Antrag bis zum Ablauf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zu stellen. Fällt das Ende der Frist auf einen Sonntag, einen allgemeinen Feiertag oder einen Sonnabend, so endet die Frist mit Ablauf des nächsten Werktags.

- (2) Die Frist beginnt mit Ablauf des Tages, an dem der Berechtigte von der Tat und der Person des Täters Kenntnis erlangt. Hängt die Verfolgbarkeit der Tat auch von einer Entscheidung über die Nichtigkeit oder Auflösung einer Ehe ab, so beginnt die Frist nicht vor Ablauf des Tages, an dem der Berechtigte von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Kenntnis erlangt. Für den Antra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und des Sorgeberechtigten kommt es auf dessen Kenntnis an.
- (3) Sind mehrere antragsberechtigt oder mehrere an der Tat beteiligt, so läuft die Frist für und gegen jeden gesondert.
- (4) Ist durch Tod des Verletzten das Antragsrecht auf Angehörige übergegangen, so endet die Frist frühestens drei Monate und spätestens sechs Monate nach dem Tod des Verletzten.
- (5) Der Lauf der Frist ruht, wenn ein Antrag auf Durchführung eines Sühneversuchs gemäß § 380 der Strafprozeßordnung bei der Vergleichsbehörde eingeht, bis zur Ausstellung der Bescheinigung nach § 380 Abs. 1 Satz 3 der Strafprozeßordnung.

§ 77c Wechselseitig begangene Taten

Hat bei wechselseitig begangenen Taten, die miteinander zusammenhängen und nur auf Antrag verfolgbar sind, ein Berechtigter die Strafverfolgung

des anderen beantragt, so erlischt das Antragsrecht des anderen, wenn er es nicht bis zur Beendigung des letzten Wortes im ersten Rechtszug ausübt. Er kann den Antrag auch dann noch stellen, wenn für ihn die Antragsfrist schon verstrichen ist.

§ 77d Zurücknahme des Antrags

- (1) Der Antrag kann zurückgenommen werden. Die Zurücknahme kann bis zum rechtskräftigen Abschluß des Strafverfahrens erklärt werden. Ein zurückgenommener Antrag kann nicht nochmals gestellt werden.
- (2) Stirbt der Verletzte oder der im Falle seines Todes Berechtigte, nachdem er den Antrag gestellt hat, so können der Ehegatte, der Lebenspartner, die Kinder, die Eltern, die Geschwister und die Enkel des Verletzten in der Rangfolge des § 77 Abs. 2 den Antrag zurücknehmen. Mehrere Angehörige des gleichen Ranges können das Recht nur gemeinsam ausüben. Wer an der Tat beteiligt ist, kann den Antrag nicht zurücknehmen.

§ 77e Ermächtigung und Strafverlangen

Ist eine Tat nur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bar, so gelten die §§ 77 und 77d entsprechend.

Fünfter Abschnitt Verjährung

Erster Titel Verfolgungsverjährung

§ 78 Verjährungsfrist

- (1) Die Verjährung schließt die Ahndung der Tat und die Anordnung von Maßnahmen (§ 11 Abs. 1 Nr. 8) aus. § 76a Abs. 2 Satz 1 Nr. 1 bleibt unberührt.
- (2) Verbrechen nach § 211 (Mord) verjähren nicht.
- (3) Soweit die Verfolgung verjährt, beträgt die Verjährungsfrist
 1. dreißig Jahre bei Taten, die mit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bedroht sind,
 2. zwanzig Jahre bei Taten, die im Höchstmaß mit Freiheitsstrafen von mehr als zehn Jahren bedroht sind,
 3. zehn Jahre bei Taten, die im Höchstmaß mit Freiheitsstrafen von mehr als fünf Jahren bis zu zehn Jahren bedroht sind,
 4. fünf Jahre bei Taten, die im Höchstmaß mit Freiheitsstrafen von mehr als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bedroht sind,
 5. drei Jahre bei den übrigen Taten.
- (4) Die Frist richtet sich nach der Strafdrohung des Gesetzes, dessen Tatbestand die Tat verwirklicht, ohne Rücksicht auf Schärfungen oder Milderungen, die nach den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Teils oder für besonders schwere oder minder schwere Fälle vorgesehen sind.

§ 78a Beginn

Die Verjährung beginnt, sobald die Tat beendet ist. Tritt ein zum Tatbestand gehörender Erfolg erst später ein, so beginnt die Verjährung mit diesem Zeitpunkt.

§ 78b Ruhen

(1) Die Verjährung ruht

1. bis zur Vollendung des achtzehnten Lebensjahres des Opfers bei Straftaten nach den §§ 174 bis 174c und 176 bis 179,
2. solange nach dem Gesetz die Verfolgung nicht begonnen oder nicht fortgesetzt werden kann; dies gilt nicht, wenn die Tat nur deshalb nicht verfolgt werden kann, weil Antrag, Ermächtigung oder Strafverlangen fehlen.

(2) Steht der Verfolgung entgegen, daß der Täter Mitglied des Bundestages oder eines Gesetzgebungsorgans eines Landes ist, so beginnt die Verjährung erst mit Ablauf des Tages zu ruhen, an dem

1. die Staatsanwaltschaft oder eine Behörde oder ein Beamter des Polizeidienstes von der Tat und der Person des Täters Kenntnis erlangt oder
2. eine Strafanzeige oder ein Strafantrag gegen den Täter angebracht wird (§158 der Strafprozeßordnung).

(3) Ist vor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ein Urteil des ersten Rechtszuges ergangen, so läuft die Verjährungsfrist nicht vor dem Zeitpunkt ab, in dem das Verfahren rechtskräftig abgeschlossen ist.

- (4) Droht das Gesetz strafscharfend für besonders schwere Fälle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fünf Jahren an und ist das Hauptverfahren vor dem Landgericht eröffnet worden, so ruht die Verjährung in den Fällen des § 78 Abs. 3 Nr. 4 ab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höchstens jedoch für einen Zeitraum von fünf Jahren; Absatz 3 bleibt unberührt.
- (5) Hält sich der Täter in einem ausländischen Staat auf und stellt die zuständige Behörde ein förmliches Auslieferungsgesuch an diesen Staat, ruht die Verjährung ab dem Zeitpunkt des Zugangs des Gesuchs beim ausländischen Staat
1. bis zur Übergabe des Täters an die deutschen Behörden,
 2. bis der Täter das Hoheitsgebiet des ersuchten Staates auf andere Weise verlassen hat,
 3. bis zum Eingang der Ablehnung dieses Gesuchs durch den ausländischen Staat bei den deutschen Behörden oder
 4. bis zur Rücknahme dieses Gesuchs.

Lässt sich das Datum des Zugangs des Gesuchs beim ausländischen Staat nicht ermitteln, gilt das Gesuch nach Ablauf von einem Monat seit der Absendung oder Übergabe an den ausländischen Staat als zugegangen, sofern nicht die ersuchende Behörde Kenntnis davon erlangt, dass das Gesuch dem ausländischen Staat tatsächlich nicht oder ers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zugegangen ist. Satz 1 gilt nicht für ein Auslieferungsgesuch, für das im ersuchten Staat auf Grund des Rahmenbeschlusses des Rates vom 13. Juni 2002 über den Europäischen Haftbefehl und die Übergabeverfahr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ABl. EG Nr. L 190 S. 1) oder auf Grund völkerrechtlicher Vereinbarung eine § 83c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vergleichbare Fristenregelung besteht.

Fußnote

§ 78b Abs. 2 Nr. 1: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15.11.1978 I 1967 –2 BvL 13/77 –

§ 78c Unterbrechung

(1) Die Verjährung wird unterbrochen durch

1. die erst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die Bekanntgabe, daß gegen ihn das Ermittlungsverfahren eingeleitet ist, oder die Anordnung dieser Vernehmung oder Bekanntgabe,
2. jede richterlich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oder deren Anordnung,
3. jede Beauftragung eines Sachverständigen durch den Richter oder Staatsanwalt, wenn vorher der Beschuldigte vernommen oder ihm die Einleitung des Ermittlungsverfahrens bekanntgegeben worden ist,
4. jede richterliche Beschlagnahme – oder Durchsuchungsanordnung und richterliche Entscheidungen, welche diese aufrechterhalten,
5. den Haftbefehl, den Unterbringungsbefehl, den Vorführungsbefehl und richterliche Entscheidungen, welche diese aufrechterhalten,
6. die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7.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8. jede Anberaumung einer Hauptverhandlung,
9. den Strafbefehl oder eine andere dem Urteil entsprechende Entscheidung,

10. die vorläufige gerichtliche Einstellung des Verfahrens wegen Abwesenheit des Angeeschuldigten sowie jede Anordnung des Richters oder Staatsanwalts, die nacheiner solchen Einstellung des Verfahrens oder im Verfahren gegen Abwesende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 des Angeeschuldigten oder zur Sicherung von Beweisen ergeht,
11. die vorläufige gerichtliche Einstellung des Verfahrens wegen Verhandlungsunfähigkeit des Angeeschuldigten sowie jede Anordnung des Richters oder Staatsanwalts, die nach einer solchen Einstellung des Verfahrens zur Überprüfungder Verhandlungsfähigkeit des Angeeschuldigten ergeht, oder
12. jedes richterliche Ersuchen, eine Untersuchungshandlung im Ausland vorzunehmen.

Im Sicherungsverfahren und im selbständigen Verfahren wird die Verjährung durch die demSatz 1 entsprechenden Handlungen zur Durchführung des Sicherungsverfahrens oder desselbständigen Verfahrens unterbrochen.

- (2) Die Verjährung ist bei einer schriftlichen Anordnung oder Entscheidung in demZeitpunkt unterbrochen, in dem die Anordnung oder Entscheidung unterzeichnet wird. Ist das Schriftstück nicht alsbald nach der Unterzeichnung in den Geschäftsgang gelangt, so ist der Zeitpunkt maßgebend, in dem es tatsächlich in den Geschäftsgang gegeben worden ist.
- (3) Nach jeder Unterbrechung beginnt die Verjährung von neuem. Die Verfolgung ist jedoch spätestens verjährt, wenn seit dem in §78a bezeichneten Zeitpunkt das Doppelte der gesetzlichen Verjährungsfrist und, wenn die Verjährungsfrist nach besonderen Gesetzen kürzer

ist als drei Jahre, mindestens drei Jahre verstrichen sind. § 78b bleibt unberührt.

- (4) Die Unterbrechung wirkt nur gegenüber demjenigen, auf den sich die Handlung bezieht.
- (5) Wird ein Gesetz, das bei der Beendigung der Tat gilt, vor der Entscheidung geändert und verkürzt sich hierdurch die Frist der Verjährung, so bleiben Unterbrechungshandlung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neuen Rechts vorgenommen worden sind, wirksam, auch wenn im Zeitpunkt der Unterbrechung die Verfolgung nach dem neuen Recht bereits verjährt gewesen wäre.

Zweiter Titel Vollstreckungsverjährung

§ 79 Verjährungsfrist

- (1) Eine rechtskräftig verhängte Strafe oder Maßnahme (§ 11 Abs. 1 Nr. 8) darf nach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nicht mehr vollstreckt werden.
- (2) Die Vollstreckung von lebenslangen Freiheitsstrafen verjährt nicht.
- (3) Die Verjährungsfrist beträgt
 - 1. fünfundzwanzig Jahre bei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ehn Jahren,
 - 2. zwanzig Jahre bei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fünf Jahren bis zu zehn Jahren,
 - 3. zehn Jahre bei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 4. fünf Jahre bei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und bei Geldstrafe von mehr als dreißig Tagessätzen,
 - 5. drei Jahre bei Geldstrafe bis zu dreißig Tagessätzen.

- (4) Die Vollstreckung der Sicherungsverwahrung und der unbefristeten Führungsaufsicht (§ 68c Abs. 2 Satz 1 oder Abs. 3) verjähren nicht. Die Verjährungsfrist beträgt
1. fünf Jahre in den sonstigen Fällen der Führungsaufsicht sowie bei der ersten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2. zehn Jahre bei den übrigen Maßnahmen.
- (5) Ist auf Freiheitsstrafe und Geldstrafe zugleich oder ist neben einer Strafe auf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auf Verfall, Einziehung oder Unbrauchbarmachung erkannt, so verjährt die Vollstreckung der einen Strafe oder Maßnahme nicht früher als die der anderen. Jedoch hindert eine zugleich angeordnete Sicherungsverwahrung die Verjährung der Vollstreckung von Strafen oder anderen Maßnahmen nicht.
- (6) Die Verjährung beginnt mit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 79a Ruhen

Die Verjährung ruht,

1. solange nach dem Gesetz die Vollstreckung nicht begonnen oder nicht fortgesetzt werden kann,
2. solange dem Verurteilten a) Aufschub oder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b) Aussetzung zur Bewährung durch richterliche Entscheidung oder im Gnadenweg oder c) Zahlungserleichterung bei Geldstrafe, Verfall oder Einziehung bewilligt ist,
3. solange der Verurteilte im In- oder Ausland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 79b Verlängerung

Das Gericht kann die Verjährungsfrist vor ihrem Ablauf auf Antrag der Vollstreckungsbehörde einmal um die Hälfte der gesetzlichen Verjährungsfrist verlängern, wenn der Verurteilte sich in einem Gebiet aufhält, aus dem seine Auslieferung oder Überstellung nicht erreicht werden kann.

Besonderer Teil

Erster Abschnitt

Friedensverrat, Hochverrat und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Erster Titel Friedensverrat

§ 80 Vorbereitung eines Angriffskrieges

Wer einen Angriffskrieg (Artikel 26 Abs. 1 des Grundgesetzes), an dem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teiligt sein soll, vorbereitet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Krieg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wird mit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oder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bestraft.

§ 80a Aufstacheln zum Angriffskrieg

Wer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zum Angriffskrieg (§80) aufstachel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Zweiter Titel Hochverrat

§ 81 Hochverrat gegen den Bund

- (1)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 oder

2. die auf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oder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82 Hochverrat gegen ein Land

- (1) Wer es unternimm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1. das Gebiet eines Landes ganz oder zum Teil einem anderen L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zuverleiben oder einen Teil eines Landes von diesem abzutrennen oder
 2. die auf der Verfassung eines Landes beruhend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änder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83 Vorbereitung eines hochverräterischen Unternehmens

- (1) Wer ein bestimmtes hochverräterisches Unternehmen gegen den Bund vorber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Wer ein bestimmtes hochverräterisches Unternehmen gegen ein Land vorber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83a Tätige Reue

- (1) In den Fällen der §§ 81 und 82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49 Abs. 2) oder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und eine von ihm erkannte Gefahr, daß andere das Unternehmen weiter ausführen, abwendet oder wesentlich mindert oder wenn er freiwillig die Vollendung der Tat verhindert.
- (2) In den Fällen des §83 kann das Gericht nach Absatz 1 verfahr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sein Vorhaben aufgibt und eine von ihm verursachte und erkannte Gefahr, daß andere das Unternehmen weiter vorbereiten oder es ausführen, abwendet oder wesentlich mindert oder wenn er freiwillig die Vollendung der Tat verhindert.
- (3)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ie bezeichnete Gefahr abgewendet oder wesentlich gemindert oder die Vollendung der Tat verhindert, so genügt sein freiwilliges unternhaftes Bemühen, dieses Ziel zu erreichen.

Dritter Titel Gefähr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 84 Fortführung ein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 (1) Wer als Rädelsführer oder Hintermann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en organisatorischen Zusammenhalt
 1. einer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2. einer Partei, von d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gestellt ha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verbotenen Partei ist, aufrech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2) Wer sich in einer Partei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rt als Mitglied betätigt oder wer ihren organisatorischen Zusammenhalt unterstü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Wer einer anderen Sach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ie im Verfahren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oder im Verfahren nach § 33 Abs. 2 des Parteiengesetzes erlassen ist, oder einer vollziehbaren Maßnahme zuwiderhandelt, die im Vollzug einer in einem solchen Verfahren ergangenen Sachentscheidung getroff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n in Satz 1 bezeichneten Verfahren steht ein Verfahren nach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gleich.
-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2 und der Absätze 2 und 3 Satz 1 kann das Gericht bei Beteiligten, deren Schuld gering und deren Mitwirkung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is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 (5)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Satz 1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as Fortbestehen der Partei zu

verhindern; erreicht er dieses Ziel oder wird es ohne sein Bemühen erreicht, so wird der Täter nicht bestraft.

§ 85 Verstoß gegen ein Vereinigungsverbot

- (1) Wer als Rädelsführer oder Hintermann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en organisatorischen Zusammenhalt
1. einer Partei oder Vereinigung, von der im Verfahren nach § 33 Abs. 3 des Parteiengesetzes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verbotenen Partei ist, oder
 2. einer Vereinigung, die unanfechtbar verboten ist, weil sie sich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richtet, oder von der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solchen verbotenen Vereinigung ist, aufrech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2) Wer sich in einer Partei oder Vereinigung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rt als Mitglied betätigt oder wer ihren organisatorischen Zusammenhalt unterstü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 84 Abs. 4 und 5 gilt entsprechend.

§ 86 Verbreiten von Propagandamitteln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

- (1) Wer Propagandamittel
1. einer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einer Partei oder Vereinigung, von der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solchen Partei ist,

2. einer Vereinigung, die unanfechtbar verboten ist, weil sie sich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richtet, oder von der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solchen verbotenen Vereinigung ist,
 3. einer Regierung,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die für die Zwecke einer der in den Nummern 1 und 2 bezeichneten Parteien oder Vereinigungen tätig ist, oder
 4. Propagandamittel, die nach ihrem Inhalt dazu bestimmt sind, Bestrebungen einer ehemaligen nationalsozialistischen Organisation fortzusetzen,
- im Inland verbreitet oder zur Verbreitung im Inland oder Ausland herstellt, vorrätig hält, einführt oder ausführt oder in Datenspeichern öffentlich zugänglich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Propagandamittel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nur solche Schriften (§ 11 Abs. 3), deren Inhalt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oder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gerichtet ist.
 - (3) Absatz 1 gilt nicht, wenn das Propagandamittel oder die Handlung der staatsbürgerlichen Aufklärung, der Abwehr verfassungswidriger Bestrebungen, der Kunst oder der Wissenschaft, der Forschung oder der Lehre, der Berichterstattung über Vorgänge des Zeitgeschehens oder der Geschichte oder ähnlichen Zwecken dient.
 - (4) Ist die Schuld gering, so kann das Gericht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r Vorschrift absehen.

§ 86a Verwenden von Kennzeichen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im Inland Kennzeichen einer der in § 86 Abs. 1 Nr. 1, 2 und 4 bezeichneten Parteien oder Vereinigungen verbreitet od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in von ihm verbreiteten Schriften (§ 11 Abs. 3) verwendet oder

2. Gegenstände, die derartige Kennzeichen darstellen oder enthalten, zur Verbreitung oder Verwendung im Inland oder Ausland in der in Nummer 1 bezeichneten Art und Weise herstellt, vorrätig hält, einführt oder ausführt.

(2) Kennzeichen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namentlich Fahnen, Abzeichen, Uniformstücke, Parolen und Grußformen. Den in Satz 1 genannten Kennzeichen stehen solche gleich, die ihnen zum Verwechseln ähnlich sind.

(3) § 86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 87 Agententätigkeit zu Sabotagezweck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inen Auftrag einer Regierung,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zur Vorbereitung von Sabotagehandlungen, die in diesem Geltungsbereich begangen werden sollen, dadurch befolgt, daß er

1. sich bereit hält, auf Weisung einer der bezeichneten Stellen solche Handlungen zu begehen,

2. Sabotageobjekte auskundschaftet,
 3. Sabotagemittel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verwahrt, einem anderen überläßt oder in diesen Bereich einführt,
 4. Lager zur Aufnahme von Sabotagemitteln oder Stützpunkte für die Sabotagetätigkeit einrichtet, unterhält oder überprüft,
 5. sich zur Begehung von Sabotagehandlungen schulen läßt oder andere dazu schult oder
 6. die Verbindung zwischen einem Sabotageagenten (Nummern 1 bis 5) und einer der bezeichneten Stellen herstellt oder aufrechterhält, und sich dadurch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setzt.
- (2) Sabotagehandlungen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1. Handlungen, die den Tatbestand der §§ 109e, 305, 306 bis 306c, 307 bis 309, 313, 315, 315b, 316b, 316c Abs. 1 Nr. 2, der §§ 317 oder 318 verwirklichen, und
 2. andere Handlungen, durch die der Betrieb eines für die Landesverteidigung, den Schutz der Zivilbevölkerung gegen Kriegsgefahren oder für die Gesamtwirtschaft wichtigen Unternehmens dadurch verhindert oder gestört wird, daß eine dem Betriebsdienende Sache zerstört, beschädigt, beseitigt, verändert oder unbrauchbar gemacht oder daß die für den Betrieb bestimmte Energie entzogen wird.
- (3) Das Gericht kann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sein Verhalten aufgibt und sein Wissen so rechtzeitig einer Dienststelle offenbart, daß Sabotagehandlungen, deren Planung er kennt, noch verhindert werden können.

§88 Verfassungsfeindliche Sabotage

(1) Wer als Rädelsführer oder Hintermann einer Gruppe oder, ohne mit einer Gruppe oder für eine solche zu handeln, als einzelner absichtlich bewirkt, daß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urch Störhandlungen

1. Unternehmen oder Anlagen, die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Postdienstleistungen oder dem öffentlichen Verkehr dienen,
2. Telekommunikationsanlagen, die öffentlichen Zwecken dienen,
3. Unternehmen oder Anlagen, die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Wasser, Licht, Wärme oder Kraft dienen oder sonst für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lebenswichtig sind, oder
4. Dienststellen, Anlagen, Einrichtungen oder Gegenstände, die ganz oder überwiegend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dienen, ganz oder zum Teil außer Tätigkeit gesetzt oder den bestimmungsmäßigen Zwecken entzogen werden, und sich dadurch absich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89 Verfassungsfeindliche Einwirkung auf Bundeswehr und öffentliche Sicherheitsorgane

(1) Wer auf Angehörige der Bundeswehr oder eines öffentlichen Sicherheitsorgans planmäßig einwirkt, um deren pflichtmäßige Bereitschaft zum Schutz 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zu untergraben, und sich dadurch absich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 86 Abs. 4 gilt entsprechend.

§ 90 Verunglimpfung des Bundespräsidenten

(1)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3) den Bundespräsidenten 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wenn nicht die Voraussetzungen des § 188 erfüllt sind.

(3) Die Strafe is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enn die Tat eine Verleumdung (§ 187) ist oder wenn der Täter sich durch die Tat absich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setzt.

(4) Die Tat wird nur mit Ermächtigung des Bundespräsidenten verfolgt.

§ 90a Verunglimpfung des Staates und seiner Symbole

(1)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3)

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eines ihrer Länder oder ihr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beschimpft oder böswillig verächtlich macht oder
 2. die Farben, die Flagge, das Wappen oder die Hymn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eines ihrer Länder 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öffentlich gezeigte Flag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eines ihrer Länder oder ein von einer Behörde öffentlich angebrachtes Hoheitszei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eines ihrer Länder entfernt,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oder unkenntlich macht oder beschimpfenden Unfug daran verübt.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Strafe is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wenn der Täter sich durch die Tat absich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setzt.

§ 90b Verfassungsfeindliche Verunglimpfung von Verfassungsorganen

- (1)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 Abs.3) ein Gesetzgebungsorgan, die Regierung oder das Verfassungsgerich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eines ihrer Mitglieder in dieser Eigenschaft in einer das Ansehen des Staates gefährdenden Weise verunglimpft und sich dadurch absichtlich für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einge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Die Tat wird nur mit Ermächtigung des betroffenen Verfassungsorgans oder Mitglieds verfolgt.

§ 91 Anwendungsbereich

Die §§ 84, 85 und 87 gelten nur für Taten, die durch ein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usgeübte Tätigkeit begangen werden.

Vierter Titel Gemeinsame Vorschriften

§ 92 Begriffsbestimmungen

- (1) Im Sinne dieses Gesetzes beeinträchtigt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r ihre Freiheit von fremder Botmäßigkeit aufhebt, ihre staatliche Einheit beseitigt oder ein zu ihr gehörendes Gebiet abtrennt.
- (2)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Verfassungsgrundsätze
1. das Recht des Volkes, die Staatsgewalt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zuüben und die Volksvertretung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zu wählen,
 2. die Bindung der Gesetzgebung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und die Bind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n Gesetz und Recht,

3. das Recht auf die Bildung und Ausübung einer parlamentarischen Opposition,
4. die Ablösbarkeit der Regierung und ihre Verantwortlichkeit gegenüber der Volksvertretung,
5. die Unabhängigkeit der Gerichte und 6. der Ausschluß jeder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3)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Bestrebungen geg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Absatz 1),
2. Bestrebungen gegen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die äußere oder inn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einträchtigen,
3. Bestrebungen gegen Verfassungsgrundsätze solche Bestrebungen, deren Träger darauf hinarbeiten, einen Verfassungsgrundsatz (Absatz 2) zu beseitigen, außer Geltung zu setzen oder zu untergraben.

§ 92a Nebenfolge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egen einer Straftat nach diesem Abschnitt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 stimmen, aberkennen (§ 45 Abs. 2 und 5).

§ 92b Einziehung

Ist eine Straftat nach diesem Abschnitt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die durch die Tat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und
 2.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den §§ 80a, 86, 86a, 90 bis 90b bezieht,
-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Zweiter Abschnitt

Landesverrat und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 93 Begriff des Staatsgeheimnisses

- (1) Staatsgeheimnisse sind Tatsachen, Gegenstände oder Erkenntnisse, die nur einem begrenzten Personenkreis zugänglich sind und vor einer fremden Macht geheimgehalten werden müssen, um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zuwenden.
- (2) Tatsachen, die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oder unter Geheimhaltung gegenüber den Vertragspartn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 zwischenstaatlich vereinbarte Rüstungsbeschränkungen verstoßen, sind keine Staatsgeheimnisse.

§ 94 Landesverrat

- (1) Wer ein Staatsgeheimnis
 1. einer fremden Macht oder einem ihrer Mittelsmänner mitteilt oder
 2. sonst an einen Unbefugten gelangen läßt oder öffentlich bekanntmacht, um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nachteiligen oder eine fremde Macht zu begünstigen,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eine verantwortliche Stellung mißbraucht, die ihn zur Wahrung von Staatsgeheimnissen besonders verpflichtet, oder
 2. durch die Tat die Gefahr eines besonder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 95 Offenbaren von Staatsgeheimnissen

- (1) Wer ein Staatsgeheimnis, das von einer amtlichen Stelle oder auf deren Veranlassung geheimgehalten wird, an einen Unbefugten gelangen läßt oder öffentlich bekanntmacht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94 mit Strafe bedroht is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94 Abs. 2 Satz 2 ist anzuwenden.

§ 96 Landesverräterische Ausspähung, Auskundschaften von Staatsgeheimnissen

- (1) Wer sich ein Staatsgeheimnis verschafft, um es zu verraten (§ 94),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Wer sich ein Staatsgeheimnis, das von einer amtlichen Stelle oder auf deren Veranlassung geheimgehalten wird, verschafft, um es zu offenbaren (§95),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97 Preisgabe von Staatsgeheimnissen

- (1) Wer ein Staatsgeheimnis, das von einer amtlichen Stelle oder auf deren Veranlassung geheimgehalten wird, an einen Unbefugten gelangen läßt oder öffentlich bekanntmacht und dadurch fahrlässig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ein Staatsgeheimnis, das von einer amtlichen Stelle oder auf deren Veranlassung geheimgehalten wird und das ihm kraft seines Amtes, seiner Dienststellung oder eines von einer amtlichen Stelle erteilten Auftrags zugänglich war, leichtfertigermaßen einen Unbefugten gelangen läßt und dadurch fahrlässig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Die Tat wird nur mit Ermächtigung der Bundesregierung verfolgt.

§ 97a Verrat illegaler Geheimnisse

Wer ein Geheimnis, das wegen eines der in § 93 Abs. 2 bezeichneten Verstöße kein Staatsgeheimnis ist, einer fremden Macht oder einem

ihrer Mittelsmänner mitteilt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wird wie ein Landesverräter (§ 94) bestraft. § 96 Abs. 1 in Verbindung mit § 94 Abs. 1 Nr. 1 ist auf Geheimnisse der in Satz 1 bezeichneten Art entsprechend anzuwenden.

§ 97b Verrat in irriger Annahme eines illegalen Geheimnisses

- (1)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r §§ 94 bis 97 in der irrigen Annahme, das Staatsgeheimnis sei ein Geheimnis der in § 97a bezeichneten Art, so wird er, wenn
1. dieser Irrtum ihm vorzuwerfen ist,
 2. er nicht in der Absicht handelt, dem vermeintlichen Verstoß entgegenzuwirken, oder
 3. die Tat nach den Umständen kein angemessenes Mittel zu diesem Zweck ist,
- nach den bezeichneten Vorschriften bestraft. Die Tat ist in der Regel kein angemessenes Mittel, wenn der Täter nicht zuvor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um Abhilfe angerufen hat.
- (2) War dem Täter als Amtsträger oder als Soldat der Bundeswehr das Staatsgeheimnis dienstlich anvertraut oder zugänglich, so wird er auch dann bestraft, wenn nicht zuvor der Amtsträger einen Dienstvorgesetzten, der Soldat einen Disziplinarvorgesetzten um Abhilfe angerufen hat. Dies gilt für die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und für Personen, die im Sinne des § 353b Abs. 2 verpflichtet worden sind, sinngemäß.

§ 98 Landesverräterische Agententätigkeit

(1) Wer

1. für eine fremde Macht eine Tätigkeit ausübt, die auf die Erlangung oder Mitteilung von Staatsgeheimnissen gerichtet ist, oder
2. gegenüber einer fremden Macht oder einem ihrer Mittelsmänner sich zu einer solchen Tätigkeit bereit erklä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94 oder § 96 Abs. 1 mit Strafe bedroht ist.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94 Abs. 2 Satz 2 Nr. 1 gilt entsprechend.

- (2) Das Gericht kann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sein Verhalten aufgibt und sein Wissen einer Dienststelle offenbart. Is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von der fremden Macht oder einem ihrer Mittelsmänner zu einem Verhalten gedrängt worden, so wird er nach dieser Vorschrift nicht bestraft, wenn er freiwillig sein Verhalten aufgibt und sein Wissen unverzüglich einer Dienststelle offenbart.

§ 99 Geheimdienstliche Agententätigkeit

(1) Wer

1. für den Geheimdienst einer fremden Macht eine geheimdienstliche Tätigkeit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übt, die auf die Mitteilung oder Lieferung von Tatsachen, Gegenständen oder Erkenntnissen gerichtet ist, oder

2. gegenüber dem Geheimdienst einer fremden Macht oder einem seiner Mittelsmänner sich zu einer solchen Tätigkeit bereit erklä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94 oder § 96 Abs. 1, in § 97a oder in § 97b in Verbindung mit § 94 oder § 96 Abs. 1 mit Strafe bedroht ist.
-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Tatsachen, Gegenstände oder Erkenntnisse, die von einer amtlichen Stelle oder auf deren Veranlassung geheimgehalten werden, mitteilt oder liefert und wenn er
1. eine verantwortliche Stellung mißbraucht, die ihn zur Wahrung solcher Geheimnisse besonders verpflichtet, oder
 2. durch die Tat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 (3) § 98 Abs. 2 gilt entsprechend.

§ 100 Friedensgefährdende Beziehungen

- (1) Wer als Deutscher, der seine Lebensgrundlag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at, in der Absicht, einen Krieg oder ein bewaffnetes Unternehmen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zuführen, zu einer Regierung,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oder zu einem ihrer Mittelsmänner Beziehungen aufnimmt oder un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fahr fü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t.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 100a Landesverräterische Fälschung

- (1) Wer wider besseres Wissen gefälschte oder verfälschte Gegenstände, Nachrichtendarüber oder unwahre Behauptungen tatsächlicher Art, die im Falle ihrer Echtheit oder Wahrheit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oder die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einer fremden Macht von Bedeutung wären,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oder öffentlich bekanntmacht, um einer fremden Macht vorzutäuschen, daß es sich um echte Gegenstände oder um Tatsachen handle,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oder die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einer fremden Macht herbei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solche Gegenstände durch Fälschung oder Verfälschung herstellt oder sie sich verschafft, um sie in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Weise zur Täuschung einer fremden Macht an einen anderen gelangen zu lassen oder öffentlich bekanntzumachen und dadurch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oder die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einer fremden Machtherbeizuführen.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durch die Tat einen besonders schweren Nachteil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oder die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einer fremden Macht herbeiführt.

§ 101 Nebenfolge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egen einer vorsätzlichen Straftat nach diesem Abschnitt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 stimmen, aberkennen (§ 45 Abs. 2 und 5).

§ 101a Einziehung

Ist eine Straftat nach diesem Abschnitt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die durch die Tat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und
2. Gegenstände, die Staatsgeheimnisse sind, und Gegenstände der in § 100a bezeichneten Art, auf die sich die Tat bezieht,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Gegenstände der in Satz 1 Nr. 2 bezeichneten Art werden auch ohne die Voraussetzungen des §

74 Abs. 2 eingezogen, wenn dieserforderlich ist, um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zuwenden;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Täter ohne Schuldgehandelt hat.

Drit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ausländische Staaten

§ 102 Angriff gegen Organe und Vertreter ausländischer Staaten

- (1) Wer einen Angriff auf Leib oder Leben eines ausländischen Staatsoberhaupts, eines Mitglieds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oder eines im Bundesgebiet beglaubigten Leiterseiner ausländischen diplomatischen Vertretung begeht, während sich der Angegriffene inamtlicher Eigenschaft im Inland auf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oder mit Geldstrafe,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stimmen, aberkennen (§ 45 Abs. 2 und 5).

§ 103 Beleidigung von Organen und Vertretern ausländischer Staaten

- (1) Wer ein ausländisches Staatsoberhaupt oder wer mit Beziehung auf ihre Stellungein Mitglied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das sich in amtlicher Eigenschaft imInland aufhält, oder einen im Bundesgebiet

beglaubigten Leiter einer ausländischdiplomatischen Vertretung beleid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im Falle der verleumderischen Beleidigung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Ist die Tat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egangen, so ist § 200 anzuwenden. Den Antrag auf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kann auch der Staatsanwalt stellen.

§ 104 Verletzung von Flaggen und Hoheitszeichen ausländischer Staaten

- (1) Wer eine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oder nach anerkanntem Brauch öffentlich gezeigte Flagge eines ausländischen Staates oder wer ein Hoheitszeichen eines solchen Staates, das von einer anerkannten Vertretung dieses Staates öffentlich angebracht worden ist, entfernt, zerstört, beschädigt oder unkenntlich macht oder wer beschimpfenden Unfug daran verü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4a Voraussetzungen der Strafverfolgung

Straftaten nach diesem Abschnitt werden nur verfolgt, wen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dem anderen Staat diplomatische Beziehungen unterhält, die Gegenseitigkeit verbürgt ist und auch zur Zeit der Tat verbürgt war, ein Strafverlangender ausländischen Regierung vorliegt und die Bundesregierung die Ermächtigung zur Strafverfolgung erteilt.

Vier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Verfassungsorgane sowie bei Wahlen und Abstimmungen

§ 105 Nötigung von Verfassungsorganen

(1) Wer

1.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einen seiner Ausschüsse,
2. die Bundesversammlung oder einen ihrer Ausschüsse oder
3. die Regierung oder das Verfassungsgerich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rechtswidri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nötigt, ihre Befugnisse nicht oder in einem bestimmten Sinne auszuüb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106 Nötigung des Bundespräsidenten und von Mitgliedern eines Verfassungsorgans

(1) Wer

1. den Bundespräsidenten oder
2. ein Mitglied
 - a) eines Gesetzgebungsorgans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 b) der Bundesversammlung oder
 - c) der Regierung oder des Verfassungsgerichts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rechtswidri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nötigt, seine Befugnisse nicht oder in einem bestimmten Sinne auszuüb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106a (weggefallen)

§ 106b Störung der Tätigkeit eines Gesetzgebungsorgans

(1) Wer gegen Anordnungen verstößt, die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sein Präsident über die Sicherheit und Ordnung im Gebäude des Gesetzgebungsorgans oder auf dem dazugehörenden Grundstück allgemein oder im Einzelfall erläßt, und dadurch die Tätigkeit des Gesetzgebungsorgans hindert oder 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ie Strafvorschrift des Absatzes 1 gilt bei Anordnungen eines Gesetzgebungsorgans des Bundes oder seines Präsidenten weder für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noch für die Mitglieder des Bundesrates und der Bundesregierung sowie ihre Beauftragten, bei Anordnungen eines Gesetzgebungsorgans eines Landes oder seines Präsidenten weder für die Mitglieder der Gesetzgebungsorgane dieses Landes noch für die Mitglieder der Landesregierung und ihre Beauftragten.

§ 107 Wahlbehinderung

- (1) Wer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eine Wahl oder die Feststellung ihres Ergebnisses verhindert oder 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7a Wahlfälschung

- (1) Wer unbefugt wählt oder sonst ein unrichtiges Ergebnis einer Wahl herbeiführt oder das Ergebnis verfäls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das Ergebnis einer Wahl unrichtig verkündet oder verkünden läß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107b Fälschung von Wahlunterlagen

- (1) Wer
1. seine Eintragung in die Wählerliste (Wahlkartei) durch falsche Angaben erwirkt,
 2. einen anderen als Wähler einträgt, von dem er weiß, daß er keinen Anspruch auf Eintragung hat,
 3. die Eintragung eines Wahlberechtigten als Wähler verhindert, obwohl er dessen Wahlberechtigung kennt,
 4. sich als Bewerber für eine Wahl aufstellen läßt, obwohl er nicht wählbar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wei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 (2) Der Eintragung in die Wählerliste als Wähler entspricht die Ausstellung der Wahlunterlagen für die Urwahlen in der Sozialversicherung.

§ 107c Verletzung des Wahlgeheimnisses

Wer einer dem Schutz des Wahlgeheimnisses dienenden Vorschrift in der Absicht zuwiderhandelt, sich oder einem anderen Kenntnis davon zu verschaffen, wie jemand gewählt ha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08 Wählernötigung

- (1) Wer rechtswidrig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durch Mißbrauch eines beruflichen oder wirtschaftlichen Abhängigkeitsverhältnisses oder durchsonstigen wirtschaftlichen Druck einen anderen nötigt oder hindert, zu wählen oder sein Wahlrecht in einem bestimmten Sinne auszuüb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8a Wählertäuschung

- (1) Wer durch Täuschung bewirkt, daß jemand bei der Stimmabgabe über den Inhalt seiner Erklärung irrt oder gegen seinen Willen nicht

oder ungültig wäh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8b Wählerbestechung

(1) Wer einem anderen dafür, daß er nicht oder in einem bestimmten Sinne wähle, Geschenke oder andere Vorteile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dafür, daß er nicht oder in einem bestimmten Sinne wähle, Geschenke oder andere Vorteile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 108c Nebenfolge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07, 107a, 108 und 108b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stimmen, aberkennen (§ 45 Abs. 2 und 5).

§ 108d Geltungsbereich

Die §§ 107 bis 108c gelten für Wahlen zu den Volksvertretungen, für die Wahl der Abgeordnet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für sonstige Wahlen und Abstimmungen des Volkes im Bund, in den Länder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sowie für Urwahlen in der Sozialversicherung. Einer Wahl oder Abstimmung steht das

Unterschreiben eines Wahlvorschlags oder das Unterschreiben für ein Volksbegehren gleich.

§ 108e Abgeordnetenbestechung

- (1) Wer es unternimmt, für eine Wahl oder Abstimmung im Europäischen Parlament oder in einer Volksvertretung des Bundes, der Länder, Gemeinden oder Gemeindeverbände eine Stimme zu kaufen oder zu verkauf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egen einer Straftat nach Absatz 1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 stimmen, aberkennen.

Fünf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Landesverteidigung

§ 109 Wehrpflichtentziehung durch Verstümmelung

- (1) Wer sich oder einen anderen mit dessen Einwilligung durch Verstümmelung oder auf andere Weise zur Erfüllung der Wehrpflicht untauglich macht oder mach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Führt der Täter die Untauglichkeit nur für eine gewisse Zeit oder für eine einzelne Art der Verwendung herbei,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109a Wehrpflichtentziehung durch Täuschung

- (1) Wer sich oder einen anderen durch arglistige, auf Täuschung berechnete Machenschaften der Erfüllung der Wehrpflicht dauernd oder für eine gewisse Zeit, ganz oder für eine einzelne Art der Verwendung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9b und 109c (weggefallen)

§ 109d Störpropaganda gegen die Bundeswehr

- (1) Wer unwahre oder gröblich entstellte Behauptungen tatsächlicher Art, deren Verbreitung geeignet ist, die Tätigkeit der Bundeswehr zu stören, wider besseres Wissen zum Zwecke der Verbreitung aufstellt oder solche Behauptungen in Kenntnis ihrer Unwahrheit verbreitet, um die Bundeswehr in der Erfüllung ihrer Aufgabe der Landesverteidigung zu behind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9e Sabotagehandlungen an Verteidigungsmitteln

- (1) Wer ein Wehrmittel oder eine Einrichtung oder Anlage, die ganz oder vorwiegend der Landesverteidigung oder dem Schutz der Zivilbevölkerung gegen Kriegsgefahren dient, unbefugt zerstört, beschädigt, verändert, unbrauchbar macht oder beseitigt und dadurch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Schlagkraft der Truppe oder

Menschenleb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wissentlich einen solchen Gegenstand oder den dafür bestimmten Werkstoff fehlerhaft herstellt oder liefert und dadurch wissentlich die in Absatz 1 bezeichnete Gefahr herbeiführ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5) Wer die Gefah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nicht wissentlich, ab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herbei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 109f Sicherheitsgefährdender Nachrichtendienst

- (1) Wer für eine Dienststelle, eine Partei oder eine andere Vereinig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für eine verbotene Vereinigung oder für einen ihrer Mittelsmänner
 - 1. Nachrichten über Angelegenheiten der Landesverteidigung sammelt,
 - 2. einen Nachrichtendienst betreibt, der Angelegenheiten der Landesverteidigung zum Gegenstand hat, oder
 - 3. für eine dieser Tätigkeiten anwirbt oder sie unterstütztund dadurch Bestrebungen dient, die gegen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ie Schlagkraft der Truppe gerichtet sin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Ausgenommen ist eine zur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im Rahmen der üblichen Presse- oder Funkberichterstattung ausgeübte Tätigkei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9g Sicherheitsgefährdendes Abbilden

(1) Wer von einem Wehrmittel, einer militärischen Einrichtung oder Anlage oder einem militärischen Vorgang eine Abbildung oder Beschreibung anfertigt oder eine solche Abbildung oder Beschreibung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und dadurch wissentlich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ie Schlagkraft der Truppe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Wer von einem Luftfahrzeug aus eine Lichtbildaufnahme von einem Gebiet oder Gegenstand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nfertigt oder eine solche Aufnahme oder eine danach hergestellte Abbildung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und dadurch wissentlich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ie Schlagkraft der Truppe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bsatz 1 mit Strafe bedroht is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Abbildung oder Beschreibung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und dadurch die Gefahr nicht

wissentlich, aber vorsätzlich oder leichtfertig herbei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ie Tat ist jedoch nicht strafbar, wenn der Täter mit Erlaubnis der zuständigen Dienststelle gehandelt hat.

§ 109h Anwerben für fremden Wehrdienst

- (1) Wer zugunsten einer ausländischen Macht einen Deutschen zum Wehrdienst in einer militärischen oder militärähnlichen Einrichtung anwirbt oder ihren Werbern oder dem Wehrdienst einer solchen Einrichtung zu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09i Nebenfolge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09e und 109f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und das Recht, in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zu wählen oder zu stimmen, aberkennen (§ 45 Abs. 2 und 5).

§ 109k Einziehung

Ist eine Straftat nach den §§ 109d bis 109g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die durch die Tat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und

2. Abbildungen, Beschreibungen und Aufnahmen,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109g bezieht,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Gegenstände der in Satz 1 Nr. 2 bezeichneten Art werden auch ohne die Voraussetzungen des § 74 Abs. 2 eingezogen, wenn das Interesse der Landesverteidigung es erfordert;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Täter ohne Schuld gehandelt hat.

Sechster Abschnitt 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 110 (weggefallen)

§ 111 Öffentliche Aufforderung zu Straftaten

- (1)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zu einer rechtswidrigen Tat auffordert, wird wie ein Anstifter (§ 26) bestraft.
- (2) Bleibt die Aufforderung ohne Erfol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Die Strafe darf nicht schwerer sein als die, die für den Fall angedroht ist, daß die Aufforderung Erfolg hat (Absatz 1); § 49 Abs. 1 Nr. 2 ist anzuwenden.

§ 112 (weggefallen)

§ 113 Widerstand gegen Vollstreckungsbeamte

- (1) Wer einem Amtsträger oder Soldaten der Bundeswehr, der zur Vollstreckung von Gesetzen, Rechtsverordnungen, Urteilen, Gerichtsbeschlüssen oder Verfügungen berufen ist, bei der Vornahme einer

solchen Diensthandlun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leistet oder ihn dabei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1. der Täter oder ein anderer Beteiligter eine Waffe bei sich führt, um diese bei der Tat zu verwenden, oder
2. der Täter durch eine Gewalttätigkeit den Angegriffenen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3) Die Tat ist nicht nach dieser Vorschrift strafbar, wenn die Diensthandlung nicht rechtmäßig ist.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Täter irrig annimmt, die Diensthandlung sei rechtmäßig.

(4) Nimmt der Täter bei Begehung der Tat irrig an, die Diensthandlung sei nicht rechtmäßig, und konnte er den Irrtum vermeiden,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bei geringer Schuld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r Vorschrift absehen. Konnte der Täter den Irrtum nicht vermeiden und war ihm nach den ihm bekannten Umständen auch nicht zuzumuten, sich mit Rechtsbehelfen gegen die vermeintlich rechtswidrige Diensthandlung zu wehren, so ist die Tat nicht nach dieser Vorschrift strafbar; war ihm dies zuzumuten,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r Vorschrift absehen.

§ 114 Widerstand gegen Personen, die Vollstreckungsbeamten gleichstehen

- (1) Der Diensthandlung eines Amtsträgers im Sinne des §113 stehen Vollstreckungshandlungen von Personen gleich, die die Rechte und Pflichten eines Polizeibeamten haben oder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ohne Amtsträger zu sein.
- (2) § 113 gilt entsprechend zum Schutz von Personen, die zur Unterstützung bei der Diensthandlung zugezogen sind.

§§ 115 bis 119 (weggefallen)

§ 120 Gefangenenerbefreiung

- (1) Wer einen Gefangenen befreit, ihn zum Entweichen verleitet oder dabei för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Ist der Täter als Amtsträger oder als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gehalten, das Entweichen des Gefangenen zu verhinder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Einem Gefangenen im Sinne der Absätze 1 und 2 steht gleich, wer sonst auf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 121 Gefangenenerneuterei

- (1) Gefangene, die sich zusammenrotten und mit vereinten Kräften
1. einen Anstaltsbeamten, einen anderen Amtsträger oder einen mit ihrer Beaufsichtigung, Betreuung oder Untersuchung Beauftragten nötigen (§ 240) odertätlich angreifen,

2. gewaltsam ausbrechen oder 3. gewaltsam einem von ihnen oder einem anderen Gefangenen zum Ausbruch verhelfen, werden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wird die Meuterei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oder ein anderer Beteiligter

1. eine Schußwaffe bei sich führt,
2. eine andere Waffe bei sich führt, um diese bei der Tat zu verwenden, oder
3. durch eine Gewalttätigkeit einen anderen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4) Gefangener im Sinne der Absätze 1 bis 3 ist auch, wer in der Sicherungsverwahrung untergebracht ist.

§ 122 (weggefallen)

Siebe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 123 Hausfriedensbruch

(1) Wer in die Wohnung, in die Geschäftsräume oder in das befriedete Besitztum eines anderen oder in abgeschlossene Räume, welche zum öffentlichen Dienst oder Verkehr bestimmt sind, widerrechtlich eindringt,

oder wer, wenn er ohne Befugnis darin verweilt, auf die Aufforderung des Berechtigten sich nicht entfern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 124 Schwerer Hausfriedensbruch

Wenn sich eine Menschenmenge öffentlich zusammenrottet und in der Absicht,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oder Sachen mit vereinten Kräften zu begehen, in die Wohnung, in die Geschäftsräume oder in das befriedete Besitztum eines anderen oder in abgeschlossene Räume, welche zum öffentlichen Dienst bestimmt sind, widerrechtlich eindringt, so wird jeder, welcher an diesen Handlungen teilnimmt,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25 Landfriedensbruch

(1) Wer sich an

1. Gewalttätigkeiten gegen Menschen oder Sachen oder
 2. Bedrohungen von Menschen mit einer Gewalttätigkeit,
- die aus einer Menschenmenge in ein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gefährdenden Weise mit vereinten Kräften begangen werden, als Täter oder Teilnehmer beteiligt oder wer auf die Menschenmenge einwirkt, um ihre Bereitschaft zu solchen Handlungen zu förd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2) Soweit die in Absatz 1 Nr. 1, 2 bezeichneten Handlungen in §113 mit Strafe bedroht sind, gilt § 113 Abs. 3, 4 sinngemäß.

§ 125a Besonders schwerer Fall des Landfriedensbruchs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des § 125 Abs. 1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eine Schusswaffe bei sich führt,
2. eine andere Waffe bei sich führt, um diese bei der Tat zu verwenden,
3. durch eine Gewalttätigkeit einen anderen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oder
4. plündert oder bedeutenden Schaden an fremden Sachen anrichtet.

§ 126 Störung des öffentlichen Friedens durch Androhung von Straftaten

(1)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1. einen der in § 125a Satz 2 Nr. 1 bis 4 bezeichneten Fälle des Landfriedensbruchs,
2. einen Mord (§ 211), Totschlag (§ 212) oder Völkermord (§ 6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 7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Kriegsverbrechen (§§ 8, 9, 10, 11 oder 12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3. eine schwere Körperverletzung (§ 226),
4. eine Straftat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in den Fällen des §

- 232 Abs. 3, 4 oder Abs. 5, des § 233 Abs. 3, jeweils soweit es sich um Verbrechen handelt, der §§ 234, 234a, 239a oder 239b,
5. einen Raub oder eine räuberische Erpressung (§§ 249 bis 251 oder 255),
6. ein gemeingefährliches Verbrechen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oder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3, des § 309 Abs. 1 bis 4, der §§ 313, 314 oder 315 Abs. 3, des § 315b Abs. 3, des § 316a Abs. 1 oder 3, des § 316c Abs. 1 oder 3 oder des § 318 Abs. 3 oder 4 oder
7. ein gemeingefährliches Vergehen in den Fällen des § 309 Abs. 6, des § 311 Abs. 1, des § 316b Abs. 1, des § 317 Abs. 1 oder des § 318 Abs. 1
- andro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wider besseres Wissen vortäuscht, die Verwirklichung einer der in Absatz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en stehe bevor.

§ 127 Bildung bewaffneter Gruppen

Wer unbefugt eine Gruppe, die über Waffen oder andere gefährliche Werkzeuge verfügt, bildet oder befehligt oder wer sich einer solchen Gruppe anschließt, sie mit Waffen oder Geld versorgt oder sonst unterstü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28 (weggefallen)

§129 Bildung krimineller Vereinigungen

- (1) Wer eine Vereinigung gründet, deren Zwecke oder deren Tätigkeit darauf gerichtet sind, Straftaten zu begehen, oder wer sich an einer solchen Vereinigung als Mitglied beteiligt, für sie um Mitglieder oder Unterstützer wirbt oder sie unterstü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Absatz 1 ist nicht anzuwenden,
1. wenn die Vereinigung eine politische Partei ist, d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hat,
 2. wenn die Begehung von Straftaten nur ein Zweck oder eine Tätigkeit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ist oder
 3. soweit die Zwecke oder die Tätigkeit der Vereinigung Straftaten nach den §§ 84 bis 87 betreffen.
- (3) Der Versuch, eine in Absatz 1 bezeichnete Vereinigung zu gründen, ist strafbar.
- (4) Gehört der Täter zu den Rädelsführern oder Hintermännern oder liegt sons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vor,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Zweck oder die Tätigkeit der kriminellen Vereinigung darauf gerichtet ist, in § 100c Abs. 2 Nr. 1 Buchstabe a, c, d, e und g mit Ausnahme von Straftaten nach § 239a oder § 239b, Buchstabe h bis m, Nr. 2 bis 5 und 7 der Strafprozessordnung genannte Straftaten zu begehen.

- (5) Das Gericht kann bei Beteiligten, deren Schuld gering und deren Mitwirkung vonuntergeordneter Bedeutung ist, von einer Bestrafung nach den Absätzen 1 und 3 absehen.
- (6) Das Gericht kann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einer Bestrafung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1.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as Fortbestehen der Vereinigung oder die Begehung einer ihren Zielen entsprechenden Straftat zu verhindern, oder
 2. freiwillig sein Wissen so rechtzeitig einer Dienststelle offenbart, daß Straftaten, deren Planung er kennt, noch verhindert werden können;
- erreicht der Täter sein Ziel, das Fortbestehen der Vereinigung zu verhindern, oder wirdes ohne sein Bemühen erreicht, so wird er nicht bestraft.

§ 129a Bildung terroristischer Vereinigungen

- (1) Wer eine Vereinigung gründet, deren Zwecke oder deren Tätigkeit darauf gerichtetsind,
1. Mord (§ 211) oder Totschlag (§ 212) oder Völkermord (§ 6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 7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Kriegsverbrechen (§§ 8, 9, 10, 11 oder § 12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2.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in den Fällen des § 239a oder des § 239b3.(weggefallen)

zu begehen, oder wer sich an einer solchen Vereinigung als Mitglied beteilig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Vereinigung gründet, deren Zwecke oder deren Tätigkeit darauf gerichtet sind,

1. einem anderen Menschen schwere körperliche oder seelische Schäden, insbesondere derin § 226 bezeichneten Art, zuzufügen,
2. Straftaten nach den §§ 303b, 305, 305a oder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oder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4, des § 309 Abs. 1 bis 5, der §§ 313, 314 oder 315 Abs. 1, 3 oder 4, des § 316b Abs. 1 oder 3 oder des § 316c Abs. 1 bis 3 oder des § 317 Abs. 1,
3. Straftaten gegen die Umwelt in den Fällen des § 330a Abs. 1 bis 3,
4. Straftaten nach § 19 Abs. 1 bis 3, § 20 Abs. 1 oder 2, § 20a Abs. 1 bis 3, § 19 Abs. 2 Nr. 2 oder Abs. 3 Nr. 2, § 20 Abs. 1 oder 2 oder § 20a Abs. 1 bis 3,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21, oder nach § 22a Abs. 1 bis 3 des Gesetzes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oder
5. Straftaten nach § 51 Abs. 1 bis 3 des Waffengesetzes

zu begehen, oder wer sich an einer solchen Vereinigung als Mitglied beteiligt, wenn eine der in den Nummern 1 bis 5 bezeichneten Taten bestimmt ist, die Bevölkerung auf erhebliche Weise einzuschüchtern, eine Behörde oder ein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rechtswidri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Gewalt zu nötigen oder die politischen, verfassungsrechtlichen, wirtschaftlichen oder sozialen Grundstrukturen

- eines Staates oder ein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 zu beseitigen oder erheblich zu beeinträchtigen, und durch die Art ihrer Begehung oder ihre Auswirkungen einen Staat oder ein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erheblich schädigen kann.
- (3) Sind die Zwecke oder die Tätigkeit der Vereinigung darauf gerichtet, eine der in Absatz 1 und 2 bezeichneten Straftaten anzudrohen,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 (4) Gehört der Täter zu den Rädelsführern oder Hintermännern, so is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5) Wer eine in Absatz 1, 2 oder Absatz 3 bezeichnete Vereinigung unterstützt, wird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r für eine in Absatz 1 oder Absatz 2 bezeichnete Vereinigung um Mitglieder oder Unterstützer wirb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6) Das Gericht kann bei Beteiligten, deren Schuld gering und deren Mitwirkung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is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2, 3 und 5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 49 Abs. 2) mildern.
- (7) § 129 Abs. 6 gilt entsprechend.
- (8)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und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aberkennen (§ 45 Abs. 2).

- (9)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2 und 4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68 Abs. 1).

§ 129b Kriminelle und terroristische Vereinigungen im Ausland; Erweiterter Verfall und Einziehung

- (1) Die §§ 129 und 129a gelten auch für Vereinigungen im Ausland. Bezieht sich die Tat auf eine Vereinigung außerhalb der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so gilt dies nur, wenn sie durch ein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usgeübte Tätigkeit begangen wird oder wenn der Täter oder das Opfer Deutscher ist oder sich im Inland befindet. In den Fällen des Satzes 2 wird die Tat nur mit Ermächtigun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verfolgt. Die Ermächtigung kann für den Einzelfall oder allgemein auch für die Verfolgung künftiger Taten erteilt werden, die sich auf eine bestimmte Vereinigung beziehen.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Ermächtigung zieht das Ministerium in Betracht, ob die Bestrebungen der Vereinigung gegen die Grundwerte einer die Würde des Menschen achtenden staatlichen Ordnung oder geg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gerichtet sind und bei Abwägung aller Umstände als verwerflich erscheinen.
- (2) In den Fällen der §§ 129 und 129a,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Absatz 1, sind die §§ 73d und 74a anzuwenden.

§ 130 Volksverhetzung

(1)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1. zum Haß gegen Teile der Bevölkerung aufstachelt oder zu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n gegen sie auffordert oder

2. die Menschenwürde anderer dadurch angreift, daß er Teile der Bevölkerung beschimpft, böswillig verächtlich macht oder verleum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Schriften (§ 11 Abs. 3), die zum Haß gegen Teile der Bevölkerung oder gegeneine nationale, rassische, religiöse oder durch ihr Volkstum bestimmte Gruppe aufstacheln, zu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n gegen sie auffordern oder die Menschenwürde anderer dadurch angreifen, daß Teile der Bevölkerung oder eine vorbezeichnete Gruppe beschimpft, böswillig verächtlich gemacht oder verleumdet werden,

a) verbreitet,

b)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ü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c)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anbietet, überläßt oder zugänglich macht oder

d)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 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Buchstaben a bis c zu verwenden oder einem andere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oder

2. eine Darbietung des in Nummer 1 bezeichneten Inhalts durch Rundfunk, Medien- oder Teledienste verbreitet.
-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ine unter der Herrschaft des Nationalsozialismus begangene Handlung der in § 6 Abs.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Art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billigt, leugnet oder verharmlost.
- (4)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den öffentlichen Frieden in einer die Würde der Opfer verletzenden Weise dadurch stört, dass er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billigt, verherrlicht oder rechtfertigt.
- (5) Absatz 2 gilt auch für Schriften (§ 11 Abs. 3) des in den Absätzen 3 und 4 bezeichneten Inhalts.
- (6)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auch in Verbindung mit Absatz 5, und in den Fällen der Absätze 3 und 4 gilt § 86 Abs. 3 entsprechend.

§ 130a Anleitung zu Straftaten

- (1) Wer eine Schrift (§ 11 Abs. 3), die geeignet ist, als Anleitung zu einer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zu dienen, und nach ihrem Inhalt bestimmt ist, die Bereitschaft anderer zu fördern oder zu wecken, eine solche Tat zu begehen, verbreitet,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1. eine Schrift (§ 11 Abs. 3), die geeignet ist, als Anleitung zu einer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zu dienen, verbreitet,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oder
2.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zu einer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eine Anleitung gibt, um die Bereitschaft anderer zu fördern oder zu wecken, eine solche Tat zu begehen.

(3) § 86 Abs. 3 gilt entsprechend.

§ 131 Gewaltdarstellung

(1) Wer Schriften (§ 11 Abs. 3), die grausame oder sonst unmenschliche Gewalttätigkeiten gegen Menschen oder menschenähnliche Wesen in einer Art schildern, die eine Verherrlichung oder Verharmlosung solcher Gewalttätigkeiten ausdrückt oder die das Grausame oder Unmenschliche des Vorgangs in einer die Menschenwürde verletzenden Weise darstellt,

1. verbreitet,
2.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3.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anbietet, überläßt oder zugänglich macht oder
4.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 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n 1 bis 3 zu verwenden oder einem andere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Darbietung des in Absatz 1 bezeichneten Inhalts durch Rundfunk, Medien- oder Teledienste verbreitet.
-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wenn die Handlung der Berichterstattung über Vorgänge des Zeitgeschehens oder der Geschichte dient.
- (4) Absatz 1 Nr. 3 ist nicht anzuwenden, wenn der zur Sorge für die Person Berechtigte handelt; dies gilt nicht, wenn der Sorgeberechtigte durch das Anbieten, Überlassen oder Zugänglichmachen seine Erziehungspflicht gröblich verletzt.

§ 132 Amtsanmaßung

Wer unbefugt sich mit der Ausübung eines öffentlichen Amtes befaßt oder eine Handlung vornimmt, welche nur kraft eines öffentlichen Amtes vorgenommen werden darf,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32a Mißbrauch von Titeln, Berufsbezeichnungen und Abzeichen

- (1) Wer unbefugt
 - 1. inländische oder ausländische Amts- oder Dienstbezeichnungen, akademische Grade, Titel oder öffentliche Würden führt,
 - 2. die Berufsbezeichnung Arzt, Zahnarzt, Psychologischer Psychotherapeut,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 Psychotherapeut, Tierarzt, Apotheker, Rechtsanwalt, Patentanwalt, Wirtschaftsprüfer, vereidigter Buchprüfer,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r führt,

3. die Bezeichnung öffentlich bestellter Sachverständiger führt oder
4. inländische oder ausländische Uniformen, Amtskleidungen oder
 Amtsabzeichen trä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n in Absatz 1 genannten Bezeichnungen, akademischen Graden,
 Titeln, Würden, Uniformen, Amtskleidungen oder Amtsabzeichen
 stehen solche gleich, die ihnen zum Verwechseln ähnlich sind.
-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Amtsbezeichnungen, Titel, Würden,
 Amtskleidungen und Amtsabzeichen der Kirchen und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 (4)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bsatz 1 Nr. 4, allein
 oder in Verbindung mit Absatz 2 oder 3,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133 Verwahrungsbruch

- (1) Wer Schriftstücke oder andere bewegliche Sachen, die sich in
 dienstlicher Verwahrung befinden oder ihm oder einem anderen
 dienstlich in Verwahrung gegeben worden sind,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oder der dienstlichen Verfügung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asselbe gilt für Schriftstücke oder andere bewegliche Sachen, die
 sich in amtlicher Verwahrung einer Kirche oder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befinden oder von dieser dem Täter oder
 einem anderen amtlich in Verwahrung gegeben worden sind.

- (3) Wer die Tat an einer Sache begeht, die ihm als Amtsträger oder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anvertraut worden oder zugänglich geword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34 Verletzung amtlicher Bekanntmachungen

Wer wissentlich ein dienstliches Schriftstück, das zur Bekanntmachung öffentlich angeschlagen oder ausgelegt ist, zerstört, beseitigt, verunstaltet, unkenntlich macht oder in seinem Sinn entstel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35 (weggefallen)

§ 136 Verstrickungsbruch, Siegelbruch

- (1) Wer eine Sache, die gepfändet oder sonst dienstlich in Beschlag genommen ist,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oder in anderer Weise ganz oder zum Teil der Verstrickung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 dienstliches Siegel beschädigt, ablöst oder unkenntlich macht, das angelegt ist, um Sachen in Beschlag zu nehmen, dienstlich zu verschließen oder zu bezeichnen, oder wer den durch ein solches Siegel bewirkten Verschluß ganz oder zum Teil unwirksam macht.
- (3) Die Tat ist nicht nach den Absätzen 1 und 2 strafbar, wenn die Pfändung, die Beschlagnahme oder die Anlegung des Siegels nicht durch eine rechtmäßige Diensthandlung vorgenommen ist.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Täter irrig annimmt, die Diensthandlung sei rechtmäßig.

(4) § 113 Abs. 4 gilt sinngemäß.

§ 137 (weggefallen)

§ 138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1) Wer von dem Vorhaben oder der Ausführung

1. einer Vorbereitung eines Angriffskrieges (§ 80),
2. eines Hochverrats in den Fällen der §§ 81 bis 83 Abs. 1,
3. eines Landesverrats oder ein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in den Fällen der §§ 94 bis 96, 97a oder 100,
4. einer Geld- oder Wertpapierfälschung in den Fällen der §§ 146, 151, 152 oder einer Fälschung von Zahlungskarten mit Garantiefunktion und Vordrucken für Euroschecks in den Fällen des § 152b Abs. 1 bis 3,
5. eines Mordes (§ 211) oder Totschlags (§ 212) oder eines Völkermordes (§ 6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es Verbrechens gegen die Menschlichkeit (§ 7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es Kriegsverbrechens (§§ 8, 9, 10, 11 oder 12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6. einer Straftat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in den Fällen des § 232 Abs. 3, 4 oder Abs. 5, des § 233 Abs. 3, jeweils soweit es sich um Verbrechen handelt, der §§ 234, 234a, 239a oder 239b,
7. eines Raubes oder einer räuberischen Erpressung (§§ 249 bis 251 oder 255) oder

8. einer gemeingefährlichen Straftat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oder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4, des § 309 Abs. 1 bis 5, der §§ 310, 313, 314 oder 315 Abs. 3, des § 315b Abs. 3 oder der §§ 316a oder 316c

zu einer Zeit, zu der die Ausführung oder der Erfolg noch abgewendet werden kann, glaubhaft erfährt und es unterläßt, der Behörde oder dem Bedrohten rechtzeitig Anzeige zu mach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von dem Vorhaben oder der Ausführung einer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Satz 1 und 2, zu einer Zeit, zu der die Ausführung noch abgewendet werden kann, glaubhaft erfährt und es unterläßt, der Behörde unverzüglich Anzeige zu erstatten. § 129b Abs. 1 Satz 3 bis 5 gilt entsprechend.

(3) Wer die Anzeige leichtfertig unterläßt, obwohl er von dem Vorhaben oder der Ausführung der rechtswidrigen Tat glaubhaft erfahren ha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39 Straflosigkeit der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1) Ist in den Fällen des § 138 die Tat nicht versucht worden, so kann von Strafe abgesehen werden.

(2) Ein Geistlicher ist nicht verpflichtet anzuzeigen, was ihm in seiner Eigenschaft als Seelsorger anvertraut worden ist.

(3) Wer eine Anzeige unterläßt, die er gegen einen Angehörigen

erstatten müßte, iststraffrei, wenn er sich ernsthaft bemüht hat, ihn von der Tat abzuhalten oder den Erfolg abzuwenden, es sei denn, daß es sich um

1. einen Mord oder Totschlag (§§ 211 oder 212),
2. einen Völkermord in den Fällen des § 6 Abs. 1 Nr.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in den Fällen des § 7 Abs. 1 Nr.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ein Kriegsverbrechen in den Fällen des § 8 Abs. 1 Nr.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oder
3. einen erpresserischen Menschenraub (§ 239a Abs. 1), eine Geiselnahme (§ 239b Abs. 1) oder einen Angriff auf den Luft- und Seeverkehr (§ 316c Abs. 1) durch eine terroristische Vereinigung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handelt.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ist ein Rechtsanwalt, Verteidiger, Arzt, Psychologischer Psychotherapeut oder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 nicht verpflichtet anzuzeigen, was ihm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ist. Dieberufsmäßigen Gehilfen der in Satz 2 genannten Personen und die Personen, die bei diesen zur Vorbereitung auf den Beruf tätig sind, sind nicht verpflichtet mitzuteilen, was ihnen in ihrer beruflichen Eigenschaft bekannt geworden ist.

- (4) Straffrei ist, wer die Ausführung oder den Erfolg der Tat anders als durch Anzeige abwendet. Unterbleibt die Ausführung oder der Erfolg der Tat ohne Zutun des zur Anzeige Verpflichteten, so genügt zu seiner Straflosigkeit sein ernsthaftes Bemühen, den Erfolg abzuwenden.

§ 140 Belohnung und Billigung von Straftaten

Wer eine der in § 138 Abs. 1 Nr. 1 bis 4 und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en oder eine rechtswidrige Tat nach § 176 Abs. 3, nach den §§ 176a und 176b, nachden §§ 177 und 178 oder nach § 179 Abs. 3, 5 und 6, nachdem sie begangen oder in strafbarer Weise versucht worden ist,

1. belohnt oder
 2.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illig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41 (weggefallen)

§ 142 Unerlaubtes Entfernen vom Unfallort

(1) Ein Unfallbeteiligter, der sich nach einem Unfall im Straßenverkehr vom Unfallort entfernt, bevor er

1. zugunsten der anderen Unfallbeteiligten und der Geschädigten die Feststellung seiner Person, seines Fahrzeugs und der Art seiner Beteiligung durch seine Anwesenheit und durch die Angabe, daß er an dem Unfall beteiligt ist, ermöglicht hat oder
2. eine nach den Umständen angemessene Zeit gewartet hat, ohne daß jemand bereit war, die Feststellungen zu treff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Nach Absatz 1 wird auch ein Unfallbeteiligter bestraft, der sich
1. nach Ablauf der Wartefrist (Absatz 1 Nr. 2) oder
 2. berechtigt oder entschuldigt
- vom Unfallort entfernt hat und die Feststellungen nicht unverzüglich nachträglichermöglicht.
- (3) Der Verpflichtung, die Feststellungen nachträglich zu ermöglichen, genügt der Unfallbeteiligte, wenn er den Berechtigten (Absatz 1 Nr. 1) oder einer nahe gelegenen Polizeidienststelle mitteilt, daß er an dem Unfall beteiligt gewesen ist, und wenn er seine Anschrift, seinen Aufenthalt sowie das Kennzeichen und den Standort seines Fahrzeugs angibt und dieses zu unverzüglichen Feststellungen für eine ihm zumutbare Zeit zur Verfügung hält. Dies gilt nicht, wenn er durch sein Verhalten die Feststellungen absichtlich vereitelt.
- (4) Das Gericht milder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ie Strafe (§ 49 Abs. 1) oder kann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Unfallbeteiligte innerhalb von vierundzwanzig Stunden nach einem Unfall außerhalb des fließenden Verkehrs, der ausschließlich nicht bedeutenden Sachschaden zur Folge hat, freiwillig die Feststellungen nachträglich ermöglicht (Absatz 3).
- (5) Unfallbeteiligter ist jeder, dessen Verhalten nach den Umständen zur Verursachung des Unfalls beigetragen haben kann.

§ 143 (weggefallen)

§ 144 (weggefallen)

§ 145 Mißbrauch von Notrufen und Beeinträchtigung von UnfallverhütungsNothilfemitteln

(1) Wer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1. Notrufe oder Notzeichen mißbraucht oder
 2. vortäuscht, daß wegen eines Unglücksfalles oder wegen gemeiner Gefahr oder Not die Hilfe anderer erforderlich sei,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Wer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1. die zur Verhütung von Unglücksfällen oder gemeiner Gefahr dienenden Warn-oderVerbotszeichen beseitigt, unkenntlich macht oder in ihrem Sinn entstellt oder
2. die zur Verhütung von Unglücksfällen oder gemeiner Gefahr dienenden Schutzvorrichtungen oder die zur Hilfeleistung bei Unglücksfällen oder gemeiner Gefahr bestimmten Rettungsgeräte oder anderen Sachen beseitigt, verändert oder unbrauchbar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303 oder § 304 mit Strafe bedroht ist.

§ 145a Verstoß gegen Weisungen während der Führungsaufsicht

Wer während der Führungsaufsicht gegen eine bestimmte Weisung der in § 68b Abs. 1 bezeichneten Art verstößt und dadurch den Zweck der Maßregel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ie Tat wird nur auf Antrag der Aufsichtsstelle (§ 68a) verfolgt.

§ 145b (weggefallen)

§ 145c Verstoß gegen das Berufsverbot

Wer einen Beruf, einen Berufszweig, ein Gewerbe oder einen Gewerbebezweig für sich odereinen anderen ausübt oder durch einen anderen für sich ausüben läßt, obwohl dies ihm oder dem anderen strafgerichtlich untersag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45d Vortäuschen einer Straftat

(1) Wer wider besseres Wissen einer Behörde oder einer zur Entgegennahme von Anzeigenzuständigen Stelle vortäuscht,

1. daß eine rechtswidrige Tat begangen worden sei oder
2. daß die Verwirklichung einer der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en bevorstehe,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164, § 258 oder § 258a mit Strafe bedroht ist.

(2) Ebenso wird bestraft, wer wider besseres Wissen eine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Stellen über den Beteiligten

1. an einer rechtswidrigen Tat oder
2. an einer bevorstehenden, in § 126 Abs.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zu täuschen sucht.

Achter Abschnitt Geld- und Wertzeichenfälschung

§ 146 Geldfälschung

- (1)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wird bestraft, wer
1. Geld in der Absicht nachmacht, daß es als echt in Verkehr gebracht oder daßein solches Inverkehrbringen ermöglicht werde, oder Geld in dieser Absicht soverfälscht, daß der Anschein eines höheren Wertes hervorgerufen wird,
 2. falsches Geld in dieser Absicht sich verschafft oder feilhält oder
 3. falsches Geld, das 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Nummern 1 oder 2 nachgemacht, verfälscht oder sich verschafft hat, als echt in Verkehr bringt.
- (2)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fortgesetzten Begehung einer Geldfälschung verbunden h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147 Inverkehrbringen von Falschgeld

- (1) Wer, abgesehen von den Fällen des § 146, falsches Geld als echt in Verkehr 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48 Wertzeichenfälschung

-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amtliche Wertzeichen in der Absicht nachmacht, daß sie als echt verwendet oder in Verkehr gebracht werden oder daß ein solches Verwenden oder Inverkehrbringenermöglichst werde, oder amtliche Wertzeichen in dieser Absicht so verfälscht, daß der Anschein eines höheren Wertes hervorgerufen wird,
 2. falsche amtliche Wertzeichen in dieser Absicht sich verschafft oder
 3. falsche amtliche Wertzeichen als echt verwendet, feilhält oder in Verkehr bringt.
- (2) Wer bereits verwendete amtliche Wertzeichen, an denen das Entwertungszeichen beseitigt worden ist, als gültig verwendet oder in Verkehr 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149 Vorbereitung der Fälschung von Geld und Wertzeichen

- (1) Wer eine Fälschung von Geld oder Wertzeichen vorbereitet, indem er
1. Platten, Formen, Drucksätze, Druckstöcke, Negative, Matrizen, Computerprogramme oder ähnliche Vorrichtungen, die ihrer Art nach zur Begehung der Tat geeignet sind,
 2. Papier, das einer solchen Papierart gleicht oder zum Verwechseln ähnlich ist, die zur Herstellung von Geld oder amtlichen Wertzeichen bestimmt und gegen Nachahmung besonders gesichert ist, oder

3. Hologramme oder andere Bestandteile, die der Sicherung gegen Fälschung dienen,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feilhält, verwahr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wird, wenn er eine Geldfälschung vorbereitet,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son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Nach Absatz 1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1. die Ausführung der vorbereiteten Tat aufgibt und eine von ihm verursachte Gefahr, daß andere die Tat weiter vorbereiten oder sie ausführen, abwendet oder die Vollendung der Tat verhindert und
 2. die Fälschungsmittel, soweit sie noch vorhanden und zur Fälschung brauchbar sind, vernichtet, unbrauchbar macht, ihr Vorhandensein einer Behörde anzeigt oder sie dort abliefern.
- (3)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ie Gefahr, daß andere die Tat weiter vorbereiten oder sie ausführen, abgewendet oder die Vollendung der Tat verhindert, so genügt an Stelle der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Nr. 1 das freiwillige und ernsthafte Bemühen des Täters, dieses Ziel zu erreichen.

§ 150 Erweiterter Verfall und Einziehung

- (1) In den Fällen der §§ 146, 148 Abs. 1, der Vorbereitung einer Geldfälschung nach § 149 Abs. 1, der §§ 152a und 152b ist §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2) Ist eine Straftat nach diesem Abschnitt begangen worden, so werden das falsche Geld, die falschen oder entwerteten Wertzeichen und die in § 149 bezeichneten Fälschungsmittel eingezogen.

§ 151 Wertpapiere

Dem Geld im Sinne der §§ 146, 147, 149 und 150 stehen folgende Wertpapiere gleich, wenn sie durch Druck und Papierart gegen Nachahmung besonders gesichert sind:

1. Inhaber- sowie solche Orderschuldverschreibungen, die Teile einer Gesamtemission sind, wenn in den Schuldverschreibungen die Zahlung einer bestimmten Geldsumme versprochen wird;
2. Aktien;
3. von Kapitalanlagegesellschaften ausgegebene Anteilscheine;
4. Zins-, Gewinnanteil- und Erneuerungsscheine zu Wertpapieren der in den Nummern 1 bis 3 bezeichneten Art sowie Zertifikate über Lieferung solcher Wertpapiere;
5. Reiseschecks.

§ 152 Geld, Wertzeichen und Wertpapiere eines fremden Währungsgebiets

Die §§ 146 bis 151 sind auch auf Geld, Wertzeichen und Wertpapiere eines fremden Währungsgebiets anzuwenden.

§ 152a Fälschung von Zahlungskarten, Schecks und Wechseln

- (1)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oder, um eine solche Täuschung zu ermöglichen,
1. inländische oder ausländische Zahlungskarten, Schecks oder Wechsel nachmacht oder verfälscht oder

2. solche falschen Karten, Schecks oder Wechsel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feilhält, einem anderen überlässt oder gebrau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Absatz 1 verbunden h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 (4) Zahlungskarten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Karten,
 1. die von einem Kreditinstitut oder Finanzdienstleistungsinstitut herausgegeben wurden und
 2. durch Ausgestaltung oder Codierung besonders gegen Nachahmung gesichert sind.
- (5) § 149, soweit er sich auf die Fälschung von Wertzeichen bezieht, und § 150 Abs. 2 gelten entsprechend.

§ 152b Fälschung von Zahlungskarten mit Garantiefunktion und Vordrucken für Euroschecks

- (1) Wer eine der in § 152a Abs. 1 bezeichneten Handlungen in Bezug auf Zahlungskarten mit Garantiefunktion oder Euroscheckvordrucke begeh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Absatz 1 verbunden h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4) Zahlungskarten mit Garantiefunktion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Kreditkarten, Euroscheckkarten und sonstige Karten,
1. die es ermöglichen, den Aussteller im Zahlungsverkehr zu einer garantierten Zahlung zu veranlassen, und
 2. durch Ausgestaltung oder Codierung besonders gegen Nachahmung gesichert sind.
- (5) § 149, soweit er sich auf die Fälschung von Geld bezieht, und § 150 Abs. 2 gelten entsprechend.

Neunter Abschnitt Falsche uneidliche Aussage und Meineid

§ 153 Falsche uneidliche Aussage

- (1) Wer vor Gericht oder vor einer anderen zur eidlichen Vernehmung vo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zuständigen Stelle als Zeuge oder Sachverständiger uneidlich falschaussag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Einer in Absatz 1 genannten Stelle steht ein Untersuchungsausschuss eines Gesetzgebungsorgans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gleich.

§ 154 Meineid

- (1) Wer vor Gericht oder vor einer anderen zur Abnahme von Eiden

zuständigen Stellefalsch schw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155 Eidesgleiche Bekräftigungen

Dem Eid stehen gleich 1. die den Eid ersetzende Bekräftigung, 2. die Berufung auf einen früheren Eid oder auf eine frühere Bekräftigung.

§ 156 Falsche Versicherung an Eides Statt

Wer vor einer zur Abnahme ein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ständigen Behörde eine solche Versicherung falsch abgibt oder unter Berufung auf eine solche Versicherung falsch aussa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57 Aussagenotstand

- (1) Hat ein Zeuge oder Sachverständiger sich eines Meineids oder einer falschen uneidlichen Aussage schuldig gemacht,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und im Falle uneidlicher Aussage auch ganz von Strafe absehen, wenn der Täter die Unwahrheit gesagt hat, um von einem Angehörigen oder von sich selbst die Gefahr abzuwenden, bestraft oder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unterworfen zu werden.
- (2) Das Gericht kann auch dann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ganz von Strafe absehen, wenn ein noch nicht Eidesmündiger uneidlich falsch ausgesagt hat.

§ 158 Berichtigung einer falschen Angabe

- (1) Das Gericht kann die Strafe wegen Meineids, falsch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oder falscher uneidlicher Aussag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absehen, wenn der Täter die falsche Angabe rechtzeitig berichtigt.
- (2) Die Berichtigung ist verspätet, wenn sie bei der Entscheidung nicht mehr verwertet werden kann oder aus der Tat ein Nachteil für einen anderen entstanden ist oder wenn schon gegen den Täter eine Anzeige erstattet oder eine Untersuchung eingeleitet worden ist.
- (3) Die Berichtigung kann bei der Stelle, der die falsche Angabe gemacht worden ist oder die sie im Verfahren zu prüfen hat, sowie bei einem Gericht, einem Staatsanwalt oder einer Polizeibehörde erfolgen.

§ 159 Versuch der Anstiftung zur Falschaussage

Für den Versuch der Anstiftung zu einer falschen uneidlichen Aussage (§ 153) und einer falschen Versicherung an Eides Statt (§ 156) gelten § 30 Abs. 1 und § 31 Abs. 1 Nr. 1 und Abs. 2 entsprechend.

§ 160 Verleitung zur Falschaussage

- (1) Wer einen anderen zur Ableistung eines falschen Eides verl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r einen anderen zur Ableistung einer falschen Versicherung an Eides Statt oder einer falschen uneidlichen Aussage verl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61 und 162 (weggefallen)

§ 163 Fahrlässiger Falscheid, fahrlässige falsche Versicherung
an Eidesstatt

- (1) Wenn eine der in den §§ 154 bis 156 bezeichneten Handlungen aus Fahrlässigkeit begangen worden ist, so trit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ein.
- (2) Straflosigkeit tritt ein, wenn der Täter die falsche Angabe rechtzeitig berichtigt. Die Vorschriften des §158 Abs. 2 und 3 gelten entsprechend.

Zehnter Abschnitt Falsche Verdächtigung

§ 164 Falsche Verdächtigung

- (1) Wer einen anderen bei einer Behörde oder einem zur Entgegennahme von Anzeigenzuständigen Amtsträger oder militärischen Vorgesetzten oder öffentlich wider besseres Wissen einer rechtswidrigen Tat oder der Verletzung einer Dienstpflicht in der Absicht verdächtigt, ein behördliches Verfahren oder andere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ihn herbeizuführen oder fort dauern zu 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in gleicher Absicht bei einer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Stellen oder öffentlich über einen anderen wider besseres Wissen eine sonstige Behauptung tatsächlicher Art aufstellt, die geeignet ist, ein behördliches Verfahren oder andere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ihn herbeizuführen oder fort dauern zu lassen.

§ 165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 (1) Ist die Tat nach § 164 ö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 Abs.3) begangen und wird ihretwegen auf 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 Verletzten anzuordnen, daß die Verurteilung wegen falscher Verdächtigung auf 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Stirbt der Verletzte, so geht das Antragsrecht auf die in § 77 Abs. 2 bezeichneten Angehörigen über. § 77 Abs. 2 bis 4 gilt entsprechend.
- (2) Für die Art der Bekanntmachung gilt § 200 Abs. 2 entsprechend.

Elfter Abschnitt Straftaten, welche sich auf Religion und Weltanschauungsbeziehen

§ 166 Beschimpfung von Bekenntnissen, Religionsgesellschaften und Weltanschauungsvereinigungen

- (1) Wer ö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den Inhalt des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Bekenntnisses anderer in einer Weise beschimpft,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ö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 Abs. 3) eine im Inland bestehende Kirche oder andere Religionsgesellschaft oder Weltanschauungsvereinigung, ihre Einrichtungen oder Gebräuche in einer Weise beschimpft,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 167 Störung der Religionsausübung

(1) Wer

1. den Gottesdienst oder eine gottesdienstliche Handlung einer im Inland bestehenden Kirche oder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 absichtlich und in grober Weise stört oder

2. an einem Ort, der dem Gottesdienst einer solchen Religionsgesellschaft gewidmet ist, beschimpfenden Unfug verü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m Gottesdienst stehen entsprechende Feiern einer im Inland bestehenden Weltanschauungsvereinigung gleich.

§ 167a Störung einer Bestattungsfeier

Wer eine Bestattungsfeier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68 Störung der Totenruhe

(1) Wer unbefugt aus dem Gewahrsam des Berechtigten den Körper oder Teile des Körperseines verstorbenen Menschen, eine tote Leibesfrucht, Teile einer solchen oder die Asche eines verstorbenen Menschen wegnimmt oder wer daran beschimpfenden Unfug verü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Aufbahrungsstätte, Beisetzungsstätte oder öffentliche Totengedenkstätte zerstört oder beschädigt oder wer dort beschimpfenden Unfug verübt.

(3) Der Versuch ist strafbar.

Zwölf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en Personenstand, die Ehe und die Familie

§ 169 Personenstands Fältschung

- (1) Wer ein Kind unterschleibt oder den Personenstand eines anderen gegenüber einer zur Führung von Personenstandsbüchern oder zur Feststellung des Personenstands zuständigen Behörde falsch angibt oder unterdrück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70 Verletzung der Unterhaltspflicht

- (1) Wer sich einer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 entzieht, so daß der Lebensbedarf des Unterhaltsberechtigten gefährdet ist oder ohne die Hilfe anderer gefährdet wäre,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einer Schwangeren zum Unterhalt verpflichtet ist und ihr diesen Unterhalt in verwerflicher Weise vorenthält und dadurch den Schwangerschaftsabbruch bewirk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Fußnote

§ 170 Abs. 1 (früher § 170b Abs. 1):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17.1.1979 I 410 BvL 25/77

§ 171 Verletzung der Fürsorge- oder Erziehungspflicht

Wer seine Fürsorge- oder Erziehungspflicht gegenüber einer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gröblich verletzt und dadurch den Schutzbefohlenen in die Gefahr bringt, in seiner körperlichen oder psychischen Entwicklung erheblich geschädigt zu werden, einen kriminellen Lebenswandel zu führen oder der Prostitution nachzugeh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72 Doppelehe

Wer eine Ehe schließt, obwohl er verheiratet ist, oder wer mit einem Verheirateten eine Ehe schließ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73 Beischlaf zwischen Verwandten

- (1) Wer mit einem leiblichen Abkömmling den Beischlaf voll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mit einem leiblichen Verwandten aufsteigender Linie den Beischlaf voll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ies gilt auch dann, wenn das Verwandtschaftsverhältnis erloschen ist. Ebenso werden leibliche Geschwister bestraft, die miteinander den Beischlaf vollziehen.
- (3) Abkömmlinge und Geschwister werden nicht nach dieser Vorschrift bestraft, wenn sie zur Zeit der Tat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 waren.

Drei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 174 Sexueller Mißbrauch von Schutzbefohlenen

(1) Wer sexuelle Handlungen

1. an einer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die ihm zur Erziehung, zur Ausbildung oder zur Betreuung in der Lebensführung anvertraut ist,
2. an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die ihm zur Erziehung, zur Ausbildung oder zur Betreuung in der Lebensführung anvertraut oder im Rahmen eines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ses untergeordnet ist, unter Mißbrauch einer mit dem Erziehungs-, Ausbildungs-, Betreuungs-,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 verbundenen Abhängigkeit oder
3. an seinem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n leiblichen oder angenommenen Kind

vornimmt oder an sich von dem Schutzbefohlenen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W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Nr. 1 bis 3

1. sexuelle Handlungen vor dem Schutzbefohlenen vornimmt oder
2. den Schutzbefohlenen dazu bestimmt, daß er sexuelle Handlungen vor ihm vornimmt,

um sich oder den Schutzbefohlenen hierdurch sexuell zu erre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oder des Absatzes 2 in Verbindung mit Absatz 1 Nr. 1 kann das Gericht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r Vorschrift absehen, wenn bei Berücksichtigung des Verhaltens des Schutzbefohlenen das Unrecht der Tat gering ist.

§ 174a Sexueller Mißbrauch von Gefangenen, behördlich Verwahrten oder Kranken und Hilfsbedürftigen in Einrichtungen

- (1) Wer sexuelle Handlungen an einer gefangenen od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verwahrten Person, die ihm zur Erziehung, Ausbildung, Beaufsichtigung oder Betreuung anvertraut ist, unter Mißbrauch seiner Stellung vornimmt oder an sich von der gefangenen oder verwahrten Person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Person, die in einer Einrichtung für kranke oder hilfsbedürftige Menschen aufgenommen und ihm zur Beaufsichtigung oder Betreuung anvertraut ist, dadurch mißbraucht, daß er unter Ausnutzung der Krankheit oder Hilfsbedürftigkeit dieser Person sexuelle Handlungen an ihr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174b Sexueller Mißbrauch unter Ausnutzung einer Amtsstellung

- (1)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einem Strafverfahren oder an einem Verfahren zur Anordnung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er behördlichen Verwahrung berufen ist, unter Mißbrauch der durch das Verfahren begründeten Abhängigkeit sexuelle Handlungen an demjenigen, gegen den sich das Verfahren richtet, vornimmt oder an sich von

dem anderen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174c Sexueller Mißbrauch unter Ausnutzung eines Beratungs-, Behandlungs- oder Betreuungsverhältnisses

(1) Wer sexuelle Handlungen an einer Person, die ihm wegen einer geistigen oder seelisch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einschließlich einer Suchtkrankheit o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zur Beratung, Behandlung oder Betreuung anvertraut ist, unter Mißbrauch des Beratungs-, Behandlungs- oder Betreuungsverhältnisses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sexuelle Handlungen an einer Person, die ihm zur psychotherapeutischen Behandlung anvertraut ist, unter Mißbrauch des Behandlungsverhältnisses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3) Der Versuch ist strafbar.

§ 175 (weggefallen)

§ 176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1) Wer sexuelle Handlungen an einer Person unter vierzehn Jahren (Kind) vornimmt oder an sich von dem Kind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 Kind dazu bestimmt, daß es sexuelle

Handlungen an einem Dritten vornimmt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läßt.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zu erkennen.

(4)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1. sexuelle Handlungen vor einem Kind vornimmt,
2. ein Kind dazu bestimmt, daß es sexuelle Handlungen an sich vornimmt,
3. auf ein Kind durch Schriften (§ 11 Abs. 3) einwirkt, um es zu sexuellen Handlungen zu bringen, die es an oder vor dem Täter oder einem Dritten vornehmen oder von dem Täter oder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lassen soll, oder
4. auf ein Kind durch Vorzeigen pornographischer Abbildungen oder Darstellungen, durch Abspielen von Tonträgern pornographischen Inhalts oder durch entsprechende Redeneinwirkung.

(5)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ein Kind für eine Tat nach den Absätzen 1 bis 4 anbietet oder nachzuweisen verspricht oder versich mit einem anderen zu einer solchen Tat verabredet.

(6) Der Versuch ist strafbar; dies gilt nicht für Taten nach Absatz 4 Nr. 3 und 4 und Absatz 5.

§ 176a Schwerer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1) Der sexuelle Missbrauch von Kindern wird in den Fällen des § 176

- Abs. 1 und 2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wenn der Täter innerhalb der letztenfünf Jahre wegen einer solchen Straftat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 (2) Der sexuelle Missbrauch von Kindern wird in den Fällen des § 176 Abs. 1 und 2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bestraft, wenn
1. eine Person über achtzehn Jahren mit dem Kind den Beischlaf vollzieht oder ähnliche sexuelle Handlungen an ihm vornimmt oder an sich von ihm vornehmen lässt, die mit einem Eindringen in den Körper verbunden sind,
 2. die Tat von mehreren gemeinschaftlich begangen wird oder
 3. der Täter das Kind durch die Tat in die Gefah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oder einer erheblichen Schädigung der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 (3)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wird bestraft, wer in den Fällen des§ 176 Abs. 1 bis 3, 4 Nr. 1 oder Nr. 2 oder des § 176 Abs. 6 als Täter oder anderer Beteiligter in der Absicht handelt, die Tat zum Gegenstand einer pornographischen Schrift (§ 11 Abs. 3) zu machen, die nach § 184b Abs. 1 bis 3 verbreitet werden soll.
- (4)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5)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das

Kind in den Fällen des § 176 Abs. 1 bis 3 bei der Tat körperlich schwer misshandelt od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 (6) In die in Absatz 1 bezeichnete Frist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welcher der Tät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orden ist. Eine Tat, die im Ausland abgeurteilt worden ist, steh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einer im Inland abgeurteilten Tat gleich, wenn sie nach deutschem Strafrecht eine solche nach § 176 Abs. 1 oder 2 wäre.

§ 176b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mit Todesfolge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en sexuellen Mißbrauch (§§ 176 und 176a)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des Kindes,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177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 (1) Wer eine andere Person

1. mit Gewalt,
2. durch Drohung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oder
3. unter Ausnutzung einer Lage, in der das Opfer der Einwirkung des Täters schutzlos ausgeliefert ist,

nötigt, sexuelle Handlungen des Täters oder eines Dritten an sich zu dulden oder an dem Täter oder einem Dritten vorzunehm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1. der Täter mit dem Opfer den Beischlaf vollzieht oder ähnliche sexuelle Handlungen an dem Opfer vornimmt oder an sich von ihm vornehmen läßt, die dieses besonders erniedrigen, insbesondere, wenn sie mit einem Eindringen in den Körper verbunden sind (Vergewaltigung), oder
 2. die Tat von mehreren gemeinschaftlich begangen wird.
- (3)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bei sich führt,
 2. sonst ein Werkzeug oder Mittel bei sich führt, um den Widerstand einer anderen Person durch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zu verhindern oder zu überwinden, oder
 3. das Opf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 (4)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bei der Tat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verwendet oder
 2. das Opfer
 - a) bei der Tat körperlich schwer mißhandelt oder
 - b)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r Absätze 3 und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178 Sexuelle Nötigung und Vergewaltigung mit Todesfolge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sexuelle Nötigung oder Vergewaltigung (§ 177)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des Opfers,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179 Sexueller Mißbrauch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1) Wer eine andere Person, die

1. wegen einer geistigen oder seelisch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einschließlich einer Suchtkrankheit oder wegen einer tiefgreifenden Bewußtseinsstörung oder

2. körperlich

zum Widerstand unfähig ist, dadurch mißbraucht, daß er unter Ausnutzung der Widerstandsunfähigkeit sexuelle Handlungen an ihr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widerstandsunfähige Person (Absatz

1) dadurch mißbraucht, daß er sie unter Ausnutzung der Widerstandsunfähigkeit dazu bestimmt, sexuelle Handlungen an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zu lassen.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zu erkennen.

(4) Der Versuch ist strafbar.

- (5)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ist zu erkennen, wenn
1. der Täter mit dem Opfer den Beischlaf vollzieht oder ähnliche sexuelle Handlungen an ihm vornimmt oder an sich von ihm vornehmen läßt, die mit einem Eindringen in den Körper verbunden sind,
 2. die Tat von mehreren gemeinschaftlich begangen wird oder
 3. der Täter das Opf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oder einer erheblichen Schädigung der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 (6)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5 ist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7) § 177 Abs. 4 Nr. 2 und § 178 gelten entsprechend.

§ 180 Förderung sexueller Handlungen Minderjähriger

- (1) Wer sexuellen Handlungen einer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an oder vor einem Dritten oder sexuellen Handlungen eines Dritten an einer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1. durch seine Vermittlung oder
 2. durch Gewähren oder Verschaffen von Gelegenheit
- Vorschub leis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Satz 1 Nr. 2 ist nicht anzuwenden, wenn der zur Sorge für die Person Berechtigte handelt; dies gilt nicht, wenn der Sorgeberechtigte durch das Vorschubleisten seine Erziehungspflicht gröblich verletzt.
- (2) Wer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bestimmt, sexuelle Handlungen gegen Entgelt an oder vor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zulassen, oder wer solchen Handlungen durch seine Vermittlung Vorschub leis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Wer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die ihm zur Erziehung, zur Ausbildung oder zur Betreuung in der Lebensführung anvertraut oder im Rahmen eines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ses untergeordnet ist, unter Mißbrauch einer mit dem Erziehungs-, Ausbildungs-, Betreuungs-,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 verbundenen Abhängigkeit bestimmt, sexuelle Handlungen an oder vor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zu 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ist der Versuch strafbar.

§ 180a Ausbeutung von Prostituierten

- (1) Wer gewerbsmäßig einen Betrieb unterhält oder leitet, in dem Personen der Prostitution nachgehen und in dem diese in persönlicher oder wirtschaftlicher Abhängigkeit gehalten werd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1.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zur Ausübung der Prostitution Wohnung, gewerbsmäßig Unterkunft oder gewerbsmäßig Aufenthalt gewährt oder
2. eine andere Person, der er zur Ausübung der Prostitution Wohnung gewährt, zur Prostitution anhält oder im Hinblick auf sie ausbeutet.

§§ 180b und 181 (weggefallen)

§ 181a Zuhälterei

- (1)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1. eine andere Person, die der Prostitution nachgeht, ausbeutet oder
 2. seines Vermögensvorteils wegen eine andere Person bei der Ausübung der Prostitution überwacht, Ort, Zeit, Ausmaß oder andere Umstände der Prostitutionsausübung bestimmt oder Maßnahmen trifft, die sie davon abhalten sollen, die Prostitution aufzugeben,
- und im Hinblick darauf Beziehungen zu ihr unterhält, die über den Einzelfall hinausgehen.
-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die persönliche oder wirtschaftliche Unabhängigkeit einer anderen Person dadurch beeinträchtigt, dass er gewerbsmäßig die Prostitutionsausübung der anderen Person durch Vermittlung sexuellen Verkehrs fördert und im Hinblick darauf Beziehungen zu ihr unterhält, die über den Einzelfall hinausgehen.
- (3) Nach den Absätzen 1 und 2 wird auch bestraft, wer die in Absatz 1 Nr. 1 und 2 genannten Handlungen oder die in Absatz 2 bezeichnete Förderung gegenüber seinem Ehegatten vornimmt.

§ 181b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r §§ 174 bis 174c, 176 bis 180, 181a und 182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 1).

§ 181c Vermögensstrafe und Erweiterter Verfall

In den Fällen des § 181a Abs. 1 Nr. 2 sind die §§ 43a,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 182 Sexueller Mißbrauch von Jugendlichen

(1) Eine Person über achtzehn Jahre, die eine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dadurch mißbraucht, daß sie

1. unter Ausnutzung einer Zwangslage oder gegen Entgelt sexuelle Handlungen an ihr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oder
2. diese unter Ausnutzung einer Zwangslage dazu bestimmt, sexuelle Handlungen an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zu 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ine Person über einundzwanzig Jahre, die eine Person unter sechzehn Jahren dadurch mißbraucht, daß sie

1. sexuelle Handlungen an ihr vornimmt oder an sich von ihr vornehmen läßt oder
2. diese dazu bestimmt, sexuelle Handlungen an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zu lassen,

und dabei die fehlende Fähigkeit des Opfers zur sexuellen Selbstbestimmung ausnu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kann das Gericht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bei Berücksichtigung des Verhaltens der Person, gegen die sich die Tat richtet, das Unrecht der Tat gering ist.

§ 183 Exhibitionistische Handlungen

- (1) Ein Mann, der eine andere Person durch eine exhibitionistische Handlung beläs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3) Das Gericht kann die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auch dann zur Bewährung aussetzen, wenn zu erwarten ist, daß der Täter erst nach einer längeren Heilbehandlung keine exhibitionistischen Handlungen mehr vornehmen wird.
- (4) Absatz 3 gilt auch, wenn ein Mann oder eine Frau wegen einer exhibitionistischen Handlung
 - 1. nach einer anderen Vorschrift, die im Höchstmaß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androht, oder
 - 2. nach § 174 Abs. 2 Nr. 1 oder § 176 Abs. 3 Nr. 1 bestraft wird.

§ 183a Erregung öffentlichen Ärgernisses

Wer öffentlich sexuelle Handlungen vornimmt und dadurch absichtlich oder wissentlichein Ärgernis erre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183 mit Strafe bedroht ist.

§ 184 Verbreitung pornographischer Schriften

(1) Wer pornographische Schriften (§ 11 Abs. 3)

1.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anbietet, überläßt oder zugänglich macht,
2. an einem Ort, der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zugänglich ist oder von ihnen eingesehen werden kann,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3. im Einzelhandel außerhalb von Geschäftsräumen, in Kiosken oder anderen Verkaufsstellen, die der Kunde nicht zu betreten pflegt, im Versandhandel oder in gewerblichen Leihbüchereien oder Lesezirkeln einem anderen anbietet oder überläßt,
- 3a. im Wege gewerblicher Vermietung oder vergleichbarer gewerblicher Gewährung des Gebrauchs, ausgenommen in Ladengeschäften, die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nicht zugänglich sind und von ihnen nicht eingesehen werden können, einem anderen anbietet oder überläßt,
4. im Wege des Versandhandels einzuführen unternimmt,
5. öffentlich an einem Ort, der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zugänglich ist oder von ihnen eingesehen werden kann,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außerhalb des Geschäftsverkehrs mit dem einschlägigen Handel anbietet, ankündigt oder anpreist,

6.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ohne von diesem hierzu aufgefordert zu sein,

7. in einer öffentlichen Filmvorführung gegen ein Entgelt zeigt, das ganz oderüberwiegend für diese Vorführung verlangt wird,

8.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oder ein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n 1 bis 7 zu verwenden oder einemandere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oder

9. aus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 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Ausland unter Verstoß gegen die dort geltenden Strafvorschriften zu verbreiten oder öffentlichzugänglich zu machen oder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Absatz 1 Nr. 1 ist nicht anzuwenden, wenn der zur Sorge für die Person Berechtigtehandelt; dies gilt nicht, wenn der Sorgeberechtigte durch das Anbieten, Überlassen oder Zugänglichmachen seine Erziehungspflicht gröblich verletzt. Absatz 1 Nr. 3a gilt nicht, wenn die Handlung im Geschäftsverkehr mit gewerblichen Entleihern erfolgt.

(3) bis (7) (weggefallen)

Fußnote

§184 Abs. 1 Nr. 7: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17.1.1978 I 405 –1 BvL 13/76 –

§ 184a Verbreitung gewalt-oder tierpornographischer Schriften

Wer pornographische Schriften (§ 11 Abs. 3), die Gewalttätigkeiten oder sexuelle Handlungen von Menschen mit Tieren zum Gegenstand haben,

1. verbreitet,
 2.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oder
 3.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 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 1 oder Nummer 2 zu verwenden oder einem andere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4b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Schriften

(1) Wer pornographische Schriften (§ 11 Abs. 3), die d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 176 bis 176b) zum Gegenstand haben (kinderpornographische Schriften),

1. verbreitet,
2. öffentlich ausstellt, anschläg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oder
3.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um sie oder aus ihnen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 1 oder Nummer 2 zu verwenden oder einem andere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s unternimmt, einem anderen den

Besitz von kinderpornographischen Schriften zu verschaffen, die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eben.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oder des Absatzes 2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und die kinderpornographischen Schriften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eben.
- (4) Wer es unternimmt, sich den Besitz von kinderpornographischen Schriften zu verschaffen, die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eb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die in Satz 1 bezeichneten Schriften besitzt.
- (5) Die Absätze 2 und 4 gelten nicht für Handlungen, die ausschließlich der Erfüllung rechtmäßiger dienstlicher oder beruflicher Pflichten dienen.
- (6)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ist § 73d anzuwenden.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bsatz 2 oder Absatz 4 bezieht, werden eingezogen. § 74a ist anzuwenden.

§ 184c Verbreitung pornographischer Darbietungen durch Rundfunk, Medien- oder Teledienste

Nach den §§ 184 bis 184b wird auch bestraft, wer eine pornographische Darbietung durch Rundfunk, Medien- oder Teledienste verbreitet. In den Fällen des § 184 Abs. 1 ist Satz 1 bei einer Verbreitung durch Medien- oder

Teledienste nicht anzuwenden, wenn durchtechnische oder sonstige Vorkehrungen sichergestellt ist, dass die pornographische Darbietung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nicht zugänglich ist.

§ 184d Ausübung der verbotenen Prostitution

Wer einem durch Rechtsverordnung erlassenen Verbot, der Prostitution an bestimmten Orten überhaupt oder zu bestimmten Tageszeiten nachzugehen, beharrlich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wei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184e Jugendgefährdende Prostitution

Wer der Prostitution

1. in der Nähe einer Schule oder anderen Örtlichkeit, die zum Besuch durch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bestimmt ist, oder
2. in einem Haus, in dem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wohnen, in einer Weise nachgeht, die diese Personen sittlich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4f Begriffsbestimmung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sexuelle Handlungen
nur solche, die im Hinblick auf das jeweils geschützte Rechtsgut von einiger Erheblichkeit sind,
2. sexuelle Handlungen vor einem anderen
nur solche, die vor einem anderen vorgenommen werden, der den Vorgang wahrnimmt.

Vierzehnter AbschnittBeleidigung

§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 Tö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6 Üble Nachrede

Wer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r 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geeignet ist, wird, wenn nicht diese Tatsache erweislich wahr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ö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egang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7 Verleumdung

Wer wider besseres Wissen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 unwahre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 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oder dessen Kredit zu gefährden geeigne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egang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8 Üble Nachrede und Verleumdung gegen Personen des politischen Lebens

- (1) Wird gegen eine im politischen Leben des Volkes stehende Person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eine üble Nachrede (§ 186) aus Beweggründen begangen, die mit der Stellung des Beleidigten im öffentlichen Leben zusammenhängen, und ist die Tat geeignet, sein öffentliches Wirken erheblich zu erschwer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2) Eine Verleumdung (§ 187) wird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189 Verunglimpfung des Andenkens Verstorbener

Wer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 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90 Wahrheitsbeweis durch Strafurteil

Ist die behauptete oder verbreitete Tatsache eine Straftat, so ist der Beweis der Wahrheit als erbracht anzusehen, wenn der Beleidigte wegen dieser Tat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Der Beweis der Wahrheit ist dagegen ausgeschlossen, wenn der Beleidigte vor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 rechtskräftig freigesprochen worden ist.

§ 191 (weggefallen)

§ 192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o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 Bestrafung nach § 185 nicht aus, wenn das 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 193 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

Tadelnde Urteile über wissenschaftliche, künstlerische oder gewerbliche Leistungen, desgleichen Äußerungen, welche zur Ausführung oder Verteidigung von Rechten oder zur 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 gemacht werden, sowie Vorhaltungen und Rügen der Vorgesetzten gegen ihre Untergebenen, dienstliche Anzeigen oder Urteile von seiteneines Beamten und ähnliche Fälle sind nur insofern strafbar, als das 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Äußer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 194 Strafantrag

(1) Die Beleidigung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 Schrift (§11 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 begangen, so ist ein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letzte als Angehöriger einer Gruppe unt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folgt wurde, diese Gruppe Teil der Bevölkerung ist und die Beleidigung mit dieser Verfolgung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 der Verletzte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Stirbt der Verletzte, so gehen

das Antragsrecht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ie in § 77 Abs. 2 bezeichneten Angehörigen über.

- (2) Ist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 verunglimpft, so steht das Antragsrecht den in § 77 Abs. 2 bezeichneten Angehörigen zu.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 Schrift (§ 11 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 begangen, so ist ein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storbene sein Leben als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loren hat und die Verunglimpfung damit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 ein Antragsberechtigter der Verfolgung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 (3) Ist die Beleidigung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 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 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 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e Behörde oder eine sonstige 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wahrnimmt, so wird sie auf Antrag des Behördenleiters oder des Leiters der aufsichtführenden Behörde 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 Ämtern und für Behörden der Kirchen und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 (4)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eine andere politische Körperschaf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wird sie nur mit Ermächtigung der betroffenen Körperschaft verfolgt.

§§ 195 bis 198 (weggefallen)

§ 199 Wechselseitig begangene Beleidigungen

Wenn eine Beleidigung auf der Stelle erwidert wird, so kann der Richter beide Beleidiger oder einen derselben für straffrei erklären.

§ 200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 (1) Ist die Beleidigung ö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egangen und wird ihr wegen auf 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 Verletzten oder eines sonst zum Strafantrag Berechtigten anzuordnen, daß die Verurteilung wegen der Beleidigung auf 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 (2)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 Urteil zu bestimmen. Ist 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n einer Zeitung oder Zeitschrift begangen, so ist auch die Bekanntmachung in eine Zeitung oder Zeitschrift aufzunehmen, und zwar, wenn möglich, in dieselbe, in der die Beleidigung enthalten war; dies gilt entsprechend, wenn 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m Rundfunk begangen ist.

Fünfte Abschnitt

Verletzung des persönlichen Lebens- und Geheimbereichs

§ 201 Verletzung der Vertraulichkeit des Wortes

-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unbefugt

1. das nichtöffentlich gesprochene Wort eines anderen auf einen Tonträger aufnimmt oder
 2. eine so hergestellte Aufnahme gebraucht oder einem Dritten zugänglich mach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unbefugt
1. das nicht zu seiner Kenntnis bestimmte nichtöffentlich gesprochene Wort eines anderen mit einem Abhörgerät abhört oder
 2. das nach Absatz 1 Nr. 1 aufgenommene oder nach Absatz 2 Nr. 1 abgehörte nichtöffentlich gesprochene Wort eines anderen im Wortlaut oder seinem wesentlichen Inhalt nach öffentlich mitteilt.
- Die Tat nach Satz 1 Nr. 2 ist nur strafbar, wenn die öffentliche Mitteilung geeignet ist, berechtigte Interessen eines anderen zu beeinträchtigen. Sie ist nicht rechtswidrig, wenn die öffentliche Mitteilung zur Wahrnehmung überragender öffentlicher Interessen gemacht wird.
-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als Amtsträger oder als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die Vertraulichkeit des Wortes verletzt (Absätze 1 und 2).
- (4) Der Versuch ist strafbar.
- (5) Die Tonträger und Abhörgeräte,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verwendet ha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201a Verletzung des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s durch Bildaufnahmen

- (1) Wer von einer anderen Person, die sich in einer Wohnung oder

einem gegen Einblick besonders geschützten Raum befindet, unbefugt Bildaufnahmen herstellt oder überträgt und dadurch deren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 verl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durch eine Tat nach Absatz 1 hergestellte Bildaufnahme gebraucht oder einem Dritten zugänglich macht.
- (3) Wer eine befugt hergestellte Bildaufnahme von einer anderen Person, die sich in einer Wohnung oder einem gegen Einblick besonders geschützten Raum befindet, wissentlich unbefugt einem Dritten zugänglich macht und dadurch deren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 verl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4) Die Bildträger sowie Bildaufnahmegeräte oder andere technische Mittel,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verwendet ha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202 Verletzung des Briefgeheimnisses

- (1) Wer unbefugt
 - 1. einen verschlossenen Brief oder ein anderes verschlossenes Schriftstück, die nicht zu seiner Kenntnis bestimmt sind, öffnet oder
 - 2. sich vom Inhalt eines solchen Schriftstücks ohne Öffnung des Verschlusses unter Anwendung technischer Mittel Kenntnis verschafft,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06 mit Strafe bedroht is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sich unbefugt vom Inhalt eines Schriftstücks, das nicht zu seiner Kenntnis bestimmt und durch ein verschlossenes Behältnis gegen Kenntnisnahme besonders gesichert ist, Kenntnis verschafft, nachdem er dazu das Behältnis geöffnet hat.
- (3) Einem Schriftstück im Sinne der Absätze 1 und 2 steht eine Abbildung gleich.

§ 202a Ausspähen von Daten

- (1) Wer unbefugt sich oder einem anderen Zugang zu Daten, die nicht für ihn bestimmt und die gegen unberechtigten Zugang besonders gesichert sind, unter Überwindung der Zugangssicherung verschaf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aten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nur solche, die elektronisch, magnetisch oder sonst nicht unmittelbar wahrnehmbar gespeichert sind oder übermittelt werden.

§ 202b Abfangen von Daten

Wer unbefugt sich oder einem anderen unter Anwendung von technischen Mitteln nicht für ihn bestimmte Daten (§ 202a Abs. 2) aus einer nicht öffentlichen Datenübermittlung oder aus der elektromagnetischen Abstrahlung einer Datenverarbeitungsanlage verschaf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 202c Vorbereiten des Ausspähens und Abfangens von Daten

- (1) Wer eine Straftat nach § 202a oder § 202b vorbereitet, indem er

1. Passwörter oder sonstige Sicherungscodes, die den Zugang zu Daten (§ 202a Abs. 2) ermöglichen, oder
 2. Computerprogramme, deren Zweck die Begehung einer solchen Tat ist,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verkauft, einem anderen überlässt, verbreite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 149 Abs. 2 und 3 gilt entsprechend.

§ 203 Verletzung von Privatgeheimnissen

- (1) Wer unbefugt ein fremdes Geheimnis, namentlich ein zum persönlichen Lebensbereich gehörendes Geheimnis oder ein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offenbart, das ihm als
1. Arzt, Zahnarzt, Tierarzt, Apotheker oder Angehörigen eines anderen Heilberufs, der für die Berufsausübung oder die Führung der Berufsbezeichnung eine staatlich geregelte Ausbildung erfordert,
 2. Berufspsychologen mit staatlich anerkannter wissenschaftlicher Abschlußprüfung,
 3. Rechtsanwalt, Patentanwalt, Notar, Verteidiger in einem gesetzlich geordneten Verfahren, Wirtschaftsprüfer, vereidigter Buchprüf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r oder Organ oder Mitglied eines Organs einer Rechtsanwalts-, Patentanwalts-, Wirtschaftsprüfungs-, Buchprüfungs- oder Steuerberatungsgesellschaft,
 4. Ehe-, Familien-, Erziehungs- oder Jugendberater sowie Berater für Suchtfragen in einer Beratungsstelle, die von einer Behörde oder Körperschaft, Anstalt oder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anerkannt ist.

4a. Mitglied oder Beauftragten einer anerkannten Beratungsstelle nach den §§ 3 und 8 de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es,

5. staatlich anerkanntem Sozialarbeiter oder staatlich anerkanntem Sozialpädagogen oder

6. Angehörigen eines Unternehmens der privaten Kranken-, Unfall- oder Lebensversicherung oder einer privatärztlichen oder anwaltlichen Verrechnungsstelle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geword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unbefugt ein fremdes Geheimnis, namentlich ein zum persönlichen Lebensbereich gehörendes Geheimnis oder ein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offenbart, das ihm als 1.

1. Amtsträger,

2.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3. Person, die Aufgaben oder Befugnisse nach dem Personalvertretungsrecht wahrnimmt,

4. Mitglied eines für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tätigen Untersuchungsausschusses, sonstigen Ausschusses oder Rates, das nicht selbst Mitglied des Gesetzgebungsorgans ist, oder als Hilfskraft eines solchen Ausschusses oder Rates,

5. öffentlich bestelltem Sachverständigen, der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seiner Obliegenheiten auf Grund eines Gesetzes förmlich verpflichtet worden ist, oder

6. Person, die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Geheimhaltungspflicht

- bei der Durchführung wissenschaftlicher Forschungsvorhaben auf Grund eines Gesetzes förmlich verpflichtet worden ist,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geworden ist. Einem Geheimnis im Sinne des Satzes 1 stehen Einzelangaben über persönliche oder sachliche Verhältnisse eines anderen gleich, die für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rfaßt worden sind; Satz 1 ist jedoch nicht anzuwenden, soweit solche Einzelangaben anderen Behörden oder sonstigen Stellen für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kanntgegeben werden und das Gesetz dies nicht untersagt.
- (2a) Die Ab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wenn ein 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unbefugt ein fremdes Geheimnis im Sinne dieser Vorschriften offenbart, das einem in den Absätzen 1 und 2 Genannten in dessen beruflicher Eigenschaft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 geworden ist und von dem er bei der Erfüllung seiner Aufgaben als 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Kenntnis erlangt hat.
- (3) Einem in Absatz 1 Nr. 3 genannten Rechtsanwalt stehen andere Mitglieder einer Rechtsanwaltskammer gleich. Den in Absatz 1 und Satz 1 Genannten stehen ihre berufsmäßig tätigen Gehilfen und die Personen gleich, die bei ihnen zur Vorbereitung auf den Beruf tätig sind. Den in Absatz 1 und den in Satz 1 und 2 Genannten steht nach dem Tod des zur Wahrung des Geheimnisses Verpflichteten ferner gleich, wer das Geheimnis von dem Verstorbenen oder aus dessen Nachlaß erlangt hat.
- (4) Die Absätze 1 bis 3 sind auch anzuwenden, wenn der Täter das fremde Geheimnis nach dem Tod des Betroffenen unbefugt offenbart.

- (5) Handelt der Täter gegen Entgelt od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n anderen zubereichern oder einen anderen zu schädig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zwei Jahren oder Geldstrafe.

Fußnote

§ 203 Abs. 1 Nr. 4a: Die anerkannten Beratungsstellen nach § 218b Abs. 2 Nr. 1 StGB stehen den anerkannten Beratungsstellen nach § 3 des G über die Aufklärung, Verhütung, Familienplanung und Beratung gleich gem. BVerfGE v. 4.8.1992 I 1585 –2 BvO 16/92 u. a.–

§ 204 Verwertung fremder Geheimnisse

- (1) Wer unbefugt ein fremdes Geheimnis, namentlich ein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zu dessen Geheimhaltung er nach §203 verpflichtet ist, verwer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 203 Abs. 4 gilt entsprechend.

§ 205 Strafantrag

- (1) In den Fällen des § 201 Abs. 1 und 2 und der §§ 201a, 202, 203 und 204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Dies gilt auch in den Fällen der §§202a und 202b, es sei denn,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2) Stirbt der Verletzte, so geht das Antragsrecht nach § 77 Abs. 2 auf die Angehörigen über;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r §§ 202a und 202b. Gehört das Geheimnis nicht zum persönlichen Lebensbereich

des Verletzten, so geht das Antragsrecht bei Straftatennach den §§203 und 204 auf die Erben über. Offenbart oder verwerte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r §§ 203 und 204 das Geheimnis nach dem Tod des Betroffenen, so gelten die Sätze 1 und 2 sinngemäß.

§ 206 Verletzung des Post-oder Fernmeldegeheimnisses

- (1) Wer unbefugt einer anderen Person eine Mitteilung über Tatsachen macht, die dem Post-oder Fernmeldegeheimnis unterliegen und die ihm als Inhaber oder Beschäftigtem eines Unternehmens bekanntgeworden sind, das geschäftsmäßig Post-od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als Inhaber oder Beschäftigter eines in Ab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s unbefugt
 1. eine Sendung, die einem solchen Unternehmen zur Übermittlung anvertraut worden und verschlossen ist, öffnet oder sich von ihrem Inhalt ohne Öffnung des Verschlusses unter Anwendung technischer Mittel Kenntnis verschafft,
 2. eine einem solchen Unternehmen zur Übermittlung anvertraute Sendung unterdrückt oder
 3. eine der in Absatz 1 oder in Nummer 1 oder 2 bezeichneten Handlungen gestattet oder fördert.
-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Personen, die
 1. Aufgaben der Aufsicht über ein in Absatz 1 bezeichnetes Unternehmen wahrnehmen,

2. von einem solchen Unternehmen oder mit dessen Ermächtigung mit dem Erbringen von Post-oder Telekommunikationsdiensten betraut sind oder
 3. mit der Herstellung einer dem Betrieb eines solchen Unternehmens dienenden Anlageoder mit Arbeiten daran betraut sind.
- (4) Wer unbefugt einer anderen Person eine Mitteilung über Tatsachen macht, die ihm alsoaußerhalb des Post-oder Telekommunikationsbereichs tätigem Amtsträger auf Grund eines befugten oder unbefugten Eingriffs in das Post-oder Fernmeldegeheimnis bekanntgewordensin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5) Dem Postgeheimnis unterliegen die näheren Umstände des Postverkehrs bestimmterPersonen sowie der Inhalt von Postsendungen. Dem Fernmeldegeheimnis unterliegender Inhalt der Telekommunikation und ihre näheren Umstände, insbesondere dieTatsache, ob jemand an einem Telekommunikationsvorgang beteiligt ist oder war.Das Fernmeldegeheimnis erstreckt sich auch auf die näheren Umstände erfolgloserVerbindungsversuche.

§§ 207 bis 210 (weggefallen)

Sechzehnter AbschnittStraftaten gegen das Leben

§ 211 Mord

- (1) Der Mörder wird mit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bestraft.

- (2) Mörder ist, wer aus Mordlust, zur Befriedigung des Geschlechtstriebes, aus Habgier oder sonst aus niedrigen Beweggründen, heimtückisch oder grausam oder mit gemeingefährlichen Mitteln oder um eine andere Straftat zu ermöglichen oder zu verdecken, einen Menschen tötet.

Fußnote

§ 211: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gründe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 21.6.1977 I 1236 – 1 BvL 14/76

§ 212 Totschlag

- (1) Wer einen Menschen tötet, ohne Mörder zu sein, wird als Totschläger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bestraft.
-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auf lebenslange Freiheitsstrafe zu erkennen.

§ 213 Minder schwerer Fall des Totschlags

War der Totschläger ohne eigene Schuld durch eine ihm oder einem Angehörigen zugefügte Mißhandlung oder schwere Beleidigung von dem getöteten Menschen zum Zorn gereizt und hierdurch auf der Stelle zur Tat hingerissen worden oder liegt sonst ein minderschwerer Fall vor,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214 und 215 (weggefallen)

§ 216 Tötung auf Verlangen

- (1) Ist jemand durch das ausdrückliche und ernstliche Verlangen des

Getöteten zur Tötung bestimmt word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17 (weggefallen)

§ 218 Schwangerschaftsabbruch

(1) Wer eine Schwangerschaft abbri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Handlungen, deren Wirkung vor Abschluß der Einnistung des befruchteten Eies in der Gebärmutter eintritt, gelten nicht als Schwangerschaftsabbruch im Sinne dieses Gesetzes.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gegen den Willen der Schwangeren handelt oder
2. leichtfertig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der Schwangeren verursacht.

(3) Begeht die Schwangere die T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4) Der Versuch ist strafbar. Die Schwangere wird nicht wegen Versuchs bestraft.

Fußnote

§§ 218 bis 219b (früher §§ 218 bis 219d): IdF d.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mWv 5.8.1992; Art. 13 Nr.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1585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8: Anwendbar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2 BvF 2/90 u. a.

§ 218a Straflosigkeit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1) Der Tatbestand des § 218 ist nicht verwirklicht, wenn
 1. die Schwangere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langt und dem Arzt durch eine Bescheinigung nach § 219 Abs. 2 Satz 2 nachgewiesen hat, daß sie sich mindestens drei Tage vor dem Eingriff hat beraten lassen,
 2. der Schwangerschaftsabbruch von einem Arzt vorgenommen wird und
 3. seit der Empfängnis nicht mehr als zwölf Wochen vergangen sind.
- (2) Der mit Einwilligung der Schwangeren von einem Arzt vorgenommene Schwangerschaftsabbruch ist nicht rechtswidrig, wenn der Abbruch der Schwangerschaf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genwärtigen und zukünftigen Lebensverhältnisse der Schwangeren nach ärztlicher Erkenntnis angezeigt ist, um eine Gefahr für das Leben oder die Gefahr einer schwerwiegenden Beeinträchtigung des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Gesundheitszustandes der Schwangeren abzuwenden, und die Gefahr nicht auf eine andere für sie zumutbare Weise abgewendet werden kann.
- (3)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gelten bei einem Schwangerschaftsabbruch, der mit Einwilligung der Schwangeren von einem

Arzt vorgenommen wird, auch als erfüllt, wenn ärztlicher Erkenntnis an der Schwangeren eine rechtswidrige Tat nach den §§ 176 bis 179 des Strafgesetzbuches begangen worden ist,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sprechen, daß die Schwangerschaft auf der Tat beruht, und seit der Empfängnis nichtmehr als zwölf Wochen vergangen sind.

- (4) Die Schwangere ist nicht nach § 218 strafbar, wenn der Schwangerschaftsabbruch nach Beratung (§ 219) von einem Arzt vorgenommen worden ist und seit der Empfängnis nichtmehr als zweiundzwanzig Wochen verstrichen sind. Das Gericht kann von Strafe nach § 218 absehen, wenn die Schwangere sich zur Zeit des Eingriffs in besonderer Bedrängnis befunden hat.

Fußnote

§§ 218 bis 219b (früher §§ 218 bis 219d): IdF d.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mWv 5.8.1992; Art. 13 Nr. 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8a Abs. 4: Anwendbar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 2 BvF 2/90 u. a.

§ 218b Schwangerschaftsabbruch ohne ärztliche Feststellung, unrichtige ärztliche Feststellung

- (1) Wer in den Fällen des § 218a Abs. 2 oder 3 eine Schwangerschaft abbricht, ohne daß ihm die schriftliche Feststellung eines Arztes,

der nicht selbst den Schwangerschaftsabbruch vornimmt, darüber vorgelegen hat, ob die Voraussetzungen des § 218a Abs. 2 oder 3 gegeben sin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18 mit Strafe bedroht ist. Wer als Arztwider besseres Wissen eine unrichtige Feststellung über die Voraussetzungen des § 218a Abs. 2 oder 3 zur Vorlage nach Satz 1 trif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18 mit Strafe bedroht ist. Die Schwangere ist nicht nach Satz 1 oder 2 strafbar.

- (2) Ein Arzt darf Feststellungen nach § 218a Abs. 2 oder 3 nicht treffen, wenn ihm die zuständige Stelle dies untersagt hat, weil er wegen einer rechtswidrigen Tat nach Absatz 1, den §§ 218, 219a oder 219b oder wegen einer anderen rechtswidrigen Tat, die er im Zusammenhang mit einem Schwangerschaftsabbruch begangen hat,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Die zuständige Stelle kann einem Arzt vorläufig untersagen, Feststellungen nach § 218a Abs. 2 und 3 zu treffen, wenn gegen ihn wegen des Verdachts einer der in Satz 1 bezeichneten rechtswidrigen Taten das Hauptverfahren eröffnet worden ist.

Fußnote

§§ 218 bis 219b (früher §§ 218 bis 219d): IdF d.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 mWv 5.8.1992; Art. 13 Nr. 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8b: Anwendbar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 2 BvF 2/90 u. a.

§ 218c Ärztliche Pflichtverletzung bei einem Schwangerschaftsabbruch

(1) Wer eine Schwangerschaft abbricht,

1. ohne der Frau Gelegenheit gegeben zu haben, ihm die Gründe für ihr Verlangen nach Abbruch der Schwangerschaft darzulegen,
 2. ohne die Schwangere über die Bedeutung des Eingriffs, insbesondere über Ablauf, Folgen, Risiken, mögliche physische und psychische Auswirkungen ärztlich beraten zu haben,
 3. ohne sich zuvor in den Fällen des § 218a Abs. 1 und 3 auf Grund ärztlicher Untersuchung von der Dauer der Schwangerschaft überzeugt zu haben oder
 4. obwohl er die Frau in einem Fall des § 218a Abs. 1 nach § 219 beraten ha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18 mit Strafe bedroht ist.

(2) Die Schwangere ist nicht nach Absatz 1 strafbar.

§ 219 Beratung der Schwangeren in einer Not- und Konfliktlage

(1) Die Beratung dient dem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Sie hat sich von dem Bemühen leiten zu lassen, die Frau zur Fortsetzung der Schwangerschaft zu ermutigen und ihr Perspektiven für ein Leben mit dem Kind zu eröffnen; sie soll ihr helfen, eine

verantwortliche und gewissenhafte Entscheidung zu treffen. Dabei muß der Fraubewußt sein, daß das Ungeborene in jedem Stadium der Schwangerschaft auch ihrgegenüber ein eigenes Recht auf Leben hat und daßdeshalb nach der Rechtsordnungein Schwangerschaftsabbruch nur in Ausnahmesituationen in Betracht kommen kann, wenn der Frau durch das Austragen des Kindes eine Belastung erwächst, die so schwerund außergewöhnlich ist, daß sie die zumutbare Opfergrenze übersteigt. Die Beratung soll durch Rat und Hilfe dazu beitragen, die in Zusammenhang mit der Schwangerschaftbestehende Konfliktlage zu bewältigen und einer Notlage abzuhelpfen. Das Nähere regelt da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 (2) Die Beratung hat nach dem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durch eine anerkannte 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sstelle zu erfolgen. Die Beratungsstelle hat derSchwangeren nach Abschluß der Beratung hierüber eine mit dem Datum des letzten Beratungsgesprächs und dem Namen der Schwangeren versehene Bescheinigung nach Maßgabede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es auszustellen. Der Arzt, der den Abbruch der Schwangerschaft vornimmt, ist als Berater ausgeschlossen.

§ 219a Werbung für den Abbruch der Schwangerschaft

- (1)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3) seines Vermögensvorteils wegen oder in grob anstößiger Weise
1. eigene oder fremde Dienste zur Vornahme oder Förderung eines Schwangerschaftsabbruchs oder

2. Mittel, Gegenstände oder Verfahren, die zum Abbruch der Schwangerschaft geeignet sind, unter Hinweis auf diese Eignung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oder Erklärungen solchen Inhalts bekanntgi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Absatz 1 Nr. 1 gilt nicht, wenn Ärzte oder auf Grund Gesetzes anerkannte Beratungsstellen darüber unterrichtet werden, welche Ärzte, Krankenhäuser oder Einrichtungen bereit sind, einen Schwangerschaftsabbruch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218a Abs. 1 bis 3 vorzunehmen.

(3) Absatz 1 Nr. 2 gilt nicht, wenn die Tat gegenüber Ärzten oder Personen, die zum Handel mit den in Absatz 1 Nr. 2 erwähnten Mitteln oder Gegenständen befugt sind, oder durch eine Veröffentlichung in ärztlichen oder pharmazeutischen Fachblättern begangen wird.

Fußnote

§§ 218 bis 219b (früher §§ 218 bis 219d): IdF d.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 mWv 5.8.1992; Art. 13 Nr. 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9a: Anwendbar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 2 BvF 2/90 u. a.

§ 219b Inverkehrbringen von Mitteln zum Abbruch der Schwangerschaft

(1) Wer in der Absicht, rechtswidrige Taten nach § 218 zu fördern,

Mittel oder Gegenstände, die zum Schwangerschaftsabbruch geeignet sind, in den Verkehr 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ie Teilnahme der Frau, die den Abbruch ihrer Schwangerschaft vorbereitet, ist nicht nach Absatz 1 strafbar.

(3) Mittel oder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Tat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Fußnote

§§ 218 bis 219b (früher §§ 218 bis 219d): IdF d.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 mWv 5.8.1992; Art. 13 Nr. 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9b: Anwendbar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2 BvF 2/90 u. a.

§ 219c (weggefallen)

Fußnote

§ 219c: Aufgeh. durch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 mWv 5.8.1992; Art. 13 Nr. 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 wiederholt. § 219c: Aufhebung wirksam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2 BvF 2/90 u. a.

§ 219d (weggefallen)

Fußnote

§219d: Aufgeh. durch Art. 13 Nr. 1 G v. 27.7.1992 I 1398 mWv 5.8.1992; Art. 13 Nr.1 trat einstweilen nicht in Kraft gem. BVerfGE v. 4.8.1992 I 1585 –2 BvO 16/92 u.

a. –; die einstweilige Anordnung v. 4.8.1992 wurde nach BVerfGE v. 25.1.1993 I 270wiederholt. § 219d: Aufhebung wirksam ab 16.6.1993 gem. Abschn. II Nr. 1 nach Maßgabe der Nr. 2 bis 9 der Entscheidungsformel gem. BVerfGE v. 28.5.1993 –2 BvF 2/90 u. a.

§ 220 (weggefallen)

§ 220a (weggefallen)

§ 221 Aussetzung

(1) Wer einen Menschen

1. in eine hilflose Lage versetzt oder
2. in einer hilflosen Lage im Stich läßt, obwohl er ihn in seiner Obhut hat oder ihm sonst beizustehen verpflichtet ist, und ihn dadurch der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aus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die Tat gegen sein Kind oder eine Person begeht, die ihm zur

Erziehung oder zur Betreuung in der Lebensführung anvertraut ist,
oder

2.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des Opfers verursacht.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des Opfers,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4)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222 Fahrlässige Tötung

Wer durch Fahrlässigkeit den Tod eines Mensch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Sieb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 223 Körperverletzung

(1) Wer eine andere Person körperlich mißhandelt oder an der Gesundheit schäd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24 Gefährliche Körperverletzung

(1) Wer die Körperverletzung

1. durch Beibringung von Gift oder anderen gesundheitsschädlichen Stoffen,

2. mittels einer Waffe oder eines anderen gefährlichen Werkzeugs,
 3. mittels eines hinterlistigen Überfalls,
 4. mit einem anderen Beteiligten gemeinschaftlich oder
 5. mittels einer das Leben gefährdenden Behandlung
- begeh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in minder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25 Mißhandlung von Schutzbefohlenen

(1) Wer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oder eine wegen Gebrechlichkeit oder Krankheit wehrlose Person, die

1. seiner Fürsorge oder Obhut untersteht,
2. seinem Hausstand angehört,
3. von dem Fürsorgepflichtigen seiner Gewalt überlassen worden oder
4. ihm im Rahmen eines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ses untergeordnet ist, quält oder roh mißhandelt, oder wer durch böswillige Vernachlässigung seiner Pflicht, für sie zu sorgen, sie an der Gesundheit schädig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die schutzbefohlen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1.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oder
2. einer erheblichen Schädigung der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 (4)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 226 Schwere Körperverletzung

- (1) Hat die Körperverletzung zur Folge, daß die verletzte Person
1. das Sehvermögen auf einem Auge oder beiden Augen, das Gehör, das Sprechvermögen oder die Fortpflanzungsfähigkeit verliert,
 2. ein wichtiges Glied des Körpers verliert oder dauernd nicht mehr gebrauchen kann oder
 3. in erheblicher Weise dauernd entstellt wird oder in Siechtum, Lähmung oder geistige Krankheit oder Behinderung verfällt,
-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2) Verursacht der Täter eine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Folgen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227 Kö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 (1)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Körperverletzung (§§ 223 bis 226) den Tod der verletzten Perso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228 Einwilligung

Wer eine Körperverletzung mit Einwilligung der verletzten Person vornimmt, handelt nur dann rechtswidrig, wenn die Tat trotz der Einwilligung gegen die guten Sitten verstößt.

§ 229 Fahrlässige Körperverletzung

Wer durch Fahrlässigkeit die Körperverletzung einer anderen Perso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30 Strafantrag

- (1) Die vorsätzliche Körperverletzung nach § 223 und die fahrlässige Körperverletzung nach § 229 werden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Stirbt die verletzte Person, so geht bei vorsätzlicher Körperverletzung das Antragsrecht nach § 77 Abs. 2 auf die Angehörigen über.
- (2) Ist die Tat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 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 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 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 Ämtern der Kirchen und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 231 Beteiligung an einer Schlägerei

- (1) Wer sich an einer Schlägerei oder an einem von mehreren verübten Angriff beteiligt, wird schon wegen dieser Beteiligung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urch die Schlägerei oder den Angriff der Tod eines Menschen oder eine schwere Körperverletzung (§ 226) verursacht worden ist.
- (2) Nach Absatz 1 ist nicht strafbar, wer an der Schlägerei oder dem Angriff beteiligt war, ohne daß ihm dies vorzuwerfen ist.

Achtzehn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persönliche Freiheit

§ 232 Menschenhandel zum Zweck der sexuellen Ausbeutung

- (1) Wer eine andere Person unter Ausnutzung einer Zwangslage oder der Hilflosigkeit, die mit ihrem Aufenthalt in einem fremden Land verbunden ist,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der Prostitution oder dazu bringt, sexuelle Handlungen, durch die sie ausgebeutet wird, an oder vor dem Täter oder einem Dritten vorzunehmen oder von dem Täter oder einem Dritten an sich vornehmen zu 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Person unter einundzwanzig Jahren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der Prostitution oder zu den sonst in Satz 1 bezeichneten sexuellen Handlungen bring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1. das Opfer der Tat ein Kind (§ 176 Abs. 1) ist,
2. der Täter das Opfer bei der Tat körperlich schwer misshandelt od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oder
3. der Täter die Tat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begeht.

(4) Nach Absatz 3 wird auch bestraft, wer

1. eine andere Person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oder durch List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der Prostitution oder zu den sonst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sexuellen Handlungen bringt oder
2. sich einer anderen Person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oder durch List bemächtigt, um sie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der Prostitution oder zu den sonst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sexuellen Handlungen zu bringen.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r Absätze 3 und 4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 233 Menschenhandel zum Zweck der Ausbeutung der Arbeitskraft

(1) Wer eine andere Person unter Ausnutzung einer Zwangslage oder der Hilflosigkeit, die mit ihrem Aufenthalt in einem fremden Land

verbunden ist, in Sklaverei, Leibeigenschaft oder Schuldknechtschaft oder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einer Beschäftigung bei ihm oder einem Dritten zu Arbeitsbedingungen, die in einem auffälligen Missverhältnis zu den Arbeitsbedingungen anderer Arbeitnehmerinnen oder Arbeitnehmer stehen, welche die gleiche oder eine vergleichbare Tätigkeit ausüben, 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Person unter einundzwanzig Jahren in Sklaverei, Leibeigenschaft oder Schuldknechtschaft oder zur Aufnahme oder Fortsetzung einer in Satz 1 bezeichneten Beschäftigung bring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 232 Abs. 3 bis 5 gilt entsprechend.

§ 233a Förderung des Menschenhandels

(1) Wer einem Menschenhandel nach § 232 oder § 233 Vorschub leistet, indem er eine andere Person anwirbt, befördert, weitergibt, beherbergt oder auf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1. das Opfer der Tat ein Kind (§ 176 Abs. 1) ist,
2. der Täter das Opfer bei der Tat körperlich schwer misshandelt od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oder
3. der Täter die Tat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oder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begeht.

(3) Der Versuch ist strafbar.

§ 233b Führungsaufsicht, Erweiterter Verfall

(1) In den Fällen der §§ 232 bis § 233a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68 Abs. 1).

(2) In den Fällen der §§ 232 bis 233a ist §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234 Menschenraub

(1) Wer sich einer anderen Person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oder durch List bemächtigt, um sie in hilfloser Lage auszusetzen oder dem Dienst in einer militärischen oder militärähnlichen Einrichtung im Ausland zuzuführ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234a Verschleppung

(1) Wer einen anderen durch List, Drohung oder Gewalt in ein Gebiet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verbringt oder veranlaßt, sich dorthin zu begeben, oder davon abhält, von dort zurückzukehren, und dadurch der Gefahraussetzung, aus politischen Gründen verfolgt zu werden und hierbei im Widerspruch zu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durch Gewalt—oder Willkürmaßnahmen Schadenan Leib oder Leben zu erleiden, der Freiheit beraubt oder in seiner beruflichenoder wirtschaftlichen Stellung empfindlich beeinträchtigt zu werd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 Wer eine solche Tat vorber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35 Entziehung Minderjähriger

-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 1.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oder durch List oder
 - 2. ein Kind, ohne dessen Angehöriger zu sein, den Eltern, einem Elternteil, dem Vormund oder dem Pfleger entzieht oder vorenthäl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 Kind den Eltern, einem Elternteil, dem Vormund oder dem Pfleger
 - 1. entzieht, um es in das Ausland zu verbringen, oder
 - 2. im Ausland vorenthält, nachdem es dorthin verbracht worden ist oder es sich dorthin begeben hat.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2 und des Absatzes 2 Nr. 1 ist der Versuch strafbar.

-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das Opf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oder einer erheblichen Schädigung der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oder
 2. die Tat gegen Entgelt oder in der Absicht begeht, sich oder einen Dritten zu bereichern.
- (5)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des Opfers,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6)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4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5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7) Die Entziehung Minderjähriger wird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236 Kinderhandel

- (1) Wer sein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s Kind oder seinen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n Mündel oder Pflegling unter grober Vernachlässigung der Fürsorge- oder Erziehungspflicht einem anderen auf Dauer überlässt und dabei gegen Entgelt oder in der Absicht handelt, sich oder einen Dritten zu bereich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in den Fällen des Satzes 1 das Kind, den Mündel oder Pflegling auf Dauer bei sich aufnimmt und dafür ein Entgelt gewährt.

(2) Wer unbefugt

1. die Adoption einer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vermittelt oder
2. eine Vermittlungstätigkeit ausübt, die zum Ziel hat, daß ein Dritter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auf Dauer bei sich aufnimmt, und dabei gegen Entgelt oder in der Absicht handelt, sich oder einen Dritten zu bereich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Bewirk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Satzes 1, daß die vermittelte Person in das Inland oder in das Ausland verbracht wird,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aus Gewinnsucht,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eines Kinderhandels verbunden hat, oder
2. das Kind oder die vermittelt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einer erheblichen Schädigung der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5)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3 kann das Gericht bei Beteiligten und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bei Teilnehmern, deren Schuld unter Berücksichtigung des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Wohls

des Kindes oder der vermittelten Person gering ist,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en Absätzen 1 bis 3 absehen.

§ 237 (weggefallen)

§ 238 Nachstellung

- (1) Wer einem Menschen unbefugt nachstellt, indem er beharrlich
1. seine räumliche Nähe aufsucht,
 2. unter Verwendung von Telekommunikationsmitteln der sonstigen Mitteln der Kommunikation oder über Dritte Kontakt zu ihm herzustellen versucht,
 3. unter missbräuchlicher Verwendung von dessen personenbezogenen Daten Bestellungen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ihn aufgibt oder Dritte veranlasst, mit diesem Kontakt aufzunehmen,
 4. ihn mit der Verletzung von Leben, körperlicher Unversehrtheit, Gesundheit oder Freiheit seiner selbst oder einer ihm nahe stehenden Person bedroht oder
 5. eine andere vergleichbare Handlung vornimmt
- und dadurch seine Lebensgestaltung schwerwiegend beeinträch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das Opfer, einen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 andere dem Opfer nahe stehend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des Opfers, eines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r anderen dem Opfer nahe stehenden Perso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239 Freiheitsberaubung

- (1) Wer einen Menschen einsperrt oder auf andere Weise der Freiheit berau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 1. das Opfer länger als eine Woche der Freiheit beraubt oder
 - 2. durch die Tat oder eine während der Tat begangene Handlung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des Opfers verursacht.
- (4)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oder eine während der Tat begangene Handlung den Tod des Opfers,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239a Erpresserischer Menschenraub

- (1) Wer einen Menschen entführt oder sich eines Menschen bemächtigt, um die Sorge des Opfers um sein Wohl oder die Sorge eines Dritten um das Wohl des Opfers zu einer Erpressung (§ 253) auszunutzen, oder wer die von ihm durch eine solche Handlung geschaffene Lage eines Menschen zu einer solchen Erpressung ausnutz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des Opfers,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4) Das Gericht kann die Strafe nach § 49 Abs. 1 mildern, wenn der Täter das Opfer unter Verzicht auf die erstrebte Leistung in dessen Lebenskreis zurückgelangen läßt. Tritt dieser Erfolg ohne Zutun des Täters ein, so genügt sein ernsthaftes Bemühen, den Erfolg zu erreichen.

§ 239b Geiselnahme

- (1) Wer einen Menschen entführt oder sich eines Menschen bemächtigt, um ihn oder einen Dritten durch die Drohung mit dem Tod oder einer schweren Körperverletzung (§ 226) des Opfers oder mit dessen Freiheitsentziehung von über einer Woche Dauer zu einer Handlung, Duldung oder Unterlassung zu nötigen, oder wer die von ihm durch eine solche Handlung geschaffene Lage eines Menschen

zu einer solchen Nötigung ausnutz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bestraft.

(2) § 239a Abs. 2 bis 4 gilt entsprechend.

§ 239c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r §§239a und 239b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Abs. 1).

§ 240 Nötigung

(1) Wer einen Menschen rechtswidri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einemempfindlichen Übel zu einer Handlung, Duldung oder Unterlassung nö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Rechtswidrig ist die Tat, wenn die Anwendung der Gewalt oder die Androhung desÜbels zu dem angestrebten Zweck als verwerflich anzusehen is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zu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eine andere Person zu einer sexuellen Handlung oder zur Eingehung der Ehe nötigt,
2. eine Schwangere zum Schwangerschaftsabbruch nötigt oder
3.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

§ 241 Bedrohung

- (1) Wer einen Menschen mit der Begehung eines gegen ihn oder eine ihm nahestehende Person gerichteten Verbrechens bedro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wider besseres Wissen einem Menschen vortäuscht, daß die Verwirklichung eines gegen ihn oder eine ihm nahestehende Person gerichteten Verbrechens bevorstehe.

§ 241a Politische Verdächtigung

- (1) Wer einen anderen durch eine Anzeige oder eine Verdächtigung der Gefahraussetzt, aus politischen Gründen verfolgt zu werden und hierbei im Widerspruch zu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durch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n Schaden an Leib oder Leben zu erleiden, der Freiheit beraubt oder in seiner beruflichen oder wirtschaftlichen Stellung empfindlich beeinträchtigt zu werd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Mitteilung über einen anderen macht oder übermittelt und ihn dadurch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Gefahr einer politischen Verfolgung aussetz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Wird in der Anzeige, Verdächtigung oder Mitteilung gegen den anderen eine unwahre Behauptung aufgestellt oder ist die Tat in der Absicht begangen, eine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Folgen herbeizuführen, oder liegt sons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vor, so kann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erkannt werden.

Neunzehnter Abschnitt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 242 Diebstahl

- (1) Wer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einem anderen in der Absicht wegnimmt, die Sachesich oder einem Dritten rechtswidrig zuzueign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43 Besonders schwerer Fall des Diebstahls

- (1)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wird der Diebstahl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zur Ausführung der Tat in ein Gebäude, einen Dienst- oder Geschäftsraum oder in einen anderen umschlossenen Raum einbricht, einsteigt, mit einem falschen Schlüssel oder einem anderen nicht zur ordnungsmäßigen Öffnung bestimmten Werkzeug eindringt oder sich in dem Raum verborgen hält,
 2. eine Sache stiehlt, die durch ein verschlossenes Behältnis oder eine andere Schutzvorrichtung gegen Wegnahme besonders gesichert ist,
 3. gewerbsmäßig stiehlt,
 4. aus einer Kirche oder einem anderen der Religionsausübung dienenden Gebäude oder Raum eine Sache stiehlt, die dem Gottesdienst gewidmet ist oder der religiösen Verehrung dient,
 5. eine Sache von Bedeutung für Wissenschaft, Kunst oder Geschichte

oder für dietechnische Entwicklung stiehlt, die sich in einer allgemein zugänglichen Sammlung befindet oder öffentlich ausgestellt ist,

6. stiehlt, indem er die Hilflosigkeit einer anderen Person, einen Unglücksfall oder eine gemeine Gefahr ausnutzt oder

7. eine Handfeuerwaffe, zu deren Erwerb es nach dem Waffengesetz der Erlaubnisbedarf, ein Maschinengewehr, eine Maschinenpistole, ein voll- oder halbautomatisches Gewehr oder eine Sprengstoff enthaltende Kriegswaffe im Sinne des Kriegswaffenkontrollgesetzes oder Sprengstoff stiehlt.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2 Nr. 1 bis 6 is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ausgeschlossen, wenn sich die Tat auf eine geringwertige Sache bezieht.

§ 244 Diebstahl mit Waffen, Bandendiebstahl, Wohnungseinbruchdiebstahl

(1)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1. einen Diebstahl begeht, bei dem er oder ein anderer Beteiligter

a)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bei sich führt,

b) sonst ein Werkzeug oder Mittel bei sich führt, um den Widerstand einer anderen Person durch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zu verhindern oder zu überwinden,

2.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oder Diebstahl verbunden hat, unter Mitwirkung eines anderen Bandenmitglieds stiehlt oder

3. einen Diebstahl begeht, bei dem er zur Ausführung der Tat in eine Wohnung einbricht, einsteigt, mit einem falschen Schlüssel oder einem anderen nicht zur ordnungsmäßigen Öffnung bestimmten Werkzeug eindringt oder sich in der Wohnung verborgen häl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2 sind die §§ 43a und 73d anzuwenden.

§ 244a Schwerer Bandendiebstahl

-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den Diebstahl unter den in §243 Abs. 1 Satz 2 genannten Voraussetzungen oder in den Fällen des §244 Abs. 1 Nr. 1 oder 3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oder Diebstahl verbunden hat, unter Mitwirkung eines anderen Bandenmitglieds begeh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 Die §§ 43a, 73d sind anzuwenden.

§ 245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r §§ 242 bis 244a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1).

§ 246 Unterschlagung

- (1) Wer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sich oder einem Dritten rechtswidrig zueign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2) Is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Sache dem Täter anvertrau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3) Der Versuch ist strafbar.

§ 247 Haus-und Familiendiebstahl

Ist durch einen Diebstahl oder eine Unterschlagung ein Angehöriger, der Vormund oder der Betreuer verletzt oder lebt der Verletzte mit dem Täter in häuslicher Gemeinschaft, so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 248 (weggefallen)

§ 248a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geringwertiger Sachen

Der Diebstahl und die Unterschlagung geringwertiger Sachen werden in den Fällen der §§ 242 und 246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wegen für geboten hält.

§ 248b Unbefugter Gebrauch eines Fahrzeugs

(1) Wer ein Kraftfahrzeug oder ein Fahrrad gegen den Willen des Berechtigten in Gebrauch 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 (4) Kraftfahrzeuge im Sinne dieser Vorschrift sind die Fahrzeuge, die durch Maschinenkraft bewegt werden, Landkraftfahrzeuge nur insoweit, als sie nicht an Bahngleise gebunden sind.

§ 248c Entziehung elektrischer Energie

- (1) Wer einer elektrischen Anlage oder Einrichtung fremde elektrische Energie mittelst eines Leiters entzieht, der zur ordnungsmäßigen Entnahme von Energie aus der Anlage oder Einrichtung nicht bestimmt ist, wird, wenn er die Handlung in der Absicht begeht, die elektrische Energie sich oder einem Dritten rechtswidrig zuzueignen,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 247 und 248a gelten entsprechend.
- (4) Wird die in Absatz 1 bezeichnete Handlung in der Absicht begangen, einem anderen rechtswidrig Schaden zuzufüg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Zwanzigster Abschnitt Raub und Erpressung

§ 249 Raub

- (1) Wer mit Gewalt gegen eine Person oder unter Anwendung von Drohungen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einem anderen in der Absicht wegnimmt, die Sache sich oder einem Dritten rechtswidrig zuzueign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250 Schwerer Raub

(1)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ist zu erkennen, wenn

1. der Täter oder ein anderer Beteiligten am Raub
 - a)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bei sich führt,
 - b) sonst ein Werkzeug oder Mittel bei sich führt, um den Widerstand einer anderen Person durch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zu verhindern oder zu überwinden,
 - c) eine ander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oder
2. der Täter den Raub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oder Diebstahl verbunden hat, unter Mitwirkung eines anderen Bandenmitglieds begeht.

(2)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oder ein anderer Beteiligten am Raub

1. bei der Tat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verwendet,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2 eine Waffe bei sich führt oder
3. eine andere Person

- a) bei der Tat körperlich schwer mißhandelt oder
 - b)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251 Raub mit Todesfolge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en Raub (§§ 249 und 250)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252 Räuberischer Diebstahl

Wer, bei einem Diebstahl auf frischer Tat betroffen, gegen eine Person Gewalt verübt oder Drohungen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anwendet, um sich im Besitz des gestohlenen Gutes zu erhalten, ist gleich einem Räuber zu bestrafen.

§ 253 Erpressung

- (1) Wer einen Menschen rechtswidri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Übel zu einer Handlung, Duldung oder Unterlassung nötigt und dadurch dem Vermögen des Genötigten oder eines anderen Nachteil zufügt, um sich oder einen Dritten zu Unrecht zu bereich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Rechtswidrig ist die Tat, wenn die Anwendung der Gewalt oder die Androhung des Übels zu dem angestrebten Zweck als verwerflich anzusehen is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einer Erpressung verbunden hat.

§ 254 (weggefallen)

§ 255 Räuberische Erpressung

Wird die Erpressung durch Gewalt gegen eine Person oder unter Anwendung von Drohungen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begangen, so ist der Täter gleich einem Räuber zu bestrafen.

§ 256 Führungsaufsicht, Vermögensstrafe und Erweiterter Verfall

(1) In den Fällen der §§ 249 bis 255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 1).

(2) In den Fällen der §§ 253 und 255 sind die §§ 43a,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Einundzwanzigster Abschnitt Begünstigung und Hehlerei

§ 257 Begünstigung

(1) Wer einem anderen, der eine rechtswidrige Tat begangen hat, in der Absicht Hilfe leistet, ihm die Vorteile der Tat zu sich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ie Strafe darf nicht schwerer sein als die für die Vortat angedrohte Strafe.
- (3) Wegen Begünstigung wird nicht bestraft, wer wegen Beteiligung an der Vortat strafbar ist. Dies gilt nicht für denjenigen, der einen an der Vortat Unbeteiligten zur Begünstigung anstiftet.
- (4) Die Begünstigung wird nur auf Antrag,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t, wenn der Begünstiger als Täter oder Teilnehmer der Vortat nur auf Antrag,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t werden könnte. § 248a gilt sinngemäß.

§ 258 Strafvereitelung

- (1) Wer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ganz oder zum Teil vereitelt, daß ein anderer dem Strafgesetz gemäß wegen einer rechtswidrigen Tat bestraft oder einer Maßnahme (§ 11 Abs. 1 Nr. 8) unterworfen wir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die Vollstreckung einer gegen einen anderen verhängten Strafe oder Maßnahme ganz oder zum Teil vereitelt.
- (3) Die Strafe darf nicht schwerer sein als die für die Vortat angedrohte Strafe.
- (4) Der Versuch ist strafbar.
- (5) Wegen Strafvereitelung wird nicht bestraft, wer durch die Tat zugleich ganz oder zum Teil vereiteln will, daß er selbst bestraft oder einer Maßnahme unterworfen wird oder daß eine gegen ihn verhängte Strafe oder Maßnahme vollstreckt wird.
- (6) Wer die Tat zugunsten eines Angehörigen begeht, ist straffrei.

§ 258a Strafvereitelung im Amt

- (1) Ist in den Fällen des § 258 Abs. 1 der Täter als Amtsträger zur Mitwirkung beidem Strafverfahren oder dem Verfahren zur Anordnung der Maßnahme (§ 11 Abs. 1 Nr.8) oder ist er in den Fällen des § 258 Abs. 2 als Amtsträger zur Mitwirkung bei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oder Maßnahme beruf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 258 Abs. 3 und 6 ist nicht anzuwenden.

§ 259 Hehlerei

- (1) Wer eine Sache, die ein anderer gestohlen oder sonst durch eine gegen fremdes Vermögen gerichtete rechtswidrige Tat erlangt hat, ankauft oder sonst sich oder einem Dritten verschafft, sie absetzt oder absetzen hilft, um sich oder einen Dritten zubereich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ie §§ 247 und 248a gelten sinngemäß.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260 Gewerbsmäßige Hehlerei, Bandenhehlerei

- (1)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die Hehlerei
1. gewerbsmäßig oder
 2.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Diebstahl oder Hehlerei verbunden hat, begeh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2 sind die §§ 43a, 73d anzuwenden.
§ 73d ist auch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anzuwenden.

§ 260a Gewerbsmäßige Bandenhehlerei

-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die Hehlerei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Diebstahl oder Hehlerei verbunden hat, gewerbsmäßig begeh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 Die §§ 43a, 73d sind anzuwenden.

§ 261 Geldwäsche, Verschleierung unrechtmäßig erlangter Vermögenswerte

- (1) Wer einen Gegenstand, der aus einer in Satz 2 genannten rechtswidrigen Tatherrührt, verbirgt, dessen Herkunft verschleiert oder die Ermittlung der Herkunft, das Auffinden, den Verfall, die Einziehung oder die Sicherstellung eines solchen Gegenstandes vereitelt oder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Rechtswidrige Taten im Sinne des Satzes 1 sind
 - 1. Verbrechen,
 - 2. Vergehen nach
 - a) § 332 Abs. 1, auch in Verbindung mit Abs. 3, und § 334,
 - b) § 29 Abs. 1 Satz 1 Nr. 1 des Betäubungsmittelgesetzes und § 29 Abs. 1 Nr. 1 des Grundstoffüberwachungsgesetzes,

3. Vergehen nach § 373 und nach §374 Abs. 2 der Abgabenordnung,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2 Abs. 1 des Gesetzes zur Durchführung der Gemeinsamen Marktorganisationen und der Direktzahlungen,

4. Vergehen

a) nach den §§ 152a, 181a, 232 Abs. 1 und 2, § 233 Abs. 1 und 2, §§ 233a, 242, 246, 253, 259, 263 bis 264, 266, 267, 269, 284, 326 Abs. 1, 2 und 4 sowie § 328 Abs. 1, 2 und 4,

b) nach § 96 des Aufenthaltsgesetzes, § 84 des Asylverfahrensgesetzes und nach § 370 der Abgabenordnung,

die gewerbsmäßig oder von einem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begangen worden sind, und

5. Vergehen nach §§ 129 und 129a Abs. 3 und 5,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sowie von einem Mitglied einer kriminellen oder terroristischen Vereinigung (§§ 129, 129a,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begangene Vergehen.

Satz 1 gilt in den Fällen der gewerbsmäßigen oder bandenmäßigen Steuerhinterziehung nach § 370 der Abgabenordnung für die durch die Steuerhinterziehung ersparten Aufwendungen und unrechtmäßig erlangten Steuererstattungen und –vergütungen sowie in den Fällen des Satzes 2 Nr. 3 auch für einen Gegenstand, hinsichtlich dessen Abgabenhinterzogen worden sind.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n in Absatz 1 bezeichneten Gegenstand

1. sich oder einem Dritten verschafft oder

2. verwahrt oder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verwendet, wenn er die Herkunft des Gegenstandes zu dem Zeitpunkt gekannt hat, zu dem er ihn erlangt ha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einer Geldwäsche verbunden hat.
-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oder 2 leichtfertig nicht erkennt, daß der Gegenstand aus einer in Absatz 1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herr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6) Die Tat ist nicht nach Absatz 2 strafbar, wenn zuvor ein Dritter den Gegenstand erlangt hat, ohne hierdurch eine Straftat zu begehen.
- (7)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Straftat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Die §§ 43a, 73d sin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einer Geldwäsche 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 (8) Den in den Absätzen 1, 2 und 5 bezeichneten Gegenständen stehen solche gleich, die aus einer im Ausland begangenen Tat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rt herrühren, wenn die Tat auch am Tatort mit Strafe bedroht ist.
- (9) Nach den Absätzen 1 bis 5 wird nicht bestraft, wer

1. die Tat freiwilli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eigt oder freiwillig eine solche Anzeige veranlaßt, wenn nicht die Tat in diesem Zeitpunkt ganz oder zum Teil bereitsentdeckt war und der Täter dies wußte oder bei verständiger Würdigung der Sachlagedamit rechnen mußte, und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oder 2 unter den in Nummer 1 genannten Voraussetzungen die Sicherstellung des Gegenstandes bewirkt, auf den sich die Straftat bezieht.

Nach den Absätzen 1 bis 5 wird außerdem nicht bestraft, wer wegen Beteiligung an derVortat strafbar ist.

- (10) Das Gericht kann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5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durch die freiwillige Offenbarung seines Wissens wesentlich dazu beigetragenhat, daß die Tat über seinen eigenen Tatbeitrag hinaus oder eine in Absatz 1 genannterechtswidrige Tat eines anderen aufgedeckt werden konnte.

Fußnote

§ 261 Abs. 2 Nr. 1: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formel mit GG (100–1) vereinbar gem.BVerfGE v. 30.3.2004 I 715 (2 BvR 1520/01, 2 BvR 1521/01)

§ 262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r §§259 bis 261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1).

Zweiundzwanzigster Abschnitt Betrug und Untreue

§ 263 Betrug

- (1)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durch Vorspiegelung falscher oder durch Entstellung oder Unterdrückung wahrer Tatsachen einen Irrtum erregt oder un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Urkundenfälschung oder Betrug verbunden hat,
 2. einen Vermögensverlust großen Ausmaßes herbeiführt oder in der Absicht handelt, durch die fortgesetzte Begehung von Betrug eine große Zahl von Menschen in die Gefahr des Verlustes von Vermögenswerten zu bringen,
 3. eine andere Person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4.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 oder
 5. einen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 oder Sache von bedeutendem Wert in Brand gesetzt oder durch eine Brandlegung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oder ein Schiff zum Sinken oder Stranden gebracht hat.

- (4) § 243 Abs. 2 sowie die §§ 247 und 248a gelten entsprechend.
- (5)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den Betrug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den §§ 263 bis 264 oder 267 bis 269 verbunden hat, gewerbsmäßig begeht.
- (6) Das Gericht kann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 1).
- (7) Die §§ 43a und 73d sin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den §§ 263 bis 264 oder 267 bis 269 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 263a Computerbetrug

- (1)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er das Ergebnis eines Datenverarbeitungsvorgangs durch unrichtige Gestaltung des Programms, durch Verwendung unrichtiger oder unvollständiger Daten, durch unbefugte Verwendung von Daten oder sonst durch unbefugte Einwirkung auf den Ablauf beeinfluß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 263 Abs. 2 bis 7 gilt entsprechend.
- (3) Wer eine Straftat nach Absatz 1 vorbereitet, indem er Computerprogramme, deren Zweck die Begehung einer solchen Tat ist,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feilhält, verwahrt oder einem anderen überläs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gilt § 149 Abs. 2 und 3 entsprechend.

§ 264 Subventionsbetrug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er für die Bewilligung einer Subvention zuständigen Behörde oder einer anderen in das Subventionsverfahren eingeschalteten Stelle oder Person (Subventionsgeber) über 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macht, die für ihn oder den anderen vorteilhaft sind,
2. einen Gegenstand oder eine Geldleistung, deren Verwendung durch Rechtsvorschriften oder durch den Subventionsgeber im Hinblick auf eine Subvention beschränkt ist, entgegen der Verwendungsbeschränkung verwendet,
3. den Subventionsgeber entgegen den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Subventionsvergabe über 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in Unkenntnis läßt oder
4. in einem Subventionsverfahren eine durch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erlangte Bescheinigung über eine Subventionsberechtigung oder übersubventionserhebliche Tatsachen gebrauch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aus grobem Eigennutz oder unter Verwendung nachgemachter oder verfälschter Belege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eine nicht gerechtfertigte Subvention großen Ausmaßes erlangt,
 2.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 oder
 3. die Mithilfe eines Amtsträgers ausnutzt, der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mißbraucht.
- (3) §263 Abs. 5 gilt entsprechend.
-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bis 3 leichtfertig 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5) Nach den Absätzen 1 und 4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verhindert, daß auf Grund der Tat die Subvention gewährt wird. Wird die Subvention ohne Zutun des Täters nicht gewährt, so wird er straflos, wenn er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as Gewähren der Subvention zu verhindern.
- (6)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einem Jah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Absätzen 1 bis 3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und die Fähigkeit, Rechte aus öffentlichen Wahlen zu erlangen, aberkennen (§ 45 Abs.2).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Tat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7) Subvention im Sinne dieser Vorschrift ist
1. eine Leistung aus öffentlichen Mitteln nach Bundes- oder Landesrecht an Betriebe oder Unternehmen, die wenigstens zum Teil

a) ohne marktmäßige Gegenleistung gewährt wird und

b) der Förderung der Wirtschaft dienen soll;

2. eine Leistung aus öffentlichen Mitteln nach dem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die wenigstens zum Teil ohne marktmäßige Gegenleistung gewährt wird.

Betrieb oder Unternehmen im Sinne des Satzes 1 Nr. 1 ist auch das öffentliche Unternehmen.

(8) Subventionserheblich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Tatsachen,

1. die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von dem Subventionsgeber als subventionserheblich bezeichnet sind oder

2. von denen die Bewilligung, Gewährung, Rückforderung, Weitergewährung oder das Belassen einer Subvention oder eines Subventionsvorteils gesetzlich abhängig ist.

§ 264a Kapitalanlagebetrug

(1) Wer im Zusammenhang mit

1. dem Vertrieb von Wertpapieren, Bezugsrechten oder von Anteilen, die eine Beteiligung an dem Ergebnis eines Unternehmens gewähren sollen, oder

2. dem Angebot, die Einlage auf solche Anteile zu erhöhen,

in Prospekten oder in Darstellungen oder Übersichten über den Vermögensstand hinsichtlich der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werb oder die Erhöhung erheblichen Umstände gegenüber einem größeren Kreis von Personen unrichtige vorteilhafte Angaben macht oder nachteilige Tatsachen verschwe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Absatz 1 gilt entsprechend, wenn sich die Tat auf Anteile an einem Vermögen bezieht, das ein Unternehmen im eigenen Namen, jedoch für fremde Rechnung verwaltet.
- (3) Nach den Absätzen 1 und 2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verhindert, daß auf Grund der Tat die durch den Erwerb oder die Erhöhung bedingte Leistung erbracht wird. Wird die Leistung ohne Zutun des Täters nicht erbracht, so wird er straflos, wenn er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as Erbringen der Leistung zu verhindern.

§ 265 Versicherungsmißbrauch

- (1) Wer eine gegen Untergang, Beschädigung, Beeinträchtigung der Brauchbarkeit, Verlust oder Diebstahl versicherte Sache beschädigt, zerstört, in ihrer Brauchbarkeit beeinträchtigt, beiseite schaff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um sich oder einem Dritten Leistungen aus der Versicherung zu verschaff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63 mit Strafe bedroht is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65a Erschleichen von Leistungen

- (1) Wer die Leistung eines Automaten oder eines öffentlichen Zwecken dienenden Telekommunikationsnetzes, die Beförderung durch ein Verkehrsmittel oder den Zutritt zu einer Veranstaltung oder einer Einrichtung in der Absicht erschleicht, das Entgelt nicht zu entricht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Die §§ 247 und 248a gelten entsprechend.

§ 265b Kreditbetrug

(1) Wer einem Betrieb oder Unternehmen im Zusammenhang mit einem Antrag auf Gewährung, Belassung oder Veränderung der Bedingungen eines Kredits für einen Betrieb oder ein Unternehmen oder einen vorgetäuschten Betrieb oder ein vorgetäushtes Unternehmen

1. über wirtschaftliche Verhältnisse

a)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Unterlagen, namentlich Bilanzen, Gewinn- und Verlustrechnungen, Vermögensübersichten oder Gutachten vorlegt oder

b) schriftlich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macht, die für den Kreditnehmer vorteilhaft und für die Entscheidung über einen solchen Antrag erheblich sind, oder

2. solche Verschlechterungen der in den Unterlagen oder Angaben dargestellt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bei der Vorlage nicht mitteilt, die für die Entscheidung über einen solchen Antrag erheblich sin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Nach Absatz 1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verhindert, daß der Kreditgeber auf Grund der Tat die beantragte Leistung erbringt.

Wird die Leistung ohne Zutun des Täters nicht erbracht, so wird er straflos, wenn er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as Erbringen der Leistung zu verhindern.

(3) Im Sinne des Absatzes 1 sind

1. Betriebe und Unternehmen unabhängig von ihrem Gegenstand solche, die nach Art und Umfang einen in kaufmännischer Weise eingerichteten Geschäftsbetrieb erfordern;
2. Kredite Gelddarlehen aller Art, Akzeptkredite, der entgeltliche Erwerb und die Stundung von Geldforderungen, die Diskontierung von Wechseln und Schecks und die Übernahme von Bürgschaften, Garantien und sonstigen Gewährleistungen.

§ 266 Untreue

- (1) Wer die ihm durch Gesetz, behördlichen Auftrag oder Rechtsgeschäft eingeräumte Befugnis,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oder einen anderen zu verpflichten, mißbraucht oder die ihm kraft Gesetzes, behördlichen Auftrags, Rechtsgeschäfts oder eines Treueverhältnisses obliegende Pflicht, fremde Vermögensinteressen wahrzunehmen, verletzt und dadurch dem, dessen Vermögensinteressen er zu betreuen hat, Nachteil zufü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 243 Abs. 2 und die §§ 247, 248a und 263 Abs. 3 gelten entsprechend.

§ 266a Vorenthalten und Veruntreuen von Arbeitsentgelt

- (1) Wer als Arbeitgeber der Einzugsstelle Beiträge des Arbeitnehmers

zur Sozialver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Arbeitsförderung, unabhängig davon, ob Arbeitsentgelt gezahlt wird, vorent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als Arbeitgeber

1. der für den Einzug der Beiträge zuständigen Stelle über sozialversicherungsrechtlich erhebliche Tatsach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macht oder
2. die für den Einzug der Beiträge zuständige Stelle pflichtwidrig über sozialversicherungsrechtlich erhebliche Tatsachen in Unkenntnis lässt

und dadurch dieser Stelle vom Arbeitgeber zu tragende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Arbeitsförderung, unabhängig davon, ob Arbeitsentgelt gezahlt wird, vorenthält.

(3) Wer als Arbeitgeber sonst Teile des Arbeitsentgelts, die er für den Arbeitnehmer an einen anderen zu zahlen hat, dem Arbeitnehmer einbehält, sie jedoch an den anderen nicht zahlt und es unterlässt, den Arbeitnehmer spätestens im Zeitpunkt der Fälligkeit oder unverzüglich danach über das Unterlassen der Zahlung an den anderen zu unterricht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Satz 1 gilt nicht für Teile des Arbeitsentgelts, die als Lohnsteuer einbehalten werden.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aus grobem Eigennutz in großem Ausmaß Beiträge vorenthält,

2. unter Verwendung nachgemachter oder verfälschter Belege fortgesetzt Beiträge vorenthält oder
 3. die Mithilfe eines Amtsträgers ausnutzt, der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missbraucht.
- (5) Dem Arbeitgeber stehen der Auftraggeber eines Heimarbeiters, Hausgewerbetreibenden oder einer Person, die im Sinne des Heimarbeitsgesetzes diesen gleichgestellt ist, sowie der Zwischenmeister gleich.
- (6)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kann das Gericht von einer Bestrafung nach dieser Vorschrift absehen, wenn der Arbeitgeber spätestens im Zeitpunkt der Fälligkeit oder unverzüglich danach der Einzugsstelle schriftlich
1. die Höhe der vorenthaltenen Beiträge mitteilt und
 2. darlegt, warum die fristgemäße Zahlung nicht möglich ist, obwohl er sich darum ernsthaft bemüht hat.

Liegen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vor und werden die Beiträge dann nachträglich innerhalb der von der Einzugsstelle bestimmten angemessenen Frist entrichtet, wird der Täter insoweit nicht bestraf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gelten die Sätze 1 und 2 entsprechend.

§ 266b Mißbrauch von Scheck- und Kreditkarten

- (1) Wer die ihm durch die Überlassung einer Scheckkarte oder einer Kreditkarte eingeräumte Möglichkeit, den Aussteller zu einer Zahlung zu veranlassen, mißbraucht und diesen dadurch schäd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 248a gilt entsprechend.

Dreiundzwanzigster Abschnitt Urkundenfälschung

§ 267 Urkundenfälschung

- (1)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eine unechte Urkunde herstellt, eine echte Urkunde verfälscht oder eine unechte oder verfälschte Urkunde gebrau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Betrug oder Urkundenfälschung verbunden hat,
 2. einen Vermögensverlust großen Ausmaßes herbeiführt,
 3. durch eine große Zahl von unechten oder verfälschten Urkunden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erheblich gefährdet oder
 4. seine Befugnisse oder seine Stellung als Amtsträger mißbraucht.
- (4)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die Urkundenfälschung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den §§ 263 bis 264 oder 267 bis 269 verbunden hat, gewerbsmäßig begeht.

§ 268 Fälschung technischer Aufzeichnungen

- (1)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1. eine unechte technische Aufzeichnung herstellt oder eine technische Aufzeichnung verfälscht oder
 2. eine unechte oder verfälschte technische Aufzeichnung gebrau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Technische Aufzeichnung ist eine Darstellung von Daten, Meß- oder Rechenwerten, Zuständen oder Geschehensabläufen, die durch ein technisches Gerät ganz oder zum Teil selbsttätig bewirkt wird, den Gegenstand der Aufzeichnung allgemein oder für Eingeweihte erkennen läßt und zum Beweis einer rechtlich erheblichen Tatsache bestimmt ist, gleichviel ob ihr die Bestimmung schon bei der Herstellung oder erst spätergegeben wird.
- (3) Der Herstellung einer unechten technischen Aufzeichnung steht es gleich, wenn der Täter durch störende Einwirkung auf den Aufzeichnungsvorgang das Ergebnis der Aufzeichnung beeinflußt.
- (4) Der Versuch ist strafbar.
- (5) § 267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 269 Fälschung beweiserheblicher Daten

- (1)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beweiserhebliche Daten so speichert oder verändert, daß bei ihrer Wahrnehmung eine unechte oder verfälschte Urkunde vorliegen würde, oder derart gespeicherte oder veränderte Daten gebrau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 267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 270 Täuschung im Rechtsverkehr bei Datenverarbeitung

De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steht die fälschliche Beeinflussung einer Datenverarbeitung im Rechtsverkehr gleich.

§ 271 Mittelbare Falschbeurkundung

(1) Wer bewirkt, daß Erklärungen, Verhandlungen oder Tatsachen, welche für Rechte oder Rechtsverhältnisse von Erheblichkeit sind, in öffentlichen Urkunden, Büchern, Dateien oder Registern als abgegeben oder geschehen beurkundet oder gespeichert werden, während sie überhaupt nicht oder in anderer Weise oder von einer Person in einer ihr nicht zustehenden Eigenschaft oder von einer anderen Person abgegeben oder geschehen sind,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falsche Beurkundung oder Datenspeicherung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rt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gebraucht.

(3) Handelt der Täter gegen Entgelt od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n Dritten zu bereichern oder eine andere Person zu schädig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4) Der Versuch ist strafbar.

§272 (weggefallen)

§ 273 Verändern von amtlichen Ausweisen

(1)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1. eine Eintragung in einem amtlichen Ausweis entfernt, unkenntlich macht, überdeckt oder unterdrückt oder eine einzelne Seite aus einem amtlichen Ausweis entfernt oder

2. einen derart veränderten amtlichen Ausweis gebrau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67 oder § 274 mit Strafe bedroht is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74 Urkundenunterdrückung, Veränderung einer Grenzbezeichnung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e Urkunde oder eine technische Aufzeichnung, welche ihm entweder überhaupt nicht oder nicht ausschließlich gehört, in der Absicht, einem anderen Nachteil zuzufügen, vernichtet, beschädigt oder unterdrückt,

2. beweiserhebliche Daten (§ 202a Abs. 2), über die er nicht oder nicht ausschließlich verfügen darf, in der Absicht, einem anderen Nachteil zuzufügen, löscht, unterdrückt, unbrauchbar macht oder verändert oder

3. einen Grenzstein oder ein anderes zur Bezeichnung einer Grenze oder eines Wasserstandes bestimmtes Merkmal in der Absicht,

einem anderen Nachteil zuzufügen, wegnimmt, vernichtet, unkenntlich macht, verrückt oder fälschlich setz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275 Vorbereitung der Fälschung von amtlichen Ausweisen

(1) Wer eine Fälschung von amtlichen Ausweisen vorbereitet, indem er

1. Platten, Formen, Drucksätze, Druckstöcke, Negative, Matrizen oder ähnliche Vorrichtungen, die ihrer Art nach zur Begehung der Tat geeignet sind,

2. Papier, das einer solchen Papierart gleicht oder zum Verwechseln ähnlich ist, die zur Herstellung von amtlichen Ausweisen bestimmt und gegen Nachahmung besonders gesichert ist, oder

3. Vordrucke für amtliche Ausweise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feilhält, verwahrt, einem anderen überläßt oder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Absatz 1 verbunden h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3) § 149 Abs. 2 und 3 gilt entsprechend.

§ 276 Verschaffen von falschen amtlichen Ausweisen

(1) Wer einen unechten oder verfälschten amtlichen Ausweis oder einen amtlichen Ausweis, der eine falsche Beurkundung der in den §§ 271 und 348 bezeichneten Art enthält,

1.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unternimmt oder
 2. in der Absicht, dessen Gebrauch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zu ermöglichen,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verwahr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Straftaten nach Absatz 1 verbunden hat,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276a Aufenthaltsrechtliche Papiere, Fahrzeugpapiere

Die §§ 275 und 276 gelten auch für aufenthaltsrechtliche Papiere, namentlich Aufenthaltstitel und Duldungen, sowie für Fahrzeugpapiere, namentlich Fahrzeugscheine und Fahrzeugbriefe.

§ 277 Fälschung von Gesundheitszeugnissen

Wer unter der ihm nicht zustehenden Bezeichnung als Arzt oder als eine andere approbierte Medizinalperson oder unberechtigt unter dem Namen solcher Person ein Zeugnis über seinen oder eines anderen Gesundheitszustand ausstellt oder ein derartiges echtes Zeugnis verfälscht und davon zur Täuschung von Behörden oder Versicherungsgesellschaften Gebrauch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78 Ausstellen unrichtiger Gesundheitszeugnisse

Ärzte und andere approbierte Medizinalpersonen, welche ein unrichtiges

Zeugnis über den Gesundheitszustand eines Menschen zum Gebrauch bei einer Behörde oder Versicherungsgesellschaft wider besseres Wissen ausstellen, werden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79 Gebrauch unrichtiger Gesundheitszeugnisse

Wer, um eine Behörde oder eine Versicherungsgesellschaft über seinen oder eines anderen Gesundheitszustand zu täuschen, von einem Zeugnis der in den §§ 277 und 278 bezeichneten Art Gebrauch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0 (weggefallen)

§ 281 Mißbrauch von Ausweispapieren

- (1) Wer ein Ausweispapier, das für einen anderen ausgestellt ist,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gebraucht, oder wer zur Täuschung im Rechtsverkehr einem anderen ein Ausweispapier überläßt, das nicht für diesen ausgestell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2) Einem Ausweispapier stehen Zeugnisse und andere Urkunden gleich, die im Verkehr als Ausweis verwendet werden.

§ 282 Vermögensstrafe, Erweiterter Verfall und Einziehung

- (1) In den Fällen der §§ 267 bis 269, 275 und 276 sind die §§ 43a und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gewerbsmäßig handelt.

- (2)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67, § 268, § 271 Abs. 2 und 3, §273 oder § 276, dieser auch in Verbindung mit § 276a, oder nach § 279 bezieht, könneneingezogen werden. In den Fällen des § 275, auch in Verbindung mit § 276a, werden diedort bezeichneten Fälschungsmittel eingezogen.

Vierundzwanzigster Abschnitt Insolvenzstraftaten

§ 283 Bankrott

-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beiÜberschuldung oder bei drohender oder eingetretener Zahlungsunfähigkeit
1. Bestandteile seines Vermögens, die im Falle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zur Insolvenzmasse gehören, beiseite schafft oder verheimlicht oder in einer den Anforderungen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 widersprechenden Weise zerstört, beschädigt oder unbrauchbar macht,
 2. in einer den Anforderungen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 widersprechenden Weise Verlust–oder Spekulationsgeschäfte oder Differenzgeschäfte mit Waren oder Wertpapieren eingeht oder durch unwirtschaftliche Ausgaben, Spiel oder Wetteübermäßige Beträge verbraucht oder schuldig wird,
 3. Waren oder Wertpapiere auf Kredit beschafft und sie oder die aus

- diesen Warenhergestellten Sachen erheblich unter ihrem Wert in einer den Anforderungen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 widersprechenden Weise veräußert oder sonst abgibt,
4. Rechte anderer vortäuscht oder erdichtete Rechte anerkennt,
 5. Handelsbücher, zu deren Führung er gesetzlich verpflichtet ist, zu führen unterläßt oder so führt oder verändert, daß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wird,
 6. Handelsbücher oder sonstige Unterlagen, zu deren Aufbewahrung ein Kaufmann nach Handelsrecht verpflichtet ist, vor Ablauf der für Buchführungspflichtige bestehenden Aufbewahrungsfristen beiseite schafft, verheimlicht, zerstört oder beschädigt und dadurch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7. entgegen dem Handelsrecht a) Bilanzen so aufstellt, daß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wird, oder b) es unterläßt, die Bilanz seines Vermögens oder das Inventar in der vorgeschriebenen Zeit aufzustellen, oder
 8. in einer anderen, den Anforderungen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 grob widersprechenden Weise seinen Vermögensstand verringert oder seine wirklich geschäftlichen Verhältnisse verheimlicht oder verschleier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durch eine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Handlungen seine Überschuldung oder Zahlungsunfähigkeit herbeiführ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Wer in den Fällen
1. des Absatzes 1 die Überschuldung oder die drohende oder eingetretene Zahlungsunfähigkeit fahrlässig nicht kennt oder

2. des Absatzes 2 die Überschuldung oder Zahlungsunfähigkeit leichtfert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5) Wer in den Fällen

1. des Absatzes 1 Nr. 2, 5 oder 7 fahrlässig handelt und die Überschuldung oder drohende oder eingetretene Zahlungsunfähigkeit wenigstens fahrlässig nicht kennt oder
2. des Absatzes 2 in Verbindung mit Absatz 1 Nr. 2, 5 oder 7 fahrlässig handelt und die Überschuldung oder Zahlungsunfähigkeit wenigstens leichtfert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6) Die Tat ist nur dann strafbar, wenn der Täter seine Zahlungen eingestellt hat oder über sein Vermögen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oder der Eröffnungsantrag mangels Masse abgewiesen worden ist.

§ 283a Besonders schwerer Fall des Bankrotts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des § 283 Abs. 1 bis 3 wird der Bankrott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aus Gewinnsucht handelt oder
2. wissentlich viele Personen in die Gefahr des Verlustes ihrer ihm anvertrauten Vermögenswerte oder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 283b Verletzung der Buchführungspflicht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Handelsbücher, zu deren Führung er gesetzlich verpflichtet ist, zu führen unterläßt oder so führt oder verändert, daß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wird,
 2. Handelsbücher oder sonstige Unterlagen, zu deren Aufbewahrung er nach Handelsrecht verpflichtet ist, vor Ablauf der gesetzlichen Aufbewahrungsfristen beiseite schafft, verheimlicht, zerstört oder beschädigt und dadurch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3. entgegen dem Handelsrecht
 - a) Bilanzen so aufstellt, daß die Übersicht über seinen Vermögensstand erschwert wird, oder
 - b) es unterläßt, die Bilanz seines Vermögens oder das Inventar in der vorgeschriebenen Zeit aufzustellen.
- (2)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oder 3 fahrlässig 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 283 Abs. 6 gilt entsprechend.

§ 283c Gläubigerbegünstigung

- (1) Wer in Kenntnis seiner Zahlungsunfähigkeit einem Gläubiger eine Sicherheit oder Befriedigung gewährt, die dieser nicht oder nicht in der Art oder nicht zu der Zeit zu beanspruchen hat, und ihn dadurch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vor den übrigen Gläubigern begüns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 283 Abs. 6 gilt entsprechend.

§ 283d Schuldnerbegünstigung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in Kenntnis der einem anderen drohenden Zahlungsunfähigkeit oder
2. nach Zahlungseinstellung, in einem Insolvenzverfahren oder in einem Verfahren zur Herbeiführung der 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eines anderen

Bestandteile des Vermögens eines anderen, die im Falle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zur Insolvenzmasse gehören, mit dessen Einwilligung oder zu dessen Gunsten beiseite schafft oder verheimlicht oder in einer den Anforderungen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 widersprechenden Weise zerstört, beschädigt oder unbrauchbar mach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aus Gewinnsucht handelt oder
2. wissentlich viele Personen in die Gefahr des Verlustes ihrer dem anderen anvertrauten Vermögenswerte oder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4) Die Tat ist nur dann strafbar, wenn der andere seine Zahlungen eingestellt hat oder über sein Vermögen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oder der Eröffnungsantrag mangels Masse abgewiesen worden ist.

Fünfundzwanzigster Abschnitt Strafbarer Eigennutz

§ 284 Unerlaubte Veranstaltung eines Glücksspiels

- (1) Wer ohne behördliche Erlaubnis öffentlich ein Glücksspiel veranstaltet oder hält oder die Einrichtungen hierzu bereitstel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Als öffentlich veranstaltet gelten auch Glücksspiele in Vereinen oder geschlossenen Gesellschaften, in denen Glücksspiele gewohnheitsmäßig veranstaltet werden.
- (3)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1. gewerbsmäßig oder
 2.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4) Wer für ein öffentliches Glücksspiel (Absätze 1 und 2) wir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5 Beteiligung am unerlaubten Glücksspiel

Wer sich an einem öffentlichen Glücksspiel (§ 284) beteil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286 Vermögensstrafe, Erweiterter Verfall und Einziehung

- (1) In den Fällen des § 284 Abs. 3 Nr. 2 sind die §§ 43a, 73d anzuwenden. § 73d ist auch in den Fällen des § 284 Abs. 3 Nr. 1 anzuwenden.
- (2) In den Fällen der §§ 284 und 285 werden die Spieleinrichtungen und das auf dem Spieltisch oder in der Bank vorgefundene Geld eingezogen, wenn sie dem Täter oder Teilnehmer zur Zeit der Entscheidung gehören. Andernfalls können die Gegenstände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287 Unerlaubte Veranstaltung einer Lotterie oder einer Ausspielung

- (1) Wer ohne behördliche Erlaubnis öffentliche Lotterien oder Ausspielungen beweglicher oder unbeweglicher Sachen veranstaltet, namentlich den Abschluß von Spielverträgen für eine öffentliche Lotterie oder Ausspielung anbietet oder auf den Abschluß solcher Spielverträge gerichtete Angebote an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für öffentliche Lotterien oder Ausspielungen (Absatz 1) wir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8 Vereiteln der Zwangsvollstreckung

- (1) Wer bei einer ihm drohenden Zwangsvollstreckung in der Absicht, die Befriedigung des Gläubigers zu vereiteln, Bestandteile seines Vermögens veräußert oder beiseiteschaf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 289 Pfandkehr

- (1) Wer seine eigene bewegliche Sache oder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zugunsten des Eigentümers derselben dem Nutznießer, Pfandgläubiger oder demjenigen, welchem an der Sache ein Gebrauchs- oder Zurückbehaltungsrecht zusteht, in rechtswidriger Absicht weg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 290 Unbefugter Gebrauch von Pfandsachen

Öffentliche Pfandleiher, welche die von ihnen in Pfand genommenen Gegenstände unbefugt in Gebrauch nehmen, werden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91 Wucher

- (1) Wer die Zwangslage, die Unerfahrenheit, den Mangel an Urteilsvermögen oder die erhebliche Willensschwäche eines anderen dadurch ausbeutet, daß er sich oder einem Dritten
1. für die Vermietung von Räumen zum Wohnen oder damit verbundene Nebenleistungen,
 2. für die Gewährung eines Kredits,
 3. für eine sonstige Leistung oder
 4. für die Vermittlung einer der vorbezeichneten Leistungen
-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läßt, die in einem

auffälligen Mißverhältnis zu der Leistung oder deren Vermittlung steh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irken mehrere Personen als Leistende, Vermittler oder in anderer Weise mit und ergibt sich dadurch ein auffälliges Mißverhältnis zwischen sämtlichen Vermögensvorteilen und sämtlichen Gegenleistungen, sogilt Satz 1 für jeden, der die Zwangslage oder sonstige Schwäche des anderen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zur Erzielung eines übermäßigen Vermögensvorteils ausnutz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durch die Tat den anderen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2. die Tat gewerbsmäßig begeht,
3. sich durch Wechsel wucherische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läßt.

§ 292 Jagdwilderei

(1) Wer unter Verletzung fremden Jagdrechts oder Jagdausübungsrechts

1. dem Wild nachstellt, es fängt, erlegt oder sich oder einem Dritten zueignet oder
2. eine Sache, die dem Jagdrecht unterliegt, sich oder einem Dritten zueignet, beschädigt oder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ie Tat

1. gewerbs- oder gewohnheitsmäßig,
2. zur Nachtzeit, in der Schonzeit, unter Anwendung von Schlingen oder in anderer nicht weidmännischer Weise oder
3. von mehreren mit Schußwaffen ausgerüsteten Beteiligten gemeinschaftlich begangen wird.

§ 293 Fischwilderei

Wer unter Verletzung fremden Fischereirechts oder Fischereiausübungsrechts

1. fischt oder
2. eine Sache, die dem Fischereirecht unterliegt, sich oder einem Dritten zueignet, beschädigt oder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94 Strafantrag

In den Fällen des § 292 Abs. 1 und des § 293 wird die Tat nur auf Antrag des Verletzten verfolgt, wenn sie von einem Angehörigen oder an einem Ort begangen worden ist, wo der Täter die Jagd oder die Fischerei in beschränktem Umfang ausüben durfte.

§ 295 Einziehung

Jagd- und Fischereigeräte, Hunde und andere Tiere,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bei der Tat mit sich geführt oder verwendet ha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296 (weggefallen)

§ 297 Gefährdung von Schiffen, Kraft- und Luftfahrzeugen durch Bannware

- (1) Wer ohne Wissen des Reeders oder des Schiffsführers oder als Schiffsführer ohne Wissen des Reeders eine Sache an Bord eines deutschen Schiffes bringt oder nimmt, deren Beförderung
1. für das Schiff oder die Ladung die Gefahr einer Beschlagnahme oder Einziehung oder
 2. für den Reeder oder den Schiffsführer die Gefahr einer Bestrafun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als Reeder ohne Wissen des Schiffsführers eine Sache an Bord eines deutschen Schiffes bringt oder nimmt, deren Beförderung für den Schiffsführer die Gefahr einer Bestrafung verursacht.
- (3) Absatz 1 Nr. 1 gilt auch für ausländische Schiffe, die ihre Ladung ganz oder zum Teil im Inland genommen haben.
- (4) Die Absätze 1 bis 3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Sachen in Kraft- oder Luftfahrzeuge gebracht oder genommen werden. An die Stelle des Reeders und des Schiffsführers treten der Halter und der Führer des Kraft- oder Luftfahrzeuges.

**Sechszwanzigs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en Wettbewerb**

§ 298 Wettbewerbsbeschränkende Absprachen bei Ausschreibungen

- (1) Wer bei einer Ausschreibung über 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ein Angebot abgibt, das auf einer rechtswidrigen Absprache beruht, die darauf abzielt, den Veranstalter zur Annahme eines bestimmten Angebots zu veran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Ausschreibung im Sinne des Absatzes 1 steht die freihändige Vergabe eines Auftrages nach vorausgegangenem Teilnahmewettbewerb gleich.
- (3) Nach Absatz 1, auch in Verbindung mit Absatz 2,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verhindert, daß der Veranstalter das Angebot annimmt oder dieser seine Leistung erbringt.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as Angebot nicht angenommen oder die Leistung des Veranstalters nicht erbracht, so wird er straflos, wenn er sich freiwillig und ernsthaft bemüht, die Annahme des Angebots oder das Erbringen der Leistung zu verhindern.

§ 299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geschäftlichen Verkehr

- (1) Wer als Angestellter oder Beauftragter eines geschäftlichen Betriebes im geschäftlichen Verkehr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daß er einen anderen bei dem Bezug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m Wettbewerb in unlauterer Weise bevorzu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im geschäftlichen Verkehr zu Zwecken des Wettbewerbs einem Angestellten oder Beauftragten eines

geschäftlichen Betriebes einen Vorteil für diesen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daß er ihn oder einen anderen bei dem Bezug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n unlauterer Weise bevorzuge.

-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Handlungen im ausländischen Wettbewerb.

§ 300 Besonders schwere Fälle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geschäftlichen Verkehr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wird eine Tat nach § 299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1. die Tat sich auf einen Vorteil großen Ausmaßes bezieht oder
2.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301 Strafantrag

- (1) Die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geschäftlichen Verkehr nach § 299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2) Das Recht, den Strafantrag nach Absatz 1 zu stellen, hat neben dem Verletzten jeder der in § 8 Abs. 3 Nr. 1, 2 und 4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bezeichneten Gewerbetreibenden, Verbände und Kammern.

§ 302 Vermögensstrafe und Erweiterter Verfall

- (1) In den Fällen des § 299 Abs. 1 ist §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2) In den Fällen des § 299 Abs. 2 sind die §§ 43a,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73d ist auch dann 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Siebenundzwanzigster Abschnitt Sachbeschädigung

§ 303 Sachbeschädigung

- (1) Wer rechtswidrig eine fremde Sache beschädigt oder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unbefugt das Erscheinungsbild einer fremden Sache nicht nur unerheblich und nicht nur vorübergehend veränder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303a Datenveränderung

- (1) Wer rechtswidrig Daten (§ 202a Abs. 2) löscht, unterdrückt, unbrauchbar macht oder verän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Für die Vorbereitung einer Straftat nach Absatz 1 gilt § 202c entsprechend.

§ 303b Computersabotage

- (1) Wer eine Datenverarbeitung, die für einen anderen von wesentlicher Bedeutung ist, dadurch erheblich stört, dass er
1. eine Tat nach §303a Abs. 1 begeht,
 2. Daten (§ 202a Abs. 2) in der Absicht, einem anderen Nachteil zuzufügen, eingibt oder übermittelt oder
 3. eine Datenverarbeitungsanlage oder einen Datenträger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beseitigt oder veränder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Handelt es sich um eine Datenverarbeitung, die für einen fremden Betrieb, ein fremdes Unternehmen oder eine Behörde von wesentlicher Bedeutung ist,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4)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einen Vermögensverlust großen Ausmaßes herbeiführt,
 2.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Computersabotage verbunden hat,
 3. durch die Tat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lebenswichtigen Gütern oder Dienstleistungen ode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einträchtigt.
- (5) Für die Vorbereitung einer Straftat nach Absatz 1 gilt § 202c entsprechend.

§ 303c Strafantrag

In den Fällen der §§ 303, 303a Abs. 1 und 2 sowie § 303b Abs. 1 bis 3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ß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 304 Gemeinschädliche Sachbeschädigung

- (1) Wer rechtswidrig Gegenstände der Verehrung einer im Staat bestehenden Religionsgesellschaft oder Sachen, die dem Gottesdienst gewidmet sind, oder Grabmäler, öffentliche Denkmäler, Naturdenkmäler, Gegenstände der Kunst, der Wissenschaft oder des Gewerbes, welche in öffentlichen Sammlungen aufbewahrt werden oder öffentlich aufgestellt sind, oder Gegenstände, welche zum öffentlichen Nutzen oder zur Verschönerung öffentlicher Wege, Plätze oder Anlagen dienen, beschädigt oder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unbefugt das Erscheinungsbild einer in Absatz 1 bezeichneten Sache oder eines dort bezeichneten Gegenstandes nicht nur unerheblich und nicht nur vorübergehend verändert.
- (3) Der Versuch ist strafbar.

§ 305 Zerstörung von Bauwerken

- (1) Wer rechtswidrig ein Gebäude, ein Schiff, eine Brücke, einen

Damm, eine gebaute Straße, eine Eisenbahn oder ein anderes Bauwerk, welche fremdes Eigentum sind,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05a Zerstörung wichtiger Arbeitsmittel

(1) Wer rechtswidrig

1. ein fremdes technisches Arbeitsmittel von bedeutendem Wert, das für die Errichtung einer Anlage oder eines Unternehmens im Sinne des § 316b Abs. 1 Nr. 1 oder 2 oder einer Anlage, die dem Betrieb oder der Entsorgung einer solchen Anlage oder eines solchen Unternehmens dient, von wesentlicher Bedeutung ist, oder
2. ein Kraftfahrzeug der Polizei oder der Bundeswehr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Achtundzwanzigster Abschnitt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 306 Brandstiftung

(1) Wer fremde

1. Gebäude oder Hütten,
2. Betriebsstätten oder technische Einrichtungen, namentlich Maschinen,

3. Warenlager oder -vorräte,
 4. Kraftfahrzeuge, Schienen-, Luft-oder Wasserfahrzeuge,
 5. Wälder, Heiden oder Moore oder
 6. land-, ernährungs-oder forstwirtschaftliche Anlagen oder Erzeugnisse
- in Brand setzt oder durch eine Brandlegung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06a Schwere Brandstiftung

- (1)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wird bestraft, wer
1. ein Gebäude, ein Schiff, eine Hütte oder eine andere Räumlichkeit, die der Wohnung von Menschen dient,
 2. eine Kirche oder ein anderes der Religionsausübung dienendes Gebäude oder
 3. eine Räumlichkeit, die zeitweise dem Aufenthalt von Menschen dient, zu einer Zeit, in der Menschen sich dort aufzuhalten pflegen,
- in Brand setzt oder durch eine Brandlegung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in § 306 Abs. 1 Nr. 1 bis 6 bezeichnete Sache in Brand setzt oder durch eine Brandlegung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und dadurch einen anderen Menschen in die Gefahr einer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06b Besonders schwere Brandstiftung

- (1) Wer durch eine Brandstiftung nach § 306 oder § 306a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bestraft.
- (2)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 306a
1. einen anderen Mensche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bringt,
 2. in der Absicht handelt, eine andere Straftat zu ermöglichen oder zu verdecken oder
 3. das Löschen des Brandes verhindert oder erschwert.

§ 306c Brandstiftung mit Todesfolge

Verursacht der Täter durch eine Brandstiftung nach den §§ 306 bis 306b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306d Fahrlässige Brandstiftung

- (1) Wer in den Fällen des § 306 Abs. 1 oder des § 306a Abs. 1 fahrlässig handelt oder in den Fällen des § 306a Abs. 2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in den Fällen des § 306a Abs.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06e Tätige Reue

- (1) Das Gericht kann in den Fällen der §§ 306, 306a und 306b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den Brand lösch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 (2) Nach § 306d wird nicht bestraft, wer freiwillig den Brand lösch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 (3) Wird der Brand ohne Zutun des Täters gelösch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anden ist, so genügt sein freiwilliges und ernsthaftes Bemühen, dieses Ziel zu erreichen.

§ 306f Herbeiführen einer Brandgefahr

- (1) Wer fremde
 1. feuergefährdete Betriebe oder Anlagen,
 2. Anlagen oder Betriebe der Land- oder Ernährungswirtschaft, in denen sich deren Erzeugnisse befinden,
 3. Wälder, Heiden oder Moore oder
 4. bestellte Felder oder leicht entzündliche Erzeugnisse der Landwirtschaft, die auf Feldern lagern,durch Rauchen, durch offenes Feuer oder Licht, durch Wegwerfen brennender oder glimmender Gegenstände oder in sonstiger Weise in Brandgefahr brin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in Absatz 1 Nr. 1 bis 4 bezeichnete Sache in Brandgefahr bring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 (3)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handelt od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07 Herbeiführen einer Explosion durch Kernenergie

- (1) Wer es unternimmt, durch Freisetzen von Kernenergie eine Explosion herbeizuführen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zu gefährden,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bestraft.
- (2) Wer durch Freisetzen von Kernenergie eine Explosion herbeiführ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fahrlässig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1.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08 Herbeiführen einer Sprengstoffexplosion

- (1) Wer anders als durch Freisetzen von Kernenergie, namentlich durch Sprengstoff, eine Explosion herbeiführ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bestraft.
- (2)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zu erkennen.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4)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6)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09 Mißbrauch ionisierender Strahlen

- (1) Wer in der Absicht,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Menschen zu schädigen, es unternimmt, ihn einer ionisierenden Strahlung auszusetzen, die dessen Gesundheit zuschädigen geeigne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Unternimmt es der Täter, eine unübersehbare Zahl von Menschen einer solchen Strahlung auszusetz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 (3) Verursach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zu erkennen.
- (4)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6) Wer in der Absicht,
 1. die Brauchbarkeit einer fremden Sache von bedeutendem Wert zu beeinträchtigen,
 2. nachhaltig ein Gewässer, die Luft oder den Boden nachteilig zu verändern oder
 3. ihm nicht gehörende Tiere oder Pflanzen von bedeutendem Wert zu schädigen, die Sache, das Gewässer, die Luft, den Boden, die

Tiere oder Pflanzen einerionisierenden Strahlung aussetzt, die geeignet ist, solche Beeinträchtigungen, Veränderungen oder Schäden hervorzuruf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310 Vorbereitung eines Explosions-oder Strahlungsverbrechens

(1) Wer zur Vorbereitung

1. eines bestimmten Unternehmens im Sinne des § 307 Abs. 1 oder des § 309 Abs. 2,
2. einer Straftat nach §308 Abs. 1, die durch Sprengstoff begangen werden soll,
3. einer Straftat nach § 309 Abs. 1 oder
4. einer Straftat nach § 309 Abs. 6

Kernbrennstoffe, sonstige radioaktive Stoffe, Sprengstoffe oder die zur Ausführungder Tat erforderlichen besonderen Vorrichtungen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verschafft, verwahr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wird in den Fällen der Nummer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den Fällen der Nummer 2 und derNummer 3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den Fällen derNummer 4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3 und 4 ist der Versuch strafbar.

§ 311 Freisetzen ionisierender Strahlen

(1) Wer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 330d Nr. 4, 5)

1. ionisierende Strahlen freisetzt oder

2. Kernspaltungsvorgänge bewirkt,

die geeignet sind,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zu schädi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Wer fahrlässig

1.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eine Handlung im Sinne des Absatzes 1 in einer Weise begeht, die geeignet ist, eine Schädigung außerhalb des zur Anlage gehörenden Bereichs herbeizuführen oder

2. in sonstigen Fällen des Absatzes 1 unter grob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2 Fehlerhafte Herstellung einer kerntechnischen Anlage

(1) Wer eine kerntechnische Anlage (§ 330d Nr. 2) oder Gegenstände, die zur Errichtung oder zum Betrieb einer solchen Anlage bestimmt sind, fehlerhaft herstellt oder liefert und dadurch eine Gefahr für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ü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herbeiführt, die mit der Wirkung eines Kernspaltungsvorgangs oder der Strahlung eines radioaktiven Stoffes zusammenhäng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4)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6)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oder
 - 2. leichtfert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3 Herbeiführen einer Überschwemmung

- (1) Wer eine Überschwemmung herbeiführ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 308 Abs. 2 bis 6 gilt entsprechend.

§ 314 Gemeingefährliche Vergiftung

-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wird bestraft, wer

1. Wasser in gefaßten Quellen, in Brunnen, Leitungen oder Trinkwasserspeichern oder
 2. Gegenstände, die zum öffentlichen Verkauf oder Verbrauch bestimmt sind, vergiftet oder ihnen gesundheitsschädliche Stoffe beimischt oder vergiftete oder mitgesundheitsschädlichen Stoffen vermischte Gegenstände im Sinne der Nummer 2 verkauft, feilhält oder sonst in den Verkehr bringt.
- (2) § 308 Abs. 2 bis 4 gilt entsprechend.

§ 314a Tätige Reue

- (1) Das Gericht kann die Strafe in den Fällen des § 307 Abs. 1 und des § 309 Abs. 2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wenn der Täter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sonst die Gefahr abwendet.
- (2) Das Gericht kann die in den folgenden Vorschriften angedroht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1. in den Fällen des § 309 Abs. 1 oder § 314 Abs. 1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sonst die Gefahr abwendet oder
 2. in den Fällen des
 - a) § 307 Abs. 2,
 - b) § 308 Abs. 1 und 5,
 - c) § 309 Abs. 6,
 - d) § 311 Abs. 1,

- e) §312 Abs. 1 und 6 Nr. 1,
 - f) § 313, auch in Verbindung mit § 308 Abs. 5,
freiwillig die Gefahr abwende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 (3) Nach den folgenden Vorschriften wird nicht bestraft, wer
- 1. in den Fällen des
 - a) §307 Abs. 4,
 - b) § 308 Abs. 6,
 - c) § 311 Abs. 3,
 - d) § 312 Abs. 6 Nr. 2,
 - e) § 313 Abs. 2 in Verbindung mit § 308 Abs. 6
freiwillig die Gefahr abwende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oder
 - 2. in den Fällen des § 310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sonstdie Gefahr abwendet.
- (4)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ie Gefahr abgewendet, so genügt sein freiwilliges unternsthaftes Bemühen, dieses Ziel zu erreichen.

§ 315 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Bahn-, Schiffs-und Luftverkehr

- (1) Wer die Sicherheit des Schienenbahn-, Schwebebahn-, Schiffs-oder Luftverkehrs dadurch beeinträchtigt, daß er
- 1. Anlagen oder Beförderungsmittel zerstört, beschädigt oder beseitigt,
 - 2. Hindernisse bereitet,
 - 3. falsche Zeichen oder Signale gibt oder
 - 4. einen ähnlichen, ebenso gefährlichen Eingriff vornimmt,
-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Auf Freiheitsstrafe nicht unter einem Jahr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1. in der Absicht handelt,

a) einen Unglücksfall herbeizuführen oder

b) eine andere Straftat zu ermöglichen oder zu verdecken, oder

2.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verursacht.

(4)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6)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5a Gefährdung des Bahn-, Schiffs- und Luftverkehrs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 Schienenbahn–oder Schwebebahnfahrzeug, ein Schiff oder ein Luftfahrzeug führt, obwohl er infolge des Genusses alkoholischer Getränke oder anderer berauschender Mittel oder infolge geistiger oder körperlicher Mängel nicht in der Lage ist, das Fahrzeug sicher zu führen, oder
 2. als Führer eines solchen Fahrzeugs oder als sonst für die Sicherheit Verantwortlicher durch grob pflichtwidriges Verhalten gegen Rechtsvorschriften zur Sicherung des Schienenbahn–, Schwebebahn–, Schiffs–oder Luftverkehrs verstöß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ist der Versuch strafbar.
- (3)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oder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5b 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Straßenverkehr

- (1) Wer die Sicherheit des Straßenverkehrs dadurch beeinträchtigt, daß er
1. Anlagen oder Fahrzeuge zerstört, beschädigt oder beseitigt,
 2. Hindernisse bereitet oder
 3. einen ähnlichen, ebenso gefährlichen Eingriff vornimmt,
-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Handelt der Tät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315 Abs. 3,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5c Gefährdung des Straßenverkehrs

- (1) Wer im Straßenverkehr
 - 1. ein Fahrzeug führt, obwohl er
 - a) infolge des Genusses alkoholischer Getränke oder anderer berauschender Mittel oder
 - b) infolge geistiger oder körperlicher Mängelnicht in der Lage ist, das Fahrzeug sicher zu führen, oder
 - 2. grob verkehrswidrig und rücksichtslos
 - a) die Vorfahrt nicht beachtet,
 - b) falsch überholt oder sonst bei Überholvorgängen falsch fährt,
 - c) an Fußgängerüberwegen falsch fährt,
 - d) an unübersichtlichen Stellen, an Straßenkreuzungen, Straßeneinmündungen oder Bahnübergängen zu schnell fährt,

- e) an unübersichtlichen Stellen nicht die rechte Seite der Fahrbahn einhält,
- f) auf Autobahnen oder Kraftfahrstraßen wendet, rückwärts oder entgegen der Fahrtrichtung fährt oder dies versucht oder
- g) haltende oder liegengebliebene Fahrzeuge nicht auf ausreichende Entfernung kenntlich macht, obwohl das zur Sicherung des Verkehrs erforderlich is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ist der Versuch strafbar.

(3)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oder
 -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5d Schienenbahnen im Straßenverkehr

Soweit Schienenbahnen am Straßenverkehr teilnehmen, sind nur die Vorschriften zum Schutz des Straßenverkehrs (§§ 315b und 315c) anzuwenden.

§ 316 Trunkenheit im Verkehr

- (1) Wer im Verkehr (§§ 315 bis 315d) ein Fahrzeug führt, obwohl er infolge des Genusses alkoholischer Getränke oder anderer berauschender Mittel nicht in der Lage ist, das Fahrzeug sicher zu führ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315a oder § 315c mit Strafe bedroht ist.

(2) Nach Absatz 1 wird auch bestraft, wer die Tat fahrlässig begeht.

§ 316a Räuberischer Angriff auf Kraftfahrer

(1) Wer zur Begehung eines Raubes (§§ 249 oder 250), eines räuberischen Diebstahls (§ 252) oder einer räuberischen Erpressung (§ 255) einen Angriff auf Leib oder Leben oder die Entschlußfreiheit des Führers eines Kraftfahrzeugs oder eines Mitfahrers verübt und dabei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des Straßenverkehrs ausnutzt, wird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bestraft.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316b Störung öffentlicher Betriebe

(1) Wer den Betrieb

1. von Unternehmen oder Anlagen, die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Postdienstleistungen oder dem öffentlichen Verkehr dienen,
2. einer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Wasser, Licht, Wärme oder Kraft dienenden Anlage oder eines für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lebenswichtigen Unternehmens oder
3. einer der öffentlichen Ordnung oder Sicherheit dienenden Einrichtung oder Anlage

dadurch verhindert oder stört, daß eine dem Betrieb dienende Sache zerstört, beschädigt, beseitigt, verändert oder unbrauchbar macht oder die für den Betrieb bestimmte elektrische Kraft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r Versuch ist strafbar.

(3)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durch die Tat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lebenswichtigen Gütern, insbesondere mit Wasser, Licht, Wärme oder Kraft, beeinträchtigt.

§ 316c Angriffe auf den Luft- und Seeverkehr

(1)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1. Gewalt anwendet oder die Entschlußfreiheit einer Person angreift oder sonstige Machenschaften vornimmt, um dadurch die Herrschaft über a) ein im zivilen Luftverkehr eingesetztes und im Flug befindliches Luftfahrzeug oder b) ein im zivilen Seeverkehr eingesetztes Schiff zu erlangen oder auf dessen Führung einzuwirken, oder
2. um ein solches Luftfahrzeug oder Schiff oder dessen an Bord befindliche Ladung zu zerstören oder zu beschädigen, Schußwaffen gebraucht oder es unternimmt, eine Explosion oder einen Brand herbeizuführen.

Einem im Flug befindlichen Luftfahrzeug steht ein Luftfahrzeug gleich, das von Mitgliedern der Besatzung oder von Fluggästen bereits

betreten ist oder dessen Beladungsbereits begonnen hat oder das von Mitgliedern der Besatzung oder von Fluggästen noch nicht planmäßig verlassen ist oder dessen planmäßige Entladung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wenigstens leichtfertig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ehn Jahren.
- (4) Wer zur Vorbereitung einer Straftat nach Absatz 1 Schußwaffen, Sprengstoffe oder sonst zur Herbeiführung einer Explosion oder eines Brandes bestimmte Stoffe oder Vorrichtungen herstellt, sich oder einem anderen verschafft, verwahr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317 Störung von Telekommunikationsanlagen

- (1) Wer den Betrieb einer öffentlichen Zwecken dienenden Telekommunikationsanlage dadurch verhindert oder gefährdet, daß er eine dem Betrieb dienende Sache zerstört, beschädigt, beseitigt, verändert oder unbrauchbar macht oder die für den Betrieb bestimmte elektrische Kraft entzi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Wer die Tat fahrlässig beg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8 Beschädigung wichtiger Anlagen

- (1) Wer Wasserleitungen, Schleusen, Wehre, Deiche, Dämme oder andere Wasserbauten oder Brücken, Fähren, Wege oder Schutzwehre oder dem Bergwerksbetrieb dienende Vorrichtungen zur Wasserhaltung, zur Wetterführung oder zum Ein- und Ausfahren der Beschäftigten beschädigt oder zerstör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eine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4)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5)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3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6)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oder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19 Baugefährdung

- (1) Wer bei der Planung, Leitung oder Ausführung eines Baues oder des Abbruchs eines Bauwerks gegen die allgemein anerkannten Regeln der Technik verstöß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in Ausübung eines Berufs oder Gewerbes bei der Planung, Leitung oder Ausführung eines Vorhabens, technische Einrichtungen in ein Bauwerk einzubauen oder eingebaute Einrichtungen dieser Art zu ändern, gegen die allgemein anerkannten Regeln der Technik verstöß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gefährdet.
- (3) Wer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4) Wer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20 Tätige Reue

- (1) Das Gericht kann die Strafe in den Fällen des § 316c Abs. 1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wenn der Täter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sonst den Erfolg abwendet.
- (2) Das Gericht kann die in den folgenden Vorschriften angedroht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in den Fällen

1. des § 315 Abs. 1, 3 Nr. 1 oder Abs. 5,
 2. des § 315b Abs. 1, 3 oder 4, Abs. 3 in Verbindung mit § 315 Abs. 3 Nr. 1,
 3. des § 318 Abs. 1 oder 6 Nr. 1,
 4. des § 319 Abs. 1 bis 3
- freiwillig die Gefahr abwende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3) Nach den folgenden Vorschriften wird nicht bestraft, wer

1. in den Fällen des,
 - a) § 315 Abs. 6,
 - b) § 315b Abs. 5,
 - c) § 318 Abs. 6 Nr. 2,
 - d) § 319 Abs. 4freiwillig die Gefahr abwende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oder
2. in den Fällen des § 316c Abs. 4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sonst die Gefahr abwendet.

(4)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ie Gefahr oder der Erfolg abgewendet, so genügt sein freiwilliges und ernsthaftes Bemühen, dieses Ziel zu erreichen.

§ 321 Führungsaufsicht

In den Fällen der §§ 306 bis 306c und 307 Abs. 1 bis 3, des § 308 Abs. 1 bis 3, des § 309 Abs. 1 bis 4, des § 310 Abs. 1 und des § 316c Abs. 1 Nr. 2 kann das Gericht Führungsaufsicht anordnen (§ 68 Abs. 1).

§ 322 Einziehung

Ist eine Straftat nach den §§ 306 bis 306c, 307 bis 314 oder 316c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die durch die Tat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und
2.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den §§ 310 bis 312, 314 oder 316c bezieht, eingezogen werden.

§ 323 (weggefallen)

§ 323a Vollrausch

- (1) Wer sich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durch alkoholische Getränke oder andere berauschende Mittel in einen Rausch ver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er in diesem Zustand eine rechtswidrige Tat begeht und infolgedessen nicht bestraft werden kann, weil er infolge des Rausches schuldunfähig war oder weil dies nicht auszuschließen ist.
- (2) Die Strafe darf nicht schwerer sein als die Strafe, die für die im Rausch begangene Tat angedroht ist.
- (3) Die Tat wird nur auf Antrag,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t, wenn die Rauschtat nur auf Antrag, mit Ermächtigung oder auf Strafverlangen verfolgt werden könnte.

§ 323b Gefährdung einer Entziehungskur

Wer wissentlich einem anderen, der auf Grund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ohne seine Einwilligung zu einer Entziehungskur in einer Anstalt untergebracht ist, ohne Erlaubnis des Anstaltsleiters oder seines Beauftragten alkoholische Getränke oder andere berauschende Mittel verschafft oder überläßt oder ihn zum Genuß solcher Mittel verlei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23c Unterlassene Hilfeleistung

Wer bei Unglücksfällen oder gemeiner Gefahr oder Not nicht Hilfe leistet, obwohl dies erforderlich und ihm den Umständen nach zuzumuten, insbesondere ohne erhebliche eigene Gefahr und ohne Verletzung anderer wichtiger Pflichten möglich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Neunundzwanzigster Abschnitt Straftaten gegen die Umwelt

§ 324 Gewässerverunreinigung

- (1) Wer unbefugt ein Gewässer verunreinigt oder sonst dessen Eigenschaften nachteilig verän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324a Bodenverunreinigung

- (1) Wer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Stoffe in den Bodeneinbringt, eindringen läßt oder freisetzt und diesen dadurch

1.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Tiere, Pflanzen oder ander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oder ein Gewässer zu schädigen, oder
 2. in bedeutendem Umfang verunreinigt oder sonst nachteilig verän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325 Luftverunreinigung

- (1) Wer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oder Maschine,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Veränderungen der Luft verursacht, die geeignet sind, außerhalb des zur Anlage gehörenden Bereichs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Tiere, Pflanzen oder ander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zu schädi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2) Wer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oder Maschine, unter grob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Schadstoffe in bedeutendem Umfang in die Luft außerhalb des Betriebsgeländes frei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4) Schadstoffe im Sinne des Absatzes 2 sind Stoffe, die geeignet sind,
1.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Tiere, Pflanzen oder ander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zu schädigen oder
 2. nachhaltig ein Gewässer, die Luft oder den Boden zu verunreinigen oder sonstnachteilig zu verändern.
- (5) Die Absätze 1 bis 3 gelten nicht für Kraftfahrzeuge, Schienen-, Luft- oder Wasserfahrzeuge.

§ 325a Verursachen von Lärm, Erschütterungen und nichtionisierenden Strahlen

- (1) Wer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oder Maschine,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Lärm verursacht, der geeignet ist, außerhalb des zur Anlage gehörenden Bereichs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zu schädi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oder Maschine,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die dem Schutz vor Lärm, Erschütterungen oder nichtionisierenden Strahlen dienen,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ihm nicht gehörende Tiere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1.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4) Die Absätze 1 bis 3 gelten nicht für Kraftfahrzeuge, Schienen-, Luft- oder Wasserfahrzeuge.

§ 326 Unerlaubter Umgang mit gefährlichen Abfällen

- (1) Wer unbefugt Abfälle, die
 1. Gifte oder Erreger von auf Menschen oder Tiere übertragbaren gemeingefährlichen Krankheiten enthalten oder hervorbringen können,
 2. Für den Menschen krebserzeugend, fruchtschädigend oder erbgutverändernd sind,
 3. explosionsgefährlich, selbstentzündlich oder nicht nur geringfügig radioaktiv sind oder
 4. nach Art, Beschaffenheit oder Menge geeignet sind,
 - a) nachhaltig ein Gewässer, die Luft oder den Boden zu verunreinigen oder sonstnachteilig zu verändern oder
 - b) einen Bestand von Tieren oder Pflanzen zu gefährden,außerhalb einer dafür zugelassenen Anlage oder unter wesentlicher Abweichung von einem vorgeschriebenen oder zugelassenen Verfahren behandelt, lagert, ablagert, abläßt oder sonst besei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Abfälle im Sinne des Absatzes 1 entgegen einem Verbot oder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in den, aus dem oder durch d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verbringt.

- (3) Wer radioaktive Abfälle unt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nichtabliefer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ist der Versuch strafbar.
- (5)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 1.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 (6) Die Tat ist dann nicht strafbar, wenn schädliche Einwirkungen auf die Umwelt, insbesondere auf Menschen, Gewässer, die Luft, den Boden, Nutztiere oder Nutzpflanzen, wegen der geringen Menge der Abfälle offensichtlich ausgeschlossen sind.

§ 327 Unerlaubtes Betreiben von Anlagen

- (1) Wer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oder entgegen einer vollziehbaren Untersagung
 - 1. eine kerntechnische Anlage betreibt, eine betriebsbereite oder stillgelegte kerntechnische Anlage innehat oder ganz oder teilweise abbaut oder eine solche Anlage oder ihren Betrieb wesentlich ändert oder
 - 2. eine Betriebsstätte, in der Kernbrennstoffe verwendet werden, oder deren Lage wesentlich ändert,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e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 oder eine sonstige Anlage im Sinne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deren Betrieb zum Schutz vor Gefahren untersagt worden ist,
 2. eine genehmigungsbedürftige oder anzeigepflichtige Rohrleitungsanlage zum Befördern wassergefährdender Stoffe im Sinne des Wasserhaushaltsgesetzes oder
 3. eine Abfallentsorgungsanlage im Sinne des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es ohne die nach dem jeweiligen Gesetz erforderliche Genehmigung oder Planfeststellung oder entgegen einer auf dem jeweiligen Gesetz beruhenden vollziehbaren Untersagung betreibt.
- (3)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1.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 328 Unerlaubter Umgang mit radioaktiven Stoff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offen und Gütern

-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1. wer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oder entgegen einer vollziehbaren Untersagung Kernbrennstoffe oder
 2. wer grob pflichtwidrig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oder wer entgegen einer vollziehbaren Untersagung sonstige radioaktive Stoffe, die nach Art, Beschaffenheit oder Menge geeignet sind, durch ionisierende Strahlen den Tod oder eine schwere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herbeizuführen,

aufbewahrt, befördert, bearbeitet, verarbeitet oder sonst verwendet, einführt oder ausführt.

(2) Ebenso wird bestraft, wer

1. Kernbrennstoffe, zu deren Ablieferung er auf Grund des Atomgesetzes verpflichtet ist, nicht unverzüglich abliefert,
2. Kernbrennstoffe oder die in Absatz 1 Nr. 2 bezeichneten Stoffe an Unberechtigte abgibt oder die Abgabe an Unberechtigte vermittelt,
3. eine nukleare Explosion verursacht oder
4. einen anderen zu einer in Nummer 3 bezeichneten Handlung verleitet oder eine solche Handlung fördert.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untergrober Verletzung verwaltungsrechtlicher Pflichten

1. beim Betrieb einer Anlage, insbesondere einer Betriebsstätte oder technischen Einrichtung, radioaktive Stoffe oder Gefahrstoffe im Sinne des Chemikaliengesetzes lagert, bearbeitet, verarbeitet oder sonst verwendet oder
2. gefährliche Güter befördert, versendet, verpackt oder auspackt, verlädt oder entlädt, entgegennimmt oder anderen überläßt und dadurch die Gesundheit eines anderen, ihm nicht gehörende Tiere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4) Der Versuch ist strafbar.

(5)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6) Die Absätze 4 und 5 gelten nicht für Taten nach Absatz 2 Nr. 4.

§ 329 Gefährdung schutzbedürftiger Gebiete

- (1) Wer entgegen einer auf Grund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 über ein Gebiet, das eines besonderen Schutzes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oder Geräusche bedarf oder in dem während austauscharmer Wetterlagen ein starkes Anwachsen schädlicher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zu befürchten ist, Anlagen innerhalb des Gebiets betrei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innerhalb eines solchen Gebiets Anlagen entgegen einer vollziehbaren Anordnung betreibt, die auf Grund einer in Satz 1 bezeichneten Rechtsverordnung ergangen ist.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Kraftfahrzeuge, Schienen-, Luft- oder Wasserfahrzeuge.
- (2) Wer entgegen einer zum Schutz eines Wasser- oder Heilquellenschutzbereiches erlassenen Rechtsvorschrift oder vollziehbaren Untersagung
1. betriebliche Anlagen zum Umgang mit wassergefährdenden Stoffen betreibt,
 2. Rohrleitungsanlagen zum Befördern wassergefährdender Stoffe betreibt oder solche Stoffe befördert oder
 3. im Rahmen eines Gewerbebetriebes Kies, Sand, Ton oder andere feste Stoffe abbau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Betriebliche Anlage im Sinne des Satzes 1 ist auch die Anlage in einem öffentlichen Unternehmen.
- (3) Wer entgegen einer zum Schutz eines Naturschutzgebietes, einer

als Naturschutzgebiet einstweilig sichergestellten Fläche oder eines Nationalparkserlassenen Rechtsvorschrift oder vollziehbaren Untersagung

1. Bodenschätze oder andere Bodenbestandteile abbaut oder gewinnt,
2. Abgrabungen oder Aufschüttungen vornimmt,
3. Gewässer schafft, verändert oder beseitigt,
4. Moore, Sümpfe, Brüche oder sonstige Feuchtgebiete entwässert,
5. Wald rodet,
6. Tiere einer im Sinne des Bundesnaturschutzgesetzes besonders geschützten Art tötet, fängt, diesen nachstellt oder deren Gelege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oder entfernt,
7. Pflanzen einer im Sinne des Bundesnaturschutzgesetzes besonders geschützten Art beschädigt oder entfernt oder
8. ein Gebäude errichtet

und dadurch den jeweiligen Schutzzweck nicht unerheblich beeinträch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4) Handelt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1.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 330 Besonders schwerer Fall einer Umweltstraftat

- (1)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wird eine vorsätzliche Tat nach den §§ 324 bis 329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ein Gewässer, den Boden oder ein Schutzgebiet im Sinne des § 329 Abs. 3 derart beeinträchtigt, daß die Beeinträchtigung nicht, nur mit außerordentlichem Aufwand oder erst nach längerer Zeit beseitigt werden kann,
 2.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gefährdet,
 3. einen Bestand von Tieren oder Pflanzen der vom Aussterben bedrohten Arten nachhaltig schädigt oder
 4. aus Gewinnsucht handelt.
- (2) Wer durch eine vorsätzliche Tat nach den §§ 324 bis 329
1. einen anderen Menschen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oder eine große Zahl von Menschen in die Gefahr einer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 oder
 2.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verursacht,
- wird in den Fällen der Nummer 1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den Fällen der Nummer 2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330a Abs. 1 bis 3 mit Strafe bedroht ist.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Nr.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Nr.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330a Schwere Gefährdung durch Freisetzen von Giften

- (1) Wer Stoffe, die Gifte enthalten oder hervorbringen können, verbreitet oder freisetzt und dadurch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eines anderen Menschen oder die Gefahr einer Gesundheitsschädigung einer großen Zahl von Mensch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eines anderen Mensche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nicht unter drei Jahren.
- (3)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des Absatzes 2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leichtfert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30b Tätige Reue

- (1) Das Gericht kann in den Fällen des § 325a Abs. 2, des § 326 Abs. 1 bis 3, des § 328 Abs. 1 bis 3 und des § 330a Abs. 1, 3 und 4 die Strafe nach seinem Ermessen mildern (§ 49 Abs. 2) oder von Strafe nach diesen Vorschriften absehen, wenn der Täter freiwillig

die Gefahr abwendet oder den von ihm verursachten Zustand beseitigt, bevor ein erheblicher Schaden entsteht.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wird der Täter nicht nach § 325a Abs. 3 Nr. 2, § 326 Abs. 5, § 328 Abs. 5 und § 330a Abs. 5 bestraft.

(2) Wird ohne Zutun des Täters die Gefahr abgewendet oder der rechtswidrig verursachte Zustand beseitigt, so genügt sein freiwilliges und ernsthaftes Bemühen, dieses Ziel zu erreichen.

§ 330c Einziehung

Ist eine Straftat nach den §§ 326, 327 Abs. 1 oder 2, §§ 328, 329 Abs. 1, 2 oder 3, dieser auch in Verbindung mit Abs. 4,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die durch die Tat hervorgebracht oder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und
2.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Tat bezieht,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330d Begriffsbestimmungen

Im Sinne dieses Abschnitts ist

1. ein Gewässer: ein oberirdisches Gewässer, das Grundwasser und das Meer;
2. eine kerntechnische Anlage: eine Anlage zur Erzeugung oder zur Bearbeitung oder Verarbeitung oder zur Spaltung von Kernbrennstoffen oder zur Aufarbeitung bestrahlter Kernbrennstoffe;

3. ein gefährliches Gut: ein Gut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und einer darauf beruhenden Rechtsverordnung und im Sinne der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international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im jeweiligen Anwendungsbereich;
4. eine verwaltungsrechtliche Pflicht: eine Pflicht, die sich aus
- a) einer Rechtsvorschrift,
 - b)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 c) einem vollziehbaren Verwaltungsakt,
 - d) einer vollziehbaren Auflage oder
 - e)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soweit die Pflicht auch durch Verwaltungsakt hätte auferlegt werden können,
- ergibt und dem Schutz vor Gefahren oder schädlichen Einwirkungen auf die Umwelt, insbesondere auf Menschen, Tiere oder Pflanzen, Gewässer, die Luft oder den Boden, dient;
5. ein Handeln ohne Genehmigung, Planfeststellung oder sonstige Zulassung: auch ein Handeln auf Grund einer durch Drohung, Bestechung oder Kollusion erwirkten oder durch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erschlichenen Genehmigung, Planfeststellung oder sonstigen Zulassung.

Dreißigster Abschnitt Straftaten im Amt

§ 331 Vorteilsannahme

- (1) Ein Amtsträger oder ei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der für die Dienstausübung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Ein Richter oder Schiedsrichter, der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daß er eine richterliche 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künftig vornehme,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Tat ist nicht nach Absatz 1 strafbar, wenn der Täter einen nicht von ihm geforderten Vorteil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und die zuständige Behörde im Rahmen ihrer Befugnisse entweder die Annahme vorher genehmigt hat oder der Täter unverzüglich bei ihr Anzeige erstattet und sie die Annahme genehmigt.

§ 332 Bestechlichkeit

- (1) Ein Amtsträger oder ei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 der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daß er eine Dienst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künftig vornehme und dadurch seine Dienstpflichten verletzt hat oder verletzen würde,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Der Versuch ist strafbar.
- (2) Ein Richter oder Schiedsrichter, der einen Vorteil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daß er eine richterliche 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künftig vornehme und dadurch seiner richterlichen Pflichten verletzt hat oder verletzen würde,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 Falls der Täter den Vorteil als Gegenleistung für eine künftige Handlung 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so sind die Absätze 1 und 2 schon dann anzuwenden, wenn er sich dem anderen gegenüber bereit gezeigt hat, 1. bei der Handlung seine Pflichten zu verletzen oder, 2. soweit die Handlung in seinem Ermessen steht, sich bei Ausübung des Ermessens durch den Vorteil beeinflussen zu lassen.

§ 333 Vorteilsgewährung

- (1) Wer einem Amtsträger, einem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m Soldaten der Bundeswehr für die Dienstausübung einen Vorteil für diesen oder einen Dritten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einem Richter oder Schiedsrichter einen Vorteil für diesen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daß er eine richterliche 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künftig vornehme,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 Die Tat ist nicht nach Absatz 1 strafbar, wenn die zuständige Behörde im Rahmen ihrer Befugnisse entweder die Annahme des Vorteils durch den Empfänger vorher genehmigt hat oder sie auf unverzügliche Anzeige des Empfängers genehmigt.

§ 334 Bestechung

- (1) Wer einem Amtsträger, einem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m Soldaten der Bundeswehr einen Vorteil für diesen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daß er eine Dienst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künftig vornehmen und dadurch seine Dienstpflichten verletzt hat oder verletzen würde,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 (2) Wer einem Richter oder Schiedsrichter einen Vorteil für diesen oder einen Dritten als Gegenleistung dafür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daß er eine richterliche Handlung vorgenommen und dadurch seine richterlichen Pflichten verletzt hat oder künftig vornehmen und dadurch seine richterlichen Pflichten verletzen würde, wird in den Fällen der Nummer 1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n den Fällen der Nummer 2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Der Versuch ist strafbar.
- (3) Falls der Täter den Vorteil als Gegenleistung für eine künftige Handlung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so sind die Absätze 1

und 2 schon dann anzuwenden, wenn er den anderen zu bestimmen versucht, daß dieser 1. bei der Handlung seine Pflichten verletzt oder, 2. soweit die Handlung in seinem Ermessen steht, sich bei der Ausübung des Ermessens durch den Vorteil beeinflussen läßt.

§ 335 Besonders schwere Fälle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1)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wird

1. eine Tat nach

a) § 332 Abs. 1 Satz 1, auch in Verbindung mit Abs. 3, und

b) § 334 Abs. 1 Satz 1 und Abs. 2, jeweils auch in Verbindung mit Abs. 3,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und

2. eine Tat nach § 332 Abs. 2, auch in Verbindung mit Abs. 3,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zwei Jahren bestraft.

(2) Ein besonders schwerer Fall im Sinne des Absatzes 1 liegt in der Regel vor, wenn

1. die Tat sich auf einen Vorteil großen Ausmaßes bezieht,

2. der Täter fortgesetzt Vorteile annimmt, die er als Gegenleistung dafür gefordert hat, daß er eine Diensthandlung künftig vornehme, oder

3.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336 Unterlassen der Diensthandlung

Der Vornahme einer Diensthandlung oder einer richterlichen Handlung im Sinne der §§ 331 bis 335 steht das Unterlassen der Handlung gleich.

§ 337 Schiedsrichtervergütung

Die Vergütung eines Schiedsrichters ist nur dann ein Vorteil im Sinne der §§ 331bis 335, wenn der Schiedsrichter sie von einer Partei hinter dem Rücken der anderenfordert, sich versprechen läßt oder annimmt oder wenn sie ihm eine Partei hinter demRücken der anderen anbietet, verspricht oder gewährt.

§338 Vermögensstrafe und Erweiterter Verfall

- (1) In den Fällen des § 332, auch in Verbindung mit den §§ 336 und 337, ist § 73danzuwenden, 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 (2) In den Fällen des § 334, auch in Verbindung mit den §§ 336 und 337, sind die §§43a, 73d anzuwenden, wenn der Täter als Mitglied einer Bande handelt, die sich zur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73d ist auch dann anzuwenden,wenn der Täter gewerbsmäßig handelt.

§ 339 Rechtsbeugung

Ein Richter, ein anderer Amtsträger oder ein Schiedsrichter, welcher sich bei derLeitung oder Entscheidung einer Rechtssache zugunsten oder zum Nachteil einer Parteieiner Beugung des Rechts schuldig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fünf Jahren bestraft.

§ 340 Körperverletzung im Amt

- (1) Ein Amtsträger, der während der 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eine Körperverletzung begeht oder begeh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Die §§ 224 bis 229 gelten für Straftaten nach Absatz 1 Satz 1 entsprechend.

§§ 341 und 342 (weggefallen)

§ 343 Aussageerpressung

- (1)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1. einem Strafverfahren, einem Verfahren zur Anordnung einer behördlichen Verwahrung,
 2. einem Bußgeldverfahren oder
 3. einem Disziplinarverfahren oder einem ehrengerichtlichen oder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
- berufen ist, einen anderen körperlich mißhandelt, gegen ihn sonst Gewalt anwendet, ihm Gewalt androht oder ihn seelisch quält, um ihn zu nötigen, in dem Verfahren etwas auszusagen oder zu erklären oder dies zu unter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bestraft.
- (2) In minder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344 Verfolgung Unschuldiger

- (1)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einem Strafverfahren, abgesehen von dem Verfahren zur Anordnung einer nicht freiheitsentziehenden Maßnahme (§11 Abs. 1 Nr. 8), berufen ist,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einen Unschuldigen oder jemanden, der sonst nach dem Gesetz nicht strafrechtlich verfolgt werden darf, strafrechtlich verfolgt oder auf eine solche Verfolgung hinwirk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Satz 1 gilt sinngemäß für einen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einem Verfahren zur Anordnung einer behördlichen Verwahrung berufen ist.
- (2)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einem Verfahren zur Anordnung einer nicht freiheitsentziehenden Maßnahme (§ 11 Abs. 1 Nr. 8) berufen ist, absichtlich oder wissentlich jemanden, der nach dem Gesetz nicht strafrechtlich verfolgt werden darf, strafrechtlich verfolgt oder auf eine solche Verfolgung hinwirk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Satz 1 gilt sinngemäß für einen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an
1. einem Bußgeldverfahren oder
 2. einem Disziplinarverfahren oder einem ehrengerichtlichen oder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 berufen ist. Der Versuch ist strafbar.

§ 345 Vollstreckung gegen Unschuldige

- (1)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bei de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er behördlichen Verwahrung berufen ist, eine solche Strafe, Maßregel oder Verwahrung vollstreckt, obwohl sie nach dem Gesetz nicht vollstreckt werden darf,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Handelt der Täter leichtfert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 (3) Wer, abgesehen von den Fällen des Absatzes 1,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bei der Vollstreckung einer Strafe oder einer Maßnahme (§ 11 Abs. 1 Nr. 8) berufen ist, eine Strafe oder Maßnahme vollstreckt, obwohl sie nach dem Gesetz nicht vollstreckt werden darf,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als Amtsträger, der zur Mitwirkung bei der Vollstreckung
1. eines Jugendarrestes,
 2. einer Geldbuße oder Nebenfolge nach dem Ordnungswidrigkeitenrecht,
 3. eines Ordnungsgeldes oder einer Ordnungshaft oder
 4. einer Disziplinarmaßnahme oder einer ehrengerichtlichen oder berufsgerichtlichen Maßnahme
- berufen ist, eine solche Rechtsfolge vollstreckt, obwohl sie nach dem Gesetz nicht vollstreckt werden darf. Der Versuch ist strafbar.

§§ 346 und 347 (weggefallen)

§ 348 Falschbeurkundung im Amt

- (1) Ein Amtsträger, der, zur Aufnahme öffentlicher Urkunden befugt, innerhalb seiner Zuständigkeit eine rechtlich erhebliche Tatsache falsch beurkundet oder in öffentliche Register, Bücher oder Dateien falsch einträgt oder eingi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49 bis 351 (weggefallen)

§ 352 Gebührenüberhebung

- (1) Ein Amtsträger, Anwalt oder sonstiger Rechtsbeistand, welcher Gebühren oder andere Vergütungen für amtliche Verrichtungen zu seinem Vorteil zu erheben hat, wird, wenn er Gebühren oder Vergütungen erhebt, von denen er weiß, daß der Zahlende sie überhaupt nicht oder nur in geringerem Betrag schulde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53 Abgabenüberhebung, Leistungskürzung

- (1) Ein Amtsträger, der Steuern, Gebühren oder andere Abgaben für eine öffentliche Kasse zu erheben hat, wird, wenn er Abgaben, von denen er weiß, daß der Zahlende sie überhaupt nicht oder nur in geringerem Betrag schuldet, erhebt und das rechtswidrig Erhobene ganz oder zum Teil nicht zur Kasse bringt,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Ebenso wird bestraft, wer als Amtsträger bei amtlichen Ausgaben an Geld oder Naturalien dem Empfänger rechtswidrig Abzüge macht und die Ausgaben als vollständig geleistet in Rechnung stellt.

§ 353a Vertrauensbruch im auswärtigen Dienst

- (1) Wer bei der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über einer fremden Regierung, einer Staatengemeinschaft oder einer zwischenstaatlichen Einrichtung einer amtlichen Anweisung zuwiderhandelt oder in der Absicht, die Bundesregierung irrezuführen, unwahre Berichte tatsächlicher Art erstat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ie Tat wird nur mit Ermächtigung der Bundesregierung verfolgt.

§ 353b Verletzung des Dienstgeheimnisses und einer besonderen Geheimhaltungspflicht

- (1) Wer ein Geheimnis, das ihm als 1. Amtsträger, 2.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3. Person, die Aufgaben oder Befugnisse nach dem Personalvertretungsrecht wahrnimmt, anvertraut worden oder sonst bekannt geworden ist, unbefugt offenbart und dadurch wichtige öffentliche Interess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Hat der Täter durch die Tat fahrlässig wichtige öffentliche Interessen gefährdet, so wird er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Wer, abgesehen von den Fällen des Absatzes 1, unbefugt einen

Gegenstand oder eine Nachricht, zu deren Geheimhaltung er 1. auf Grund des Beschlusses eines Gesetzgebungsorgans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eines seiner Ausschüsse verpflichtet ist oder 2. von einer anderen amtlichen Stelle unter Hinweis auf die Strafbarkeit der Verletzung der Geheimhaltungspflicht förmlich verpflichtet worden ist, an einen anderen gelangen läßt oder öffentlich bekanntmacht und dadurch wichtige öffentliche Interessen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Die Tat wird nur mit Ermächtigung verfolgt. Die Ermächtigung wird erteilt

1. von dem Präsidenten des Gesetzgebungsorgans

a)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wenn dem Täter das Geheimnis während seiner Tätigkeit bei einem oder für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bekannt geworden ist,

b)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Nr. 1; 2. von der obersten Bundesbehörde a)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wenn dem Täter das Geheimnis während seiner Tätigkeit sonst bei einer oder für eine Behörde oder bei einer anderen amtlichen Stelle des Bundes oder für eine solche Stelle bekannt geworden ist, b)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Nr. 2, wenn der Täter von einer amtlichen Stelle des Bundes verpflichtet worden ist; 3. von der obersten Landesbehörde in allen übrig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Nr. 2.

§ 353c (weggefallen)

§ 353d Verbotene Mitteilungen über Gerichtsverhandlungen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ntgegen einem gesetzlichen Verbot über eine Gerichtsverhandlung, bei der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war, oder über den Inhalt eines die Sache betreffenden amtlichen Schriftstücks öffentlich eine Mitteilung macht,
2. entgegen einer vom Gericht auf Grund eines Gesetzes auferlegten Schweigepflicht Tatsachen unbefugt offenbart, die durch eine nichtöffentliche Gerichtsverhandlung oder durch ein die Sache betreffendes amtliches Schriftstück zu seiner Kenntnis gelangt sind, oder
3. die Anklageschrift oder andere amtliche Schriftstücke eines Strafverfahrens, eines Bußgeldverfahrens oder eines Disziplinarverfahrens, ganz oder in wesentlichen Teilen, im Wortlaut öffentlich mitteilt, bevor sie in öffentlicher Verhandlung erörtert worden sind oder das Verfahren abgeschlossen ist.

Fußnote

§ 353d Nr. 3: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formel mit dem GG vereinbar, BVerfGE v.3.12.1985; 1986 I 329 – 1 BvL 15/84

§ 354 (weggefallen)

§ 355 Verletzung des Steuergeheimnisses

(1) Wer unbefugt

1. Verhältnisse eines anderen, die ihm als Amtsträger
 - a) in einem Verwaltungsverfahren oder einem gerichtlichen Verfahren in Steuersachen,
 - b) in einem Strafverfahren wegen einer Steuerstraftat oder in einem Bußgeldverfahren wegen einer Steuerordnungswidrigkeit,
 - c) aus anderem Anlaß durch Mitteilung einer Finanzbehörde oder durch die gesetzlichvorgeschriebene Vorlage eines Steuerbescheids oder einer Bescheinigung über die bei der Besteuerung getroffenen Feststellungen bekanntgeworden sind, oder
 2. ein fremdes Betriebs- oder Geschäftsgeheimnis, das ihm als Amtsträger in einem der in Nummer 1 genannten Verfahren bekanntgeworden ist, offenbart oder verwert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n Amtsträgern im Sinne des Absatzes 1 stehen gleich
1. die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n,
 2. amtlich zugezogene Sachverständige und
 3. die Träger von Ämtern der Kirchen und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 (3) Die Tat wird nur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oder des Verletzten verfolgt. Bei Taten amtlich zugezogener Sachverständiger ist der Leiter der Behörde, deren Verfahren betroffen ist, neben dem Verletzten antragsberechtigt.

§ 356 Parteiverrat

- (1) Ein Anwalt oder ein anderer Rechtsbeistand, welcher bei den ihm in dieser Eigenschaft anvertrauten Angelegenheiten in derselben Rechtssache beiden Parteien durch Rat oder Beistand pflichtwidrig dien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2) Handelt derselbe im Einverständnis mit der Gegenpartei zum Nachteil seiner Partei, so trit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ein.

§ 357 Verleitung eines Untergebenen zu einer Straftat

- (1) Ein Vorgesetzter, welcher seine Untergebenen zu einer rechtswidrigen Tat im Amt verleitet oder zu verleiten unternimmt oder eine solche rechtswidrige Tat seiner Untergebenen geschehen läßt, hat die für diese rechtswidrige Tat angedrohte Strafe verwirkt.
- (2) Dieselbe Bestimmung findet auf einen Amtsträger Anwendung, welchem eine Aufsicht oder Kontrolle über die Dienstgeschäfte eines anderen Amtsträgers übertragen ist, sofern die von diesem letzteren Amtsträger begangene rechtswidrige Tat die zur Aufsicht oder Kontrolle gehörenden Geschäfte betrifft.

§ 358 Nebenfolgen

Neben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sechs Monaten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332, 335, 339, 340, 343, 344, 345 Abs. 1 und 3, §§ 348, 352 bis 353b Abs. 1, §§ 355 und 357 kann das Gericht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 45 Abs. 2), aberkennen.